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

이 과제는 2023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위탁사업에 의한 것임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23년 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진

연구책임자 : 장인성(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박승준(대구대학교 교수)

임상수(조선대학교 교수)

변창욱(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송년(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도기현(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           |
|--------------------------------------------------------|-----------|
| 요 약 .....                                              | i         |
| <b>제1장 서 론 .....</b>                                   | <b>1</b>  |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1         |
| 1. 연구 배경 .....                                         | 1         |
| 2. 선행연구 검토 .....                                       | 3         |
| 3. 연구 목적과 내용 .....                                     | 5         |
| <b>제2장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 .....</b>                   | <b>7</b>  |
| 제1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 7         |
| 1. 목적 및 지원대상 .....                                     | 7         |
| 2.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                                   | 8         |
| 3. 추진현황 및 성과 .....                                     | 10        |
| 제2절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                                   | 11        |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11        |
| 2. 추진절차 .....                                          | 12        |
| 3. 추진현황 및 성과 .....                                     | 13        |
| <b>제3장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연계성 .....</b>            | <b>16</b> |
| 제1절 지역별 투자 동향 .....                                    | 16        |
| 제2절 지방투자보조금 집행 실적 .....                                | 19        |
| 제3절 고용연계성 .....                                        | 26        |
| <b>제4장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이 고용의 양에 미치는 효과 분석 .....</b> | <b>28</b> |
| 제1절 이전 기업에 대한 고용 현황 분석 .....                           | 28        |
| 1. 이전 기업의 고용에 대한 시계열 추이 .....                          | 28        |
| 2. 정책 효과 분석 .....                                      | 34        |
| 제2절 수혜 대상 기업 현황 분석 .....                               | 40        |

|                                                       |     |
|-------------------------------------------------------|-----|
| 1. 수혜 대상 기업 데이터 현황 .....                              | 40  |
| 2. 수혜 대상 기업 신규 일자리 분석 .....                           | 44  |
| 제3절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효과 분석 .....                           | 48  |
| 1.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48  |
| 2.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                                  | 57  |
| <b>제5장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b> .... | 60  |
| 제1절 실태조사 .....                                        | 60  |
| 1. 실태조사 결과 .....                                      | 64  |
| 2. 실태조사 분석 결과종합 및 시사점 .....                           | 121 |
| 제2절 심층 인터뷰 .....                                      | 129 |
| 1. 인터뷰 개요 .....                                       | 129 |
| 2. 심층 인터뷰 결과 .....                                    | 130 |
| 3. 심층 인터뷰 결과종합 및 시사점 .....                            | 139 |
| 제3절 지방투자기업의 인력 수급 시사점 .....                           | 143 |
| 1. 실태조사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인력 수급의 시사점 .....                   | 143 |
| 2. 심층 인터뷰에서 나타난 인력 수급의 시사점 .....                      | 145 |
| 제4절 소 결 .....                                         | 147 |
| <b>제6장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한 제언</b> .....          | 150 |
| 제1절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투자에 집중 .....                         | 150 |
| 제2절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협력 .....               | 151 |
| 1. 행정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 .....                               | 153 |
| 2.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지방투자 희망 기업 연계망 구축 ....              | 154 |
| 3.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노력 .....                        | 154 |
| 제3절 지방투자기업의 필요 인력 수급을 위한 노력 .....                     | 155 |
| 1. 생산직 인력 수급을 위한 개선방안 .....                           | 156 |
| 2. 고급인력 조달을 위한 개선방안 .....                             | 157 |
| 3. 인력 수요 예측 및 매칭 .....                                | 159 |

|            |     |
|------------|-----|
| 참고문헌 ..... | 161 |
|------------|-----|

|                           |     |
|---------------------------|-----|
|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안) ..... | 163 |
|---------------------------|-----|

|                       |     |
|-----------------------|-----|
| 2. 심층 인터뷰 주요 문항 ..... | 175 |
|-----------------------|-----|

## 표 목 차

|                                                                 |    |
|-----------------------------------------------------------------|----|
| 〈표 2-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개정내용 적용) .....                      | 8  |
| 〈표 2-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비율(개정내용 적용) .....                      | 9  |
| 〈표 2-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실적 .....                                  | 11 |
| 〈표 2- 4〉 선정사업 투자 고용계획 규모 .....                                  | 14 |
| 〈표 2- 5〉 선정사업 투자 고용계획 이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                | 15 |
| 〈표 3- 1〉 권역별 총 고정자본 형성 비중 .....                                 | 17 |
| 〈표 3- 2〉 권역별 총 고정자본 형성 규모 .....                                 | 19 |
| 〈표 3- 3〉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지원금액 비중 .....                              | 20 |
| 〈표 3- 4〉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지원 건수 .....                                | 21 |
| 〈표 3- 5〉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건당 지원금액 .....                              | 22 |
| 〈표 3- 6〉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신규 고용계획 규모 .....                           | 23 |
| 〈표 3- 7〉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지원 건당 신규 고용계획 규모 .....                     | 25 |
| 〈표 3- 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고용연계성 .....                               | 26 |
| 〈표 4- 1〉 기업 규모별 수혜 기업 및 비수혜 기업 연도별 평균 고용<br>추이 .....            | 30 |
| 〈표 4- 2〉 통합통상최소자승법을 활용한 고용함수 추정 결과 .....                        | 32 |
| 〈표 4- 3〉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고용함수 추정 결과(교호작용<br>제외) .....             | 32 |
| 〈표 4- 4〉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고용함수 추정 결과(교호작용<br>포함) .....             | 33 |
| 〈표 4- 5〉 성향점수매칭 적용 후 통합통상최소자승법을 활용한 고용함수<br>추정 결과 .....         | 33 |
| 〈표 4- 6〉 성향점수매칭 적용 후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고용함수<br>추정 결과(교호작용 제외) ..... | 34 |
| 〈표 4- 7〉 성향점수매칭 적용 후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고용함수<br>추정 결과(교호작용 포함) ..... | 34 |

|                                                     |    |
|-----------------------------------------------------|----|
| 〈표 4- 8〉 시도별 수혜 대상 고용 비교(원데이터) .....                | 36 |
| 〈표 4- 9〉 시도별 수혜 대상 고용 비교(성향점수매칭 반영) .....           | 38 |
| 〈표 4-10〉 기업 규모별 수혜 대상 고용 비교(원데이터) .....             | 39 |
| 〈표 4-11〉 기업 규모별 수혜 대상 고용 비교(성향점수매칭 반영) .....        | 40 |
| 〈표 4-12〉 시도별 지방이전 기업 수 .....                        | 41 |
| 〈표 4-13〉 정책 지원 유형별 지방이전 기업 수 .....                  | 42 |
| 〈표 4-14〉 보조금 지원 유형별 지방이전 기업 수 .....                 | 43 |
| 〈표 4-15〉 기업 유형별 지방이전 기업 수 .....                     | 44 |
| 〈표 4-16〉 시도별 지방이전 신규 고용 인원 .....                    | 45 |
| 〈표 4-17〉 정책 지원 유형별 신규 고용 인원 .....                   | 46 |
| 〈표 4-18〉 보조금 지원 유형별 신규 고용 인원 .....                  | 47 |
| 〈표 4-19〉 기업 유형별 신규 고용 인원 .....                      | 48 |
| 〈표 4-20〉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50 |
| 〈표 4-21〉 표준화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51 |
| 〈표 4-22〉 시도별 신규 고용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52 |
| 〈표 4-23〉 시도별 신규 고용에 대한 표준화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52 |
| 〈표 4-24〉 지원 유형별 신규 고용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53 |
| 〈표 4-25〉 지원 유형별 신규 고용에 대한 표준화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53 |
| 〈표 4-26〉 보조금 유형별 신규 고용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54 |
| 〈표 4-27〉 보조금 유형별 신규 고용에 대한 표준화 포아송 회귀분석<br>결과 ..... | 54 |
| 〈표 4-28〉 기업 규모별 신규 고용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55 |
| 〈표 4-29〉 기업 규모별 신규 고용에 대한 표준화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55 |
| 〈표 5- 1〉 조사 대상 및 목표 조사업체 수 및 유효표본 .....             | 62 |
| 〈표 5- 2〉 실태조사 내용 .....                              | 63 |
| 〈표 5- 3〉 사업장 입지 성격 .....                            | 64 |
| 〈표 5- 4〉 사업장 입지 규모 .....                            | 65 |
| 〈표 5- 5〉 사업장 규모 및 매출 현황 .....                       | 66 |
| 〈표 5- 6〉 사업장 고용 현황 .....                            | 66 |
| 〈표 5- 7〉 구매처 및 구매 지역 현황 .....                       | 67 |

|                                                          |    |
|----------------------------------------------------------|----|
| 〈표 5- 8〉 판매처 및 판매 지역 현황 .....                            | 68 |
| 〈표 5- 9〉 현 사업장 투자 시기 .....                               | 69 |
| 〈표 5-10〉 현 사업장 면적 .....                                  | 70 |
| 〈표 5-11〉 신규 투자 사업장 부지 유형에 대한 인식 .....                    | 70 |
| 〈표 5-12〉 총 투자액 .....                                     | 71 |
| 〈표 5-13〉 신규 사업장 비수도권 투자 유형 .....                         | 72 |
| 〈표 5-14〉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높은 임금 .....                      | 73 |
| 〈표 5-15〉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높은 입지 비용의 절감 .....               | 73 |
| 〈표 5-16〉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협업기업의 이전 또는 투자 요구 .....          | 74 |
| 〈표 5-17〉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불필요한 물류·시간 비용 소요 .....           | 74 |
| 〈표 5-18〉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정책적 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 .....           | 75 |
| 〈표 5-19〉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확대 및 공정 개선의 필요 .....             | 75 |
| 〈표 5-20〉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사업 다각화 및 신사업 추진 .....            | 76 |
| 〈표 5-21〉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부지확보 용이성 및 저렴한<br>임대료·지가 ..... | 77 |
| 〈표 5-22〉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저렴한 임금 .....                   | 78 |
| 〈표 5-23〉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저렴한 운송비용 .....                 | 78 |
| 〈표 5-24〉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협력업체 및 관련 기술의 집적 .....         | 79 |
| 〈표 5-25〉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배후시장 근접성 .....                 | 79 |
| 〈표 5-26〉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노동시장 근접성 .....                 | 80 |
| 〈표 5-27〉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양호한 정주여건 .....                 | 80 |
| 〈표 5-28〉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지자체 노력 .....                   | 81 |
| 〈표 5-29〉 지방투자 과정 애로사항(1순위) .....                         | 82 |
| 〈표 5-30〉 지방투자 과정 애로사항(1+2순위) .....                       | 82 |
| 〈표 5-31〉 향후 5년 이내 지방투자 계획 .....                          | 83 |
| 〈표 5-32〉 지방투자 전후 고용 규모 .....                             | 84 |
| 〈표 5-33〉 지방투자 이전 정규직 구성비 .....                           | 85 |
| 〈표 5-34〉 지방투자 이후 정규직 구성비 .....                           | 85 |
| 〈표 5-35〉 지방투자 전후 직종별 비중 평균 .....                         | 86 |
| 〈표 5-36〉 지방투자 전후 연령별 비중 평균 .....                         | 86 |
| 〈표 5-37〉 지방투자 전후 외국인 근로자 비중 평균 .....                     | 87 |

|                                       |     |
|---------------------------------------|-----|
| 〈표 5-38〉 생산직 신규 고용 현황(평균) .....       | 88  |
| 〈표 5-39〉 생산직 신규 고용 현황(합계) .....       | 88  |
| 〈표 5-40〉 사무·영업직 신규 고용 현황(평균) .....    | 89  |
| 〈표 5-41〉 사무·영업직 신규 고용 현황(합계) .....    | 89  |
| 〈표 5-42〉 연구개발직 신규 고용 현황(평균) .....     | 90  |
| 〈표 5-43〉 연구개발직 신규 고용 현황(합계) .....     | 90  |
| 〈표 5-44〉 신규 고용 합계 및 달성률 .....         | 91  |
| 〈표 5-45〉 신규 고용 시 어려운 점 .....          | 92  |
| 〈표 5-46〉 생산직 이직 고용 현황(평균) .....       | 93  |
| 〈표 5-47〉 생산직 이직 고용 현황(합계) .....       | 93  |
| 〈표 5-48〉 사무·영업직 이직 고용 현황(평균) .....    | 94  |
| 〈표 5-49〉 사무·영업직 이직 고용 현황(합계) .....    | 94  |
| 〈표 5-50〉 연구개발직 이직 고용 현황(평균) .....     | 95  |
| 〈표 5-51〉 연구개발직 이직 고용 현황(합계) .....     | 95  |
| 〈표 5-52〉 이직 고용 합계(평균) .....           | 96  |
| 〈표 5-53〉 이직 고용 합계 .....               | 96  |
| 〈표 5-54〉 채용활동상 가장 어려운 직군 .....        | 97  |
| 〈표 5-55〉 채용활동상 가장 어려운 계열(1순위) .....   | 98  |
| 〈표 5-56〉 채용활동상 가장 어려운 계열(1+2순위) ..... | 98  |
| 〈표 5-57〉 채용활동상 어려움의 요인(1순위) .....     | 99  |
| 〈표 5-58〉 채용활동상 어려움의 요인(1+2순위) .....   | 99  |
| 〈표 5-59〉 노동시장 여건 부족(1순위) .....        | 100 |
| 〈표 5-60〉 노동시장 여건 부족(1+2순위) .....      | 100 |
| 〈표 5-61〉 생산직 근로자 만족도 .....            | 101 |
| 〈표 5-62〉 사무·영업직 근로자 만족도 .....         | 102 |
| 〈표 5-63〉 연구개발직 근로자 만족도 .....          | 103 |
| 〈표 5-64〉 향후 고용 전망 .....               | 103 |
| 〈표 5-65〉 생산직 근로자 임금 수준 .....          | 104 |
| 〈표 5-66〉 사무·영업직 근로자 임금 수준 .....       | 105 |
| 〈표 5-67〉 연구개발직 근로자 임금 수준 .....        | 105 |
| 〈표 5-68〉 생산직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 .....        | 106 |

|                                        |     |
|----------------------------------------|-----|
| 〈표 5-69〉 사무·영업직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 .....      | 107 |
| 〈표 5-70〉 연구개발직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 .....       | 107 |
| 〈표 5-71〉 건강검진 지원 현황 .....              | 108 |
| 〈표 5-72〉 자녀교육비 지원 현황(복수응답) .....       | 109 |
| 〈표 5-73〉 식비 지원 현황 .....                | 109 |
| 〈표 5-74〉 교통비 지원 현황 .....               | 109 |
| 〈표 5-75〉 생산직 근로시간 수준 .....             | 110 |
| 〈표 5-76〉 사무·영업직 근로시간 수준 .....          | 111 |
| 〈표 5-77〉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수준 .....           | 111 |
| 〈표 5-78〉 월평균 정규 근로 외 시간 .....          | 112 |
| 〈표 5-79〉 생산직 평균 퇴사율 .....              | 113 |
| 〈표 5-80〉 사무·영업직 평균 퇴사율 .....           | 113 |
| 〈표 5-81〉 연구개발직 평균 퇴사율 .....            | 114 |
| 〈표 5-82〉 생산직 근로자 교육훈련 수준 .....         | 115 |
| 〈표 5-83〉 사무·영업직 근로자 교육훈련 수준 .....      | 115 |
| 〈표 5-84〉 연구개발직 근로자 교육훈련 수준 .....       | 116 |
| 〈표 5-85〉 교육훈련 시간 및 지원 정도 .....         | 116 |
| 〈표 5-86〉 교육훈련 생산성 향상 도움 정도 .....       | 117 |
| 〈표 5-87〉 지방투자 지원 내용(복수응답) .....        | 118 |
| 〈표 5-88〉 지방투자 수혜 실적 합계 .....           | 119 |
| 〈표 5-89〉 지방투자 지원사업 수혜 경로(복수응답) .....   | 119 |
| 〈표 5-90〉 지방투자 지원과정 애로사항(1순위) .....     | 120 |
| 〈표 5-91〉 지방투자 지원과정 애로사항(1+2순위) .....   | 120 |
| 〈표 5-92〉 기업규모별 기업현황 .....              | 121 |
| 〈표 5-93〉 종사자규모별 기업현황 .....             | 122 |
| 〈표 5-94〉 Push factor 요인별 중요도 .....     | 123 |
| 〈표 5-95〉 Pull factor 요인별 중요도(종합) ..... | 124 |
| 〈표 5-96〉 직종별 근로시간 비교응답 비중 종합 .....     | 127 |
| 〈표 5-97〉 직종별 연차별 퇴사율 종합 .....          | 127 |
| 〈표 5-98〉 직종별 교육훈련수준 평가 종합 .....        | 128 |
| 〈표 5-99〉 심층 인터뷰 조사 대상 선정 .....         | 130 |

## 그림목차

|                                       |     |
|---------------------------------------|-----|
| [그림 2-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     | 10  |
| [그림 2-2] 신청 절차 개요 .....               | 12  |
| [그림 2-3] 사업변경 절차 개요 .....             | 13  |
|                                       |     |
| [그림 3-1] 권역별 총 고정자본 형성 비중 .....       | 17  |
| [그림 3-2] 권역별 총 고정자본 형성 .....          | 18  |
| [그림 3-3] 지방투자보조금 총 지원금액 .....         | 20  |
| [그림 3-4]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지원 건수 .....      | 22  |
| [그림 3-5]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신규 고용계획 규모 ..... | 24  |
|                                       |     |
| [그림 4-1] 전체 변수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     | 59  |
|                                       |     |
| [그림 5-1] 조사방법 및 수행 프로세스 .....         | 62  |
| [그림 5-2] 지방투자의 결정 단계(이출) .....        | 124 |



## 요 약

### 1. 서 론

#### □ 연구 배경

-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발전이 주요 이슈로 등장
  - 특히,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의 56.9%(사업체 수 기준), 64.3%(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
  - 총 2,757개 상장사 중에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917개로 전체의 약 40.6%를 차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전체 약 70.2%를 차지함
- 정부는 1999년 이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해 조세감면을 강화(기업 이전 조세특례제도)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
  - 1994년 이후 지방자치와 함께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가 추진해 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주요 지역투자 정책과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지원 대상이 신·증설투자(2011년), 국내복귀(2012년), 개성공단기업(2014년)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인 2020년에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으로 확대

## □ 선행연구

-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효과를 일 자리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22)의 「부문별 국가균형 발전 시행계획 및 시·도 발전시행계획」 등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주로 제도 소개나 해당연도의 단순성과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침
  - 박재곤(2010)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역투자보조금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만 많음
- 기업의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일부 있음
  - 정윤선(2016)은 기업의 지역 간 이동분석 및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기업의 지역 간 이동패턴을 분석하고, 이동기업의 지역 고용 증가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이유진 외(2020)는 기업의 입지 이동이 고용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고, 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

## □ 연구 목적

- 정부는 1999년 이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일자리 측면에서 이들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와 정책대안 도출이 시급
  - 정보, 인재, 중앙정부 및 금융기관, 해외 접근성 등 수도권이 압도적인 입지경쟁력을 지닌 현실에서 세제혜택과 입지 공급 등을 통해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려는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최근까지 추진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면밀한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될 관련 정책의 고용효과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함

## 2.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

### 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 목적 및 지원대상

-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을 운영
  - 지자체의 주요한 기업유치 정책수단으로서, 기업의 투자 규모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기업의 투자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균특법」 제정과 함께 2004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 및 설비보조금 지원을 시작으로, 2011년 지자체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2012년 국내복귀기업, 2014년 개성공단입주기업, 2016년 대체투자·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2019년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2020년 상생형지역 일자리 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 2023년부터는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포항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원

#### □ 지원내용 및 절차

-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보조금(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국비: 100억 원 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개정내용 적용)〉

(단위: %)

| 지원 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칭 비율<br>(국비 : 지방비) |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br>(설비) 3  | -<br>(설비) 5        | (입지) 9<br>(설비) 7   | 45 : 55             |
| 균형발전 중위지역 | -<br>(설비) 5  | (입지) 10<br>(설비) 7  | (입지) 30<br>(설비) 9  | 65 : 35             |
| 균형발전 하위지역 | -<br>(설비) 8  | (입지) 20<br>(설비) 11 | (입지) 40<br>(설비) 14 | 75 : 25             |
| 산업위기대응지역  | -<br>(설비) 11 | (입지) 25<br>(설비) 19 | (입지) 50<br>(설비) 24 | 75 : 25             |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업부에서는 현장실사 및 타당성 평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결정

- 보조금은 입지투자비(부지매입비)의 최대 50%, 설비투자비(공장·신·증축 및 기계장비 구입비)의 최대 44%까지 지원
- 기업당 국비 100억 원(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경우 150억 원)까지 지원 가능
- 국비에 지방비가 매칭되어 투자기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 현황 및 성과

○ 사업을 개시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총 1,376개 기업에 1조 9,372억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26조 8,933억 원의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6만 8,879개의 지역 신규 일자리를 창출

○ 2022년에는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에게 3,439억 원(국비 2,056억 원, 지방비 1,383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 원의 민간투자과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

## 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 □ 추진 배경 및 절차

- 지역산업의 위축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중기적으로 지역일자리 규모를 확보하고 일자리·투자의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상생협력을 통해 극복할 필요
- 2019년 2월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기점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산업부가 주관부처로서 선정평가 및 운영을 주도하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후보 사업 발굴을 지원

### □ 현황 및 성과

- 2021년 12월 현재 6개 사업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중
- 2021년 12월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를 포함한 6개 선정지역의 2021년 12월 말(평균 11개월 경과시점) 투자·고용이행현황을 보면 사업계획 기간 3년 중 목표치 대비 투자는 51.9%(9,634억 원), 고용은 39.1%(1,220명)가 이행

〈선정사업 투자 고용계획 규모〉

(단위: 억 원, 명)

| 선정사업  | 협약시점      | 선정시점      | 투자     | 고용    |
|-------|-----------|-----------|--------|-------|
| 광주    | 2019년 1월  | 2020년 6월  | 5,754  | 908   |
| 경남 밀양 | 2019년 6월  | 2020년 10월 | 3,403  | 505   |
| 강원 횡성 | 2019년 8월  | 2020년 10월 | 883    | 523   |
| 전북 군산 | 2019년 10월 | 2021년 2월  | 5,171  | 1,704 |
| 부산    | 2020년 2월  | 2021년 2월  | 3,526  | 370   |
| 경북 구미 | 2019년 7월  | 2021년 12월 | 4,946  | 187   |
| 전 체   |           |           | 23,683 | 4,197 |

### 3.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연계성

#### 가. 지역별 투자 동향

##### □ 권역별 투자 동향(2000~2021년)

- 총고정자본형성에 있어서 2013년 이후 전체 대비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21년에는 48.7%에 달하여 2000년 45.4% 대비 상당한 증가를 보임
  - 이에 더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산하여 비교해보면 2000년 58%에서 2021년에는 64%로 증가하여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지에 대한 투자 집중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그 외 지역은 모두 감소함
  - 동남권 15.6%(2000) → 13.2%(2021), 대경권 11.8%(2000) → 8.7%(2021), 호남권은 10.4%(2000) → 10.1%(2021)로 모두 감소

#### 나. 지방투자보조금 집행 실적

- 2004~2010년 기간 동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이 전부였으나, 2011년 신·증설 유형이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신·증설 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배적인 지원유형이 되었음
- 금액 기준으로 2011년 22.6%에서 이듬해인 2012년 50.0%로 빠르게 증가한 후, 2021년 84%, 2022년 79.3%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임
- 반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유형은 2011년 77.4%에서 2021년 1.2%, 2022년 5.7%로 미미한 수준에 그침
- 이러한 경향성은 지방으로의 이전보다는 수도권에 근거지를 마련

한 기업이 지방사업장의 신·증설을 선호하는 현상임을 시사

- 이는 본사, 연구소 등 핵심기능을 수도권에 존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됨
  - 지방사업장의 투자 중 신·증설 유형, 그중에서도 공장 등 생산시설의 투자가 지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분업화 경향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2012년 이래 총 지원 건수는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임
- 총 지원금액의 경향성과 마찬가지로 신·증설 지원 건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단순 건수 기준으로는 신·증설의 경우 2011년 45건, 2022년 51건으로 그 증가세가 명확하지 않음
    - 반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건수는 2011년 86건에서 급속히 감소하여 2021년 2건, 2022년 6건에 불과하여 유형별 지원 건수의 구성비 변화는 지방이전 투자 유형의 급감에서 기인함을 시사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당시 시점에서 계획하고 약정한 신규 고용계획 규모는 2011년(9,701명) 이후 대개 4천 명을 하회하는 수준
- 신규 고용계획 규모의 측면에서도 지방이전 투자의 유형은 급속히 감소하였는데, 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10년(6,612명), 2011년(7,278명)과 비교하면 2021년의 30명, 2022년 163명은 상당히 줄어든 수치
  - 신·증설 유형의 경우에도 신·증설 건수의 정체 경향성과 유사하게 2011년 2,423명 대비 2022년 2,843명으로 증가세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방투자유치 대상의 바람직한 업종 단위 기준을 살펴보면, 지방 투자의 정책목표가 지속 가능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필요
- 투자·지원 규모 대비 창출하는 고용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혹은 요구숙련도가 높아 일자리의 질과 양의 수준이 높은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상당한 업종
- 생산성의 수준이 높거나 신산업으로 선제적 투자가 필요, 향후의 경쟁력 확대가 필요한 산업 혹은 투자유치 대상 지역산업 대비 고도화 수준이 높은 산업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업종임

#### 다. 고용연계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 및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의 양과 질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의 양과 질 변화를 예측
- 위 기업들의 양적 고용효과는 보조금 유형별, 시도별, 정책지원 유형별 및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
-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에 명시된 고용의 질 관련 지표에 따라 질적 고용영향평가를 수행
  - 임금(명목임금 수준, 임금격차 노동소득분배율), 근로시간(근로시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 고용형태(정규·비정규 비중, 파견·용역 비중), 고용안정(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기간 근로자 비중), 성평등(여성고용현황(여성/관리자 비중), 임금격차), 기타(산업안전, 사회보험, 일자리 만족도, 직업훈련 등)

#### 4.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이 고용의 양에 미치는 효과 분석

##### □ 분석 데이터

- 수혜 대상 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를 통해 입수했고,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함
  - 수혜 대상 기업의 수는 13,950개이고, 이 중에서 대기업은 936개, 중소기업은 13,014개임
  - 비수혜 대상 기업의 수는 11,206,257개이고, 이 중에서 대기업은 205,488개, 중소기업은 11,000,769개 수준임
- 다만, 비수혜 대상 기업의 경우 기업규모, 업력, 광역시도 등에서 수혜 대상 기업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어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 활용해서 비수혜 기업 중 수혜 기업과 성격이 비슷한 기업들을 선별한 결과 분석 대상 기업의 수는 982,848개 수준이고, 이 중에서 대기업의 수는 53,039개, 중소기업의 수는 929,809개임

##### □ 이전 기업에 대한 고용 현황 분석

-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 간 차이로 인해 고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혜기업의 기업규모, 업력,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활용해서 비수혜 기업 중 수혜 기업과 성격이 비슷한 기업들을 선별함
  - 수혜 기업은 13,950개를 대상으로 하며, 수혜 기업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기 때문에 비수혜 기업 역시 수도권을 제외하기 위해 11,206,257개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한 비수혜 기업 중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기업의 수는 982,848개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 우선, 비수혜 기업 전체와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고용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창출 효과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어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고용 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을 바탕으로 비수혜 기업 중 수혜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기업들과 수혜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
- 또한 고용 인원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세 변수와 함께 수혜 대상 기업과 비수혜 대상 기업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며 고용이 자연수(count data)라는 점을 감안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추정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함
- 추정식은 다음과 같고,  $\alpha_2 > 0$  (or  $\alpha_2 + \alpha_3 \cdot T > 0$ )이고  $\beta_2 > 0$  (or  $\beta_2 + \beta_3 \cdot T > 0$ )을 충족하면,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은 기업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함
- 대기업의 고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alpha_2 > 0$  (or  $\alpha_2 + \alpha_3 \cdot T > 0$ )을 충족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역시  $\beta_2 > 0$  (or  $\beta_2 + \beta_3 \cdot T > 0$ )을 충족함
- 포아송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수혜 더미에 대한 부호는 0보다 크기( $\gamma_2 > 0$ ) 때문에 고용창출에 대한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의 고용은 대기업의 0.044배 수준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교호작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gamma_3 < 0$ )

$$X_{i,t} = \alpha_0 + \alpha_1 \cdot T + \alpha_2 \cdot D + \alpha_3 \cdot T \cdot D + \epsilon_{i,t} \quad (1)$$

$$Y_{i,t} = \beta_0 + \beta_1 \cdot T + \beta_2 \cdot D + \beta_3 \cdot T \cdot D + v_{i,t} \quad (2)$$

$$Z_{i,t} = \gamma_0 + \gamma_1 \cdot T + \gamma_2 \cdot D + \gamma_3 \cdot T \cdot D + \gamma_4 \cdot Size + v_{i,t} \quad (3)$$

$X_{i,t}$  : 대기업 고용 인원,  $Y_{i,t}$  : 중소기업 고용 인원,

$Z_{i,t}$  : 고용 인원(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

$Size_{i,t}$  : 기업의 규모별 변수(대기업=1, 중소기업=2),

$D$  : 지방이전 정책 수혜 여부( $i = 1$ 이면  $D = 1$ ,  $i = 2$ 이면  $D = 0$ ),

$T$  : 시간 추세( $t = 2008$ 이면  $T = 1$ , ...,  $t = 2022$ 이면  $T = 15$ ),

$i = 1$  : 지방이전 정책 수혜 기업,  $i = 2$  : 지방이전 정책 비수혜 기업

- 원데이터와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한 데이터 모두 비수혜 기업과 수혜 기업 간 시도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수혜 기업의 고용이 비수혜 기업의 고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원데이터와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규모별 고용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활용 데이터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혜 대상 기업이 비수혜 대상 기업에 비해 고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수혜 대상 기업 현황 분석
  - 수혜 대상 기업의 수는 13,950개이며, 이 중에서 지원유형이 구분되지 않고, 보조금 유형이 구분되지 않는 등 결측값이 발생한 데이터를 제외하는 경우 수혜 대상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기업의 수는 1,366개 수준임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유형은 상생형일자리, 신설, 증설, 이전의 4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상생형일자리 기업이 가장 적지만, 2013년 이후에는 신설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유형을 구분하면, 고용, 설비, 입지의 3가지 유형으로 구

분되고, 고용 및 교육, 설비 및 고용, 입지 및 설비를 포함하여 총 6가지 유형이 있음

- 이 중에서 고용과 교육은 최근 들어 지원되고 있지 않아, 최근에는 입지, 설비, 입지 및 설비의 3가지 유형이 있음
  - 설비 지원이 가장 많고, 입지 지원이 다음으로 많음
  - 고용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8년 이후 없어졌고, 2008년 이전에도 20개에 불과함
  - 설비 지원에 대한 기업 수는 2011년 이후 60~90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22년까지 904개가 해당됨
  - 입지 지원에 대한 기업 수는 2016년 이후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입지 및 설비 지원 기업 수가 발생함
  - 이로 미루어볼 때, 기업 이전은 주로 설비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업 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3가지로 구분되며,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전 기업 중 중소기업이 가장 많고 대기업이 가장 적음
  -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수는 46개이고, 최근에는 저조한 상황임
  - 중견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수는 동기간 115개이고, 최근 들어 10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수는 동기간 1,205개로 이전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수혜 대상 기업 신규 일자리 분석

- 본 제도에 의해 창출되는 고용은 2010년부터 크게 증가했지만 2012년 크게 감소한 후 최근 3,000명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정책 지원 유형 중 이전에 따른 신규 고용이 가장 많고, 상생형일자리 기업이 가장 적음

- 보조금 유형별로 신규 고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설비 지원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서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신규 고용 인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가장 큼

□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효과

- 시도별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대구와 충북이 강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기 위해 오프셋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대구와 대전이 강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강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부산은 강원과 통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대구와 충북은 통계적으로 강원보다 신규 고용이 더 많음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강원보다 신규 고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오프셋 포아송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결과, 대구와 대전의 신규 고용이 강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시도의 신규 고용은 강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이로 미루어볼 때,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이 같은 경우 지방이전 혜택을 받은 기업의 신규 고용은 대전과 대구가 가장 크고, 세종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유형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와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기 위한 오프셋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모두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보다 신규 고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증설은 신설에 비해 신규 고용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징은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은 반면 증설은 신설에 비해 신규 고용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유형에 따른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와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한 오프셋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모두 고용 및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유형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고용 및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장 크고,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입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설비 및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고용과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폐지된 것을 감안할 때, 입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신규 고용 인원이 제일 크고,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작음

- 오프셋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로 분석한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고용 및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장 크고,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설비 및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입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순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에 따른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오프셋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는 이와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남

- 수혜 기업 중 기업 규모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가장 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는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로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가장 크고, 중견기업, 대기업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역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견기업은 부산, 대구, 광주, 강원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비해 큰 반면 중소기업은 부산, 대전, 충북,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시사점

- 현재와 같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도별, 지원 유형별, 보조금 유형별, 기업 규모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향후 시도별, 지원 유형별, 보조금 유형별, 기업 규모별 정책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전체 변수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과 변수별 포아송 회귀분석을 수행함
- 현행과 동일하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도별, 지원 유형별, 보조금 유형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제도의 수혜 기업 중 강원의 고용은 대전과 동일하고 부산과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신규 고용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하는 경우에도 강원의 고용은 대전과 통계적으로 동일하고 대구와 **광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고,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는 경우 역시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유형 중에서는 입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신규 고용 인원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한 경우에는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기업 규모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크지만,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정책 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은 비용으로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원의 경우, 시도별로는 대구와 광주, 지원 유형별로는 이전에 대한 지원, 보조금 유형별로는 입지 및 설비에 대한 지원,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현행과 달리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도별, 지원 유형별, 보조금 유형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제도의 수혜 기업 중 대구와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신규 고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하는 경우에는 대구와 대전의 신규 고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고,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는 경우 역시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유형 중에서는 입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신규 고용 인원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한 경우에는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크지만,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정책 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시도별로는 대구와 충북에

대한 지원, 지원 유형별로는 이전 지원, 보조금 유형별로는 입지에 대한 지원,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은 비용으로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원의 경우, 시도별로는 대구와 대전, 지원 유형별로는 이전에 대한 지원, 보조금 유형별로는 입지 및 설비에 대한 지원,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5.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조사의 목적 및 배경

-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활동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함
  - 투자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투자기업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실제 지방투자가 이루어진 업체에 대한 고용효과 실태를 조사
- 또한 정책지원 대상의 특성별 지방투자지원제도의 고용효과 차이를 파악하고, 유효한 정책 수단 및 대상 설정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방투자 지원 대상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동 제도의 목표하는 기대효과와 부합하는가를 파악

### □ 조사의 설계 및 방법

- (모집단) 모집단은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수도권 활동 기

업 또는 사업체

- 지방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과 애로사항 발굴이 주요 연구 대상이므로, 한정적 집단 즉 지방투자 보조금을 수령한 현재 비수도권 소재 기업 또는 사업체가 해당
- 2005~2022년까지 지방투자보조금을 수령하고 실제 신규 고용계획을 완수한 기업
- (조사업체 수) 지방투자보조금의 집행에 실제 관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 명부를 토대로 조사하되 약 200개 정도의 유효표본을 목표로 하였으며, 최종 확보된 유효표본은 201개
- (조사방법)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원과 업체 담당자의 1:1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업체가 희망하는 조사 방법을 우선 적용
-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Fax/E-mail 조사 및 필요시 전화조사를 병행

#### □ 조사의 내용 및 구성

- 노동시장 균형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 관점으로 구분하고, 각각 촉진과 수급 관리라는 정책 방향하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
- 우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결정 요인과 애로사항 탐색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투자 활성화, 즉 노동수요 관점의 지방투자 실태를 점검
-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투자에 수반되어 주어진 노동수요와의 매칭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동공급 관점의 지방투자 실태점검 내용으로 구성

#### □ 실태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 (조사 대상의 대표성) 지방투자 응답 기업은 중소기업 82.1%, 대기

업 2%이며, 업체 평균 고용은 30~100인이 48.8%를 차지

- 국내 전체 기업의 모집단 규모별 분포와 비교하여 대기업 비중이 크고 업체당 평균 고용도 많지만, 현행 제도상 진입 요건을 고려한다면, 기업 규모 측면에서 조사 대상 표본으로서의 대표성은 가진 것으로 판단
- 대기업 비중은 두 배 정도 크게 나타났는데, 보조금 자격요건-심사의 문턱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준
- 종사자 규모 분포를 비교해도 모집단 조사의 고용 규모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사업장 및 신규 투자 사업장의 최소 고용 규모에 대한 요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투자 규모 현황) 신규투자가 기존 사업 확장 개념에 가까운 신·증설은 클러스터 입지 유인이 크며, 이전 투자는 규모도 크고 굳이 동종산업의 집적이 아니더라도 입지의 수급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추론 가능

- 투자 규모에서도 설비투자는 신·증설 대비 이전 투자가 9배, 부지매입 투자 16배를 상회하여 총투자는 9.5배로 상당한 투자 규모의 차이를 현시

#### □ 지방투자의 결정 요인과 애로사항

- (지방투자의 Push factor) 5점 척도의 점수를 종합·비교 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투자유치의 노력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
- (지방투자의 Pull factor) 지방투자 대상 지역을 선택하는 요인인 Pull factor에서도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투자유치의 노력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
- (지방투자의 애로 요인) 지방투자 애로 요인상 인력확보 부문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규제

#### □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규모와 구성) 지방투자 후 고용 규모는 1.16배 증가하였으며, 지방투자 전후 전체 정규직으로 구성된 사업장 비중은 평균 80%에 육박하고, 80~90%를 유지하는 사업장 비중은 오히려 증가
  - 20·30대 연령대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신규 투자 사업장 개설에 의한 신규 채용, 이전에 따르는 퇴직 등으로 인력 재구조화가 일부 발현
- (계획 대비 달성률과 애로사항) 고용계획 대비 현재 고용 달성률은 업체 유형과 무관하게 90% 이상의 고용 달성률을 보인 가운데, 주요 달성률 제고의 애로사항으로 노동력 수급이라고 응답
- (이직 현황) 생산직 이직은 업체당 평균 9.2명(신규 고용 28.7명 대비 32%), 사무·영업직은 2.8명(신규 고용 7.5명 대비 37.3%), 연구개발직은 1.1명(신규 고용 2.9명 대비 37.9%)
- (채용의 애로사항) 채용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직군은 단순생산>생산기술직>연구개발직 순이며 지역별로는 상대적 격차 발생

#### □ 지방투자 일자리의 질적 평가

- (임금 수준) 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
- (복리후생) 복리후생 수준은 동종업계 대비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숙련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낮게 평가되어 해당 수준에 복리후생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함을 현시
-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동종업계 대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생산직은 타 직종 대비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
- (연차별 퇴사율) 1년차 미만 퇴사율 기준 생산직은 29.9%로 사무·영업직(15.8%), 연구개발직(9.1%) 대비 상당히 높으며, 2년차 미

만 퇴사율 기준으로 생산직이 11.6%로 가장 높음

- (근로자 교육훈련 제공 수준) 전반적으로 제공되는 교육훈련 수준에 대해 동종업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응답

#### □ 지방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

- 정부 지원 수혜 기업의 절반 정도인 52.2%가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공보물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이라고 응답, 수혜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탐색한 것으로 보임
- 지원 신청과정 애로사항은 ‘신청과정의 행정 준비’가 67.7%, 생산과정 행정 준비’도 1+2순위 기준 52.2%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 심층 인터뷰 결과종합 및 시사점

- (지방투자 요인)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지방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생산 확대, 신사업 진출, 다각화 등 기업 및 산업의 생애주기상 단계별 수요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
- 지방투자 입지의 결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노력과 지자체가 혜택으로 제공하는 요소비용이 크게 작용
- 일반적 정책지원 자체보다 지자체의 적극성에 의한 입지 선택 영향이 유의미
- 신·증설 입지 선택은 기존 사업장 입지와 관련한 입지를 선택하고, 사업장 이전은 사업의 핵심 부문의 기존 입지를 포기해야 하므로 핵심 부문 이전의 영향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산업집적의 효과는 부차적인 고려사항
- (지방투자 애로사항) 인력 이탈 및 확보 어려움은 실태조사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크게 나타났으며, 투자 철회를 고려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지방투자 촉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파악

- 특히 중·저숙련 생산직의 양적 수급이 가장 어려운데, 지방투자 사업장이 대부분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생산직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특정 지역 내에서는 인력 유치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
- 지방투자 사업장 주변 인프라 부족도 인력 수급 애로를 심화시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정적 요인(실태조사에서도 셋째 Pull factor)
- (지방투자자와 일자리) 대부분 지방투자 고용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로는 지속적인 채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중도 이탈률 때문
  - 지방이전에 따라 기존 인력 대비 최소 30%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생산직의 이탈 비중이 큼
  - 신규입직의 1년 퇴사율이 높으며, 특히 생산직의 경우 임금 차이에 의한 이직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초과근로 및 근로강도에 대한 세대별 감수성 차이는 청년근로의 고용유지율에도 악영향
- (고용의 질) 통상적으로 투자기업은 투자 초기 매몰비용으로 인해 근로의 질 개선을 위한 여력 부족을 경험
  - 주변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의 지방투자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식사, 교통, 주거 등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발생하며, 지방투자자는 대부분 이를 기본적 사항으로 인식
- (고숙련 노동자 수급 애로) 대구 의료첨단산업 복합단지의 ‘의료기기 전문가과정’(주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구체성과 대상목적성이 뚜렷한 경우임
- (자동화 수요 증대) 기술직 등 중숙련 직업군, 특화된 숙련의 근로자일수록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저숙련 생산직 부족 현상과 함께 자동화 압력으로 작용
  - 특정 숙련 부문 인력을 수급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수급애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구체적으로 조립/품질 등 생산직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로 대체 될 것
- (지방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반 서류 사항이 과다하고 잦은 담당자의 변경과 안내 및 교육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
- 지자체의 적극성이 투자유치에 주요 요인임을 고려한다면 잦은 담당자 변경은 이에 반하는 요소로 투자유치 단계뿐 아니라 지자체 대 기업 행정서비스의 전문성 혹은 연속성이 정부 지원의 질을 좌우
- (추가 요청사항) 지원 조건 완화, 노동시장 범위 확대, 투자지원 등 다양한 측면의 정부 지원을 요청, 주민등록 이전 유예, 지원 시 지역 노동시장 범위 확대, 내일채움공제 등의 조건 완화, 공통 교육을 통한 인재풀 형성 지원, 최저 임금제 동일 적용에 따른 역차별 해소, 환경 개선 등에 대한 투자지원 등을 요청

#### □ 소 결

- 지방투자 결정은 기업과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사업적 필요로 촉발되는 바가 크므로, 지방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 및 업종의 특성과 성격에 대한 사전파악과 이에 기반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마련 필요
- 지방투자 입지 결정은 투자유치 지자체의 노력과 비용 요인에 의존
  - 최종적으로 지방투자가 실현되는 것은 유치 지역 간 경쟁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지 여부이며,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은 적극적인 지자체 유치 노력과 저렴한 부지 등 본원적 생산요소 확보가 중요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비용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 인접지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증설 기업은 기존 사업장과의 거리 및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근접성을 이유로 입지 선정
  - 정책변수로 활용 가능한 것은 AM특장(전북 김제시)의 사례와 같

## 이 시험·검사장 등 시험 및 인증시설의 인접성 제고

### □ 노동력 확보와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애로 요인

-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 환경으로서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차원의 접근 요구
- 직종 중 생산직, 청년근로자 수급이 가장 어려우며, 청년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근로강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음
- 생산직 등 저숙련 노동은 임금 민감도가 높아 이직 경향성이 높음
- 전반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단순노무)는 자동화·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기술(품질관리, 분석, 공정기술, 생산관리 등) 및 중숙련 근로자의 내국인 근로자 수요는 지속할 것

### ○ 수도권 인접지역의 경우, 인접한 노동시장의 더 좋은 일자리와 지방투자 사업장의 인력경쟁으로 인한 인력 수급이 어려움

- 수도권 광역교통 인프라 대비 낙후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단별 통근버스 지원 및 인프라 부족의 보완적 정책이 강화될 필요
- 비수도권 정주여건에 대한 하드웨어 확충은 단시일 내 어려우므로, 인접 정주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거나, 근로자의 이주 결정 및 가족 동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행기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

### □ 근로환경설비 투자 가중치 확대

- 근로환경설비는 일자리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사업주는 근로환경설비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근로 설비는 사업장 신설투자 완료 후에는 개선이 어려움
- 따라서, 지방투자보조금의 설비투자 하위 비목 중 근로환경설비 목적 투자에 대한 보조율 가산 지원 고려

#### □ 지방투자 사업장에서 창출되는 신규 근로자의 지원 확대

- 전반적으로 지방투자 지원제도는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근로자 단위의 지방이전 및 지방 취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
-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등이 있으나,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근로자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투자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고려 가능

#### ○ 인력양성 및 매칭서비스의 지역 특화형 수요군의 발굴 및 타깃 프로그램 기획이 매우 중요

- 중숙련 이상의 품질(QA, QC) 관련, 공정기술 관련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 관련학과 졸업생을 수요로 하나 주변 대학의 관련 전공 졸업생이 부족한 경우 다수
- 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기기 전문가과정' 사례와 같이, 구체성과 대상목적성이 뚜렷한 경우 만족도 증가
- 동종 업종, 동류의 사업체 간에는 한정된 지역의 인력풀에 대해 경쟁하는 양상으로 보여 민간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은 어려우므로 중간조정-기획의 역할을 하는 주체 필수

#### □ 행정 간소화와 투자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

- 투자 과정에서 투자 주체들이 느끼는 행정상의 문제점들은 투자의 촉발과 지속 그리고 확산 등에 중요하므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조정과 역량 강화가 요구

## 6.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한 제언

### 가.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투자에 집중

- ☐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투자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투자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
- ☐ 정량분석 결과, 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유형별로는 이전에 대한 지원, 보조금 유형별로는 입지 및 설비에 대한 지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난 사실에 기반하여,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원 예산을 기여도에 따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을 가산 지원하는 규모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장에서 이러한 신규 고용에 따른 설비보조금 가산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바, 기존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
- ☐ 신·증설 지원보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신규 고용창출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신설 및 증설보다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및 협력

- ☐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가장 큰 Push factor가 지방투자 지원제도의 존재인 만큼 기존 지원제도의 확대를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제도의 성공적 정착도 중요

- 기업이 지방에 투자함에 있어 중요한 Pull factor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꼽음
- 기업의 입장에서 지방투자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큰 모험을 의미하며, 미래의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의 심도 있는 소통과 지원을 통해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
- 행정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
-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청과정 및 정산과정 행정’의 어려움,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 교체 시 복잡한 업무 파악에 대한 시간 소요로 행정절차 지연’을 꼽음에 따라 지자체가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부서를 통할하는 ‘기업투자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지방투자 희망 기업 연계망 구축
- 이전이나 투자 지역 선정에 있어 일관된 채널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전 및 투자 적합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며, 지자체 역시 이전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필요시 민간 리서치 회사 등에 보조금을 주고 구득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지방투자 희망 기업이 투자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노력

-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시험·검사·인증 시설의 인접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유치산업 배려를 위해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술 검증) 테스트베드는 기업들에게 그들의 기술이나 솔루션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추가적인 투자 유치) 실제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테스트베드 결과는 외부 투자자나 파트너 기업의 관심을 끌 수 있어, 추가적인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

다. 지방투자기업의 필요 인력 수급을 위한 노력

- 지방투자 과정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근로자 이탈 및 인력 확보 어려움’이 지적됨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
-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무직, 영업직은 역내에서 신규 조달이 용이하지만 생산직과 고숙련 전문인력의 조달이 가장 어렵다고 토로
  - 단순 생산직의 경우 단기 계약직의 수요가 많고 국내 청년층의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자동화 투자를 통해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
  - 고숙련 전문인력은 주로 동종업계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입사원을 뽑아서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에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력직 채용을 선호
  - 그러나 경력직 채용 시 신입직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숙소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 또한, 경력직은 주로 헤드헌터를 통해 수급하는데 이 역시 비용이 발생
- 따라서 생산직과 전문인력의 고용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두 직군 인력 조달 해소를 위해 서로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

#### □ 생산직 인력 수급을 위한 개선방안

- 부족한 정주여건 등의 인프라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한 직장 내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을 대폭 확대
  - 식사, 교통, 주거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
- 근로환경설비는 일자리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비금전적 요소이지만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
  - 지방투자보조금의 설비투자 하위 비목 중 근로환경설비 목적 투자에 대한 보조율 가산 지원 고려
- 국내 노동자들이 더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에 따라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지자체 고용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정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지 기준을 유예
  - 인접지역에서 수급한 근로 인구를 본 지역의 생활인구로 간주하여 고용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
- 생산 공정에서 자동화 및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집약도를 줄임

#### □ 고급인력 조달을 위한 개선방안

- 보조금 및 세제혜택, 정주여건 개선 및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경력직 수급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후생, 환경 개선, 안전에 대한 관

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잘 이뤄지지만 해도 이직·이탈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보다 활발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기대

-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고용의 양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고급인력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제고될 여지가 있음
-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숙련 인력 수급 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설비 메인テナンス, QA, QC, 연구개발(R&D) 등의 전문인력 조달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급 인력 수급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MOU를 맺어서 필요 인력을 조사하고, 지역대학 배출 인력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인력 수요 예측 및 매칭

-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이전 및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전략이 필요
- 이를 위해 산업 분석과 비전을 설정
  - 지역의 산업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지역경제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 지역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를 형성할 지역을 지정
  -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 내 기존 산업단지를 넘어선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앵커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도 함께 경주할 필요

- 산업 분석을 통해 도출된 특화산업에 필요한 인재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
- 지역 대학의 졸업생들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



##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어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발전이 주요 이슈로 등장
- 특히,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의 56.9%(사업체 수 기준), 64.3%(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
  - 2019년 기준 총 2,757개 상장사 중에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917개로 전체의 약 40.6%를 차지하고, 수도권 전체로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본다면 약 70.2%를 차지함
  - 2020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64개 중에서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집단은 50개, 수도권 전체로는 56개가 집중됨(공정거래위원회, 2020)
- 정부는 1999년 이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해 조세감면을 강화(기업 이전 조세특례제도)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 정책을 통해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

- 1994년 이후 지방자치와 함께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가 추진해 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주요 지역투자 정책과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
  - (지역투자 촉진) 2021년 성과로, 69개 기업을 유치하여 보조금 1,923억 원 교부 결정, 1조 7,203억 원의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신규 일자리 3,286개 창출
  - (투자유치기반 조성) 2021년 성과로 FDI 실적은 295억 달러(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외국인투자지역지정 8개(2018년) → 2개(2019년) → 4개(2020년) → 4개(2021년))
-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지원 대상이 신·증설투자(2011년), 국내복귀(2012년), 개성공단기업(2014년)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인 2020년에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으로 확대
  - 현재 시행 중인 지방주도형 투자 및 일자리 사업으로는 광주형일자리, 밀양형일자리, 부산형일자리, 횡성형일자리, 군산형일자리, 구미형일자리 등
-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으로 인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Development Zones)’를 실행할 계획
  -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115번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에 포함되어 미국이 추진 중인 Opportunity Zones와 같이, 민간(기업) 및 지방 주도의 민·관 파트너십이 강조
  - 현 정부에서는 투자기업과 지자체가 협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으로 지역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추진 중
  - 현재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023년 11월까지 광역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음
  - 이렇게 최근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이슈화됨

## 2. 선행연구 검토

-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효과를 일차리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주로 제도 소개나 해당연도의 단순성과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22)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및 시·도 발전시행계획』에서는 지역투자 촉진, 투자유치기반 조성 등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관련 정책과 계획 소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22)의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관련 세부사업의 성과와 과제 등을 제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역투자보조금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만 많음
  - 박재곤(2010)은 기업지방이전보조금과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투자보조금의 개편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
  - 김은경(2009a)은 중국 이전 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였고, 김은경(2009b)은 일본 기업들의 U-턴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일본 정부의 U-턴 기업 지원 정책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U-턴 기업의 지원방안을 제시
  - 김광국 외(2016)는 지역투자보조금 집행실적과 추진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
  - 박건우·윤성일(2019)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이론적 검토를 거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 설영훈(2015)은 충북으로 본사 이전을 완료한 수도권 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운영단계 효과를 지역 내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곽창원 외(2019)는 기업의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투자결정 요인에 관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함. 투자결정 요인 분석을 위하여 생산요소 조달, 산업집적도, 지역기반시설, 행정 및 정책지원, 투자가치의 5가지 영역과 세부적으로 속한 12개의 항목들로 구성된 AHP 분석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투자결정 요인 중에서 생산요소 조달, 투자가치, 행정 및 정책지원, 산업집적도 그리고 지역기반시설 순으로 나타남

- 이유진·김의준(2017)은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제도와 관련한 수도권 제조업체의 비수도권 이동 확률 변화 분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정책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김정홍 외(2020)는 고용보험DB와 실태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혁신도시 입주 기업의 성과 및 산업생태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성과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혁신도시 입주 기업의 성과 제고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
- 문남철(2006)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과 이전 기업의 공간적 패턴과 이전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허동숙·박경(2021)은 국내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고, 국내기업 본사의 비수도권 이전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
- 정윤선(2016)은 기업의 지역 간 이동분석 및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기업의 지역 간 이동패턴을 분석하고, 이동기업의 지역 고용증가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이동패턴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입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서울을 포함한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등 대도시에서 인근 외곽지역으로 이동패턴이 확인
  - 수도권에서 인근 충청권 및 강원권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지며, 이동기업의 고용증가 효과를 실증분석
  - 이동기업이 비이동기업에 비해 고용증가 효과가 크고, 기업 유입으로 인한 지역의 고용증가 외에 추가적인 증가 효과 발생 등 지역경제에

### 긍정적 영향

- 이유진 외(2020)는 기업의 입지 이동이 고용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고, 기업의 유치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
  - 특히, 사업체의 입지 이전에 따른 고용 측면의 효과를 분석함. 비이동 사업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동 사업체는 이동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비이동기업에 비해 종사자 수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큰 값으로 나타나 광역지자체 간 이동의 경우 입지 이전에 따른 순 편익이 발생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
- 현 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기회발전특구’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박상수·허원제(2022)는 ‘기회발전특구’와 유사한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현행 특구들의 조세지원 제도의 현황 및 평가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지원 방향을 제시
  - 미국의 기회특구 조세지원 제도가 저소득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기반의 조세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회발전특구 제도 설계에 여러 함의를 제공
- 최진섭(2022)도 미국의 ‘기회특구제도’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기회발전특구안’ 구체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3. 연구 목적과 내용

### □ 연구의 목적

- 정부는 1999년 이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일자리 측면에서 이들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와 정책대안 도출이 시급

- 기업 이전 조세특례제도 이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도시개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 등 다양한 지방 균형발전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의 기업 본사 집중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임
- 정보, 인재, 중앙정부 및 금융기관, 해외 접근성 등 수도권이 압도적인 입지경쟁력을 지닌 현실에서 세제혜택과 입지 공급 등을 통해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려는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까지 추진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면밀한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될 관련 정책의 고용효과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방자치와 함께 산업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 중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과 정책개선 방안 도출
  - 이를 통해, 최근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정책 등의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한 제언을 제시

#### □ 연구의 내용

- 산업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을 중심으로 고용영향(효과)을 분석하고자 함
  - 정량분석(양적 분석)에서는 산업부로부터 제공받은 2004~2023년 6월까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통계를 기초로 고용보험DB까지 연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함
  - 정성분석(질적 분석)에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미비함에 따라, 적합한 업체들을 선정하고 근로(노동)실태 조사 및 심층 인터뷰(FGI) 등을 진행하여 고용의 질적 효과를 분석함
-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
  - 정성분석과 정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일자리 창출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고,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

- 본 연구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DB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 이와 관련된 지방이전제도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및 상생형일자리사업을 소개함

### 제1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1. 목적 및 지원대상

-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을 운영
- 지자체의 주요한 기업유치 정책수단으로서, 기업의 투자 규모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기업의 투자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균특법」 제정과 함께 2004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입지 및 설비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을 시작
- 이후 지자체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2011년), 국내복귀기업(2012년), 개성공단입주기업(2014년), 대체투자·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2016년),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2019년),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2020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 2023년부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포항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 2.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금(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국비:100억 원 이하)

〈표 2-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개정내용 적용)

(단위: %)

| 지원 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칭 비율<br>(국비: 지방비) |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br>(설비) 3  | -<br>(설비) 5        | (입지) 9<br>(설비) 7   | 45 : 55            |
| 균형발전 중위지역 | -<br>(설비) 5  | (입지) 10<br>(설비) 7  | (입지) 30<br>(설비) 9  | 65 : 35            |
| 균형발전 하위지역 | -<br>(설비) 8  | (입지) 20<br>(설비) 11 | (입지) 40<br>(설비) 14 | 75 : 25            |
| 산업위기대응지역  | -<br>(설비) 11 | (입지) 25<br>(설비) 19 | (입지) 50<br>(설비) 24 | 75 : 25            |

- 다음의 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 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대상

|     | 대상 지역                                                                                                                                            |
|-----|--------------------------------------------------------------------------------------------------------------------------------------------------|
| 서울시 | 전 역                                                                                                                                              |
| 인천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를 제외한 전역                                                                                 |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화성시, 양주시, 김포시, 포천시, 안산시에 한함 |

주: 위 대상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

○ 낙후지역의 지원 비율에 대한 특례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는 지자체가 기업에 보조하는 금액(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의 최대 80%까지 보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낙후지역으로 함

\* 그 외의 경우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50 : 50

-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 그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추후 행자부장관이 고시할 예정)

-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10% 가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규 고용인원 수별 추가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2-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비율(개정내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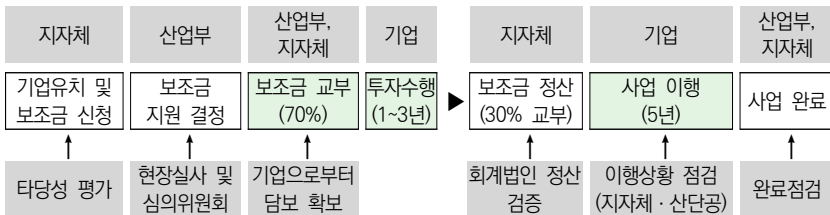
(단위: %p)

| 신규 고용인원 수     | 추가 지원 비율 |      |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15명 이상 20명 미만 | -        | -    | 2    |
| 20명 이상 30명 미만 | -        | -    | 3    |
| 30명 이상 40명 미만 | -        | -    | 4    |
| 40명 이상 50명 미만 | -        | 1    | 5    |
| 50명 이상 60명 미만 | -        | 2    | 6    |
| 60명 이상 70명 미만 | -        | 3    | 7    |
| 70명 이상 80명 미만 | -        | 4    | 8    |
| 80명 이상        | 3        | 5    | 10   |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업부에서는 현장실사 및 타당성 평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결정

- 보조금은 입지투자비(부지매입비)의 최대 50%, 설비투자비(공장 신·증축 및 기계장비 구입비)의 최대 44%까지 지원
- 기업당 국비 100억 원(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경우 150억 원)까지 지원 가능
- 국비에 지방비가 추가로 매칭되어 투자기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그림 2-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 3. 추진현황 및 성과

- 2022년에는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 전체적으로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에게 3,439억 원(국비 2,056억 원, 지방비 1,383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 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
  - 이러한 실적은 전년과 대비해 볼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민간투자는 약 9천억 원(↑52.9%) 증가하였으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25개(↑6.8%) 증가(산업통상자원부, 2022)
- 사업을 개시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총 1,376개 기업에 1조 9,372억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26조 8,933억 원의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6만 8,879개의 지역 신규 일자리를 창출
-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지원의 경우 2018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 4개, 2019년 12개, 2020년 11개, 2021년 9개 기업에 보조금 총

2,270억 원(국비 1,789억 원, 지방비 481억 원)을 지원

-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지원의 경우 2021년에 전북 군산·부산(2월), 경북 구미(12월) 등 3개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하고, 전북 군산·부산 기업에 보조금 총액 314억 원(국비 216억 원, 지방비 98억 원) 지원

〈표 2-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실적

(단위: 개, 억 원)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지원기업 수   | 89    | 71    | 72    | 69    | 62    |
| 지원 예산 합계 | 2,307 | 2,774 | 3,451 | 2,768 | 3,439 |
| 국 비      | 1,701 | 2,073 | 2,553 | 1,959 | 2,056 |
| 지방비      | 606   | 701   | 899   | 809   | 1,383 |

## 제2절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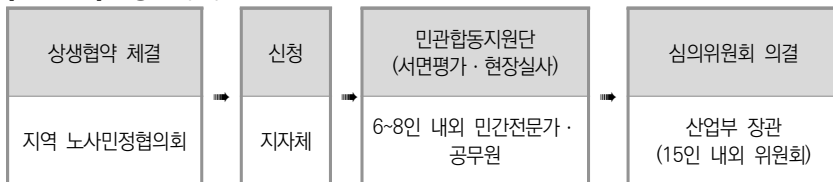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지역경제는 그동안 지역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 저하, 신산업 발굴 지체, 지역 간 투자 불균형 심화, 지역기업 이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지역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을 지속
- (필요성) 지역산업의 위축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중기적으로 지역일자리 규모를 확보하고 일자리·투자의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상생협력을 통해 극복할 필요
- 노사협력의 강화를 통해 직무급제 등의 선진 임금체계의 도입, 업종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분규의 자제, 전환 혹은 신생 산업의 공급망 구성에 필요한 공정한 기업 간 거래 질서 확립 등의 과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의 중재 및 촉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모델로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이 제시

## 2.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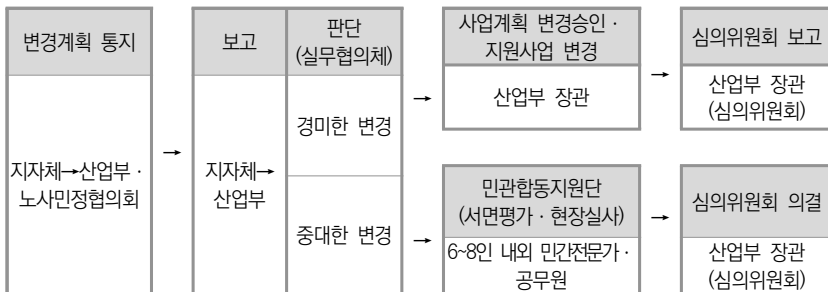
- 2019년 2월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기점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법·제도 마련의 첫 단계로 2020년 4월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 2)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
  - 산업부가 주관부처로서 선정평가 및 운영을 주도하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후보 사업 발굴을 지원
  - 사업발굴 추진을 위해 산업부와 지원기관은 권역별 온·오프라인 지역순회 설명회를 병행하여 사업개요, 선정사례,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 중앙지원사업 선정뿐 아니라 산업부(2020)-일자리위원회(2021, 특화전문 컨설팅)와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 컨설팅을 통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잠재 후보사업을 발굴·고도화하는 데 역량을 투입
  -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평가 및 운영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을 위한 서면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를 통해 확정
  - 이 과정에서 민관합동지원단 및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노사관계, 노동, 해당 사업의 업종별 전문가, 지역정책 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 평가 참여 등을 유도하여 선정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 유형에 대응

[그림 2-2] 신청 절차 개요



- 2020년은 사업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구축하고 선정에 그 초점이 있었다면, 2021년은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의 이행과 안착, 상생협력모델의 이행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간점검, 환류체계를 구축
  - 2021년 사업기간 1년이 경과되는 사업은 2020년 선정된 광주형 일자리, 경남 밀양형 일자리, 강원 횡성형 일자리로 각각 2021년 6월(광주), 10월(강원 횡성, 경남 밀양)에 1년이 경과됨에 따라 2021년 사업을 통해 운영보고서 작성 및 검토 지침 마련을 우선으로 진행
  - 수시점검을 위해 '월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의 투자·고용 및 주요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검회의(강원형 일자리 6월, 밀양형 일자리 7월, 부산형 일자리 7월)를 개최하여 사업의 진행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
  - 환류체계의 일환으로 사업계획변경 심의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여 부산형 일자리(2021년 10월)와 강원 횡성형 일자리(2021년 12월)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완료

[그림 2-3] 사업변경 절차 개요



### 3. 추진현황 및 성과

- 2021년 12월 현재 6개 사업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중
- 2020년에는 광주형 일자리(2020년 6월)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형 일자리(2020년 10월), 강원 횡성형 일자리(2020년 10월) 총 3개의 사업을

## 선정

- 최초로 선정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23년 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 신규 설립(광주글로벌모터스) 후 경형 SUV ‘캐스퍼’의 양산(2021년 9월 출고)을 시작하였고, 사전예약 25,000대를 달성해 순조로운 출발
  - 밀양형 일자리는 친환경 산단 조성을 완료하고, 한황산업 등 기업의 이전이 시작
  - 강원형 일자리의 주도기업인 디피코는 초소형 전기화물차 ‘포트로’를 양산(2021년 10월 출고) 중
- 2021년에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2021년 2월), 부산형 일자리(2021년 2월), 구미형 일자리(2021년 12월) 총 3개의 사업을 선정
- 선정 평가 시 고려하는 사업계획 3년 내 총 투자 규모는 1조 8,572억 원, 총 고용 규모는 3,123명이며, 계획상 총투자 및 고용 규모는 각각 총 투자(입지, 설비) 2조 3천 683억 원, 총 고용 규모(직접, 신규, 정규직)는 4,197명
  - 군산형 일자리의 1호 생산 차량으로 대창모터스의 모델을 명신이 위탁생산한 ‘다니고 VAN’(2021년 6월 출고)의 양산을 시작

〈표 2-4〉 선정사업 투자 고용계획 규모

(단위: 억 원, 명)

| 선정사업  | 협약시점      | 선정시점      | 투자     | 고용    |
|-------|-----------|-----------|--------|-------|
| 광주    | 2019년 1월  | 2020년 6월  | 5,754  | 908   |
| 경남 밀양 | 2019년 6월  | 2020년 10월 | 3,403  | 505   |
| 강원 횡성 | 2019년 8월  | 2020년 10월 | 883    | 523   |
| 전북 군산 | 2019년 10월 | 2021년 2월  | 5,171  | 1,704 |
| 부산    | 2020년 2월  | 2021년 2월  | 3,526  | 370   |
| 경북 구미 | 2019년 7월  | 2021년 12월 | 4,946  | 187   |
| 전 체   |           |           | 23,683 | 4,197 |

- 2021년 12월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를 포함한 6개 선정지역의 2021년 12월 말(평균 11개월 경과시점) 투자·고용이행현황을 보면 사업계획 기간 3년 중 목표치 대비 투자는 51.9%(9,634억 원), 고용은 39.1%(1,220명)가 이행

〈표 2-5〉 선정사업 투자 고용계획 이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명, %)

|    | 지역       | 3년 내 목표(A) | 이행현황(B) | 집행률(B/A) |
|----|----------|------------|---------|----------|
| 투자 | 광주광역시    | 5,754      | 5,055   | 87.9     |
|    | 강원도 횡성군  | 732        | 454     | 62.0     |
|    | 전라북도 군산시 | 3,528      | 2,318   | 65.7     |
|    | 부산광역시    | 2,523      | 1,231   | 48.8     |
|    | 경상남도 밀양시 | 1,281      | 562     | 43.9     |
|    | 경상북도 구미시 | 4,754      | 14      | 0.3      |
|    | 전 체      | 18,572     | 9,634   | 51.9     |
| 고용 | 광주광역시    | 908        | 553     | 60.9     |
|    | 강원도 횡성군  | 307        | 146     | 47.6     |
|    | 전라북도 군산시 | 1,106      | 368     | 33.3     |
|    | 부산광역시    | 370        | 86      | 23.2     |
|    | 경상남도 밀양시 | 245        | 65      | 26.5     |
|    | 경상북도 구미시 | 187        | 2       | 1.1      |
|    | 전 체      | 3,123      | 1,220   | 39.1     |

##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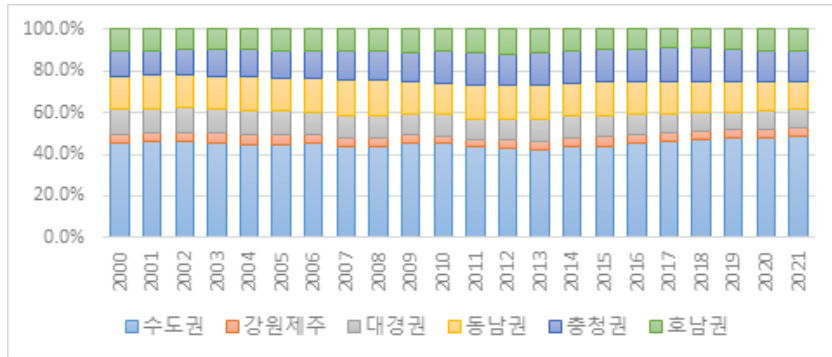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연계성

### 제1절 지역별 투자 동향

#### □ 권역별 투자 동향(2000~2021년)

- 2000년 이래 전체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 수도권보다 지속적으로 낮았으나, 2013년 이후 수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48.7%에 달하였고, 이는 2000년 45.4% 대비 상당히 증가한 수준임
  - 통계청 「지역소득 계정」의 총고정자본형성(2000~2021)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투자 비중 격차는 10% 내외였으나, 2021년에 이르러서는 2.6%에 불과
  - 신규투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지속되었음을 보이는 것임
  - 이에 더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산하여 비교해보면 2000년 58%에서 2021년에는 64%로 증가하여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지에 대한 투자 집중화 경향을 강하게 나타냄
-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이 전국 대비 투자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중에 그 외 지역은 모두 감소함
  - 동남권 15.6%(2000) → 13.2%(2021), 대경권 11.8%(2000) → 8.7%(2021), 호남권은 10.4%(2000) → 10.1%(2021)로 모두 감소

[그림 3-1] 권역별 총 고정자산 형성 비중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계정」, 실질.

〈표 3-1〉 권역별 총 고정자산 형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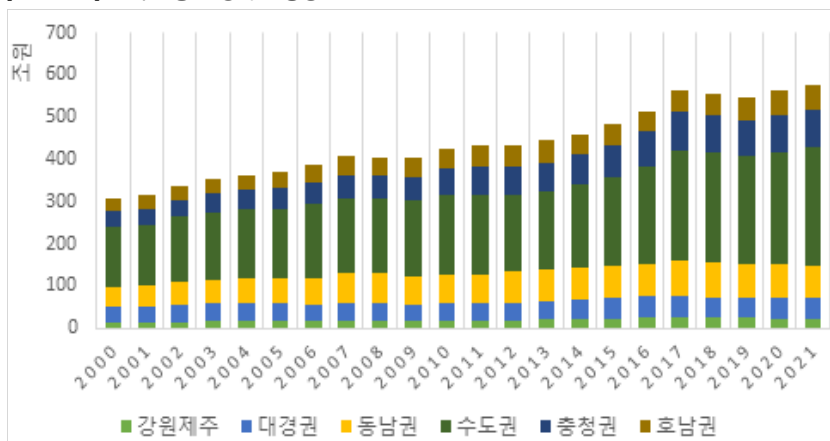
(단위: %)

|      | 수도권  | 강원·제주 | 대경권  | 동남권  | 충청권  | 호남권  |
|------|------|-------|------|------|------|------|
| 2000 | 45.4 | 4.3   | 11.8 | 15.6 | 12.6 | 10.4 |
| 2001 | 46.4 | 4.1   | 11.5 | 16.2 | 11.6 | 10.2 |
| 2002 | 45.8 | 4.1   | 12.3 | 16.2 | 12.0 | 9.6  |
| 2003 | 45.5 | 4.5   | 11.6 | 16.0 | 12.4 | 10.0 |
| 2004 | 44.8 | 4.3   | 11.5 | 16.9 | 12.9 | 9.6  |
| 2005 | 44.9 | 4.2   | 11.5 | 15.9 | 13.1 | 10.4 |
| 2006 | 45.4 | 4.2   | 10.2 | 16.3 | 13.6 | 10.3 |
| 2007 | 43.8 | 4.1   | 10.3 | 17.2 | 13.8 | 10.8 |
| 2008 | 43.8 | 3.8   | 10.8 | 17.2 | 13.5 | 10.8 |
| 2009 | 45.1 | 4.0   | 10.0 | 15.9 | 13.8 | 11.3 |
| 2010 | 44.9 | 3.9   | 10.2 | 15.3 | 14.9 | 10.8 |
| 2011 | 43.3 | 3.9   | 9.8  | 15.8 | 16.3 | 10.9 |
| 2012 | 42.8 | 4.2   | 9.9  | 16.6 | 14.7 | 11.7 |
| 2013 | 41.8 | 4.4   | 10.3 | 16.7 | 15.3 | 11.5 |
| 2014 | 43.3 | 4.5   | 10.2 | 16.1 | 15.4 | 10.3 |
| 2015 | 43.9 | 4.6   | 10.2 | 15.8 | 15.4 | 10.0 |
| 2016 | 45.0 | 4.8   | 9.6  | 15.4 | 15.9 | 9.3  |
| 2017 | 45.9 | 4.5   | 8.8  | 15.2 | 17.0 | 8.6  |
| 2018 | 47.0 | 4.2   | 8.5  | 15.1 | 15.9 | 9.2  |
| 2019 | 47.4 | 4.3   | 8.6  | 14.7 | 15.1 | 9.9  |
| 2020 | 47.7 | 4.1   | 8.7  | 13.8 | 15.1 | 10.5 |
| 2021 | 48.7 | 4.0   | 8.7  | 13.2 | 15.3 | 10.1 |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계정」, 실질.

- 투자의 규모는 전국단위 총고정자본 형성은 309.1조 원(2000)에서 576.7조 원(2021)으로 1.87배인 267.6조 원 증가
  - 수도권은 140.4조 원(2000)에서 281.1조 원(2021)으로 140.7조 원 증가하여 2.00배로 성장함
  - 충청권은 38.8조 원(2000)에서 88조 원(2021)으로 49.2조 원 증가하여 2.27배로 성장함
  - 동남권은 48.2조 원(2000)에서 75.9조 원(2000)으로 27.7조 원 증가하여 1.57배에 그쳐 전국 성장 대비 낮음
  - 대경권은 36.4조 원(2000)에서 50.3조 원(2000)으로 13.9조 원 증가하여 1.38배에 그쳐 전국 성장 대비 낮음
  - 호남권은 32.1조 원(2000)에서 58.4조 원(2000)으로 26.3조 원 증가하여 1.82배로 전국 성장과 유사한 수준
- 통계청 지역소득 계정의 총고정자본 형성을 통해 살펴본 권역별 투자동향은 비수도권투자의 상대적 약세를 장기간에 걸쳐 보였음
  -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의 상당한 성장세와 대비되는 동남권과 대경권의 낮은 성장세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 집적지에서의 투자보다 수도권과 그 영향력이 파급되는 인접지로의 신규투자 수요 이동의 경향성을 확인하는 근거임

[그림 3-2] 권역별 총 고정자본 형성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계정」, 실질.

〈표 3-2〉 권역별 총 고정자산 형성 규모

(단위:조 원)

|      | 강원·제주 | 대경권  | 동남권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전국    |
|------|-------|------|------|-------|------|------|-------|
| 2000 | 13.2  | 36.4 | 48.2 | 140.4 | 38.8 | 32.1 | 309.1 |
| 2001 | 12.9  | 36.0 | 51.0 | 145.8 | 36.4 | 32.2 | 314.3 |
| 2002 | 13.7  | 41.6 | 54.7 | 154.8 | 40.4 | 32.5 | 337.7 |
| 2003 | 16.0  | 41.0 | 57.0 | 161.8 | 43.9 | 35.6 | 355.3 |
| 2004 | 15.7  | 41.7 | 61.1 | 162.6 | 46.8 | 34.8 | 362.7 |
| 2005 | 15.5  | 42.4 | 58.7 | 165.7 | 48.5 | 38.4 | 369.2 |
| 2006 | 16.2  | 39.3 | 63.1 | 175.4 | 52.8 | 40.0 | 386.8 |
| 2007 | 16.8  | 41.8 | 70.3 | 178.7 | 56.1 | 44.0 | 407.7 |
| 2008 | 15.5  | 43.8 | 69.3 | 176.9 | 54.6 | 43.6 | 403.7 |
| 2009 | 16.2  | 40.3 | 64.3 | 182.3 | 55.7 | 45.7 | 404.5 |
| 2010 | 16.4  | 43.3 | 65.3 | 191.6 | 63.6 | 46.1 | 426.3 |
| 2011 | 17.0  | 42.1 | 68.0 | 187.0 | 70.3 | 47.1 | 431.5 |
| 2012 | 18.1  | 42.8 | 71.9 | 184.8 | 63.6 | 50.6 | 431.8 |
| 2013 | 19.3  | 45.6 | 74.4 | 185.7 | 68.2 | 51.3 | 444.5 |
| 2014 | 20.8  | 46.9 | 73.9 | 198.4 | 70.7 | 47.1 | 457.8 |
| 2015 | 22.4  | 49.2 | 76.5 | 211.8 | 74.3 | 48.3 | 482.5 |
| 2016 | 24.6  | 49.2 | 79.5 | 231.6 | 81.9 | 48.0 | 514.8 |
| 2017 | 25.6  | 49.3 | 86.0 | 258.6 | 95.9 | 48.4 | 563.8 |
| 2018 | 23.4  | 47.1 | 83.8 | 260.7 | 88.1 | 51.3 | 554.4 |
| 2019 | 23.4  | 46.7 | 80.0 | 258.8 | 82.7 | 54.3 | 545.9 |
| 2020 | 23.2  | 49.1 | 77.7 | 268.2 | 84.9 | 58.8 | 561.9 |
| 2021 | 23.0  | 50.3 | 75.9 | 281.1 | 88.0 | 58.4 | 576.7 |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계정」,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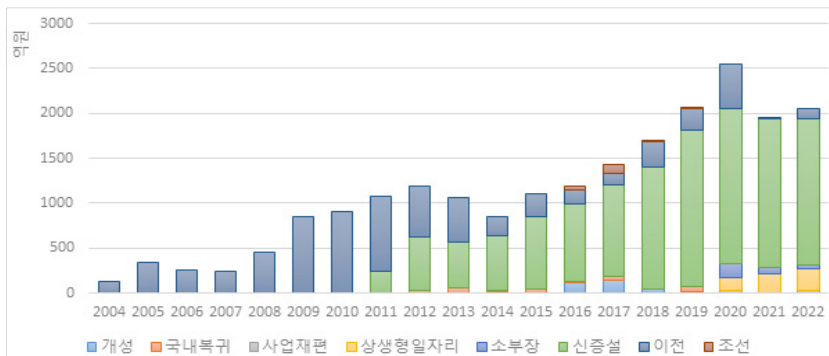
## 제2절 지방투자보조금 집행 실적

- 2004년 이래 총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증설 유형의 포함 이후 동 유형의 지원이 주를 이룸
- 2004~2010년 기간 동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이 전 부였으나, 2011년 신·증설 유형이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신·증설 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배적인 지원유형이 되었음

- 2011년 22.6%에서 이듬해인 2012년 50.0%로 빠르게 증가한 후, 2021년 84%, 2022년 79.3%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임
- 반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유형은 금액 기준으로 2011년 77.4%에서 2021년 1.2%, 2022년 5.7%로 미미한 수준에 그침
- 이러한 경향성은 지방으로의 이전보다는 수도권에 근거지를 마련한 기업이 지방사업장의 신·증설을 선호하는 현상임을 시사
  - 이는 본사, 연구소 등 핵심기능을 수도권에 존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됨
  - 지방사업장의 투자 중 신·증설 유형, 그중에서도 공장 등 생산시설의 투자가 지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분업화 경향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그림 3-3] 지방투자보조금 총 지원금액

(단위: 억 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3-3>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지원금액 비중

(단위: %)

|      | 개성 | 국내복귀 | 사업재편 | 상생형일자리 | 소부장 | 신·증설 | 이전    | 조선 |
|------|----|------|------|--------|-----|------|-------|----|
| 2004 |    |      |      |        |     |      | 100.0 |    |
| 2005 |    |      |      |        |     |      | 100.0 |    |
| 2006 |    |      |      |        |     |      | 100.0 |    |
| 2007 |    |      |      |        |     |      | 100.0 |    |
| 2008 |    |      |      |        |     |      | 100.0 |    |
| 2009 |    |      |      |        |     |      | 100.0 |    |
| 2010 |    |      |      |        |     |      | 100.0 |    |

〈표 3-3〉의 계속

|      | 개성   | 국내<br>복귀 | 사업<br>재편 | 상생형<br>일자리 | 소부장 | 신·증설 | 이전   | 조선  |
|------|------|----------|----------|------------|-----|------|------|-----|
| 2011 |      |          |          |            |     | 22.6 | 77.4 |     |
| 2012 |      | 2.6      |          |            |     | 50.0 | 47.4 |     |
| 2013 |      | 5.4      |          |            |     | 48.2 | 46.4 |     |
| 2014 | 1.3  | 1.8      |          |            |     | 72.4 | 24.4 |     |
| 2015 |      | 3.8      |          |            |     | 73.1 | 23.2 |     |
| 2016 | 9.8  | 1.3      |          |            |     | 71.6 | 13.9 | 3.3 |
| 2017 | 10.3 | 2.7      |          |            |     | 70.9 | 8.8  | 7.3 |
| 2018 | 2.2  |          |          |            |     | 80.2 | 16.6 | 1.0 |
| 2019 | 0.5  | 2.9      |          |            |     | 84.2 | 11.4 | 1.0 |
| 2020 |      |          | 0.9      | 5.9        | 6.1 | 67.4 | 19.7 |     |
| 2021 |      |          |          | 11.0       | 3.7 | 84.0 | 1.2  |     |
| 2022 |      |          | 1.3      | 11.7       | 1.9 | 79.3 | 5.7  |     |

□ 2012년 이래 총 지원 건수는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현시

○ 총 지원금액의 경향성과 마찬가지로 신·증설 지원 건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건수 기준으로는 2011년 45건 대비 2022년 51건으로 그 증가세가 명확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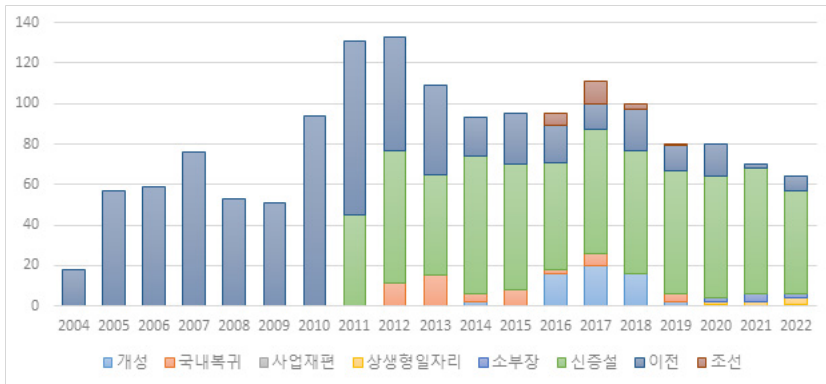
〈표 3-4〉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지원 건수

(단위: 건)

|      | 개성 | 국내<br>복귀 | 사업<br>재편 | 상생형<br>일자리 | 소부장 | 신·증설 | 이전 | 조선 |
|------|----|----------|----------|------------|-----|------|----|----|
| 2004 | .  | .        | .        | .          | .   | .    | 18 | .  |
| 2005 | .  | .        | .        | .          | .   | .    | 56 | .  |
| 2006 | .  | .        | .        | .          | .   | .    | 58 | .  |
| 2007 | .  | .        | .        | .          | .   | .    | 76 | .  |
| 2008 | .  | .        | .        | .          | .   | .    | 53 | .  |
| 2009 | .  | .        | .        | .          | .   | .    | 51 | .  |
| 2010 | .  | .        | .        | .          | .   | .    | 93 | .  |
| 2011 | .  | .        | .        | .          | .   | 45   | 86 | .  |
| 2012 | .  | 11       | .        | .          | .   | 66   | 55 | .  |
| 2013 | .  | 15       | .        | .          | .   | 50   | 44 | .  |
| 2014 | 2  | 4        | .        | .          | .   | 68   | 19 | .  |
| 2015 | .  | 8        | .        | .          | .   | 62   | 25 | .  |
| 2016 | 16 | 2        | .        | .          | .   | 53   | 18 | 6  |
| 2017 | 10 | 4        | .        | .          | .   | 61   | 8  | 11 |
| 2018 | 16 | .        | .        | .          | .   | 61   | 17 | 3  |
| 2019 | 1  | 2        | .        | .          | .   | 61   | 6  | 1  |
| 2020 | .  | .        | 1        | 1          | 2   | 60   | 16 | .  |
| 2021 | .  | .        | .        | 2          | 4   | 62   | 2  | .  |
| 2022 | .  | .        | 1        | 3          | 2   | 51   | 6  | .  |

[그림 3-4]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지원 건수

(단위: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반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건수는 2011년 86건에서 급속히 감소하여 2021년 2건, 2022년 6건에 불과하여 유형별 지원 건수의 구성비 변화는 지방이전 투자 유형의 급감에서 기인함을 시사
- 유형별 지원 규모를 유형별 지원 건수로 나누어 건당 지원금 규모를 산출했을 때, 전반적으로 지원 건당 지원 규모가 증가함
  - 이전투자 유형의 경우 2011년 14억 원 정도였던 금액이 가장 높았던 2019년에는 52.1억 원, 2020년에는 40.3억 원이었으며, 최근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2년 기준 28.4억 원으로 2011년 2배 이상 높은 수준
  - 신·증설 투자의 경우 2011년 7억 원, 2012년 11.3억 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2021년 사이 37~38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최근 2022년 기준 48억 원까지 건당 지원 규모가 상승함

<표 3-5>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건당 지원금액

(단위:억 원)

|      | 개성 | 국내복귀 | 사업재편 | 상생형일자리 | 소부장 | 신·증설 | 이전   | 조선 |
|------|----|------|------|--------|-----|------|------|----|
| 2004 | .  | .    | .    | .      | .   | .    | 14.0 | .  |
| 2005 | .  | .    | .    | .      | .   | .    | 12.1 | .  |
| 2006 | .  | .    | .    | .      | .   | .    | 8.0  | .  |
| 2007 | .  | .    | .    | .      | .   | .    | 5.9  | .  |

〈표 3-5〉의 계속

|      | 개성   | 국내<br>복귀 | 사업<br>재편 | 상생형<br>일자리 | 소부장   | 신·증설 | 이전   | 조선   |
|------|------|----------|----------|------------|-------|------|------|------|
| 2008 | .    | .        | .        | .          | .     | .    | 13.4 | .    |
| 2009 | .    | .        | .        | .          | .     | .    | 22.9 | .    |
| 2010 | .    | .        | .        | .          | .     | .    | 13.2 | .    |
| 2011 | .    | .        | .        | .          | .     | 7.0  | 14.0 | .    |
| 2012 | .    | 4.0      | .        | .          | .     | 11.3 | 14.2 | .    |
| 2013 | .    | 5.1      | .        | .          | .     | 13.4 | 15.2 | .    |
| 2014 | 8.8  | 5.4      | .        | .          | .     | 13.1 | 15.1 | .    |
| 2015 | .    | 7.6      | .        | .          | .     | 20.0 | 15.3 | .    |
| 2016 | 10.7 | 9.8      | .        | .          | .     | 23.1 | 12.7 | 10.1 |
| 2017 | 23.3 | 13.3     | .        | .          | .     | 24.5 | 23.1 | 13.6 |
| 2018 | 4.6  | .        | .        | .          | .     | 30.0 | 22.0 | 8.6  |
| 2019 | 20.8 | 42.4     | .        | .          | .     | 38.2 | 52.1 | 26.4 |
| 2020 | .    | .        | 34.8     | 323.0      | 100.5 | 37.5 | 40.3 | .    |
| 2021 | .    | .        | .        | 156.8      | 31.1  | 37.0 | 17.8 | .    |
| 2022 | .    | .        | 38.4     | 232.3      | 42.0  | 48.0 | 28.4 | .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당시 시점에서 계획하고 약정한 신규 고용계획 규모는 2011년(9,701명) 이후 대개 4천 명을 하회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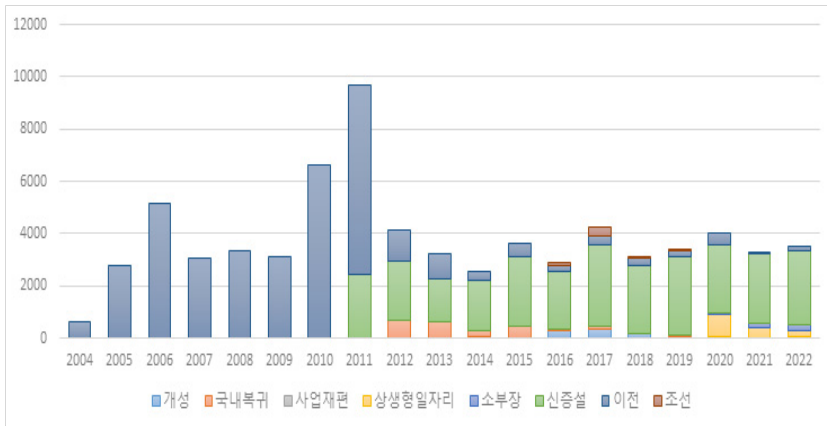
〈표 3-6〉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신규 고용계획 규모

(단위: 명)

|      | 개성  | 국내<br>복귀 | 사업<br>재편 | 상생형<br>일자리 | 소부장 | 신·증설  | 이전    | 조선  |
|------|-----|----------|----------|------------|-----|-------|-------|-----|
| 2004 | .   | .        | .        | .          | .   | .     | 622   | .   |
| 2005 | .   | .        | .        | .          | .   | .     | 2,776 | .   |
| 2006 | .   | .        | .        | .          | .   | .     | 5,149 | .   |
| 2007 | .   | .        | .        | .          | .   | .     | 3,072 | .   |
| 2008 | .   | .        | .        | .          | .   | .     | 3,365 | .   |
| 2009 | .   | .        | .        | .          | .   | .     | 3,130 | .   |
| 2010 | .   | .        | .        | .          | .   | .     | 6,612 | .   |
| 2011 | .   | .        | .        | .          | .   | 2,423 | 7,278 | .   |
| 2012 | .   | 687      | .        | .          | .   | 2,249 | 1207  | .   |
| 2013 | .   | 640      | .        | .          | .   | 1,604 | 993   | .   |
| 2014 | 61  | 205      | .        | .          | .   | 1,931 | 334   | .   |
| 2015 | .   | 443      | .        | .          | .   | 2,660 | 497   | .   |
| 2016 | 283 | 50       | .        | .          | .   | 2,196 | 243   | 126 |
| 2017 | 352 | 129      | .        | .          | .   | 3,086 | 365   | 317 |
| 2018 | 176 | .        | .        | .          | .   | 2,619 | 250   | 77  |
| 2019 | 64  | 75       | .        | .          | .   | 2,997 | 211   | 18  |
| 2020 | .   | .        | 85       | 842        | 66  | 2,602 | 413   | .   |
| 2021 | .   | .        | .        | 418        | 179 | 2,659 | 30    | .   |
| 2022 | .   | .        | 70       | 245        | 190 | 2,843 | 163   | .   |

[그림 3-5]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신규 고용계획 규모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계정, 실질.

- 신규 고용계획 규모의 측면에서도 지방이전 투자의 유형은 급속히 감소하였는데, 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10년(6,612명), 2011년(7,278명)과 비교하면 2021년의 30명, 2022년 163명은 상당히 줄어든 수치
- 신·증설 유형의 경우에도 신·증설 건수의 정체 경향성과 유사하게 2011년 2,423명 대비 2022년 2,843명으로 증가세가 확인되지 않음
- 유형별로 본 건당 신규 고용계획 규모의 추이를 보면 지방이전 투자유형은 2011년 이전과 이후 감소한 경향을 보이며, 신·증설 유형의 경우 50명 내외의 정체 경향을 보임
- 이전 투자유형의 경우 2004~2011년 기간 동안 최소 34.6~88.8명의 분포를 보였으나, 2012년부터 상당 기간 20명 내외의 수치를 보이며, 2021년 15명, 2022년 27.2명으로 나타나 건당 신규 고용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음
- 신·증설 유형의 경우 2011년 도입 이래 대체로 50명 내외의 건당 신규 고용계획 규모를 보여 지방이전 투자 대비 고용의 양적 기대효과는 크게 보임

〈표 3-7〉 지방투자보조금 유형별 지원 건당 신규 고용계획 규모

(단위: 명)

|      | 개성   | 국내<br>복귀 | 사업<br>재편 | 상생형<br>일자리 | 소부장  | 신·증설 | 이전   | 조선   |
|------|------|----------|----------|------------|------|------|------|------|
| 2004 |      |          |          |            |      |      | 34.6 |      |
| 2005 |      |          |          |            |      |      | 49.6 |      |
| 2006 |      |          |          |            |      |      | 88.8 |      |
| 2007 |      |          |          |            |      |      | 40.4 |      |
| 2008 |      |          |          |            |      |      | 63.5 |      |
| 2009 |      |          |          |            |      |      | 61.4 |      |
| 2010 |      |          |          |            |      |      | 71.1 |      |
| 2011 |      |          |          |            |      | 53.8 | 84.6 |      |
| 2012 |      | 62.5     |          |            |      | 34.1 | 21.9 |      |
| 2013 |      | 42.7     |          |            |      | 32.1 | 22.6 |      |
| 2014 | 30.5 | 51.3     |          |            |      | 28.4 | 17.6 |      |
| 2015 |      | 55.4     |          |            |      | 42.9 | 19.9 |      |
| 2016 | 17.7 | 25.0     |          |            |      | 41.4 | 13.5 | 21.0 |
| 2017 | 35.2 | 32.3     |          |            |      | 50.6 | 45.6 | 28.8 |
| 2018 | 11.0 |          |          |            |      | 42.9 | 14.7 | 25.7 |
| 2019 | 64.0 | 37.5     |          |            |      | 49.1 | 35.2 | 18.0 |
| 2020 |      |          | 85.0     | 842.0      | 33.0 | 43.4 | 25.8 |      |
| 2021 |      |          |          | 209.0      | 44.8 | 42.9 | 15.0 |      |
| 2022 |      |          | 70.0     | 81.7       | 95.0 | 55.7 | 27.2 |      |

○ 지방투자유치 대상의 바람직한 업종 단위 기준을 살펴보면, 지방투자의 정책목표가 지속 가능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필요<sup>1)</sup>)

- 투자·지원 규모 대비 창출하는 고용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혹은 요구숙련도가 높아 일자리의 질과 양의 수준이 높은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상당한 업종
- 생산성의 수준이 높거나 신산업으로 선제적 투자가 필요, 향후의 경쟁력 확대가 필요한 산업 혹은 투자유치 대상 지역산업 대비 고도화 수준이 높은 산업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업종임

1) 변창욱·김송년(2021), 『지방투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역 고용승수의 분석과 활용』.

### 제3절 고용연계성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이 기업 유치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동수요자인 기업의 형태에 따라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 및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의 양과 질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의 양과 질 변화를 예측

〈표 3-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고용연계성

|        |                       | 고용효과 창출 요인                                                                                | 고용효과                                                                                               | 활용 자료                                  | 분석 방법                                                                                                |
|--------|-----------------------|-------------------------------------------------------------------------------------------|----------------------------------------------------------------------------------------------------|----------------------------------------|------------------------------------------------------------------------------------------------------|
| 정량적 효과 | 직접적 효과<br>(재정지출 고용효과) |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신규 기업 설립 확대 및 이에 따른 인력 필요                                       | - 보조금 지원 유형별, 시도별, 정책지원 유형별 및 기업규모에 따른 인력 고용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신규 고용 등을 중심으로 산정)                       | 사업 성과 raw data 및 고용보험DB                | 포아송 회귀분석 및 의사결정나무 분석 등 적용                                                                            |
| 정성적 효과 |                       |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 수행을 위한 인력 필요<br>-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신규 기업 설립 확대 및 이에 따른 인력 필요 |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사업 수행·참여를 위해 신규 고용 인력의 고용의 질<br>- 사업 수행 이후 수혜 기업의 매출 증대,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신규 고용 인력의 고용의 질 | - 실태조사 보고서 활용(고용 형태 등 고용 현황 및 질 관련 현황) | -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근로(노동)시간, 고용 안정, 일자리(업무) 만족도, 산업안전, 직무훈련(업무 역량 향상 교육) 기회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 분석        |
|        |                       |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에 따른 기업 인력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br>- 기업 성장에 따른 고용의 질 개선                   | - 지원 사업을 통한 고용의 질 변화(향상)                                                                           | - 역량의 변화(향상) 등에 대한 조사 및 인터뷰 자료         | -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근로(노동)시간, 고용 안정, 일자리(업무) 만족도, 산업안전, 직무훈련(업무 역량 향상 교육) 기회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 분석 |

- 위 기업들의 양적 고용효과는 보조금 유형별, 시도별, 정책지원 유형별 및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
-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에 명시된 고용의 질 관련 지표에 따라 질적 고용영향평가를 수행
  - 임금(명목임금 수준, 임금격차 노동소득분배율), 근로시간(근로시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 고용형태(정규·비정규 비중, 파견·용역 비중), 고용안정(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기간 근로자 비중), 성평등(여성고용현황(여성/관리자 비중), 임금격차), 기타(산업안전, 사회보험, 일자리 만족도, 직업훈련 등)
-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및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효과는 <표 3-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의 양과 질 실태를 분석

## 제4장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이 고용의 양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제1절 이전 기업에 대한 고용 현황 분석

#### 1. 이전 기업의 고용에 대한 시계열 추이

##### □ 분석 데이터

- 수혜 대상 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sup>1)</sup>의 내부자료를 통해 입수했고, 한국 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함
  - 수혜 대상 기업의 수는 13,950개이고, 이 중에서 대기업은 936개, 중소기업은 13,014개임
  - 비수혜 대상 기업의 수는 11,206,257개이고 이 중에서 대기업은 205,488개, 중소기업은 11,000,769개 수준임
- 다만, 비수혜 대상 기업의 경우 기업규모, 업력, 광역시도 등에서 수혜 대상 기업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어 성향 점수매칭(PSM : 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 활용해서 비수혜 기업 중 수혜 기업과 성격이 비슷한 기업들을 선별한 결과 분석 대상 기업의 수는 982,848개 수준이고 이 중에서 대기업의 수는 53,039개, 중소기업의 수는 929,809개임

##### □ 추이 분석

-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혜 기업 및 비수혜 기업의 관계없이 고용은 2008년에 비해 2022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적으로 추이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 간 차이로 인해 고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혜기업의 기업규모, 업력,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활용해서 비수혜 기업 중 수혜 기업과 성격이 비슷한 기업들을 선별함
  - 수혜 기업은 13,950개를 대상으로 하며, 수혜 기업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기 때문에 비수혜 기업 역시 수도권을 제외하기 위해 11,206,257개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 다만,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한 비수혜 기업 중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기업의 수는 982,848개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 우선, 비수혜 기업 전체와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고용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창출 효과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어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고용 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고용은 2009년, 2011년, 2015년, 2017년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대기업 비수혜 대상 기업의 고용 역시 2009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고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달리 비수혜 대상 기업의 고용은 감소함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혜 대상 기업의 고용은 2009년, 2015년, 2018년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중소기업 비수혜 대상 기업의 고용은 2009년, 2017년, 2018년, 2021년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감소함
  - 모든 연도에서 수혜 대상 기업의 고용이 비수혜 대상 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중 수혜 대상 기업의 고

- 용은 대기업 중 비수혜 대상 기업의 고용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을 바탕으로 비수혜 기업 중 수혜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기업들과 수혜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
- 비수혜 대상 기업의 연평균 고용을 분석한 결과, 수혜 대상 기업의 특징으로 통제된 기업들의 연평균 값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통제하지 않은 기업들의 연평균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의 연평균 고용은 모든 연도에서 수혜 대상 기업이 비수혜 대상 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수혜 대상 기업의 고용이 비수혜 대상 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성향점수매칭으로 통제된 비수혜 대상 기업의 연도별 연평균 고용의 추이는 통제하지 않은 비수혜 대상 기업의 연도별 연평균 고용 추이와 유사함

〈표 4-1〉 기업 규모별 수혜 기업 및 비수혜 기업 연도별 평균 고용 추이

|      | 대기업   |        |     | 중소기업  |        |     |
|------|-------|--------|-----|-------|--------|-----|
|      | 수혜 대상 | 비수혜 대상 |     | 수혜 대상 | 비수혜 대상 |     |
|      |       | 원데이터   | PSM |       | 원데이터   | PSM |
| 2008 | 2,051 | 146    | 287 | 65    | 10     | 22  |
| 2009 | 1,738 | 129    | 295 | 62    | 10     | 22  |
| 2010 | 1,865 | 121    | 288 | 64    | 10     | 22  |
| 2011 | 1,446 | 101    | 290 | 67    | 9      | 21  |
| 2012 | 1,881 | 105    | 332 | 74    | 9      | 24  |
| 2013 | 2,122 | 120    | 323 | 77    | 8      | 24  |
| 2014 | 2,244 | 178    | 520 | 91    | 8      | 34  |
| 2015 | 2,126 | 157    | 540 | 88    | 8      | 34  |
| 2016 | 2,254 | 163    | 521 | 90    | 7      | 32  |
| 2017 | 2,132 | 158    | 529 | 101   | 7      | 30  |
| 2018 | 2,172 | 135    | 504 | 97    | 15     | 28  |
| 2019 | 2,350 | 158    | 492 | 98    | 14     | 25  |
| 2020 | 2,352 | 160    | 489 | 99    | 14     | 24  |
| 2021 | 2,413 | 173    | 506 | 102   | 16     | 25  |
| 2022 | 2,497 | 181    | 552 | 111   | 13     | 34  |

□ 시계열 분석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으로 구분하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시계열 데이터와 함께 패널 데이터가 구축됨
- 이러한 패널 데이터는 시계열 15개, 횡단면 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의 안정성을 검정하는 단위근 검정은 생략하고,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역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통상최소자승법(Pooled OLS : Ordinary Least Square) 추정 방법을 활용함
- 전술한 바와 같이 고용 인원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세 변수와 함께 수혜 대상 기업과 비수혜 대상 기업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다음의 회귀 모형을 설정함
  - 전술한 바와 같이 패널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설명 변수를 포함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추세 변수와 더미 변수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함
  - 또한 추세와 더미 간 교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호작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추정함
  - 더불어 고용은 자연수(count data)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고용 변화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포아송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추정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정함
  - 이때,  $\alpha_2 > 0$  (or  $\alpha_2 + \alpha_3 \cdot T > 0$ )이고  $\beta_2 > 0$  (or  $\beta_2 + \beta_3 \cdot T > 0$ )을 충족하면,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은 기업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함

$$X_{i,t} = \alpha_0 + \alpha_1 \cdot T + \alpha_2 \cdot D + \alpha_3 \cdot T \cdot D + \epsilon_{i,t} \quad (1)$$

$$Y_{i,t} = \beta_0 + \beta_1 \cdot T + \beta_2 \cdot D + \beta_3 \cdot T \cdot D + v_{i,t} \quad (2)$$

$$Z_{i,t} = \gamma_0 + \gamma_1 \cdot T + \gamma_2 \cdot D + \gamma_3 \cdot T \cdot D + \gamma_4 \cdot Size + v_{i,t} \quad (3)$$

$X_{i,t}$  : 대기업 고용 인원,  $Y_{i,t}$  : 중소기업 고용 인원,

$Z_{i,t}$  : 고용 인원(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

$Size_{i,t}$  : 기업의 규모별 변수(대기업=1, 중소기업=2),

$D$  : 지방이전 정책 수혜 여부( $i = 1$ 이면  $D = 1$ ,  $i = 2$ 이면  $D = 0$ ),

$T$  : 시간 추세( $t = 2008$ 이면  $T = 1$ , ...,  $t = 2022$ 이면  $T = 15$ ),

$i = 1$  : 지방이전 정책 수혜 기업,  $i = 2$  : 지방이전 정책 비수혜 기업

○ 이와 같은 고용함수를 바탕으로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하지 않은 채 추정한 결과,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통계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고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alpha_2 > 0$  (or  $\alpha_2 + \alpha_3 \cdot T > 0$ )을 충족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역시  $\beta_2 > 0$  (or  $\beta_2 + \beta_3 \cdot T > 0$ )을 충족함
- 포아송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교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 $\gamma_3 = 0$ )으로 분석되었고, 수혜 더미에 대한 부호는 0보다 크기( $\gamma_2 > 0$ ) 때문에 고용창출에 대한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의 고용은 대기업의 0.043배 수준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분석됨

〈표 4-2〉 통합통상최소자승법을 활용한 고용함수 추정 결과

| 교호 여부   | 대기업        |             |       | 중소기업      |          |       |
|---------|------------|-------------|-------|-----------|----------|-------|
|         |            | 추정치         | t 통계량 |           | 추정치      | t 통계량 |
| 교호작용 제외 | $\alpha_0$ | -71.60      | -1.05 | $\beta_0$ | -5.02    | -1.50 |
|         | $\alpha_1$ | 27.16***    | 4.01  | $\beta_1$ | 1.94***  | 5.83  |
|         | $\alpha_2$ | 1,963.87*** | 33.58 | $\beta_2$ | 75.20*** | 26.09 |
| 교호작용 포함 | $\alpha_0$ | 114.72*     | 1.73  | $\beta_0$ | 7.33***  | 3.70  |
|         | $\alpha_1$ | 3.87        | 0.53  | $\beta_1$ | 0.40*    | 1.83  |
|         | $\alpha_2$ | 1,591.21*** | 16.93 | $\beta_2$ | 50.49*** | 17.99 |
|         | $\alpha_3$ | 46.58***    | 4.51  | $\beta_3$ | 3.09***  | 10.01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표 4-3〉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고용함수 추정 결과(교호작용 제외)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gamma_0$ | 4.805***  | 207.25  |       |       |       |
| $\gamma_1$ | 0.025***  | 20.06   |       |       |       |
| $\gamma_2$ | 2.643***  | 123.61  |       |       |       |
| $\gamma_4$ | -3.154*** | -117.37 | 0.043 | 0.040 | 0.045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표 4-4〉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고용함수 추정 결과(교호작용 포함)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gamma_0$ | 4.783***  | 104.43  |       |       |       |
| $\gamma_1$ | 0.027***  | 5.71    |       |       |       |
| $\gamma_2$ | 2.666***  | 56.29   |       |       |       |
| $\gamma_3$ | -0.003    | -0.56   |       |       |       |
| $\gamma_4$ | -3.154*** | -117.37 | 0.043 | 0.040 | 0.045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다음으로 전술한 고용함수를 바탕으로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한 후 추정  
한 결과,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통계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고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alpha_2 > 0$  (or  $\alpha_2 + \alpha_3 \cdot T > 0$ )  
을 충족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역시  $\beta_2 > 0$   
(or  $\beta_2 + \beta_3 \cdot T > 0$ )을 충족함
  - 포아송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수혜 더미에 대한 부호는 0보다 크  
기( $\gamma_2 > 0$ ) 때문에 고용창출에 대한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중소기업의 고용은 대기업의 0.044배 수준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  
로 분석되었지만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교호작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gamma_3 < 0$ )

〈표 4-5〉 성향점수매칭 적용 후 통합통상최소자승법을 활용한 고용함수 추정 결과

| 교호 여부      | 대기업        |             |       | 중소기업      |          |       |
|------------|------------|-------------|-------|-----------|----------|-------|
|            |            | 추정치         | t 통계량 |           | 추정치      | t 통계량 |
| 교호작용<br>제외 | $\alpha_0$ | 145.70**    | 2.39  | $\beta_0$ | 10.50*** | 3.07  |
|            | $\alpha_1$ | 35.70***    | 5.90  | $\beta_1$ | 2.04***  | 6.01  |
|            | $\alpha_2$ | 1,678.22*** | 32.07 | $\beta_2$ | 59.01*** | 20.11 |
| 교호작용<br>포함 | $\alpha_0$ | 263.76***   | 3.76  | $\beta_0$ | 22.35*** | 9.25  |
|            | $\alpha_1$ | 20.94**     | 2.72  | $\beta_1$ | 0.56**   | 2.10  |
|            | $\alpha_2$ | 1,442.11*** | 14.55 | $\beta_2$ | 35.31*** | 10.33 |
|            | $\alpha_3$ | 29.51**     | 2.71  | $\beta_3$ | 2.96***  | 7.88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표 4-6〉 성향점수매칭 적용 후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고용함수 추정 결과(교호작용 제외)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gamma_0$ | 5.848***  | 373.24  |       |       |       |
| $\gamma_1$ | 0.029***  | 24.48   |       |       |       |
| $\gamma_2$ | 1.567***  | 118.15  |       |       |       |
| $\gamma_4$ | -3.116*** | -125.34 | 0.044 | 0.042 | 0.047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표 4-7〉 성향점수매칭 적용 후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고용함수 추정 결과(교호작용 포함)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gamma_0$ | 5.684***  | 204.00  |       |       |       |
| $\gamma_1$ | 0.047***  | 16.74   |       |       |       |
| $\gamma_2$ | 3.116***  | 58.05   |       |       |       |
| $\gamma_3$ | -0.023*** | -7.31   |       |       |       |
| $\gamma_4$ | -3.116*** | -125.34 | 0.044 | 0.042 | 0.047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2. 정책 효과 분석

### 가. 수혜 대상과 비수혜 대상 간 고용의 차이 분석

#### □ 시도별 분석

○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하지 않은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수혜 기업과 수혜 기업 간 시도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수혜 기업의 고용이 비수혜 기업의 고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08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8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8.08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대구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58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11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16.54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광주의 경우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65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9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25.93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대전의 경우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76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9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14.10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울산의 경우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45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12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9.20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세종의 경우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23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10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4.58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강원도의 경우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49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12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12.23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충북의 경우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27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10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20.59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충남의 경우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35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10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12.23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전북의 경우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98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8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23.04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전남의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74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105명에 비해 작지만,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0.73으로 신뢰수준 90%에서도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없음
- 경북의 경우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286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12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4.78

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경남의 경우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212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12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6.24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제주의 경우 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96명으로 비수해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7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9.83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표 4-8〉 시도별 수해 대상 고용 비교(원데이터)

| 시도별 | 수해 여부  | 평균  | 표본 크기     | 표준편차      |
|-----|--------|-----|-----------|-----------|
| 부산  | 수해 대상  | 108 | 822       | 313.31    |
|     | 비수해 대상 | 8   | 1,613,319 | 77.52     |
| 대구  | 수해 대상  | 158 | 1,061     | 266.37    |
|     | 비수해 대상 | 11  | 1,088,236 | 3,719.30  |
| 광주  | 수해 대상  | 65  | 981       | 66.98     |
|     | 비수해 대상 | 9   | 627,566   | 264.94    |
| 대전  | 수해 대상  | 76  | 409       | 95.80     |
|     | 비수해 대상 | 9   | 645,289   | 147.77    |
| 울산  | 수해 대상  | 145 | 296       | 248.44    |
|     | 비수해 대상 | 12  | 437,663   | 220.75    |
| 세종  | 수해 대상  | 123 | 246       | 387.77    |
|     | 비수해 대상 | 10  | 76,393    | 66.60     |
| 강원  | 수해 대상  | 149 | 1,101     | 343.51    |
|     | 비수해 대상 | 12  | 669,239   | 3,447.94  |
| 충북  | 수해 대상  | 127 | 987       | 176.29    |
|     | 비수해 대상 | 10  | 697,419   | 633.75    |
| 충남  | 수해 대상  | 135 | 1,763     | 427.60    |
|     | 비수해 대상 | 10  | 915,417   | 266.46    |
| 전북  | 수해 대상  | 198 | 2,274     | 392.57    |
|     | 비수해 대상 | 8   | 772,788   | 116.55    |
| 전남  | 수해 대상  | 74  | 787       | 145.47    |
|     | 비수해 대상 | 105 | 738,309   | 36,327.32 |
| 경북  | 수해 대상  | 286 | 1,435     | 2,171.39  |
|     | 비수해 대상 | 12  | 1,120,689 | 1,849.42  |
| 경남  | 수해 대상  | 212 | 1,501     | 1,237.45  |
|     | 비수해 대상 | 12  | 1,476,671 | 2,947.99  |
| 제주  | 수해 대상  | 96  | 287       | 152.91    |
|     | 비수해 대상 | 7   | 327,259   | 70.34     |

- 수혜 대상 기업 중 평균 고용 인원이 가장 큰 경상북도와 두 번째로 큰 경상남도의 경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1.13이고, 세 번째로 큰 전라북도와의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1.52로 신뢰수준 90%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고용 인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전라북도와 다른 시도의 고용과의  $t$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두 신뢰수준 99%에서 귀무가설인 등평균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로 이전한 수혜 대상 기업의 고용은 다른 시도로 이전한 수혜 대상 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을 바탕으로 시도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도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하지 않고 시도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임
- 부산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08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37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6.43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대구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58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38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14.43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광주·경남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65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40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6.63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대전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76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45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6.10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울산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45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65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5.38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세종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23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46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3.08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강원·충청·충남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49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35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10.92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충북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27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40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15.20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충남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35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53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 값은 7.82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표 4-9〉 시도별 수혜 대상 고용 비교(성향점수매칭 반영)

| 시도별 | 수혜 여부  | 평균  | 표본 크기   | 표준편차     |
|-----|--------|-----|---------|----------|
| 부산  | 수혜 대상  | 108 | 822     | 313.31   |
|     | 비수혜 대상 | 37  | 132,368 | 198      |
| 대구  | 수혜 대상  | 158 | 1,061   | 266.37   |
|     | 비수혜 대상 | 38  | 73,583  | 465      |
| 광주  | 수혜 대상  | 65  | 981     | 66.98    |
|     | 비수혜 대상 | 40  | 56,780  | 740      |
| 대전  | 수혜 대상  | 76  | 409     | 95.80    |
|     | 비수혜 대상 | 45  | 52,595  | 415      |
| 울산  | 수혜 대상  | 145 | 296     | 248.44   |
|     | 비수혜 대상 | 65  | 41,890  | 684      |
| 세종  | 수혜 대상  | 123 | 246     | 387.77   |
|     | 비수혜 대상 | 46  | 7,745   | 199      |
| 강원  | 수혜 대상  | 149 | 1,101   | 343.51   |
|     | 비수혜 대상 | 35  | 49,537  | 163      |
| 충북  | 수혜 대상  | 127 | 987     | 176.29   |
|     | 비수혜 대상 | 40  | 74,613  | 235      |
| 충남  | 수혜 대상  | 135 | 1,763   | 427.60   |
|     | 비수혜 대상 | 53  | 91,340  | 784      |
| 전북  | 수혜 대상  | 198 | 2,274   | 392.57   |
|     | 비수혜 대상 | 36  | 66,940  | 205      |
| 전남  | 수혜 대상  | 74  | 787     | 145.47   |
|     | 비수혜 대상 | 49  | 75,965  | 445      |
| 경북  | 수혜 대상  | 286 | 1,435   | 2,171.39 |
|     | 비수혜 대상 | 47  | 104,359 | 560      |
| 경남  | 수혜 대상  | 212 | 1,501   | 1,237.45 |
|     | 비수혜 대상 | 45  | 130,393 | 410      |
| 제주  | 수혜 대상  | 96  | 287     | 152.91   |
|     | 비수혜 대상 | 28  | 24,740  | 104      |

- 전북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198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36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9.57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전남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74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49명에 비해 크고,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4.75로 신뢰수준 99%에서도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경북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286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47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4.17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경남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212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45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5.21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제주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96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28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7.49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 기업 규모별 분석

-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수혜 대상 기업이 비수혜 대상 기업에 비해 고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2,125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146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11.76으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85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11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32.35로 신뢰수준 99%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음

〈표 4-10〉 기업 규모별 수혜 대상 고용 비교(원데이터)

| 기업 규모 | 수혜 여부  | 평균    | 표본 크기      | 표준편차     |
|-------|--------|-------|------------|----------|
| 대기업   | 수혜 대상  | 2,125 | 936        | 5,146.15 |
|       | 비수혜 대상 | 146   | 205,488    | 1,383.81 |
| 중소기업  | 수혜 대상  | 85    | 13,014     | 128.69   |
|       | 비수혜 대상 | 11    | 11,000,769 | 6,579.74 |

-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한 후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수혜 대상 기업이 비수혜 대상 기업에 비해 고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2,125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314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10.75로 신뢰수준 99%에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기각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85명으로 비수혜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 28명에 비해 크며, 등평균 검정 통계량 t값은 50.03으로 신뢰수준 99%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음

〈표 4-11〉 기업 규모별 수혜 대상 고용 비교(성향점수매칭 반영)

| 기업 규모 | 수혜 여부  | 평균    | 표본 크기   | 표준편차     |
|-------|--------|-------|---------|----------|
| 대기업   | 수혜 대상  | 2,125 | 936     | 5,146.15 |
|       | 비수혜 대상 | 314   | 53,039  | 1,932.81 |
| 중소기업  | 수혜 대상  | 85    | 13,014  | 128.69   |
|       | 비수혜 대상 | 28    | 929,809 | 120.12   |

## 제2절 수혜 대상 기업 현황 분석

### 1. 수혜 대상 기업 데이터 현황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유형은 상생형일자리, 신설, 증설, 이전의 4가지로 구분됨. 또한 보조금의 유형은 입지, 설비, 고용, 교육의 4가지로 구분되지만, 고용과 교육에 대한 유형은 현재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를 제외함. 따라서 보조금의 유형은 입지, 설비, 입지와 설비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는 기업의 3가지로 구분됨. 전술한 바와 같이 수혜 대상 기업의 수는 13,950개이며 이 중에서 지원유형이 구분되지 않고, 보조금 유형이 구분되지 않는 등 결측값이 발생한 데이터를 제외하는 경우 수혜 대상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기업의 수는 1,366개가 됨. 이와 같이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의 혜택을 받은 기업 중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분석이 가능한 기업의 수는 총 1,366개이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어느 유형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신규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

## 가. 정책 혜택 기업 수

### □ 시도별 기업 수

○ 지방이전 기업 수는 2010년부터 크게 증가했지만 2013년 크게 감소하여 2022년에는 62개에 불과함

〈표 4-12〉 시도별 지방이전 기업 수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부산  | 0    | 0    | 0    | 0    | 1    | 0    | 0    | 7    | 11   | 3     |
| 대구  | 0    | 3    | 4    | 3    | 1    | 0    | 0    | 16   | 8    | 6     |
| 광주  | 3    | 3    | 0    | 0    | 2    | 1    | 2    | 8    | 11   | 12    |
| 대전  | 1    | 1    | 1    | 0    | 0    | 3    | 10   | 8    | 3    | 3     |
| 울산  | 0    | 0    | 0    | 0    | 0    | 0    | 0    | 0    | 4    | 0     |
| 세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 강원  | 2    | 13   | 24   | 20   | 7    | 9    | 16   | 12   | 9    | 5     |
| 충북  | 6    | 10   | 3    | 3    | 12   | 5    | 11   | 8    | 8    | 7     |
| 충남  | 5    | 13   | 13   | 17   | 14   | 20   | 15   | 17   | 25   | 9     |
| 전북  | 0    | 12   | 10   | 28   | 9    | 4    | 8    | 4    | 4    | 4     |
| 전남  | 0    | 0    | 0    | 1    | 1    | 4    | 23   | 16   | 7    | 4     |
| 경북  | 0    | 0    | 0    | 0    | 1    | 1    | 1    | 17   | 13   | 15    |
| 경남  | 0    | 0    | 1    | 0    | 1    | 0    | 1    | 8    | 9    | 11    |
| 제주  | 1    | 1    | 0    | 1    | 3    | 3    | 5    | 2    | 7    | 5     |
| 전 체 | 18   | 56   | 56   | 73   | 52   | 50   | 92   | 123  | 119  | 87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전체    |
| 부산  | 3    | 6    | 3    | 5    | 1    | 1    | 2    | 5    | 0    | 48    |
| 대구  | 10   | 6    | 3    | 3    | 6    | 4    | 2    | 2    | 3    | 80    |
| 광주  | 8    | 2    | 4    | 2    | 2    | 2    | 2    | 1    | 0    | 65    |
| 대전  | 0    | 4    | 2    | 0    | 1    | 0    | 1    | 2    | 0    | 40    |
| 울산  | 0    | 1    | 1    | 1    | 2    | 0    | 2    | 1    | 1    | 13    |
| 세종  | 4    | 5    | 6    | 3    | 3    | 2    | 4    | 2    | 0    | 32    |
| 강원  | 2    | 3    | 3    | 9    | 7    | 1    | 3    | 2    | 2    | 149   |
| 충북  | 2    | 5    | 8    | 10   | 4    | 7    | 9    | 5    | 8    | 131   |
| 충남  | 7    | 9    | 8    | 11   | 10   | 8    | 8    | 9    | 11   | 229   |
| 전북  | 13   | 7    | 11   | 9    | 13   | 24   | 21   | 16   | 7    | 204   |
| 전남  | 2    | 8    | 3    | 8    | 15   | 5    | 4    | 4    | 3    | 108   |
| 경북  | 11   | 15   | 5    | 5    | 6    | 2    | 7    | 8    | 16   | 123   |
| 경남  | 18   | 5    | 5    | 2    | 4    | 11   | 7    | 11   | 9    | 103   |
| 제주  | 4    | 3    | 2    | 1    | 0    | 0    | 0    | 1    | 2    | 41    |
| 전 체 | 84   | 79   | 64   | 69   | 74   | 67   | 72   | 69   | 62   | 1,366 |

○ 지방이전 기업 수는 시도별로 편차가 큼

- 지방이전 기업은 충남이 229개로 가장 많고, 울산이 13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지원 유형별 기업 수

- 정책 지원 유형을 구분하면, 상생형일자리, 신설, 증설, 이전으로 구분되며 상생형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2020년부터 시행됨
- 정책 지원 유형 중 이전 기업이 가장 많고 상생형일자리 기업이 가장 적지만, 2013년 이후 신설 기업이 가장 많음
  - 2010년까지는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만 있었고, 2011년 이후 신설, 증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 발생함
  - 상생형일자리 기업은 2020년 1개, 2021년 2개, 2022년 3개 발생함
  - 2013년 이후 신설 기업의 수가 이전 기업의 수보다 더 많았으며, 이로 미루어볼 때 지방이전은 주로 신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신설 기업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513개가 발생했으며, 매년 비슷한 수가 지원되고 있음
  - 증설 기업은 동기간 197개가 발생했으며, 매년 비슷한 수준의 수가 유지되고 있음

〈표 4-13〉 정책 지원 유형별 지방이전 기업 수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상생형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신설  | 0    | 0    | 0    | 0    | 0    | 0    | 0    | 26   | 46   | 40    |
| 증설  | 0    | 0    | 0    | 0    | 0    | 0    | 0    | 19   | 20   | 10    |
| 이전  | 18   | 56   | 56   | 73   | 52   | 50   | 92   | 78   | 53   | 37    |
| 전 체 | 18   | 56   | 56   | 73   | 52   | 50   | 92   | 123  | 119  | 87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전체    |
| 상생형 | 0    | 0    | 0    | 0    | 0    | 0    | 1    | 2    | 3    | 6     |
| 신설  | 47   | 48   | 42   | 45   | 40   | 47   | 47   | 47   | 38   | 513   |
| 증설  | 21   | 14   | 11   | 16   | 21   | 14   | 16   | 19   | 16   | 197   |
| 이전  | 16   | 17   | 11   | 8    | 13   | 6    | 8    | 1    | 5    | 650   |
| 전 체 | 84   | 79   | 64   | 69   | 74   | 67   | 72   | 69   | 62   | 1,366 |

주 : 상생형은 상생형일자리 기업을 의미함.

- 이전 기업은 동기간 650개가 발생했으며, 2010년과 2011년 급증했지만 이후 감소하여 2019년 이후에는 10개 미만임

#### □ 보조금 유형별 기업 수

- 보조금 유형을 구분하면, 고용, 설비, 입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고용 및 교육, 설비 및 고용, 입지 및 설비를 포함하여 총 6가지 유형이 있음
- 이 중에서 고용과 교육은 최근 들어 지원되고 있지 않아, 최근에는 입지, 설비, 입지 및 설비의 3가지 유형이 있음
- 설비 지원이 가장 많고, 입지 지원이 두 번째로 많음
  - 고용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8년 이후 없어졌고, 2008년 이전에도 8개에 불과함
  - 설비 지원에 대한 기업 수는 2011년 이후 60~90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22년까지 904개가 해당됨
  - 입지 지원에 대한 기업 수는 2016년 이후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입지 및 설비 지원 기업 수가 발생함
  - 이로 미루어볼 때, 기업 이전은 주로 설비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14〉 보조금 지원 유형별 지방이전 기업 수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고용     | 0    | 0    | 0    | 2    | 2    | 1    | 5    | 0    | 0    | 0     |
| 설비     | 0    | 15   | 6    | 17   | 17   | 14   | 19   | 85   | 86   | 61    |
| 입지     | 18   | 36   | 43   | 49   | 32   | 34   | 66   | 31   | 30   | 19    |
| 고용, 교육 | 0    | 2    | 4    | 2    | 0    | 0    | 0    | 0    | 0    | 0     |
| 설비, 고용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 입지, 설비 | 0    | 1    | 3    | 3    | 1    | 1    | 2    | 7    | 3    | 7     |
| 전 체    | 18   | 56   | 56   | 73   | 52   | 50   | 92   | 123  | 119  | 87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전체    |
| 고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 설비     | 73   | 70   | 57   | 64   | 67   | 61   | 64   | 68   | 60   | 904   |
| 입지     | 8    | 1    | 0    | 0    | 0    | 0    | 0    | 0    | 0    | 367   |
| 고용, 교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     |
| 설비, 고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 입지, 설비 | 3    | 8    | 7    | 5    | 7    | 6    | 8    | 1    | 2    | 75    |
| 전 체    | 84   | 79   | 64   | 69   | 74   | 67   | 72   | 69   | 62   | 1,366 |

## □ 기업 유형별 기업 수

- 기업 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3가지로 구분되며,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필요함
- 이전 기업 중 중소기업이 가장 많고 대기업이 가장 적음
  -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수는 46개이고, 최근 근에는 저조한 상황임
  - 중견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수는 동기간 115개이고, 최근 들어 10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수는 동기간 1,205개로 이전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 4-15〉 기업 유형별 지방이전 기업 수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대기업  | 2    | 6    | 6    | 4    | 2    | 2    | 3    | 5    | 0    | 1     |
| 중견기업 | 0    | 3    | 2    | 3    | 2    | 3    | 5    | 2    | 7    | 5     |
| 중소기업 | 16   | 47   | 48   | 66   | 48   | 45   | 84   | 116  | 112  | 81    |
| 전 체  | 18   | 56   | 56   | 73   | 52   | 50   | 92   | 123  | 119  | 87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전체    |
| 대기업  | 1    | 1    | 2    | 2    | 2    | 2    | 0    | 1    | 4    | 46    |
| 중견기업 | 7    | 7    | 7    | 9    | 7    | 12   | 8    | 10   | 16   | 115   |
| 중소기업 | 76   | 71   | 55   | 58   | 65   | 53   | 64   | 58   | 42   | 1,205 |
| 전 체  | 84   | 79   | 64   | 69   | 74   | 67   | 72   | 69   | 62   | 1,366 |

## 2. 수혜 대상 기업 신규 일자리 분석

- 신규 일자리 분석은 정책 혜택을 통해 계획된 신규 고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본 제도를 통해 창출된 신규 고용은 68,559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계획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통해 창출된 고용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일한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함

## 가. 정책 혜택 일자리 분석

### □ 시도별 일자리 분석

- 본 제도에 의해 창출되는 고용은 2010년부터 크게 증가했지만, 2012년 크게 감소한 후 최근 3,000명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지방이전 기업 수와 동일하게 신규 고용 역시 시도별로 편차가 큼
  - 신규 고용 역시 이전 기업 수와 동일하게 충남이 가장 많고 울산이 가장 적음

〈표 4-16〉 시도별 지방이전 신규 고용 인원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부산  | 0     | 0     | 0     | 0     | 27    | 0     | 0     | 810   | 580   | 119    |
| 대구  | 0     | 616   | 500   | 1,060 | 150   | 0     | 0     | 842   | 375   | 314    |
| 광주  | 30    | 87    | 0     | 0     | 0     | 23    | 116   | 285   | 272   | 228    |
| 대전  | 0     | 20    | 190   | 0     | 0     | 215   | 452   | 556   | 95    | 119    |
| 울산  | 0     | 0     | 0     | 0     | 0     | 0     | 0     | 0     | 35    | 0      |
| 세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     |
| 강원  | 90    | 787   | 909   | 568   | 708   | 470   | 2,336 | 1,713 | 219   | 104    |
| 충북  | 242   | 536   | 700   | 135   | 1,368 | 301   | 1,642 | 952   | 403   | 366    |
| 충남  | 260   | 632   | 2,151 | 787   | 653   | 1,486 | 719   | 1,169 | 539   | 218    |
| 전북  | 0     | 98    | 373   | 352   | 51    | 398   | 366   | 483   | 46    | 62     |
| 전남  | 0     | 0     | 0     | 70    | 9     | 178   | 690   | 1,586 | 99    | 249    |
| 경북  | 0     | 0     | 0     | 0     | 22    | 42    | 55    | 1,014 | 335   | 341    |
| 경남  | 0     | 0     | 326   | 0     | 134   | 0     | 106   | 260   | 323   | 404    |
| 제주  | 0     | 0     | 0     | 50    | 243   | 17    | 67    | 29    | 135   | 51     |
| 전 체 | 622   | 2,776 | 5,149 | 3,022 | 3,365 | 3,130 | 6,549 | 9,699 | 3,456 | 2,597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전체     |
| 부산  | 104   | 387   | 168   | 337   | 55    | 24    | 140   | 468   | 0     | 3,219  |
| 대구  | 240   | 211   | 116   | 72    | 229   | 106   | 126   | 230   | 283   | 5,470  |
| 광주  | 247   | 31    | 158   | 62    | 90    | 113   | 857   | 200   | 0     | 2,799  |
| 대전  | 0     | 86    | 100   | 0     | 20    | 0     | 30    | 126   | 0     | 2,009  |
| 울산  | 0     | 17    | 45    | 8     | 102   | 0     | 55    | 20    | 26    | 308    |
| 세종  | 111   | 90    | 289   | 148   | 135   | 23    | 100   | 106   | 0     | 1,024  |
| 강원  | 55    | 129   | 114   | 333   | 166   | 104   | 96    | 90    | 60    | 9,051  |
| 충북  | 113   | 474   | 339   | 1,296 | 189   | 234   | 422   | 161   | 327   | 10,200 |
| 충남  | 400   | 316   | 312   | 467   | 233   | 204   | 238   | 319   | 729   | 11,832 |
| 전북  | 295   | 335   | 302   | 302   | 999   | 1,562 | 1,224 | 642   | 464   | 8,354  |
| 전남  | 10    | 288   | 66    | 202   | 374   | 202   | 90    | 120   | 62    | 4,295  |
| 경북  | 200   | 554   | 180   | 119   | 155   | 46    | 269   | 256   | 1,050 | 4,638  |
| 경남  | 441   | 166   | 209   | 95    | 122   | 590   | 361   | 518   | 447   | 4,502  |
| 제주  | 49    | 73    | 41    | 10    | 0     | 0     | 0     | 30    | 63    | 858    |
| 전 체 | 2,265 | 3,157 | 2,439 | 3,451 | 2,869 | 3,208 | 4,008 | 3,286 | 3,511 | 68,559 |

□ 정책 지원 유형별 일자리 분석

- 정책 지원 유형 중 이전에 따른 신규 고용이 가장 많고 상생형일자리 기업이 가장 적음
- 그러나 2012년 이후 신설 기업에서 신규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되고 있고, 2014년 이후에는 대부분 신설 기업에서 신규 고용이 발생함
  - 상생형일자리 기업의 경우, 2020년 842명, 2021년 418명, 2022년 245명으로 매년 약 50%씩 감소하고 있음
  - 신설에 따른 신규 고용은 2019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9년 이후에는 2,200~2,400명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임
  - 증설에 따른 신규 고용은 2011년, 2018년, 2019년, 2022년 크게 증가했지만, 대체로 400~600명 수준을 보임
  - 이전에 따른 신규 고용은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2년 이후 급감하여 2021년에는 30명, 2022년에는 163명 수준을 보임
- 이전보다는 신설 또는 증설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있음

〈표 4-17〉 정책 지원 유형별 신규 고용 인원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상생형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신설  | 0     | 0     | 0     | 0     | 0     | 0     | 0     | 1,662 | 1,806 | 1,448  |
| 증설  | 0     | 0     | 0     | 0     | 0     | 0     | 0     | 761   | 443   | 156    |
| 이전  | 622   | 2,776 | 5,149 | 3,022 | 3,365 | 3,130 | 6,549 | 7,276 | 1,207 | 993    |
| 전 체 | 622   | 2,776 | 5,149 | 3,022 | 3,365 | 3,130 | 6,549 | 9,699 | 3,456 | 2,597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전체     |
| 상생형 | 0     | 0     | 0     | 0     | 0     | 0     | 842   | 418   | 245   | 1,505  |
| 신설  | 1,437 | 2,194 | 1,769 | 2,604 | 1,552 | 2,308 | 2,240 | 2,264 | 2,394 | 23,678 |
| 증설  | 494   | 466   | 427   | 482   | 1,067 | 689   | 513   | 574   | 709   | 6,781  |
| 이전  | 334   | 497   | 243   | 365   | 250   | 211   | 413   | 30    | 163   | 36,595 |
| 전 체 | 2,265 | 3,157 | 2,439 | 3,451 | 2,869 | 3,208 | 4,008 | 3,286 | 3,511 | 68,559 |

주 : 상생형은 상생형일자리 기업을 의미함.

□ 보조금 유형별 일자리 분석

- 보조금 유형별로 신규 고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설비 지원 보조금을 받

은 기업에서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 관련 보조금으로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30명 발생했고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음
- 고용 및 교육 관련 보조금으로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740명 발생했고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음
- 설비 및 고용 관련 보조금으로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은 2005년 63명에 불과함
- 설비 관련 보조금으로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은 42,439명이고, 입지 및 설비 관련 보조금으로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은 2,752명 수준임
- 입지 관련 보조금으로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은 20,535명이고, 2015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음
- 이로 미루어볼 때 정부 지원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대체로 설비 관련 보조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18〉 보조금 지원 유형별 신규 고용 인원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고용     | 0     | 0     | 0     | 49    | 234   | 92    | 655   | 0     | 0     | 0      |
| 설비     | 0     | 1,053 | 646   | 778   | 335   | 1,000 | 1,071 | 6,598 | 2,590 | 1,918  |
| 입지     | 622   | 1,136 | 3,830 | 1,320 | 2,687 | 1,912 | 4,730 | 2,768 | 820   | 493    |
| 고용, 교육 | 0     | 500   | 500   | 740   | 0     | 0     | 0     | 0     | 0     | 0      |
| 설비, 고용 | 0     | 63    | 0     | 0     | 0     | 0     | 0     | 0     | 0     | 0      |
| 입지, 설비 | 0     | 24    | 173   | 135   | 109   | 126   | 93    | 333   | 46    | 186    |
| 전 체    | 622   | 2,776 | 5,149 | 3,022 | 3,365 | 3,130 | 6,549 | 9,699 | 3,456 | 2,597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전체     |
| 고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30  |
| 설비     | 1,996 | 2,954 | 2,314 | 3,214 | 2,724 | 2,997 | 3,595 | 3,256 | 3,400 | 42,439 |
| 입지     | 185   | 32    | 0     | 0     | 0     | 0     | 0     | 0     | 0     | 20,535 |
| 고용, 교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740  |
| 설비, 고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3     |
| 입지, 설비 | 84    | 171   | 125   | 237   | 145   | 211   | 413   | 30    | 111   | 2,752  |
| 전 체    | 2,265 | 3,157 | 2,439 | 3,451 | 2,869 | 3,208 | 4,008 | 3,286 | 3,511 | 68,559 |

#### □ 기업 유형별 일자리 분석

○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고용에 있어 파급효과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영향이 큼

- 이전 기업 중 신규 고용 인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큼
  -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8,098명이고, 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 이후 200명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임
  - 중견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8,757명이고 2010년, 2019년, 2022년 1,000명 이상을 기록함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2004년 622명에서 2022년 1,842명으로 급증했고 동기간 51,7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특히,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2011년 7,912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급감했고, 최근에는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음

〈표 4-19〉 기업 유형별 신규 고용 인원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대기업  | 0     | 616   | 1,426 | 1,060 | 350   | 195   | 419   | 1,468 | 0     | 7      |
| 중견기업 | 0     | 450   | 200   | 190   | 98    | 80    | 1,399 | 319   | 227   | 321    |
| 중소기업 | 622   | 1,710 | 3,523 | 1,772 | 2,917 | 2,855 | 4,731 | 7,912 | 3,229 | 2,269  |
| 전 체  | 622   | 2,776 | 5,149 | 3,022 | 3,365 | 3,130 | 6,549 | 9,699 | 3,456 | 2,597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전체     |
| 대기업  | 279   | 320   | 257   | 821   | 162   | 155   | 0     | 60    | 503   | 8,098  |
| 중견기업 | 292   | 598   | 268   | 408   | 421   | 1,236 | 310   | 774   | 1,166 | 8,757  |
| 중소기업 | 1,694 | 2,239 | 1,914 | 2,222 | 2,286 | 1,817 | 3,698 | 2,452 | 1,842 | 51,704 |
| 전 체  | 2,265 | 3,157 | 2,439 | 3,451 | 2,869 | 3,208 | 4,008 | 3,286 | 3,511 | 68,559 |

### 제3절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효과 분석

#### 1.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지방이전 정책의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신규 고용창출이 큰 유형을 분석

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함. 신규 고용 인원은 음수가 아닌 정수 값만을 갖기 때문에 통상선형모형보다는 일반화선형모형(GLM: Generalized Linear Model) 중 하나인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포아송 회귀모형은 설명변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유용함. 더불어 김동현·이상경(2012)에 따르면 오프셋을 활용하는 포아송 회귀분석은 서로 다른 시간 간격이나 공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있음. 지방이전 정책의 혜택을 받은 기업 중에서 보조금의 혜택이 커서 투자 금액이 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는 신규 고용창출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오프셋을 활용하는 포아송 회귀분석을 함께 추정함.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인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원데이터 비교라고 하고, 오프셋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통제 데이터 비교라고 함

## 가. 전체 변수 추정

### □ 원데이터 비교

- 가용한 변수를 모두 활용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각 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는 모든 변수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일 때 즉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ceteris paribus) 해당 변수에 대한 영향을 의미함
- 시도별의 경우 기준은 강원이 되며, 대전은 강원과 통계적으로 동일한 신규 고용 인원을 창출하고, 부산과 충북은 통계적으로 강원보다 신규 고용이 더 많으며, 나머지 시도는 강원보다 신규 고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크지만, 증설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전 기업 중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더 크고,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20〉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부산     | 0.129***  | 5.80   | 1.14 | 1.09 | 1.19 |
| 대구     | -0.119*** | -5.80  | 0.89 | 0.85 | 0.92 |
| 광주     | -0.389*** | -14.81 | 0.68 | 0.64 | 0.71 |
| 대전     | -0.028    | -1.13  | 0.97 | 0.93 | 1.02 |
| 울산     | -0.697*** | -12.44 | 0.50 | 0.45 | 0.56 |
| 세종     | -0.667*** | -19.76 | 0.51 | 0.48 | 0.55 |
| 충북     | 0.137***  | 9.13   | 1.15 | 1.11 | 1.18 |
| 충남     | -0.121*** | -8.51  | 0.89 | 0.86 | 0.91 |
| 전북     | -0.359*** | -22.77 | 0.70 | 0.68 | 0.72 |
| 전남     | -0.342*** | -17.84 | 0.71 | 0.68 | 0.74 |
| 경북     | -0.328*** | -16.70 | 0.72 | 0.69 | 0.75 |
| 경남     | -0.210*** | -10.74 | 0.81 | 0.78 | 0.84 |
| 제주     | -1.230*** | -34.18 | 0.29 | 0.27 | 0.31 |
| 이전     | 0.034***  | 2.65   | 1.03 | 1.01 | 1.06 |
| 증설     | -0.360*** | -25.99 | 0.70 | 0.68 | 0.72 |
| 고용, 교육 | -0.480*** | -10.97 | 0.62 | 0.57 | 0.67 |
| 설비     | -0.689*** | -20.85 | 0.50 | 0.47 | 0.54 |
| 설비, 고용 | -0.754*** | -5.70  | 0.47 | 0.36 | 0.61 |
| 입지     | -0.566*** | -17.40 | 0.57 | 0.53 | 0.61 |
| 입지, 설비 | -0.863*** | -23.19 | 0.42 | 0.39 | 0.45 |
| 중견기업   | -0.743*** | -42.82 | 0.48 | 0.46 | 0.49 |
| 중소기업   | -1.389*** | -95.43 | 0.25 | 0.24 | 0.26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 통제 데이터 비교(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

-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이 클수록 신규 고용 인원 역시 크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오프셋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함
- 시도별의 경우 기준은 강원이 되며, 대전은 강원과 통계적으로 동일한 신규 고용 인원을 창출하고, 대구, 광주는 통계적으로 강원보다 신규 고용이 더 많으며, 나머지 시도는 강원보다 신규 고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전과 증설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크고, 증설보다 이전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큼

- 또한 이전 기업 중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더 크고,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21〉 표준화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부산     | -0.657*** | -28.65 | 0.52 | 0.50 | 0.54 |
| 대구     | 0.798***  | 38.20  | 2.22 | 2.13 | 2.31 |
| 광주     | 0.420***  | 15.96  | 1.52 | 1.45 | 1.60 |
| 대전     | 0.039     | 1.53   | 1.04 | 0.99 | 1.09 |
| 울산     | -0.133**  | -2.37  | 0.88 | 0.78 | 0.98 |
| 세종     | -0.933*** | -27.81 | 0.39 | 0.37 | 0.42 |
| 충북     | -1.159*** | -75.70 | 0.31 | 0.30 | 0.32 |
| 충남     | -1.036*** | -70.71 | 0.35 | 0.34 | 0.37 |
| 전북     | -0.671*** | -40.34 | 0.51 | 0.49 | 0.53 |
| 전남     | -0.062*** | -3.15  | 0.94 | 0.90 | 0.98 |
| 경북     | -0.383*** | -19.51 | 0.68 | 0.66 | 0.71 |
| 경남     | -0.351*** | -17.80 | 0.70 | 0.68 | 0.73 |
| 제주     | -0.483*** | -13.31 | 0.62 | 0.57 | 0.66 |
| 이전     | 1.165***  | 87.52  | 3.21 | 3.12 | 3.29 |
| 중설     | 0.373***  | 26.84  | 1.45 | 1.41 | 1.49 |
| 고용, 교육 | 1.848***  | 38.60  | 6.34 | 5.78 | 6.97 |
| 설비     | -2.350*** | -65.61 | 0.10 | 0.09 | 0.10 |
| 설비, 고용 | -1.613*** | -12.14 | 0.20 | 0.15 | 0.26 |
| 입지     | -2.359*** | -66.85 | 0.09 | 0.09 | 0.10 |
| 입지, 설비 | -1.098*** | -27.67 | 0.33 | 0.31 | 0.36 |
| 중견기업   | 0.516***  | 27.67  | 1.67 | 1.61 | 1.74 |
| 중소기업   | 1.889***  | 118.36 | 6.62 | 6.41 | 6.83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나. 시도별 비교

### □ 원데이터 비교

- 강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부산은 강원과 통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대구와 충북은 통계적으로 강원보다 신규 고용이 더 많음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강원보다 신규 고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2〉 시도별 신규 고용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부산 | -0.008    | -0.35  | 0.99 | 0.95 | 1.03 |
| 대구 | 0.112***  | 6.58   | 1.12 | 1.08 | 1.16 |
| 광주 | -0.686*** | -27.52 | 0.50 | 0.48 | 0.53 |
| 대전 | -0.164*** | -6.66  | 0.85 | 0.81 | 0.89 |
| 울산 | -0.922*** | -16.65 | 0.40 | 0.36 | 0.44 |
| 세종 | -0.640*** | -19.43 | 0.53 | 0.49 | 0.56 |
| 충북 | 0.244***  | 16.90  | 1.28 | 1.24 | 1.31 |
| 충남 | -0.170*** | -12.14 | 0.84 | 0.82 | 0.87 |
| 전북 | -0.385*** | -25.55 | 0.68 | 0.66 | 0.70 |
| 전남 | -0.423*** | -22.92 | 0.66 | 0.63 | 0.68 |
| 경북 | -0.504*** | -27.81 | 0.60 | 0.58 | 0.63 |
| 경남 | -0.334*** | -18.33 | 0.72 | 0.69 | 0.74 |
| 제주 | -1.065*** | -29.82 | 0.34 | 0.32 | 0.37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 통제 데이터 비교(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

- 오프셋 포아송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대구와 대전의 신규 고용이 강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시도의 신규 고용은 강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이로 미루어볼 때,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이 같은 경우 지방이전 혜택을 받은 기업의 신규 고용은 대전과 대구가 가장 크고, 세종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3〉 시도별 신규 고용에 대한 표준화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부산 | -0.914*** | -42.47  | 0.40 | 0.38 | 0.42 |
| 대구 | 0.297***  | 17.17   | 1.35 | 1.30 | 1.39 |
| 광주 | -0.341*** | -13.61  | 0.71 | 0.68 | 0.75 |
| 대전 | 0.724***  | 29.19   | 2.06 | 1.96 | 2.17 |
| 울산 | -0.768*** | -13.84  | 0.46 | 0.42 | 0.52 |
| 세종 | -1.501*** | -45.37  | 0.22 | 0.21 | 0.24 |
| 충북 | -1.693*** | -115.35 | 0.18 | 0.18 | 0.19 |
| 충남 | -0.984*** | -68.93  | 0.37 | 0.36 | 0.38 |
| 전북 | -1.329*** | -86.68  | 0.26 | 0.26 | 0.27 |
| 전남 | -0.086*** | -4.60   | 0.92 | 0.88 | 0.95 |
| 경북 | -1.261*** | -68.83  | 0.28 | 0.27 | 0.29 |
| 경남 | -1.033*** | -55.72  | 0.36 | 0.34 | 0.37 |
| 제주 | -0.303*** | -8.47   | 0.74 | 0.69 | 0.79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다. 지원 유형별 비교

### □ 원데이터 비교

- 지원 유형 중 신설을 기준으로 신규 고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증설은 신설에 비해 신규 고용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지원 유형별 신규 고용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이전 | 0.205***  | 24.63  | 1.23 | 1.21 | 1.25 |
| 증설 | -0.277*** | -20.36 | 0.76 | 0.74 | 0.78 |

주: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 통제 데이터 비교(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

- 이러한 특징은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증설은 신설에 비해 신규 고용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5〉 지원 유형별 신규 고용에 대한 표준화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이전 | 1.060*** | 126.94 | 2.89 | 2.84 | 2.94 |
| 증설 | -0.021   | -1.51  | 0.98 | 0.95 | 1.01 |

주: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라. 보조금 유형별 비교

### □ 원데이터 비교

- 보조금 유형 중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신규 고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고용 및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설비, 설비 및 고용, 입지,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은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고용과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폐지된 것을 감안할 때, 입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신규 고용 인원이 제일 크고,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작음

〈표 4-26〉 보조금 유형별 신규 고용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고용, 교육 | 0.747***  | 19.01  | 2.11 | 1.96 | 2.28 |
| 설비     | -0.818*** | -25.94 | 0.44 | 0.41 | 0.47 |
| 설비, 고용 | -1.185*** | -9.13  | 0.31 | 0.24 | 0.39 |
| 입지     | -0.610*** | -19.11 | 0.54 | 0.51 | 0.58 |
| 입지, 설비 | -1.032*** | -28.26 | 0.36 | 0.33 | 0.38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 통제 데이터 비교(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

-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한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임
- 고용 및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은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설비, 설비 및 고용, 입지,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은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적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고용과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때,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크고, 설비와 입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7〉 보조금 유형별 신규 고용에 대한 표준화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고용, 교육 | 1.002***  | 24.62   | 2.72 | 2.52 | 2.95 |
| 설비     | -4.348*** | -130.68 | 0.01 | 0.01 | 0.01 |
| 설비, 고용 | -0.946*** | -7.27   | 0.39 | 0.30 | 0.50 |
| 입지     | -3.355*** | -99.77  | 0.03 | 0.03 | 0.04 |
| 입지, 설비 | -1.453*** | -38.22  | 0.23 | 0.22 | 0.25 |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마. 기업 규모별 비교

### □ 원데이터 비교

- 기업 규모 중 대기업을 기준으로 신규 고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규 고용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본 제도 수혜 기업 중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28〉 기업 규모별 신규 고용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중견기업 | -0.863*** | -55.87  | 0.42 | 0.41 | 0.43 |
| 중소기업 | -1.438*** | -119.17 | 0.24 | 0.23 | 0.24 |

주: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 통제 데이터 비교(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

-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한 후 기업 규모 중 대기업을 기준으로 신규 고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대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본 제도 수혜 기업 중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29〉 기업 규모별 신규 고용에 대한 표준화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 추정치      | z 통계량  | 평균   | 하한   | 상한   |
|------|----------|--------|------|------|------|
| 중견기업 | 0.550*** | 34.89  | 1.73 | 1.68 | 1.79 |
| 중소기업 | 1.856*** | 148.74 | 6.40 | 6.25 | 6.56 |

주: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 바. 포아송 회귀분석 추정 결과 요약

- 현재와 같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도별, 지원 유형별, 보조금 유형별, 기업 규모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향후 시도별, 지원 유형별, 보조금 유형별, 기업 규모별 정책을 각각 달리 적용하

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전체 변수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과 변수별 포아송 회귀분석을 수행함

○ 현행과 동일하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도별, 지원 유형별, 보조금 유형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제도의 수혜 기업 중 강원의 고용은 대전과 동일하고 부산과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신규 고용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하는 경우에도 강원의 고용은 대전과 통계적으로 동일하고 대구와 광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고,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는 경우 역시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유형 중에서는 입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신규 고용 인원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한 경우에는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기업 규모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크지만,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정책 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은 비용으로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원의 경우, 시도별로는 대구와 광주, 지원 유형별로는 이전에 대한 지원, 보조금 유형별로는 입지 및 설비에 대한 지원,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현행과 달리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도별, 지원 유형별, 보조금 유형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제도의 수혜 기업 중 대구와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신규 고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하는 경우에는 대구와 대전의 신규 고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고,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는 경우 역시 이전에 대한 지원이 신설에 대한 지원보다 신규 고용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유형 중에서는 입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신규 고용 인원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표준화한 경우에는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크지만,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정책 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시도별로는 대구와 충북에 대한 지원, 지원 유형별로는 이전 지원, 보조금 유형별로는 입지에 대한 지원,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은 비용으로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원의 경우, 시도별로는 대구와 대전, 지원 유형별로는 이전에 대한 지원, 보조금 유형별로는 입지 및 설비에 대한 지원,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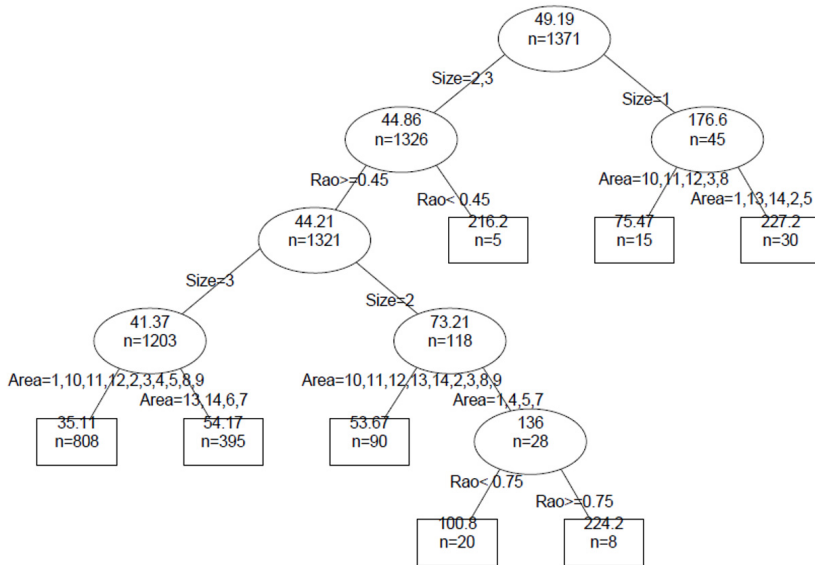
## 2.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 다음으로 신규 고용 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분류 방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함. 의사결정나무는 시초는 Sonquist and Morgan(1963)의 자동 상호 작용 탐지(AID :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이며, 이후 Morgan and Messenger(1973)가 제안한 기술적인 자동 상호 작용 탐지(THAID : Technical Automatic

- Interaction Detection)로 발전됨. 또한 대부분의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분류와 회귀 나무(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를 개발한 Breiman et al.(1984)은 의사결정나무의 가지치기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정립함. 이후 Kass(1990)는 카이제곱 적합성 검정에 근거한 카이제곱 자동 상호 작용 탐지(CHAID: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Loh and Shih(1997)는 변수 선택의 편의를 줄일 수 있는 QUEST(Quick, Unbiased, Efficient, Statistical Tree)를 개발함. 가장 최근에 개발된 의사결정나무분석 방법론은 Breiman(2001)이 제시한 Random Forest로 부트스트랩(bootstrap) 표본을 이용하여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하여 그 결과들을 결합하는 앙상블(ensemble) 기법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향상함.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지니 지수를 가장 작게 감소시킬 수 있는 분리 기준인 CART 알고리즘을 활용함
- 대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평균 176.6명)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평균 44.86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이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로 이전하는 경우보다 그 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이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로 이전하는 경우 신규 고용 인원은 평균 75.47명 수준임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규 고용 인원은 평균 227.2명인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율에 따라 신규 고용 인원이 구분되지만,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이를 신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중견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은 평균 73.21명인 데 반해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은 평균 41.37명 수준임
    -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부산, 대구, 광주, 강원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규 고용 인원은 평균 136명이고 그 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규 고용 인원은 평균 53.67명 수준임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산, 대전, 충북, 충남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규 고용 인원은 평균 54.17명이고 그 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

규 고용 인원은 평균 35.11명 수준임

[그림 4-1] 전체 변수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 Area | Code | Size | Code |
|------|------|------|------|
| 강원   | 1    | 대기업  | 1    |
| 경남   | 2    | 중견기업 | 2    |
| 경북   | 3    | 중소기업 | 3    |
| 광주   | 4    | .    | .    |
| 대구   | 5    | .    | .    |
| 대전   | 6    | .    | .    |
| 부산   | 7    | .    | .    |
| 세종   | 8    | .    | .    |
| 울산   | 9    | .    | .    |
| 전남   | 10   | .    | .    |
| 전북   | 11   | .    | .    |
| 제주   | 12   | .    | .    |
| 충남   | 13   | .    | .    |
| 충북   | 14   | .    | .    |

## 제5장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1절 실태조사

#### □ 조사 배경 · 필요성 · 목적

- 본 사업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격
  - 투자 규모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투자기업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어 투자 활성화를 유도
- 투자행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제도적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보와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수집 필요성 제기
  - (실효성)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본 제도가 실제 기업의 투자 결정과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
  - (효과성) 제도 추진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인 면까지 파악할 필요
  - (파급성)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유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
- 투자와 일자리 창출 간 정량적 관계 규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의 지향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질적인 고용 상황 개

### 선 도모 필요

- 투자와 일자리 창출 간에는 영향의 경로와 규모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
  - 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 투자사업의 본래 목적과 우리 경제·사회가 추구하는 일자리의 질적 방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목적성을 가진 평가가 필요
- 본 조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활동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수행이 목적
- 투자 규모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투자기업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실제 지방투자가 이루어진 업체에 대한 고용효과 실태를 조사
- 또한 정책지원 대상의 특성별 지방투자지원제도의 고용효과 차이를 파악하고, 유효한 정책 수단 및 대상 설정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목적
- 동 제도가 목표로 하는 혹은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유형(규모, 입지 형태, 업종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방투자 지원 대상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동 제도가 목표로 하는 기대효과와 부합하는지를 파악

### □ 조사의 설계 및 방법

- (모집단) 모집단은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수도권 활동 기업 또는 사업체
- 지역 단위에 기반하며 비수도권으로 투자가 실현된 활동에만 적용되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모집단 설정
  - 지방투자 결정 이후 실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과 애로사항 발굴이 주요 연구 대상이므로, 한정적 집단 즉 지방투자보조금을 수령한 현재 비수도권 소재 기업 또는 사업체가 해당
  - 2005~2022년까지 지방투자보조금을 수령하고 실제 신규 고용계획을

## 완수한 기업

- (조사업체 수) 지방투자보조금의 집행에 실제 관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 명부를 토대로 조사하되 약 200개 정도의 유효표본을 목표로 하였으며, 최종 확보된 유효표본은 201개
  - 조사대상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 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략 50% 정도 비율로 응답 목표를 설정하였고, 실제 유효표본은 이전 76개, 신·증설 125개가 확보
  - 조사대상 지역은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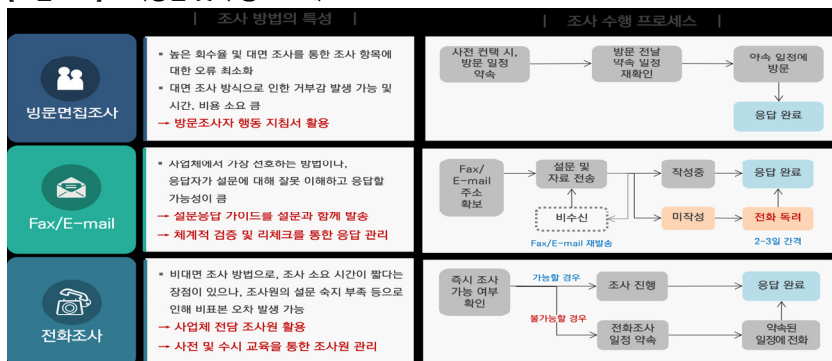
〈표 5-1〉 조사 대상 및 목표 조사업체 수 및 유효표본

(단위: 개)

|        | 분야           | 조사 목표 업체 수 | 유효표본 수 |
|--------|--------------|------------|--------|
| 지방투자기업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 100        | 76     |
|        | 신·증설         | 100        | 125    |
| 전 체    |              | 200        | 201    |

- (조사방법)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원과 업체 담당자의 1:1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업체가 희망하는 조사 방법을 우선 적용
  -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Fax/E-mail 조사 및 필요시 전화조사를 병행

[그림 5-1] 조사방법 및 수행 프로세스



## □ 조사 내용 및 구성

- 본 실태조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촉발 요인인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 도출이 목적
- 이를 위해 노동시장 균형 차원에서 수요 관점과 공급 관점으로 구분하고, 각각 촉진과 수급 관리라는 정책 방향하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
  - 우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결정 요인과 애로사항 탐색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투자 활성화, 즉 노동수요 관점의 지방투자 실태를 점검
  -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투자에 수반되어 주어진 노동수요와의 매칭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동공급 관점의 지방투자 실태점검 내용으로 구성

〈표 5-2〉 실태조사 내용

|                       | 세부 내용                                                                                                                                                                                                                                     |
|-----------------------|-------------------------------------------------------------------------------------------------------------------------------------------------------------------------------------------------------------------------------------------|
| 지방투자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연혁(설립 시기, 소재지 주소) ■ 입지 형태</li> <li>■ 기업 규모(법정, 매출액, 고용)</li> <li>■ 생산품과 거래현황(주 생산품, 구매·판매 비율)</li> </ul>                                                                                      |
| 지방투자의 요인과 애로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현황(투자단계, 규모, 투자액, 주 생산품)</li> <li>■ 지방투자 결정요인(Push 요인, Pull 요인)</li> <li>■ 지방투자 실현 과정의 애로사항</li> <li>■ 지방투자 계획</li> </ul>                                                                     |
| 지방투자자<br>일자리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별 고용 구성 : 지방투자 전후 정규직 구성비 변화</li> <li>■ 고용 규모 : 지방투자 전후 총고용 규모</li> <li>■ 직종·연령·국적 고용 구성</li> <li>■ 신규·이직 고용 : 총규모, 총원·이직 경로, 총원·이직 지역</li> <li>■ 고용 애로사항 : 직군·학력, 사용자·근로자 관점, 정책 등</li> </ul> |
| 지방투자자<br>일자리<br>질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보상</li> <li>■ 근로자 복지</li> <li>■ 근로시간</li> <li>■ 근속</li> <li>■ 교육훈련</li> </ul>                                                                                                                |
| 지방투자자를<br>위한 정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원 형태</li> <li>■ 정부 지원 수혜 실적, 수혜 경로</li> <li>■ 정부 지원과정 애로사항</li> </ul>                                                                                                                        |

## 1. 실태조사 결과

### 가. 지방투자 현황

#### □ 사업장 입지 현황

- (입지 성격) 실제 입지 가능 용지의 지역 간 규모 차이가 있지만, 응답 업체 88.6%는 계획 입지에 소재하고, 건물, 토지는 대부분 자가로 소유
  - 강원·제주권 투자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계획 입지에 소재
  -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개별 입지 비중은 늘고 있으나, 자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건물은 자가, 토지는 임대 비중이 상승 추세

〈표 5-3〉 사업장 입지 성격

(단위: %)

|       |            | 사례 수  | 입지 성격 |       | 소유 여부    |     |          |      |
|-------|------------|-------|-------|-------|----------|-----|----------|------|
|       |            |       | 계획 입지 | 개별 입지 | 건물 소유 여부 |     | 토지 소유 여부 |      |
|       |            |       |       |       | 자가       | 임대  | 자가       | 임대   |
| 전 체   |            | (201) | 88.6  | 11.4  | 97.0     | 3.0 | 93.5     | 6.5  |
| 지역    | 충청권        | (58)  | 87.9  | 12.1  | 98.3     | 1.7 | 98.3     | 1.7  |
|       | 호남권        | (62)  | 90.3  | 9.7   | 96.8     | 3.2 | 91.9     | 8.1  |
|       | 대경권        | (30)  | 93.3  | 6.7   | 96.7     | 3.3 | 96.7     | 3.3  |
|       | 동남권        | (32)  | 87.5  | 12.5  | 93.8     | 6.3 | 81.3     | 18.8 |
|       | 강원·제주권     | (19)  | 78.9  | 21.1  | 100.0    | 0.0 | 100.0    | 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87.2  | 12.8  | 96.0     | 4.0 | 91.2     | 8.8  |
|       | 이전         | (76)  | 90.8  | 9.2   | 98.7     | 1.3 | 97.4     | 2.6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92.9  | 7.1   | 96.4     | 3.6 | 96.4     | 3.6  |
|       | 2015~2019년 | (63)  | 90.5  | 9.5   | 96.8     | 3.2 | 95.2     | 4.8  |
|       | 2020년 이후   | (110) | 86.4  | 13.6  | 97.3     | 2.7 | 91.8     | 8.2  |

- (입지 규모) 50% 이하의 낮은 용적률을 보이고, 부지는 충청권, 건물은 동남권 사업장이 가장 넓게 활용하며, 이전 기업 부지면적이 높은 수준
  - 부지와 건물 면적은 각각 평균 26,912㎡, 12,340㎡이며, 부지는 충청권 31,777㎡, 건물은 동남권 사업장 16,231㎡로 가장 큰 규모

〈표 5-4〉 사업장 입지 규모

(단위: m<sup>2</sup>)

|          |            | 사례 수  | 부지면적   |           | 건물면적   |           |
|----------|------------|-------|--------|-----------|--------|-----------|
|          |            |       | 평균     | 합계        | 평균     | 전체        |
| 전 체      |            | (201) | 26,912 | 5,409,317 | 12,340 | 2,480,382 |
| 지역       | 충청권        | (58)  | 31,777 | 1,843,060 | 11,909 | 690,736   |
|          | 호남권        | (62)  | 28,372 | 1,759,064 | 11,961 | 741,570   |
|          | 대경권        | (30)  | 17,260 | 517,807   | 11,985 | 359,561   |
|          | 동남권        | (32)  | 30,716 | 982,915   | 16,231 | 519,393   |
|          | 강원·제주권     | (19)  | 16,130 | 306,471   | 8,901  | 169,122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23,192 | 2,898,979 | 13,293 | 1,661,643 |
|          | 이전         | (76)  | 33,031 | 2,510,338 | 10,773 | 818,739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42,565 | 1,191,811 | 13,359 | 374,041   |
|          | 2015~2019년 | (63)  | 24,145 | 1,521,125 | 9,843  | 620,137   |
|          | 2020년 이후   | (110) | 24,513 | 2,696,380 | 13,511 | 1,486,204 |

- 수도권 이전 투자기업이 지역 내 신·증설 투자기업에 비해 부지면적이 큰 가운데, 특히 이전 투자가 많았던 2015년 이전에는 그 이후와 비교해 약 2배에 달하는 부지면적 활용

#### □ 사업장 규모 현황

- (기업 규모) 응답 업체 전체로 중소기업(법정 구분 기준)이 가장 많으며 (82.1%),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권역, 신·증설, 2020년 이후 투자일 수록 대기업 사례는 전무

- 동남권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는 특히 약 94%가 중소기업 기준에 포함
- 대기업 응답 비중은 전체 중 2.0%에 불과하며, 모두 2019년 이전에 투자는 완료하였고, 수도권 이전 투자만 포함

- (매출 규모) 3년간 매출액 평균은 1,369억 원이며, 2015년 이전 완료한 업체의 평균이 2,240억 원 수준으로 평균 대비 높음

\*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 평균이 4,204억 원으로 매우 높는데, 유효표본 수가 타지역 대비 적으므로 해석상에 주의 필요

〈표 5-5〉 사업장 규모 및 매출 현황

(단위: %, 억 원)

|          |            | 사례 수  | 기업 규모 (법정 구분) |      |      | 최근 3년<br>매출액 평균 |
|----------|------------|-------|---------------|------|------|-----------------|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전 체      |            | (201) | 2.0           | 15.9 | 82.1 | 1,369.0         |
| 지역       | 충청권        | (58)  | 3.4           | 22.4 | 74.1 | 662.1           |
|          | 호남권        | (62)  | 3.2           | 19.4 | 77.4 | 1,474.4         |
|          | 대경권        | (30)  | 0.0           | 13.3 | 86.7 | 772.5           |
|          | 동남권        | (32)  | 0.0           | 6.3  | 93.8 | 1,322.1         |
|          | 강원·제주권     | (19)  | 0.0           | 5.3  | 94.7 | 4,204.1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0.0           | 19.2 | 80.8 | 1,520.3         |
|          | 이전         | (76)  | 5.3           | 10.5 | 84.2 | 1,120.1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7.1           | 7.1  | 85.7 | 2,239.9         |
|          | 2015~2019년 | (63)  | 3.2           | 7.9  | 88.9 | 1,498.6         |
|          | 2020년 이후   | (110) | 0.0           | 22.7 | 77.3 | 1,073.1         |

- (고용 규모) 응답 업체 사업장 상시 고용 규모는 30인~100인 미만인 사업장이 48.8%로 가장 많고, 3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은 각각 11.4%
- 응답 사례 중 충청권과 호남권은 3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크고 동시에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도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
  - 신·증설 투자는 규모가 큰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반면 이전 투자는 소규모 사업장, 2015년 이후는 30인 미만 사례가 급감

〈표 5-6〉 사업장 고용 현황

(단위: %)

|          |            | 사례 수  | 30인 미만 | 30인~100인<br>미만 | 100인~300인<br>미만 | 300인 이상 |
|----------|------------|-------|--------|----------------|-----------------|---------|
| 전 체      |            | (201) | 11.4   | 48.8           | 28.4            | 11.4    |
| 지역       | 충청권        | (58)  | 8.6    | 55.2           | 24.1            | 12.1    |
|          | 호남권        | (62)  | 21.0   | 40.3           | 25.8            | 12.9    |
|          | 대경권        | (30)  | 6.7    | 43.3           | 33.3            | 16.7    |
|          | 동남권        | (32)  | 6.3    | 59.4           | 28.1            | 6.3     |
|          | 강원·제주권     | (19)  | 5.3    | 47.4           | 42.1            | 5.3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6.4    | 52.0           | 28.0            | 13.6    |
|          | 이전         | (76)  | 19.7   | 43.4           | 28.9            | 7.9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35.7   | 21.4           | 28.6            | 14.3    |
|          | 2015~2019년 | (63)  | 9.5    | 55.6           | 27.0            | 7.9     |
|          | 2020년 이후   | (110) | 6.4    | 51.8           | 29.1            | 12.7    |

## □ 사업장 거래현황

- (구매 관계) 응답 업체의 구매처 중 중소기업 비중이 69.8%로 가장 높으며, 타지역에 많은 구매처가 소재한 가운데, 신·증설 투자는 이전 투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역 내 구매 관계가 높은 수준
  -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은 대기업 구매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동남권은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구매 지역 비중은 국내 타지역이 64.4%로 가장 높은 가운데, 대경권은 국내 타지역 구매 비중이 73.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신·증설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들어 소재 지역 내에서 구매 관계를 가진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
- (판매 관계) 판매처에서 중소기업이 52.7%, 대기업은 39.6%로 구매 관계에 비해 대기업으로의 판매 비중이 대폭 상승하고, 특히 신·증설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더 많은 판매 비중
  - 수도권에 멀리 떨어진 지역(동남권)일수록 판매처가 대기업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파악
  - 판매는 국내 타지역 비중이 59.0%로 가장 높은 가운데, 마찬가지로 신·증설 투자 시 지역 내 소재 기업과 판매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표 5-7〉 구매처 및 구매 지역 현황

(단위: %)

|       |            | 사례 수  | 구매처 비율 |      |      | 구매 지역 비율 |        |      |
|-------|------------|-------|--------|------|------|----------|--------|------|
|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기타   | 국내 소재 지역 | 국내 타지역 | 수입   |
| 전 체   |            | (201) | 21.2   | 69.8 | 9.0  | 24.4     | 64.4   | 11.2 |
| 지역    | 충청권        | (58)  | 23.5   | 63.9 | 12.6 | 22.0     | 66.8   | 11.2 |
|       | 호남권        | (62)  | 23.2   | 69.5 | 7.3  | 26.6     | 61.5   | 11.9 |
|       | 대경권        | (30)  | 24.4   | 66.8 | 8.9  | 18.4     | 73.2   | 8.5  |
|       | 동남권        | (32)  | 17.7   | 75.5 | 6.9  | 31.9     | 57.7   | 10.5 |
|       | 강원·제주권     | (19)  | 8.4    | 84.1 | 7.5  | 21.3     | 64.2   | 14.6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24.1   | 66.9 | 9.1  | 29.4     | 60.6   | 10.0 |
|       | 이전         | (76)  | 16.5   | 74.6 | 8.9  | 16.0     | 70.7   | 13.2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17.7   | 77.3 | 5.0  | 15.8     | 67.7   | 16.6 |
|       | 2015~2019년 | (63)  | 19.9   | 72.2 | 7.9  | 22.7     | 65.9   | 11.4 |
|       | 2020년 이후   | (110) | 22.8   | 66.5 | 10.7 | 27.5     | 62.8   | 9.7  |

〈표 5-8〉 판매처 및 판매 지역 현황

(단위: %)

|       |            | 사례 수  | 판매처 비율 |      |      | 판매 지역 비율 |        |      |
|-------|------------|-------|--------|------|------|----------|--------|------|
|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기타   | 국내 소재 지역 | 국내 타지역 | 수출   |
| 전 체   |            | (201) | 39.6   | 52.7 | 7.7  | 24.2     | 59.0   | 16.8 |
| 지역    | 충청권        | (58)  | 37.0   | 51.3 | 11.6 | 26.9     | 56.3   | 16.8 |
|       | 호남권        | (62)  | 41.8   | 49.9 | 8.3  | 22.3     | 66.6   | 11.1 |
|       | 대경권        | (30)  | 43.4   | 47.1 | 9.5  | 20.3     | 57.0   | 22.7 |
|       | 동남권        | (32)  | 46.5   | 53.2 | 0.3  | 29.8     | 46.8   | 23.4 |
|       | 강원·제주권     | (19)  | 23.2   | 73.7 | 3.2  | 19.0     | 66.1   | 14.9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46.9   | 45.9 | 7.2  | 28.0     | 55.3   | 16.7 |
|       | 이전         | (76)  | 27.7   | 63.9 | 8.5  | 18.0     | 65.1   | 16.9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31.4   | 62.7 | 5.9  | 14.1     | 70.5   | 15.3 |
|       | 2015~2019년 | (63)  | 36.6   | 53.5 | 9.8  | 25.6     | 55.8   | 18.6 |
|       | 2020년 이후   | (110) | 43.5   | 49.6 | 6.9  | 26.0     | 57.9   | 16.2 |

#### □ 지방투자 현황 종합

- 응답 업체는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에 높은 비율로 입주하고, 자가 부지·건물을 소유하며, 중소기업이 대다수이며,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구매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판매는 대기업과 관계 형성
- 권역 간에는 확연하게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는 않으나, 입지 조건, 수도권과의 거리, 중소기업 비중 등에서 지역적 특성이 반영
- 신·증설 또는 이전 투자 등 지원 유형과 관련해 입지와 고용 규모 차이와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에 따른 거래 관계의 상대적 차이 확인
- 최근으로 올수록 개별 입지 비중이 늘고 동시에 공간 소요도 줄어드는 가운데, 대기업 투자는 줄어드는 현황

#### 나. 지방투자의 요인과 애로사항

##### □ 현 사업장 투자 시기

- 응답 업체의 49.8%가 현 사업장은 2015~2019년에 착공한 것으로 파악

되며, 47.3%가 2020년 이후에 공장 등록

- 충청권과 호남권은 2015년 이전, 대경권 및 동남권은 2020년 이후 착공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투자 유형의 경우는 실제 본 제도 운영현황과 마찬가지로 신·증설 투자의 최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현 사업장 가동률은 92.1% 수준으로 파악

〈표 5-9〉 현 사업장 투자 시기

(단위: %)

|       |            | 사례 수  | 착공 시기   |           |         | 공장 등록 시점 |           |         | 현재 가동률 |
|-------|------------|-------|---------|-----------|---------|----------|-----------|---------|--------|
|       |            |       | 2015 이전 | 2015~2019 | 2020 이후 | 2015 이전  | 2015~2019 | 2020 이후 |        |
| 전 체   |            | (201) | 24.9    | 49.8      | 25.4    | 16.9     | 35.8      | 47.3    | 92.1   |
| 지역    | 충청권        | (58)  | 22.4    | 55.2      | 22.4    | 6.9      | 43.1      | 50.0    | 90.9   |
|       | 호남권        | (62)  | 33.9    | 50.0      | 16.1    | 29.0     | 24.2      | 46.8    | 92.2   |
|       | 대경권        | (30)  | 10.0    | 43.3      | 46.7    | 6.7      | 30.0      | 63.3    | 93.8   |
|       | 동남권        | (32)  | 9.4     | 46.9      | 43.8    | 3.1      | 43.8      | 53.1    | 92.3   |
|       | 강원·제주권     | (19)  | 52.6    | 47.4      | 0.0     | 47.4     | 47.4      | 5.3     | 91.8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4.8     | 57.6      | 37.6    | 2.4      | 31.2      | 66.4    | 90.9   |
|       | 이전         | (76)  | 57.9    | 36.8      | 5.3     | 40.8     | 43.4      | 15.8    | 93.9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100.0   | 0.0       | 0.0     | 100.0    | 0.0       | 0.0     | 92.0   |
|       | 2015~2019년 | (63)  | 28.6    | 71.4      | 0.0     | 7.9      | 85.7      | 6.3     | 95.0   |
|       | 2020년 이후   | (110) | 3.6     | 50.0      | 46.4    | 0.9      | 16.4      | 82.7    | 90.4   |

#### □ 현 사업장 면적

- 산업시설(78%)과 지원시설(22%)의 총계 기준으로 사업장 면적은 평균 29,697㎡이며, 충청권이 평균 51,043㎡로 가장 넓은 면적 보유
- 산업시설은 충청권이 평균 48,277㎡로 가장 넓었지만, 지원시설은 호남권이 평균 17,004㎡로 가장 넓은 수준
- 신·증설 투자 사업장 면적은 18,667㎡로 수도권 이전 투자 사업장의 40%에 불과하며, 최근 2020년 이후는 평균 면적이 대폭 감소

〈표 5-10〉 현 사업장 면적

(단위: m²)

|          |            | 사례 수  | 산업시설   |           | 지원시설   |           | 전체(산업+지원) |           |
|----------|------------|-------|--------|-----------|--------|-----------|-----------|-----------|
|          |            |       | 평균     | 합계        | 평균     | 합계        | 평균        | 합계        |
| 전 체      |            | (201) | 23,019 | 4,626,725 | 6,679  | 1,342,389 | 29,697    | 5,969,114 |
| 지역       | 충청권        | (58)  | 48,277 | 2,800,072 | 2,766  | 160,427   | 51,043    | 2,960,499 |
|          | 호남권        | (62)  | 11,708 | 725,902   | 17,004 | 1,054,226 | 28,712    | 1,780,129 |
|          | 대경권        | (30)  | 16,371 | 491,128   | 642    | 19,248    | 17,013    | 510,376   |
|          | 동남권        | (32)  | 13,706 | 438,607   | 2,517  | 80,534    | 16,223    | 519,141   |
|          | 강원·제주권     | (19)  | 9,001  | 171,016   | 1,471  | 27,954    | 10,472    | 198,97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3,592 | 1,699,049 | 5,075  | 634,317   | 18,667    | 2,333,365 |
|          | 이전         | (76)  | 38,522 | 2,927,677 | 9,317  | 708,072   | 47,839    | 3,635,749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13,172 | 368,829   | 24,062 | 673,746   | 37,235    | 1,042,575 |
|          | 2015~2019년 | (63)  | 44,572 | 2,808,021 | 6,517  | 410,574   | 51,089    | 3,218,595 |
|          | 2020년 이후   | (110) | 13,181 | 1,449,875 | 2,346  | 258,069   | 15,527    | 1,707,944 |

#### □ 투자 현황

○ (입지 유형) 투자 결정 시 신규 투자 사업장 부지유형에 대한 인식 질문에 '동종산업 집적은 아니나 계획 입지'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 (70.6%)

- 그 외 동남권 소재 업체, 신·증설 업체, 2020년 이후 완료 업체는 '동종산업 집적지'로 인식했다는 응답 비중이 20% 상회

〈표 5-11〉 신규 투자 사업장 부지 유형에 대한 인식

(단위: %)

|          |            | 사례 수  | 개별 입지 | 동종산업<br>집적지 | 동종산업 집적은<br>아니나 계획 입지 |
|----------|------------|-------|-------|-------------|-----------------------|
| 전 체      |            | (201) | 13.4  | 15.9        | 70.6                  |
| 지역       | 충청권        | (58)  | 13.8  | 10.3        | 75.9                  |
|          | 호남권        | (62)  | 12.9  | 19.4        | 67.7                  |
|          | 대경권        | (30)  | 13.3  | 13.3        | 73.3                  |
|          | 동남권        | (32)  | 12.5  | 21.9        | 65.6                  |
|          | 강원·제주권     | (19)  | 15.8  | 15.8        | 68.4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2.8  | 20.8        | 66.4                  |
|          | 이전         | (76)  | 14.5  | 7.9         | 77.6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14.3  | 7.1         | 78.6                  |
|          | 2015~2019년 | (63)  | 15.9  | 7.9         | 76.2                  |
|          | 2020년 이후   | (110) | 11.8  | 22.7        | 65.5                  |

○ (투자 규모) 총투자 규모는 평균 1,162억 원이며, 이 중 설비(88%)와 부지(12%) 투자 모두 동남권이 가장 큰 가운데, 이전 투자가 신·증설 투자의 약 10배 정도 더 크고, 최근 들어 평균 투자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

- 설비투자는 평균 1,018억 원으로 부지 투자 규모의 7.1배에 달하며, 동남권 업체 평균 설비투자 규모가 4,108억 원으로 가장 큰 수준
- 부지투자는 평균 144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마찬가지로 동남권 소재 업체의 평균 부지투자 규모가 709억 원으로 가장 큰 수준

〈표 5-12〉 총 투자액

(단위: 백만 원)

|       |            | 사례 수  | 설비투자    |            | 부지매입   |           | 전체(설비+부지) |            |
|-------|------------|-------|---------|------------|--------|-----------|-----------|------------|
|       |            |       | 평균      | 합계         | 평균     | 합계        | 평균        | 합계         |
| 전 체   |            | (201) | 101,814 | 20,464,705 | 14,357 | 2,885,677 | 116,171   | 23,350,382 |
| 지역    | 충청권        | (58)  | 20,390  | 1,182,634  | 4,535  | 263,033   | 24,925    | 1,445,667  |
|       | 호남권        | (62)  | 72,897  | 4,519,615  | 3,912  | 242,533   | 76,809    | 4,762,148  |
|       | 대경권        | (30)  | 46,726  | 1,401,780  | 1,171  | 35,140    | 47,897    | 1,436,920  |
|       | 동남권        | (32)  | 410,758 | 13,144,241 | 70,865 | 2,267,683 | 481,623   | 15,411,924 |
|       | 강원·제주권     | (19)  | 11,391  | 216,435    | 4,068  | 77,288    | 15,459    | 293,723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25,368  | 3,171,042  | 2,113  | 264,117   | 27,481    | 3,435,159  |
|       | 이전         | (76)  | 227,548 | 17,293,663 | 34,494 | 2,621,560 | 262,042   | 19,915,223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15,324  | 429,065    | 8,336  | 233,417   | 23,660    | 662,482    |
|       | 2015~2019년 | (63)  | 83,667  | 5,271,021  | 4,000  | 252,018   | 87,667    | 5,523,039  |
|       | 2020년 이후   | (110) | 134,224 | 14,764,619 | 21,820 | 2,400,242 | 156,044   | 17,164,861 |

○ (투자 유형) 신규사업장으로서 비수도권 투자는 ‘지방이전’이 3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주로 수도권 인근 권역 소재 업체가 ‘지방이전’으로 투자

- ‘비수도권 사업장 신설’ 34.3%, ‘비수도권 사업장 증설’ 26.4%가 다음으로 높았으며, 지역별로 충청,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는 ‘지방이전’이 각각 58.6%, 68.4%로 타지역 대비 높은 비중

〈표 5-13〉 신규 사업장 비수도권 투자 유형

(단위: %)

|          |            | 사례 수  | 지방이전<br>(3년 이내 기존<br>수도권 사업장 폐쇄) | 비수도권<br>사업장 신설 | 비수도권<br>사업장 증설 |
|----------|------------|-------|----------------------------------|----------------|----------------|
| 전 체      |            | (201) | 39.3                             | 34.3           | 26.4           |
| 지역       | 충청권        | (58)  | 58.6                             | 17.2           | 24.1           |
|          | 호남권        | (62)  | 37.1                             | 40.3           | 22.6           |
|          | 대경권        | (30)  | 20.0                             | 50.0           | 30.0           |
|          | 동남권        | (32)  | 9.4                              | 53.1           | 37.5           |
|          | 강원·제주권     | (19)  | 68.4                             | 10.5           | 21.1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2.4                              | 55.2           | 42.4           |
|          | 이전         | (76)  | 100.0                            | 0.0            | 0.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100.0                            | 0.0            | 0.0            |
|          | 2015~2019년 | (63)  | 54.0                             | 20.6           | 25.4           |
|          | 2020년 이후   | (110) | 15.5                             | 50.9           | 33.6           |

○ (투자 사업장 종합) 응답 업체 절반이 2015~2019년에 착공한 사업장이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 투자가 면적, 금액 규모가 크며, 주로 수도권 인근 권역으로의 이전 비중이 높고, 계획 입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수준

- 권역 간에는 투자 시기가 201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 다르게 나타났다으며, 충청권이 가장 넓은 사업장 면적을 가지는 반면 동남권은 투자 규모가 가장 크고, 동중산업 집적 경향이 타지역 대비 높음
- 투자 유형과 관련해서는 이전 투자가 면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운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전 투자는 줄고 신·증설 투자가 느는 것을 반영하여 평균 부지면적은 줄어들고 투자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

□ 지방투자 결정의 주된 이유: Push 요인

○ (임금) 지방투자를 결정한 주된 이유 중 ‘높은 임금’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중립적이거나, 권역과 시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존재

- 절반 정도인 50.7%가 중요하다고(중요함+매우 중요함) 응답(5점 척도: 평균 3.52점)한 가운데, 충청권과 동남권 소재 기업은 투자 과정에서 수도권 또는 지역 내 임금 수준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
- 지원 유형 간에는 큰 차이가 없이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나, 시기별로는 2015년 이전 투자 완료 업체는 임금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

〈표 5-14〉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높은 임금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 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7.0         | 7.0            | 35.3 | 28.4 | 22.4     | 50.7            | 3.52     |
| 지역       | 충청권        | (58)  | 13.8        | 5.2            | 44.8 | 25.9 | 10.3     | 36.2            | 3.14     |
|          | 호남권        | (62)  | 1.6         | 9.7            | 25.8 | 30.6 | 32.3     | 62.9            | 3.82     |
|          | 대경권        | (30)  | 3.3         | 10.0           | 26.7 | 20.0 | 40.0     | 60.0            | 3.83     |
|          | 동남권        | (32)  | 9.4         | 6.3            | 43.8 | 25.0 | 15.6     | 40.6            | 3.31     |
|          | 강원·제주권     | (19)  | 5.3         | 0.0            | 36.8 | 47.4 | 10.5     | 57.9            | 3.58     |
| 지원<br>유형 | 신·중설       | (125) | 5.6         | 8.0            | 37.6 | 24.0 | 24.8     | 48.8            | 3.54     |
|          | 이전         | (76)  | 9.2         | 5.3            | 31.6 | 35.5 | 18.4     | 53.9            | 3.49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7.1            | 14.3 | 53.6 | 25.0     | 78.6            | 3.96     |
|          | 2015~2019년 | (63)  | 11.1        | 7.9            | 39.7 | 22.2 | 19.0     | 41.3            | 3.30     |
|          | 2020년 이후   | (110) | 6.4         | 6.4            | 38.2 | 25.5 | 23.6     | 49.1            | 3.54     |

- (입지 비용 절감) ‘높은 입지 비용의 절감’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68.2%로 높았으며, 투자 권역, 유형, 시기에 큰 차이는 없음
  - 호남권, 대경권 소재 업체, 이전 투자, 2015년 이전의 투자가 좀 더 중요도가 높으나, 경계를 나누어 그 차이를 살펴볼 수준은 아님
- (협업기업 이전 또는 투자 요구) ‘협업기업의 이전 또는 투자 요구’는 46.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지방투자 결정에 큰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이전의 투자는 중요한 결정 요인
  - 충청권이 타지역과 비교해 중요도 평가가 더 낮았고, 2015년 이전의 투자 완료 업체는 협업기업과의 관계가 투자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표 5-15〉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높은 입지 비용의 절감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br>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2.0            | 3.5            | 26.4 | 37.3 | 30.8     | 68.2            | 3.92     |
| 지역       | 충청권        | (58)  | 5.2            | 3.4            | 25.9 | 39.7 | 25.9     | 65.5            | 3.78     |
|          | 호남권        | (62)  | 0.0            | 1.6            | 25.8 | 38.7 | 33.9     | 72.6            | 4.05     |
|          | 대경권        | (30)  | 0.0            | 3.3            | 23.3 | 26.7 | 46.7     | 73.3            | 4.17     |
|          | 동남권        | (32)  | 3.1            | 9.4            | 25.0 | 31.3 | 31.3     | 62.5            | 3.78     |
|          | 강원·제주권     | (19)  | 0.0            | 0.0            | 36.8 | 52.6 | 10.5     | 63.2            | 3.74     |
| 지원<br>유형 | 신·중설       | (125) | 1.6            | 5.6            | 26.4 | 35.2 | 31.2     | 66.4            | 3.89     |
|          | 이전         | (76)  | 2.6            | 0.0            | 26.3 | 40.8 | 30.3     | 71.1            | 3.96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0.0            | 25.0 | 46.4 | 28.6     | 75.0            | 4.04     |
|          | 2015~2019년 | (63)  | 1.6            | 7.9            | 27.0 | 33.3 | 30.2     | 63.5            | 3.83     |
|          | 2020년 이후   | (110) | 2.7            | 1.8            | 26.4 | 37.3 | 31.8     | 69.1            | 3.94     |

〈표 5-16〉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협업기업의 이전 또는 투자 요구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 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11.4        | 9.5            | 32.3 | 26.4 | 20.4     | 46.8            | 3.35     |
| 지역       | 충청권        | (58)  | 19.0        | 10.3           | 36.2 | 22.4 | 12.1     | 34.5            | 2.98     |
|          | 호남권        | (62)  | 8.1         | 6.5            | 30.6 | 29.0 | 25.8     | 54.8            | 3.58     |
|          | 대경권        | (30)  | 6.7         | 10.0           | 33.3 | 16.7 | 33.3     | 50.0            | 3.60     |
|          | 동남권        | (32)  | 6.3         | 12.5           | 28.1 | 34.4 | 18.8     | 53.1            | 3.47     |
|          | 강원·제주권     | (19)  | 15.8        | 10.5           | 31.6 | 31.6 | 10.5     | 42.1            | 3.11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1.2        | 12.0           | 32.0 | 26.4 | 18.4     | 44.8            | 3.29     |
|          | 이전         | (76)  | 11.8        | 5.3            | 32.9 | 26.3 | 23.7     | 50.0            | 3.45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14.3        | 3.6            | 10.7 | 39.3 | 32.1     | 71.4            | 3.71     |
|          | 2015~2019년 | (63)  | 11.1        | 9.5            | 31.7 | 27.0 | 20.6     | 47.6            | 3.37     |
|          | 2020년 이후   | (110) | 10.9        | 10.9           | 38.2 | 22.7 | 17.3     | 40.0            | 3.25     |

○ (물류·시간 비용) ‘불필요한 물류·시간 비용의 소요’는 투자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평가했으며(62.2%, 3.78점), 권역, 유형에 따라 차이

- 충청권과 강원·제주권 소재 투자기업은 중립적으로 평가했으며, 이전 투자보다는 신·증설 투자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 요인으로 평가

〈표 5-17〉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불필요한 물류·시간 비용 소요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br>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2.0            | 6.5            | 29.4 | 36.3 | 25.9     | 62.2            | 3.78     |
| 지역       | 충청권        | (58)  | 5.2            | 10.3           | 31.0 | 36.2 | 17.2     | 53.4            | 3.50     |
|          | 호남권        | (62)  | 0.0            | 4.8            | 25.8 | 35.5 | 33.9     | 69.4            | 3.98     |
|          | 대경권        | (30)  | 3.3            | 0.0            | 26.7 | 36.7 | 33.3     | 70.0            | 3.97     |
|          | 동남권        | (32)  | 0.0            | 9.4            | 25.0 | 40.6 | 25.0     | 65.6            | 3.81     |
|          | 강원·제주권     | (19)  | 0.0            | 5.3            | 47.4 | 31.6 | 15.8     | 47.4            | 3.58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6            | 6.4            | 25.6 | 40.8 | 25.6     | 66.4            | 3.82     |
|          | 이전         | (76)  | 2.6            | 6.6            | 35.5 | 28.9 | 26.3     | 55.3            | 3.7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7.1            | 25.0 | 28.6 | 39.3     | 67.9            | 4.00     |
|          | 2015~2019년 | (63)  | 3.2            | 6.3            | 36.5 | 31.7 | 22.2     | 54.0            | 3.63     |
|          | 2020년 이후   | (110) | 1.8            | 6.4            | 26.4 | 40.9 | 24.5     | 65.5            | 3.80     |

○ (정책지원, 투자유치) 지방투자를 결정한 주된 이유 중 ‘본사·사업장 이전, 신·증설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보조금, 인센티브 등)’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평가(86.1%, 4.30점)

-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지방투자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기업과 수도권 이전 투자 등 리스크가 큰 투자 과정에 정부 역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
- (설비 확대·개선) '기존 사업장의 생산역량 부족에 따른 확대 및 공정 개선의 필요'도 지방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70.6%, 4.00점)
- 특히 충청권 소재 업체는 설비 확대·개선 필요성이 투자에 미친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

〈표 5-18〉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정책적 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 고려 않음 | 중요 하지 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 중요 | 중요+ 매우 중요 | 5점 평균 |
|-------|------------|-------|----------|----------|------|------|-------|-----------|-------|
| 전 체   |            | (201) | 0.0      | 1.0      | 12.9 | 40.8 | 45.3  | 86.1      | 4.30  |
| 지역    | 충청권        | (58)  | 0.0      | 0.0      | 17.2 | 41.4 | 41.4  | 82.8      | 4.24  |
|       | 호남권        | (62)  | 0.0      | 1.6      | 8.1  | 37.1 | 53.2  | 90.3      | 4.42  |
|       | 대경권        | (30)  | 0.0      | 3.3      | 10.0 | 43.3 | 43.3  | 86.7      | 4.27  |
|       | 동남권        | (32)  | 0.0      | 0.0      | 12.5 | 37.5 | 50.0  | 87.5      | 4.38  |
|       | 강원·제주권     | (19)  | 0.0      | 0.0      | 21.1 | 52.6 | 26.3  | 78.9      | 4.05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0.0      | 1.6      | 16.0 | 36.8 | 45.6  | 82.4      | 4.26  |
|       | 이전         | (76)  | 0.0      | 0.0      | 7.9  | 47.4 | 44.7  | 92.1      | 4.37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0.0      | 0.0  | 57.1 | 42.9  | 100.0     | 4.43  |
|       | 2015~2019년 | (63)  | 0.0      | 1.6      | 20.6 | 36.5 | 41.3  | 77.8      | 4.17  |
|       | 2020년 이후   | (110) | 0.0      | 0.9      | 11.8 | 39.1 | 48.2  | 87.3      | 4.35  |

〈표 5-19〉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확대 및 공정 개선의 필요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 고려 않음 | 중요 하지 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 중요 | 중요+ 매우 중요 | 5점 평균 |
|-------|------------|-------|----------|----------|------|------|-------|-----------|-------|
| 전 체   |            | (201) | 2.5      | 2.0      | 24.9 | 34.3 | 36.3  | 70.6      | 4.00  |
| 지역    | 충청권        | (58)  | 1.7      | 1.7      | 15.5 | 48.3 | 32.8  | 81.0      | 4.09  |
|       | 호남권        | (62)  | 3.2      | 1.6      | 29.0 | 25.8 | 40.3  | 66.1      | 3.98  |
|       | 대경권        | (30)  | 3.3      | 3.3      | 30.0 | 30.0 | 33.3  | 63.3      | 3.87  |
|       | 동남권        | (32)  | 3.1      | 3.1      | 25.0 | 31.3 | 37.5  | 68.8      | 3.97  |
|       | 강원·제주권     | (19)  | 0.0      | 0.0      | 31.6 | 31.6 | 36.8  | 68.4      | 4.05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1.6      | 3.2      | 24.0 | 32.0 | 39.2  | 71.2      | 4.04  |
|       | 이전         | (76)  | 3.9      | 0.0      | 26.3 | 38.2 | 31.6  | 69.7      | 3.93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3.6      | 0.0      | 21.4 | 42.9 | 32.1  | 75.0      | 4.00  |
|       | 2015~2019년 | (63)  | 3.2      | 3.2      | 30.2 | 33.3 | 30.2  | 63.5      | 3.84  |
|       | 2020년 이후   | (110) | 1.8      | 1.8      | 22.7 | 32.7 | 40.9  | 73.6      | 4.09  |

- (신사업 다각화) 지방투자를 결정한 주된 이유 중 '사업의 다각화 및 신사업(품목 전환 포함) 추진'은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며(63.7%, 3.85점), 신·증설 투자의 중요 요인이며 최근 들어 보다 중시됨
- 동남권 소재 업체가 타 권역보다 높게 평가하나(71.9%) 큰 차이는 없으며, 이전 투자보다는 소재한 지역 내 신·증설 투자에서 유효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러한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평가

〈표 5-20〉 투자 결정 이유 중요도 - 사업 다각화 및 신사업 추진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 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2.0         | 4.0            | 30.3 | 34.3 | 29.4     | 63.7            | 3.85     |
| 지역       | 충청권        | (58)  | 0.0         | 5.2            | 32.8 | 32.8 | 29.3     | 62.1            | 3.86     |
|          | 호남권        | (62)  | 1.6         | 3.2            | 32.3 | 35.5 | 27.4     | 62.9            | 3.84     |
|          | 대경권        | (30)  | 3.3         | 3.3            | 33.3 | 40.0 | 20.0     | 60.0            | 3.70     |
|          | 동남권        | (32)  | 6.3         | 0.0            | 21.9 | 25.0 | 46.9     | 71.9            | 4.06     |
|          | 강원·제주권     | (19)  | 0.0         | 10.5           | 26.3 | 42.1 | 21.1     | 63.2            | 3.74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0.8         | 3.2            | 25.6 | 36.0 | 34.4     | 70.4            | 4.00     |
|          | 이전         | (76)  | 3.9         | 5.3            | 38.2 | 31.6 | 21.1     | 52.6            | 3.61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3.6         | 3.6            | 39.3 | 32.1 | 21.4     | 53.6            | 3.64     |
|          | 2015~2019년 | (63)  | 4.8         | 4.8            | 30.2 | 31.7 | 28.6     | 60.3            | 3.75     |
|          | 2020년 이후   | (110) | 0.0         | 3.6            | 28.2 | 36.4 | 31.8     | 68.2            | 3.96     |

- (지방투자 Push factor 종합) 5점 척도의 점수를 종합·비교 시, 아래의 순서로 나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투자유치의 노력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
- (정책지원, 투자유치 지원수단) 4.30점/5점
  - (설비 확대·개선) 4.00점/5점
  - (입지 비용 절감) 3.92점/5점
  - (신사업 다각화) 3.85점/5점
  - (물류·시간 비용) 3.78점/5점
  - (임금) 3.52점/5점
  - (협업기업 이전 또는 투자 요구) 3.35점/5점
- (지방투자 Push factor 시사점) 지방투자 결정은 입지·임금·물류 등 요소비용의 측면보다 우선 지방투자 지원 수단 존재와 사업적 필요성

(설비 확대, 사업계획)에 의해 기존 입지를 이탈할 필요성이 먼저 제기  
 - 요소비용에 대한 중요도도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절대적으로 요소비용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 현재 지역으로 지방투자를 결정한 주된 이유: Pull 요인

- (부지확보 용이성·지대) 현재 지역으로 지방투자를 결정하게 된 요인 중 ‘부지확보 용이성 및 저렴한 임대료·지가’의 중요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77.6%가, 4.08점)되며, 신·증설 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추세
- 권역별로는 대부분 높게 평가하나 대경권 소재 업체는 중요하다는 평가가 90%를 상회하는 반면, 강원·제주권은 상대적으로 중립적
  - 유형별로도 높은 수준이나 특히 부지에 대한 비용 절감을 고려하는 신·증설 투자의 중시 정도가 높았고, 신·증설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시기별로도 중요도 상승

〈표 5-21〉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부지확보 용이성 및 저렴한 임대료·지가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 고려 않음 | 중요 하지 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 중요 | 중요+ 매우 중요 | 5점 평균 |
|-------|------------|-------|----------|----------|------|------|-------|-----------|-------|
| 전 체   |            | (201) | 0.0      | 2.0      | 20.4 | 44.8 | 32.8  | 77.6      | 4.08  |
| 지역    | 충청권        | (58)  | 0.0      | 3.4      | 19.0 | 39.7 | 37.9  | 77.6      | 4.12  |
|       | 호남권        | (62)  | 0.0      | 0.0      | 21.0 | 38.7 | 40.3  | 79.0      | 4.19  |
|       | 대경권        | (30)  | 0.0      | 0.0      | 6.7  | 66.7 | 26.7  | 93.3      | 4.20  |
|       | 동남권        | (32)  | 0.0      | 6.3      | 21.9 | 46.9 | 25.0  | 71.9      | 3.91  |
|       | 강원·제주권     | (19)  | 0.0      | 0.0      | 42.1 | 42.1 | 15.8  | 57.9      | 3.74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0.0      | 2.4      | 12.8 | 52.8 | 32.0  | 84.8      | 4.14  |
|       | 이전         | (76)  | 0.0      | 1.3      | 32.9 | 31.6 | 34.2  | 65.8      | 3.99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0.0      | 50.0 | 25.0 | 25.0  | 50.0      | 3.75  |
|       | 2015~2019년 | (63)  | 0.0      | 1.6      | 20.6 | 44.4 | 33.3  | 77.8      | 4.10  |
|       | 2020년 이후   | (110) | 0.0      | 2.7      | 12.7 | 50.0 | 34.5  | 84.5      | 4.16  |

- (임금) 현재 지역에 지방투자를 결정하는 데 ‘저렴한 임금(노동력, 토지, 운송비용)’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44.8%, 3.46점)
- 호남권 소재 업체의 56.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은 가운데, 유형, 시기별로도 큰 차이가 없음

〈표 5-22〉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저렴한 임금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 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3.0         | 3.5            | 48.8 | 33.8 | 10.9     | 44.8            | 3.46     |
| 지역       | 충청권        | (58)  | 5.2         | 1.7            | 55.2 | 29.3 | 8.6      | 37.9            | 3.34     |
|          | 호남권        | (62)  | 1.6         | 4.8            | 37.1 | 37.1 | 19.4     | 56.5            | 3.68     |
|          | 대경권        | (30)  | 3.3         | 3.3            | 53.3 | 36.7 | 3.3      | 40.0            | 3.33     |
|          | 동남권        | (32)  | 3.1         | 6.3            | 50.0 | 31.3 | 9.4      | 40.6            | 3.38     |
|          | 강원·제주권     | (19)  | 0.0         | 0.0            | 57.9 | 36.8 | 5.3      | 42.1            | 3.47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6         | 3.2            | 45.6 | 38.4 | 11.2     | 49.6            | 3.54     |
|          | 이전         | (76)  | 5.3         | 3.9            | 53.9 | 26.3 | 10.5     | 36.8            | 3.33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3.6            | 50.0 | 32.1 | 14.3     | 46.4            | 3.57     |
|          | 2015~2019년 | (63)  | 6.3         | 1.6            | 49.2 | 34.9 | 7.9      | 42.9            | 3.37     |
|          | 2020년 이후   | (110) | 1.8         | 4.5            | 48.2 | 33.6 | 11.8     | 45.5            | 3.49     |

- (운송비용) 현재 지역으로 지방투자를 결정하게 된 요인 중 ‘저렴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중요하다고 평가(54.7%, 3.62점)
  - ‘저렴한 운송비용’이 중요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업체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협력업체 및 기술 집적) ‘협력업체 및 관련 기술의 집적’ 등 기술 및 거래 등 현재 지역 내 기업 관계에 대한 중요도도 투자 결정에 아주 높은 수준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51.7%, 3.53점)

〈표 5-23〉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저렴한 운송비용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br>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3.5            | 3.0            | 38.8 | 37.8 | 16.9     | 54.7            | 3.62     |
| 지역       | 충청권        | (58)  | 5.2            | 0.0            | 41.4 | 32.8 | 20.7     | 53.4            | 3.64     |
|          | 호남권        | (62)  | 3.2            | 0.0            | 35.5 | 41.9 | 19.4     | 61.3            | 3.74     |
|          | 대경권        | (30)  | 3.3            | 10.0           | 26.7 | 50.0 | 10.0     | 60.0            | 3.53     |
|          | 동남권        | (32)  | 3.1            | 6.3            | 40.6 | 34.4 | 15.6     | 50.0            | 3.53     |
|          | 강원·제주권     | (19)  | 0.0            | 5.3            | 57.9 | 26.3 | 10.5     | 36.8            | 3.42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4.0            | 4.0            | 36.0 | 43.2 | 12.8     | 56.0            | 3.57     |
|          | 이전         | (76)  | 2.6            | 1.3            | 43.4 | 28.9 | 23.7     | 52.6            | 3.7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0.0            | 39.3 | 35.7 | 25.0     | 60.7            | 3.86     |
|          | 2015~2019년 | (63)  | 3.2            | 3.2            | 42.9 | 34.9 | 15.9     | 50.8            | 3.57     |
|          | 2020년 이후   | (110) | 4.5            | 3.6            | 36.4 | 40.0 | 15.5     | 55.5            | 3.58     |

〈표 5-24〉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협력업체 및 관련 기술의 집적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 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2.5         | 9.0            | 36.8 | 36.3 | 15.4     | 51.7            | 3.53     |
| 지역       | 충청권        | (58)  | 3.4         | 12.1           | 46.6 | 27.6 | 10.3     | 37.9            | 3.29     |
|          | 호남권        | (62)  | 0.0         | 3.2            | 37.1 | 37.1 | 22.6     | 59.7            | 3.79     |
|          | 대경권        | (30)  | 6.7         | 10.0           | 16.7 | 53.3 | 13.3     | 66.7            | 3.57     |
|          | 동남권        | (32)  | 0.0         | 9.4            | 34.4 | 37.5 | 18.8     | 56.3            | 3.66     |
|          | 강원·제주권     | (19)  | 5.3         | 15.8           | 42.1 | 31.6 | 5.3      | 36.8            | 3.16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6         | 9.6            | 34.4 | 39.2 | 15.2     | 54.4            | 3.57     |
|          | 이전         | (76)  | 3.9         | 7.9            | 40.8 | 31.6 | 15.8     | 47.4            | 3.47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14.3           | 25.0 | 35.7 | 25.0     | 60.7            | 3.71     |
|          | 2015~2019년 | (63)  | 1.6         | 6.3            | 50.8 | 34.9 | 6.3      | 41.3            | 3.38     |
|          | 2020년 이후   | (110) | 3.6         | 9.1            | 31.8 | 37.3 | 18.2     | 55.5            | 3.57     |

- 권역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대경권 소재 업체는 기업 관계가 중요하다는 비중이 60%를 상회하나, 충청권,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는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후시장 근접성) ‘배후시장 근접성’이 현재 지역에 투자를 결정한 요인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으로 평가(44.3%, 3.39점)되었으며, 다만 2015년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업체에게 ‘배후시장 근접성’은 투자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

〈표 5-25〉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배후시장 근접성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 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3.5         | 13.4           | 38.8 | 29.4 | 14.9     | 44.3            | 3.39     |
| 지역       | 충청권        | (58)  | 6.9         | 10.3           | 48.3 | 24.1 | 10.3     | 34.5            | 3.21     |
|          | 호남권        | (62)  | 1.6         | 14.5           | 32.3 | 27.4 | 24.2     | 51.6            | 3.58     |
|          | 대경권        | (30)  | 3.3         | 20.0           | 26.7 | 40.0 | 10.0     | 50.0            | 3.33     |
|          | 동남권        | (32)  | 0.0         | 12.5           | 40.6 | 31.3 | 15.6     | 46.9            | 3.50     |
|          | 강원·제주권     | (19)  | 5.3         | 10.5           | 47.4 | 31.6 | 5.3      | 36.8            | 3.21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2.4         | 13.6           | 39.2 | 30.4 | 14.4     | 44.8            | 3.41     |
|          | 이전         | (76)  | 5.3         | 13.2           | 38.2 | 27.6 | 15.8     | 43.4            | 3.36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10.7           | 28.6 | 32.1 | 28.6     | 60.7            | 3.79     |
|          | 2015~2019년 | (63)  | 4.8         | 15.9           | 44.4 | 27.0 | 7.9      | 34.9            | 3.17     |
|          | 2020년 이후   | (110) | 3.6         | 12.7           | 38.2 | 30.0 | 15.5     | 45.5            | 3.41     |

- (노동시장) '노동시장 근접성'은 투자 결정에 있어서 아주 높은 수준에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54.7%, 3.58점)되는 가운데, 권역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과거와 비교해 중요도는 낮은 수준
- 호남권과 대경권 소재 업체는 노동시장 형성 범위가 투자를 결정하는데 비교적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 (정주여건) '양호한 정주여건'이 중요하다라는 응답도 50%를 상회하였으나, 확연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평가하기 힘든 수준(55.2%, 3.64점)이며, 과거와 비교해 중요도는 낮은 수준

〈표 5-26〉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노동시장 근접성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 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3.0         | 4.5            | 37.8 | 40.8 | 13.9     | 54.7            | 3.58     |
| 지역       | 충청권        | (58)  | 3.4         | 1.7            | 48.3 | 37.9 | 8.6      | 46.6            | 3.47     |
|          | 호남권        | (62)  | 1.6         | 4.8            | 32.3 | 43.5 | 17.7     | 61.3            | 3.71     |
|          | 대경권        | (30)  | 6.7         | 6.7            | 26.7 | 46.7 | 13.3     | 60.0            | 3.53     |
|          | 동남권        | (32)  | 0.0         | 6.3            | 40.6 | 37.5 | 15.6     | 53.1            | 3.63     |
|          | 강원·제주권     | (19)  | 5.3         | 5.3            | 36.8 | 36.8 | 15.8     | 52.6            | 3.53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6         | 5.6            | 34.4 | 44.8 | 13.6     | 58.4            | 3.63     |
|          | 이전         | (76)  | 5.3         | 2.6            | 43.4 | 34.2 | 14.5     | 48.7            | 3.5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7.1            | 28.6 | 42.9 | 21.4     | 64.3            | 3.79     |
|          | 2015~2019년 | (63)  | 4.8         | 1.6            | 47.6 | 39.7 | 6.3      | 46.0            | 3.41     |
|          | 2020년 이후   | (110) | 2.7         | 5.5            | 34.5 | 40.9 | 16.4     | 57.3            | 3.63     |

〈표 5-27〉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양호한 정주여건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br>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2.0            | 4.5            | 38.3 | 37.8 | 17.4     | 55.2            | 3.64     |
| 지역       | 충청권        | (58)  | 3.4            | 5.2            | 44.8 | 36.2 | 10.3     | 46.6            | 3.45     |
|          | 호남권        | (62)  | 1.6            | 1.6            | 33.9 | 41.9 | 21.0     | 62.9            | 3.79     |
|          | 대경권        | (30)  | 3.3            | 0.0            | 33.3 | 40.0 | 23.3     | 63.3            | 3.80     |
|          | 동남권        | (32)  | 0.0            | 9.4            | 34.4 | 37.5 | 18.8     | 56.3            | 3.66     |
|          | 강원·제주권     | (19)  | 0.0            | 10.5           | 47.4 | 26.3 | 15.8     | 42.1            | 3.47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6            | 4.0            | 38.4 | 39.2 | 16.8     | 56.0            | 3.66     |
|          | 이전         | (76)  | 2.6            | 5.3            | 38.2 | 35.5 | 18.4     | 53.9            | 3.62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0.0            | 32.1 | 42.9 | 25.0     | 67.9            | 3.93     |
|          | 2015~2019년 | (63)  | 4.8            | 6.3            | 44.4 | 34.9 | 9.5      | 44.4            | 3.38     |
|          | 2020년 이후   | (110) | 0.9            | 4.5            | 36.4 | 38.2 | 20.0     | 58.2            | 3.72     |

- 호남권, 대경권 소재 업체와 2015년 이전 완료 업체는 ‘양호한 정주 여건’을 중요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0% 상회
- (지자체 노력) 현재 지역에 지방투자를 결정하게 된 요인 중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투자유치 노력’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83.6%, 4.12점)되며, 권역, 유형, 시기와 무관하게 높게 평가
- 권역 중 호남권 소재 업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90%를 넘어 정책지원의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표 5-28〉 지방투자 결정 요인 중요도 - 지자체 노력

(단위: %, 점)

|          |            | 사례 수  | 전혀<br>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0.0            | 2.0            | 14.4 | 53.2 | 30.3     | 83.6            | 4.12     |
| 지역       | 충청권        | (58)  | 0.0            | 0.0            | 13.8 | 56.9 | 29.3     | 86.2            | 4.16     |
|          | 호남권        | (62)  | 0.0            | 1.6            | 8.1  | 46.8 | 43.5     | 90.3            | 4.32     |
|          | 대경권        | (30)  | 0.0            | 10.0           | 16.7 | 63.3 | 10.0     | 73.3            | 3.73     |
|          | 동남권        | (32)  | 0.0            | 0.0            | 21.9 | 50.0 | 28.1     | 78.1            | 4.06     |
|          | 강원·제주권     | (19)  | 0.0            | 0.0            | 21.1 | 52.6 | 26.3     | 78.9            | 4.05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0.0            | 2.4            | 13.6 | 52.8 | 31.2     | 84.0            | 4.13     |
|          | 이전         | (76)  | 0.0            | 1.3            | 15.8 | 53.9 | 28.9     | 82.9            | 4.11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3.6            | 7.1  | 60.7 | 28.6     | 89.3            | 4.14     |
|          | 2015~2019년 | (63)  | 0.0            | 0.0            | 23.8 | 49.2 | 27.0     | 76.2            | 4.03     |
|          | 2020년 이후   | (110) | 0.0            | 2.7            | 10.9 | 53.6 | 32.7     | 86.4            | 4.16     |

- (지방투자 과정 애로사항) 지방투자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 이탈 및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이 1순위 기준 40.8%, 1+2순위 기준 68.7%로 나타나 인력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
- 또한 ‘기업에 적합한 지역 내 고급인력의 부족’은 1순위 기준 16.4%, 1+2순위 기준 31.3%로 나타나 지방투자에서는 인력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조사
-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자금조달’ 문제는 1+2순위 기준 30% 수준의 유사한 응답 비중
- (5년 내 투자계획) 향후 5년 이내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52.7%이며 34.3%는 ‘현재 소재지 신·증설’이라고 응답

- 동남권,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 지방이전 업체, 2015년 이전 완료 업체는 향후 5년 이내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60% 상회
- 2020년 이후 완료업체는 '현재 소재지 신·증설'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0%를 상회

〈표 5-29〉 지방투자 과정 애로사항(1순위)

(단위: %)

|          |            | 사례 수  | 전혀 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40.8        | 17.9           | 16.4 | 13.4 | 6.5      | 3.5             | 1.0      |
| 지역       | 충청권        | (58)  | 46.6        | 10.3           | 19.0 | 15.5 | 3.4      | 3.4             | 0.0      |
|          | 호남권        | (62)  | 38.7        | 21.0           | 16.1 | 12.9 | 4.8      | 4.8             | 1.6      |
|          | 대경권        | (30)  | 36.7        | 20.0           | 23.3 | 0.0  | 13.3     | 3.3             | 3.3      |
|          | 동남권        | (32)  | 34.4        | 28.1           | 6.3  | 18.8 | 9.4      | 3.1             | 0.0      |
|          | 강원·제주권     | (19)  | 47.4        | 10.5           | 15.8 | 21.1 | 5.3      | 0.0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37.6        | 18.4           | 19.2 | 15.2 | 7.2      | 0.8             | 1.6      |
|          | 이전         | (76)  | 46.1        | 17.1           | 11.8 | 10.5 | 5.3      | 7.9             | 0.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42.9        | 25.0           | 7.1  | 3.6  | 14.3     | 7.1             | 0.0      |
|          | 2015~2019년 | (63)  | 44.4        | 15.9           | 15.9 | 12.7 | 4.8      | 4.8             | 0.0      |
|          | 2020년 이후   | (110) | 38.2        | 17.3           | 19.1 | 16.4 | 5.5      | 1.8             | 1.8      |

주: 기타 0.5% 제외.

〈표 5-30〉 지방투자 과정 애로사항(1+2순위)

(단위: %)

|          |            | 사례 수  | 전혀<br>고려<br>않음 | 중요<br>하지<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중요+<br>매우<br>중요 | 5점<br>평균 |
|----------|------------|-------|----------------|----------------|------|------|----------|-----------------|----------|
| 전 체      |            | (201) | 68.7           | 31.3           | 30.3 | 29.9 | 26.9     | 8.0             | 1.5      |
| 지역       | 충청권        | (58)  | 67.2           | 37.9           | 20.7 | 24.1 | 39.7     | 6.9             | 0.0      |
|          | 호남권        | (62)  | 66.1           | 27.4           | 37.1 | 37.1 | 21.0     | 4.8             | 1.6      |
|          | 대경권        | (30)  | 76.7           | 40.0           | 30.0 | 20.0 | 16.7     | 13.3            | 3.3      |
|          | 동남권        | (32)  | 68.8           | 15.6           | 37.5 | 34.4 | 21.9     | 12.5            | 3.1      |
|          | 강원·제주권     | (19)  | 68.4           | 36.8           | 26.3 | 31.6 | 31.6     | 5.3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62.4           | 34.4           | 32.8 | 36.0 | 19.2     | 9.6             | 2.4      |
|          | 이전         | (76)  | 78.9           | 26.3           | 26.3 | 19.7 | 39.5     | 5.3             | 0.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75.0           | 14.3           | 42.9 | 17.9 | 35.7     | 14.3            | 0.0      |
|          | 2015~2019년 | (63)  | 73.0           | 31.7           | 25.4 | 25.4 | 33.3     | 4.8             | 1.6      |
|          | 2020년 이후   | (110) | 64.5           | 35.5           | 30.0 | 35.5 | 20.9     | 8.2             | 1.8      |

주: 기타 0.5% 제외.

〈표 5-31〉 향후 5년 이내 지방투자 계획

(단위: %)

|          |            | 사례 수  | 투자<br>계획<br>없음 | 현재<br>소재지<br>신·증설 | 그 외<br>지방<br>신·증설 | 수도권<br>신·증설 | 현재<br>소재지<br>이전 | 수도권<br>이전 | 그 외<br>지방<br>이전 |
|----------|------------|-------|----------------|-------------------|-------------------|-------------|-----------------|-----------|-----------------|
| 전 체      |            | (201) | 52.7           | 34.3              | 11.4              | 3.5         | 1.5             | 1.5       | 0.5             |
| 지역       | 충청권        | (58)  | 50.0           | 39.7              | 8.6               | 3.4         | 1.7             | 3.4       | 0.0             |
|          | 호남권        | (62)  | 51.6           | 33.9              | 11.3              | 8.1         | 3.2             | 0.0       | 0.0             |
|          | 대경권        | (30)  | 43.3           | 36.7              | 16.7              | 0.0         | 0.0             | 3.3       | 3.3             |
|          | 동남권        | (32)  | 62.5           | 25.0              | 12.5              | 0.0         | 0.0             | 0.0       | 0.0             |
|          | 강원·제주권     | (19)  | 63.2           | 31.6              | 10.5              | 0.0         | 0.0             | 0.0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48.0           | 38.4              | 12.8              | 2.4         | 0.8             | 0.0       | 0.8             |
|          | 이전         | (76)  | 60.5           | 27.6              | 9.2               | 5.3         | 2.6             | 3.9       | 0.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75.0           | 17.9              | 7.1               | 0.0         | 0.0             | 0.0       | 0.0             |
|          | 2015~2019년 | (63)  | 57.1           | 25.4              | 14.3              | 6.3         | 4.8             | 3.2       | 0.0             |
|          | 2020년 이후   | (110) | 44.5           | 43.6              | 10.9              | 2.7         | 0.0             | 0.9       | 0.9             |

○ (지방투자의 Pull factor 종합) Push factor와 유사하게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노력 등이 현재 지역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부지확보 용이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

- (지자체 노력) 4.12점/5점
- (부지확보 용이성·지대) 4.08점/5점
- (정주여건) 3.64점/5점
- (운송비용) 3.62점/5점
- (노동시장 근접성) 3.58점/5점
- (협력업체 및 기술 집적) 3.53/5점
- (임금) 3.46점/5점
- (배후시장 근접성) 3.39점/5점

○ (지방투자의 Pull factor 시사점) 기업이 지방투자 입지 선택 시 Push factor 요소의 중요도 메커니즘과 대응되는 지점은 설비 확대, 자체적인 사업계획 전망에 따라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므로 그에 대응하는 부지확보 가능성이 중요

#### 다.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

□ 지방투자 전후 고용 규모

- 응답한 201개 업체의 지방투자 이후 총고용 규모는 24,149명에서 28,121명으로 1.16배 늘어나 투자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확인
  - 업체당 평균 고용 규모는 지방투자 이전 120명이었으나, ‘지방이전’ 업체는 119명으로 변함이 없고, ‘신·증설’ 업체는 145명으로 증가
  - 권역별로는 총고용 기준으로 호남권 일자리 창출 배율이 가장 높고 (1.44배), 2015년 이전 투자기업이 높게 나타남(1.69배)

〈표 5-32〉 지방투자 전후 고용 규모

(단위: 명)

|       |            | 사례 수  | 지방투자 이전 |        | 지방투자 이후 |       |      |        |
|-------|------------|-------|---------|--------|---------|-------|------|--------|
|       |            |       | 평균      | 합계     | 지방이전    |       | 신·증설 |        |
|       |            |       |         |        | 평균      | 합계    | 평균   | 전체     |
| 전 체   |            | (201) | 120     | 24,149 | 119     | 9,617 | 145  | 18,504 |
| 지역    | 충청권        | (58)  | 124     | 7,204  | 142     | 4,813 | 154  | 4,318  |
|       | 호남권        | (62)  | 66      | 4,094  | 117     | 2,929 | 75   | 2,986  |
|       | 대경권        | (30)  | 143     | 4,292  | 72      | 433   | 204  | 4,894  |
|       | 동남권        | (32)  | 136     | 4,367  | 65      | 196   | 176  | 5,093  |
|       | 강원·제주권     | (19)  | 221     | 4,192  | 96      | 1,246 | 173  | 1,213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144     | 18,014 | 222     | 1,111 | 150  | 18,344 |
|       | 이전         | (76)  | 81      | 6,135  | 112     | 8,506 | 27   | 160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60      | 1,671  | 100     | 2,795 | 16   | 31     |
|       | 2015~2019년 | (63)  | 146     | 9,220  | 131     | 4,465 | 125  | 3,996  |
|       | 2020년 이후   | (110) | 121     | 13,258 | 124     | 2,357 | 154  | 14,477 |

#### □ 지방투자 전후 고용 구성

- (정규직 구성비) 지방투자 이전 사업장의 정규직 구성비가 100%라고 응답한 비중은 80.1%였으며, 지방투자 이후는 78.6%로 소폭 감소
  - 충청권 소재 업체는 정규직 구성비 100% 비중이 지방투자 이전 79.3%에서 81.0%로 소폭 상승
  - 지방투자 이전 사업장의 정규직 구성비가 80% 초과 90% 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은 11.4%였으며 지방투자 이후는 15.9%로 증가

〈표 5-33〉 지방투자 이전 정규직 구성비

(단위: %)

|          |            | 사례 수  | 100% | 80% 초과<br>90% 이하 | 70% 초과<br>80% 이하 | 60% 초과<br>70% 이하 | 50% 초과<br>60% 이하 | 40% 초과<br>50% 이하 | 30% 초과<br>40% 이하 | 30% 이하 |
|----------|------------|-------|------|------------------|------------------|------------------|------------------|------------------|------------------|--------|
|          | 전 체        | (201) | 80.1 | 11.4             | 3.0              | 1.0              | 1.5              | 1.0              | 0.5              | 1.5    |
| 지역       | 충청권        | (58)  | 79.3 | 15.5             | 3.4              | 0.0              | 0.0              | 0.0              | 0.0              | 1.7    |
|          | 호남권        | (62)  | 77.4 | 9.7              | 4.8              | 3.2              | 3.2              | 1.6              | 0.0              | 0.0    |
|          | 대경권        | (30)  | 80.0 | 6.7              | 3.3              | 0.0              | 3.3              | 0.0              | 0.0              | 6.7    |
|          | 동남권        | (32)  | 84.4 | 12.5             | 0.0              | 0.0              | 0.0              | 0.0              | 3.1              | 0.0    |
|          | 강원·제주권     | (19)  | 84.2 | 10.5             | 0.0              | 0.0              | 0.0              | 5.3              | 0.0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79.2 | 11.2             | 2.4              | 1.6              | 2.4              | 0.8              | 0.8              | 1.6    |
|          | 이전         | (76)  | 81.6 | 11.8             | 3.9              | 0.0              | 0.0              | 1.3              | 0.0              | 1.3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92.9 | 3.6              | 0.0              | 0.0              | 0.0              | 3.6              | 0.0              | 0.0    |
|          | 2015~2019년 | (63)  | 77.8 | 14.3             | 1.6              | 0.0              | 3.2              | 0.0              | 0.0              | 3.2    |
|          | 2020년 이후   | (110) | 78.2 | 11.8             | 4.5              | 1.8              | 0.9              | 0.9              | 0.9              | 0.9    |

〈표 5-34〉 지방투자 이후 정규직 구성비

(단위: %)

|          |            | 사례 수  | 100% | 80% 초과<br>90% 이하 | 70% 초과<br>80% 이하 | 60% 초과<br>70% 이하 | 50% 초과<br>60% 이하 | 30% 이하 |
|----------|------------|-------|------|------------------|------------------|------------------|------------------|--------|
|          | 전 체        | (201) | 78.6 | 15.9             | 1.5              | 2.0              | 0.5              | 1.5    |
| 지역       | 충청권        | (58)  | 81.0 | 17.2             | 1.7              | 0.0              | 0.0              | 0.0    |
|          | 호남권        | (62)  | 74.2 | 19.4             | 3.2              | 3.2              | 0.0              | 0.0    |
|          | 대경권        | (30)  | 80.0 | 10.0             | 0.0              | 0.0              | 3.3              | 6.7    |
|          | 동남권        | (32)  | 81.3 | 15.6             | 0.0              | 3.1              | 0.0              | 0.0    |
|          | 강원·제주권     | (19)  | 78.9 | 10.5             | 0.0              | 5.3              | 0.0              | 5.3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76.8 | 16.0             | 1.6              | 2.4              | 0.8              | 2.4    |
|          | 이전         | (76)  | 81.6 | 15.8             | 1.3              | 1.3              | 0.0              | 0.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92.9 | 0.0              | 3.6              | 3.6              | 0.0              | 0.0    |
|          | 2015~2019년 | (63)  | 74.6 | 20.6             | 1.6              | 0.0              | 1.6              | 1.6    |
|          | 2020년 이후   | (110) | 77.3 | 17.3             | 0.9              | 2.7              | 0.0              | 1.8    |

○ (직종별 비중) 지방투자 전후 직종별 구성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생산직 구성비는 지방투자 이전 61.2%에서 61.6%로 소폭 증가
  - \* 동남권, 강원·제주권 업체는 지방투자 이후 생산직 구성비가 소폭 감소
- 사무·영업직은 지방투자 전 26.7%에서 투자 이후 26.0%로 소폭 감소
  - \* 대경권과 동남권 업체는 지방투자 이후 사무·영업직 구성비가 소폭 증가

- 연구개발직은 지방투자 이전 12.1%에서 지방투자 이후 12.4%로 소폭 증가

〈표 5-35〉 지방투자 전후 직종별 비중 평균

(단위: %)

|       |            | 사례 수  | 생산직  |      | 사무·영업직 |      | 연구·개발직 |      |
|-------|------------|-------|------|------|--------|------|--------|------|
|       |            |       | 이전   | 이후   | 이전     | 이후   | 이전     | 이후   |
| 전 체   |            | (201) | 61.2 | 61.6 | 26.7   | 26.0 | 12.1   | 12.4 |
| 지역    | 충청권        | (58)  | 61.1 | 61.2 | 28.6   | 27.2 | 10.3   | 11.6 |
|       | 호남권        | (62)  | 62.2 | 64.7 | 25.7   | 24.0 | 12.1   | 11.3 |
|       | 대경권        | (30)  | 63.2 | 63.5 | 23.4   | 24.4 | 13.4   | 12.1 |
|       | 동남권        | (32)  | 58.5 | 56.8 | 28.9   | 30.3 | 12.6   | 12.9 |
|       | 강원·제주권     | (19)  | 59.7 | 58.1 | 25.1   | 24.4 | 15.2   | 17.5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62.0 | 62.7 | 27.1   | 26.4 | 10.9   | 10.9 |
|       | 이전         | (76)  | 59.9 | 59.9 | 25.9   | 25.4 | 14.2   | 14.7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65.6 | 67.2 | 25.4   | 22.7 | 9.0    | 10.1 |
|       | 2015~2019년 | (63)  | 59.6 | 59.1 | 25.0   | 24.8 | 15.4   | 16.1 |
|       | 2020년 이후   | (110) | 61.0 | 61.6 | 27.9   | 27.6 | 11.1   | 10.8 |

- (연령별 비중) 지방투자 전후 연령별 비중은 20대, 30대가 각각 1.5%, 1.7%, 60대는 0.7% 증가한 반면 40대, 50대는 각각 1.5%, 2.3% 감소
-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대 종사자 구성비는 증가했으며, 30대 종사자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표 5-36〉 지방투자 전후 연령별 비중 평균

(단위: %)

|       |            | 사례 수  | 20대 이하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이상 |     |
|-------|------------|-------|--------|------|------|------|------|------|------|------|--------|-----|
|       |            |       | 이전     | 이후   | 이전   | 이후   | 이전   | 이후   | 이전   | 이후   | 이전     | 이후  |
| 전 체   |            | (201) | 13.0   | 14.5 | 27.8 | 29.5 | 30.8 | 29.3 | 22.8 | 20.5 | 5.5    | 6.2 |
| 지역    | 충청권        | (58)  | 14.4   | 14.1 | 29.4 | 33.0 | 28.2 | 26.8 | 22.8 | 20.2 | 5.4    | 6.0 |
|       | 호남권        | (62)  | 12.6   | 15.7 | 26.0 | 26.2 | 32.7 | 32.4 | 23.7 | 20.3 | 5.1    | 5.4 |
|       | 대경권        | (30)  | 13.2   | 14.5 | 22.4 | 23.9 | 32.7 | 30.0 | 26.6 | 25.1 | 5.2    | 6.6 |
|       | 동남권        | (32)  | 10.5   | 12.0 | 33.8 | 34.4 | 30.6 | 28.9 | 18.3 | 17.3 | 6.9    | 7.4 |
|       | 강원·제주권     | (19)  | 14.5   | 16.4 | 27.8 | 29.7 | 30.6 | 26.3 | 21.7 | 20.7 | 5.3    | 6.9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13.6   | 15.3 | 26.7 | 27.8 | 30.5 | 29.3 | 22.8 | 20.6 | 6.4    | 7.0 |
|       | 이전         | (76)  | 12.1   | 13.3 | 29.7 | 32.2 | 31.3 | 29.3 | 22.9 | 20.4 | 4.0    | 4.9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11.6   | 13.2 | 28.8 | 30.3 | 33.0 | 31.8 | 23.1 | 20.3 | 3.6    | 4.4 |
|       | 2015~2019년 | (63)  | 14.5   | 16.3 | 30.1 | 30.9 | 29.1 | 26.9 | 22.2 | 20.5 | 4.2    | 5.4 |
|       | 2020년 이후   | (110) | 12.6   | 13.9 | 26.4 | 28.5 | 31.3 | 30.0 | 23.1 | 20.6 | 6.7    | 7.1 |

- (외국인 근로자 비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지방투자 이전 7.2%에서 지방투자 이후 10.3%로 3.1% 증가
  - 대경권 소재 업체는 지방투자 이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6.7%에서 13.1%로 6.4%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

〈표 5-37〉 지방투자 전후 외국인 근로자 비중 평균

(단위: %)

|          |            | 사례 수  | 지방투자 이전 | 지방투자 이후 | GAP<br>(이후-이전) |
|----------|------------|-------|---------|---------|----------------|
| 전 체      |            | (201) | 7.2     | 10.3    | 3.1            |
| 지역       | 충청권        | (58)  | 6.6     | 10.4    | 3.8            |
|          | 호남권        | (62)  | 8.3     | 10.1    | 1.8            |
|          | 대경권        | (30)  | 6.7     | 13.1    | 6.4            |
|          | 동남권        | (32)  | 5.0     | 7.9     | 2.9            |
|          | 강원·제주권     | (19)  | 10.1    | 10.3    | 0.2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6.3     | 9.4     | 3.1            |
|          | 이전         | (76)  | 8.7     | 11.8    | 3.1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9.0     | 8.7     | -0.3           |
|          | 2015~2019년 | (63)  | 9.2     | 12.0    | 2.8            |
|          | 2020년 이후   | (110) | 5.6     | 9.8     | 4.2            |

- (고용구성변화 소결) 지방투자 후 전반적으로 이전 사업의 숙련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연령 재구조화 효과가 부분적 현시
  - (정규직 구성비) 지방투자 전후 직군별 구성비는 전체 정규직으로 구성된 사업장 비중이 평균 80%에 육박하며, 80~90%를 유지하는 사업장 비중은 오히려 증가
  - (직종별 비중) 지방투자 전후 직종별 구성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사업의 숙련구조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연령별 비중) 지방투자 이후 연령별 구성비는 20대, 30대가 각각 1.5%, 1.7% 증가하여, 이전 및 신규 투자에 수반되어 부분적 인력 재구조화 효과가 확인
  - (외국인 근로자 비중) 지방투자 후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지방투자 이후 신규 고용 현황

- (생산직) 응답 업체의 지방투자 이후 생산직 신규 고용은 평균 28.7명이  
고, 총 5,762명으로 파악되며, 권역, 유형, 시기 차이는 크지 않음
- 충원은 '신규 입직'(12.4명), '동종업계 이직'(12.1명)이 유사한 규모  
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내'에서 생산직 신규  
고용의 60% 이상 고용(18.7명)

〈표 5-38〉 생산직 신규 고용 현황(평균)

(단위: 명)

|          |            | 사례<br>수 | 총 신규<br>고용 | 충원 검토          |            |          | 충원 지역 |                      |                    |
|----------|------------|---------|------------|----------------|------------|----------|-------|----------------------|--------------------|
|          |            |         |            | 동종<br>업계<br>이직 | 타 업종<br>전직 | 신규<br>입직 | 타 시도  | 지방투자<br>사업장<br>소재 시도 | 기존<br>사업장<br>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28.7       | 12.1           | 4.1        | 12.4     | 5.9   | 18.7                 | 4.0                |
| 지역       | 충청권        | (58)    | 33.6       | 14.3           | 4.8        | 14.5     | 8.2   | 20.1                 | 5.3                |
|          | 호남권        | (62)    | 24.7       | 9.7            | 3.1        | 11.9     | 4.9   | 18.1                 | 1.7                |
|          | 대경권        | (30)    | 27.1       | 11.8           | 4.2        | 11.1     | 3.6   | 17.2                 | 6.3                |
|          | 동남권        | (32)    | 30.5       | 13.9           | 4.5        | 12.2     | 6.2   | 18.9                 | 5.5                |
|          | 강원·제주권     | (19)    | 25.8       | 10.8           | 4.6        | 10.4     | 5.6   | 18.4                 | 1.8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30.0       | 13.2           | 4.2        | 12.5     | 5.6   | 18.8                 | 5.6                |
|          | 이전         | (76)    | 26.5       | 10.3           | 4.0        | 12.3     | 6.4   | 18.6                 | 1.6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28.3       | 9.0            | 4.3        | 15.0     | 5.6   | 21.0                 | 1.6                |
|          | 2015~2019년 | (63)    | 27.1       | 12.9           | 3.7        | 10.5     | 5.5   | 16.9                 | 4.7                |
|          | 2020년 이후   | (110)   | 29.6       | 12.4           | 4.3        | 12.9     | 6.2   | 19.2                 | 4.3                |

〈표 5-39〉 생산직 신규 고용 현황(합계)

(단위: 명)

|          |            | 사례<br>수 | 총 신규<br>고용 | 충원 검토          |            |          | 충원 지역 |                      |                    |
|----------|------------|---------|------------|----------------|------------|----------|-------|----------------------|--------------------|
|          |            |         |            | 동종<br>업계<br>이직 | 타 업종<br>전직 | 신규<br>입직 | 타 시도  | 지방투자<br>사업장<br>소재 시도 | 기존<br>사업장<br>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5,762      | 2,434          | 830        | 2,498    | 1,188 | 3,761                | 813                |
| 지역       | 충청권        | (58)    | 1,950      | 830            | 277        | 843      | 475   | 1,166                | 309                |
|          | 호남권        | (62)    | 1,531      | 601            | 195        | 735      | 301   | 1,124                | 106                |
|          | 대경권        | (30)    | 814        | 354            | 126        | 334      | 109   | 516                  | 189                |
|          | 동남권        | (32)    | 977        | 444            | 144        | 389      | 197   | 605                  | 175                |
|          | 강원·제주권     | (19)    | 490        | 205            | 88         | 197      | 106   | 350                  | 34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3,745      | 1,655          | 529        | 1,561    | 700   | 2,350                | 695                |
|          | 이전         | (76)    | 2,017      | 779            | 301        | 937      | 488   | 1,411                | 118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791        | 251            | 119        | 421      | 158   | 587                  | 46                 |
|          | 2015~2019년 | (63)    | 1,710      | 814            | 234        | 662      | 349   | 1,067                | 294                |
|          | 2020년 이후   | (110)   | 3,261      | 1,369          | 477        | 1,415    | 681   | 2,107                | 473                |

- (사무·영업직) 사무·영업직 신규 고용은 평균 7.5명이며, 총 1,509명으로 파악되며, 권역, 유형, 시기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충원은 '신규 입직'(3.6명) 경로가 가장 크며, 충원 지역은 신규 고용의 51%(3.9명)가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내'
  - 충원 지역에 대해서 충청권은 타 시도 고용이 많은 것이 차이점

〈표 5-40〉 사무·영업직 신규 고용 현황(평균)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신규 고용 | 충원 검토    |         |       | 충원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신규 입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7.5     | 2.7      | 1.3     | 3.6   | 2.7   | 3.9            | 1.0          |
| 지역    | 충청권        | (58)  | 8.8     | 3.3      | 1.1     | 4.4   | 4.3   | 3.3            | 1.1          |
|       | 호남권        | (62)  | 6.5     | 1.9      | 1.4     | 3.2   | 1.6   | 4.1            | 0.8          |
|       | 대경권        | (30)  | 5.4     | 1.4      | 1.0     | 3.0   | 1.8   | 2.5            | 1.1          |
|       | 동남권        | (32)  | 10.2    | 4.2      | 1.7     | 4.3   | 2.9   | 6.1            | 1.1          |
|       | 강원·제주권     | (19)  | 5.8     | 2.9      | 1.2     | 1.8   | 1.9   | 3.1            | 0.8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8.0     | 2.9      | 1.3     | 3.9   | 2.7   | 4.1            | 1.2          |
|       | 이전         | (76)  | 6.6     | 2.3      | 1.3     | 3.0   | 2.6   | 3.4            | 0.6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6.9     | 2.0      | 1.1     | 3.8   | 1.8   | 4.4            | 0.6          |
|       | 2015~2019년 | (63)  | 6.5     | 2.4      | 1.2     | 2.9   | 2.1   | 3.3            | 1.1          |
|       | 2020년 이후   | (110) | 8.3     | 3.0      | 1.4     | 3.9   | 3.2   | 4.0            | 1.0          |

〈표 5-41〉 사무·영업직 신규 고용 현황(합계)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신규 고용 | 충원 검토    |         |       | 충원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신규 입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1,509   | 535      | 259     | 715   | 535   | 776            | 198          |
| 지역    | 충청권        | (58)  | 508     | 189      | 65      | 254   | 250   | 193            | 65           |
|       | 호남권        | (62)  | 402     | 115      | 87      | 200   | 99    | 254            | 49           |
|       | 대경권        | (30)  | 162     | 42       | 31      | 89    | 55    | 75             | 32           |
|       | 동남권        | (32)  | 326     | 134      | 54      | 138   | 94    | 196            | 36           |
|       | 강원·제주권     | (19)  | 111     | 55       | 22      | 34    | 37    | 58             | 16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1,004   | 360      | 158     | 486   | 336   | 515            | 153          |
|       | 이전         | (76)  | 505     | 175      | 101     | 229   | 199   | 261            | 45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192     | 57       | 30      | 105   | 51    | 124            | 17           |
|       | 2015~2019년 | (63)  | 408     | 152      | 73      | 183   | 130   | 210            | 68           |
|       | 2020년 이후   | (110) | 909     | 326      | 156     | 427   | 354   | 442            | 113          |

- (연구개발직) 응답 업체의 지방투자 이후 업체당 연구개발직 신규 고용은 평균 2.9명이며, 업체 합계는 573명으로 파악
- 충원은 생산직 및 사무직과 달리 해당 업계 전문성 수요로 '동종업계 이직'(1.7명)을 가장 많이 검토하였고, '신규 입직'이 다음 순(0.9명)
  - 충원 지역은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내'가 평균 1.3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충청권과 대경권은 타 시도에서 신규 고용이 많이 이뤄짐

〈표 5-42〉 연구개발직 신규 고용 현황(평균)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신규 고용 | 충원 검토    |         |       | 충원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신규 입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2.9     | 1.7      | 0.2     | 0.9   | 1.0   | 1.3            | 0.5          |
| 지역    | 충청권        | (58)  | 3.6     | 2.4      | 0.3     | 0.9   | 1.6   | 1.3            | 0.7          |
|       | 호남권        | (62)  | 2.1     | 1.1      | 0.2     | 0.8   | 0.7   | 0.8            | 0.6          |
|       | 대경권        | (30)  | 2.2     | 1.1      | 0.5     | 0.7   | 1.2   | 0.6            | 0.5          |
|       | 동남권        | (32)  | 3.5     | 2.1      | 0.0     | 1.4   | 0.3   | 3.0            | 0.2          |
|       | 강원·제주권     | (19)  | 2.9     | 1.8      | 0.2     | 0.9   | 1.1   | 1.4            | 0.5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2.7     | 1.5      | 0.3     | 0.9   | 1.0   | 1.1            | 0.6          |
|       | 이전         | (76)  | 3.1     | 2.0      | 0.1     | 0.9   | 1.1   | 1.6            | 0.4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2.0     | 1.2      | 0.1     | 0.6   | 0.8   | 0.7            | 0.6          |
|       | 2015~2019년 | (63)  | 4.0     | 2.5      | 0.4     | 1.1   | 1.1   | 2.1            | 0.9          |
|       | 2020년 이후   | (110) | 2.4     | 1.3      | 0.2     | 0.9   | 1.0   | 1.0            | 0.3          |

〈표 5-43〉 연구개발직 신규 고용 현황(합계)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신규 고용 | 충원 검토    |         |       | 충원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신규 입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573     | 340      | 49      | 184   | 202   | 262            | 109          |
| 지역    | 충청권        | (58)  | 206     | 138      | 17      | 51    | 91    | 73             | 42           |
|       | 호남권        | (62)  | 131     | 69       | 13      | 49    | 44    | 49             | 38           |
|       | 대경권        | (30)  | 67      | 33       | 14      | 20    | 35    | 18             | 14           |
|       | 동남권        | (32)  | 113     | 66       | 1       | 46    | 11    | 96             | 6            |
|       | 강원·제주권     | (19)  | 56      | 34       | 4       | 18    | 21    | 26             | 9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340     | 186      | 39      | 115   | 122   | 142            | 76           |
|       | 이전         | (76)  | 233     | 154      | 10      | 69    | 80    | 120            | 33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56      | 34       | 4       | 18    | 21    | 19             | 16           |
|       | 2015~2019년 | (63)  | 254     | 159      | 23      | 72    | 67    | 132            | 55           |
|       | 2020년 이후   | (110) | 263     | 147      | 22      | 94    | 114   | 111            | 38           |

- (신규 고용 합계 및 달성률) 지방투자 후 총 신규 고용은 7,844명이며  
 ‘신규입직’이 3,397명, ‘동종업계로부터 이직’이 3,309명
- 지방투자 후 신규 고용은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내’에서 비중이 가장 높으며 4,799명이 사업장 소재 시도 내에서 신규 고용됨
  - 신규 고용계획 대비 현재 고용 달성률은 94.9%로 업체 유형과 무관하게 90% 이상의 고용 달성률이 도출됨
- \*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 2015년 이전 완료 업체는 계획 대비 고용 달성률이 100%를 상회함

〈표 5-44〉 신규 고용 합계 및 달성률

(단위: 명, %)

|       |            | 사례 수  | 총 신규 고용 | 총원 검토    |         |       | 총원 지역 |                |              | 계획 대비 신규 고용 달성률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신규 입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 전 체   |            | (201) | 7,844   | 3,309    | 1,138   | 3,397 | 1,925 | 4,799          | 1,120        | 94.9            |
| 지역    | 충청권        | (58)  | 2,664   | 1,157    | 359     | 1,148 | 816   | 1,432          | 416          | 91.4            |
|       | 호남권        | (62)  | 2,064   | 785      | 295     | 984   | 444   | 1,427          | 193          | 94.4            |
|       | 대경권        | (30)  | 1,043   | 429      | 171     | 443   | 199   | 609            | 235          | 95.4            |
|       | 동남권        | (32)  | 1,416   | 644      | 199     | 573   | 302   | 897            | 217          | 92.5            |
|       | 강원·제주권     | (19)  | 657     | 294      | 114     | 249   | 164   | 434            | 59           | 110.2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5,089   | 2,201    | 726     | 2,162 | 1,158 | 3,007          | 924          | 95.0            |
|       | 이전         | (76)  | 2,755   | 1,108    | 412     | 1,235 | 767   | 1,792          | 196          | 94.6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1,039   | 342      | 153     | 544   | 230   | 730            | 79           | 102.4           |
|       | 2015~2019년 | (63)  | 2,372   | 1,125    | 330     | 917   | 546   | 1,409          | 417          | 94.8            |
|       | 2020년 이후   | (110) | 4,433   | 1,842    | 655     | 1,936 | 1,149 | 2,660          | 624          | 93.0            |

- (신규 고용 시 애로) 지방투자 응답 업체들은 신규 고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동력의 수급’이라고 응답(72.6%)
- 노동력 수급 외에 신규 고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애로사항의 비중이 낮은 가운데, 특히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는 ‘노동력의 수급’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80%를 상회

〈표 5-45〉 신규 고용 시 어려운 점

(단위: %)

|          |            | 사례 수  | 노동력의<br>수급 | 사업의 실적<br>부진 | 지방투자 집행 후<br>예상치 못한<br>과다 지출 발생 | 기타  |
|----------|------------|-------|------------|--------------|---------------------------------|-----|
| 전 체      |            | (201) | 72.6       | 15.4         | 10.0                            | 2.0 |
| 지역       | 충청권        | (58)  | 79.3       | 12.1         | 6.9                             | 1.7 |
|          | 호남권        | (62)  | 66.1       | 17.7         | 12.9                            | 3.2 |
|          | 대경권        | (30)  | 70.0       | 20.0         | 10.0                            | 0.0 |
|          | 동남권        | (32)  | 68.8       | 15.6         | 12.5                            | 3.1 |
|          | 강원·제주권     | (19)  | 84.2       | 10.5         | 5.3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71.2       | 17.6         | 9.6                             | 1.6 |
|          | 이전         | (76)  | 75.0       | 11.8         | 10.5                            | 2.6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78.6       | 14.3         | 7.1                             | 0.0 |
|          | 2015~2019년 | (63)  | 68.3       | 17.5         | 11.1                            | 3.2 |
|          | 2020년 이후   | (110) | 73.6       | 14.5         | 10.0                            | 1.8 |

○ (신규 고용 현황 시사점) 업체당 생산직 신규 고용이 평균 28.7명으로 가장 많고 사무직 7.5명, 연구개발 2.9명 순이며, 생산직은 신규 입직과 동종업계 이직, 사무직은 신규 입직, 연구개발직은 동종업계 이직 경로가 우세

- 사무직, 연구개발직 등 고숙련 인력일수록 상대적으로 소재지 내 충원보다 역외 충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 고용계획 대비 현재 고용 달성률은 94.9%로 업체 유형과 무관하게 90% 이상의 고용 달성률을 보이며, 신규 고용 과정에서 대부분 노동력의 수급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 지방투자 이후 이직 고용 현황

- (생산직) 지방투자 이후 업체당 생산직 이직은 평균 9.2명이며, '동종업계로 이직'이 가장 많고(4.4명, 전체 이직의 48%), 지역은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내'를 가장 많이 선택(3.8명, 전체 이직의 42%)
- 권역별 이직 경로는 '퇴직' 비중이 높은 강원·제주권 제외하고는 유사한 경향이며, 유형별로 이전 투자는 '퇴직'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표 5-46〉 생산직 이직 고용 현황(평균)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이직 고용 | 이직 검토    |         |     | 이직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퇴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9.2     | 4.4      | 2.1     | 2.7 | 2.7   | 2.7            | 3.8          |
| 지역    | 충청권        | (58)  | 14.9    | 6.4      | 3.1     | 5.4 | 5.1   | 4.2            | 5.7          |
|       | 호남권        | (62)  | 6.8     | 3.4      | 2.1     | 1.2 | 1.8   | 2.3            | 2.7          |
|       | 대경권        | (30)  | 3.8     | 2.7      | 0.8     | 0.3 | 0.7   | 0.6            | 2.5          |
|       | 동남권        | (32)  | 11.6    | 6.3      | 2.3     | 3.0 | 2.8   | 3.3            | 5.4          |
|       | 강원·제주권     | (19)  | 4.0     | 0.8      | 0.3     | 2.9 | 1.1   | 1.6            | 1.3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11.6    | 5.9      | 2.6     | 3.0 | 3.1   | 3.3            | 5.1          |
|       | 이전         | (76)  | 5.2     | 1.9      | 1.1     | 2.2 | 1.9   | 1.6            | 1.7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3.6     | 2.3      | 1.2     | 0.2 | 1.6   | 1.3            | 0.7          |
|       | 2015~2019년 | (63)  | 6.3     | 3.8      | 1.7     | 0.9 | 1.7   | 1.6            | 3.0          |
|       | 2020년 이후   | (110) | 12.3    | 5.3      | 2.5     | 4.4 | 3.5   | 3.6            | 5.1          |

〈표 5-47〉 생산직 이직 고용 현황(합계)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이직 고용 | 이직 검토    |         |     | 이직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퇴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1,845   | 884      | 415     | 546 | 536   | 537            | 772          |
| 지역    | 충청권        | (58)  | 866     | 374      | 180     | 312 | 293   | 241            | 332          |
|       | 호남권        | (62)  | 419     | 213      | 132     | 74  | 110   | 142            | 167          |
|       | 대경권        | (30)  | 114     | 82       | 24      | 8   | 22    | 17             | 75           |
|       | 동남권        | (32)  | 370     | 200      | 74      | 96  | 91    | 106            | 173          |
|       | 강원·제주권     | (19)  | 76      | 15       | 5       | 56  | 20    | 31             | 25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1,449   | 742      | 330     | 377 | 392   | 415            | 642          |
|       | 이전         | (76)  | 396     | 142      | 85      | 169 | 144   | 122            | 130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101     | 63       | 33      | 5   | 45    | 36             | 20           |
|       | 2015~2019년 | (63)  | 395     | 237      | 104     | 54  | 105   | 101            | 189          |
|       | 2020년 이후   | (110) | 1,349   | 584      | 278     | 487 | 386   | 400            | 563          |

- (사무·영업직) 사무·영업직은 업체당 평균 2.8명이 이직하였으며,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동종업계 이직’이 가장 많고(1.6명, 전체 이직 대비 59%), 지역은 ‘타 시도’(1.4명, 전체 이직 대비 50%)
- 권역별 이직 경로는 ‘퇴직’ 비중이 높은 강원·제주권 제외하고는 유사한 경향이며, 유형별로 이전 투자는 ‘퇴직’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표 5-48〉 사무·영업직 이직 고용 현황(평균)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이직 고용 | 이직 검토    |         |     | 이직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퇴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2.8     | 1.6      | 0.6     | 0.5 | 1.4   | 0.8            | 0.6          |
| 지역    | 충청권        | (58)  | 4.0     | 2.6      | 1.0     | 0.5 | 2.4   | 1.0            | 0.6          |
|       | 호남권        | (62)  | 2.1     | 1.3      | 0.6     | 0.3 | 1.0   | 0.7            | 0.4          |
|       | 대경권        | (30)  | 0.9     | 0.6      | 0.2     | 0.1 | 0.2   | 0.1            | 0.6          |
|       | 동남권        | (32)  | 4.6     | 2.4      | 0.9     | 1.2 | 2.1   | 1.4            | 1.0          |
|       | 강원·제주권     | (19)  | 0.9     | 0.3      | 0.1     | 0.6 | 0.4   | 0.4            | 0.2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3.4     | 2.1      | 0.7     | 0.6 | 1.5   | 1.0            | 0.8          |
|       | 이전         | (76)  | 1.8     | 0.9      | 0.6     | 0.2 | 1.1   | 0.4            | 0.2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1.1     | 0.6      | 0.5     | 0.0 | 0.8   | 0.3            | 0.1          |
|       | 2015~2019년 | (63)  | 2.0     | 1.2      | 0.5     | 0.3 | 1.0   | 0.5            | 0.5          |
|       | 2020년 이후   | (110) | 3.6     | 2.1      | 0.8     | 0.7 | 1.8   | 1.1            | 0.7          |

〈표 5-49〉 사무·영업직 이직 고용 현황(합계)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이직 고용 | 이직 검토    |         |    | 이직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퇴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554     | 328      | 129     | 97 | 279   | 159            | 116          |
| 지역    | 충청권        | (58)  | 233     | 149      | 56      | 28 | 138   | 59             | 36           |
|       | 호남권        | (62)  | 130     | 78       | 36      | 16 | 61    | 43             | 26           |
|       | 대경권        | (30)  | 27      | 18       | 7       | 2  | 5     | 4              | 18           |
|       | 동남권        | (32)  | 146     | 78       | 29      | 39 | 67    | 46             | 33           |
|       | 강원·제주권     | (19)  | 18      | 5        | 1       | 12 | 8     | 7              | 3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419     | 257      | 83      | 79 | 193   | 127            | 99           |
|       | 이전         | (76)  | 135     | 71       | 46      | 18 | 86    | 32             | 17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32      | 18       | 14      | 0  | 21    | 8              | 3            |
|       | 2015~2019년 | (63)  | 124     | 74       | 32      | 18 | 60    | 32             | 32           |
|       | 2020년 이후   | (110) | 398     | 236      | 83      | 79 | 198   | 119            | 81           |

- (연구개발직) 지방투자 이후 연구개발직은 업체당 평균 1.1명이 이직하였으며, 이 중 ‘동종업계로 이직’이 가장 많고(0.6명, 53%), 지역은 ‘타 시도’와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내’가 유사한 수준

〈표 5-50〉 연구개발직 이직 고용 현황(평균)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이직 고용 | 이직 검토    |         |     | 이직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퇴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1.1     | 0.6      | 0.1     | 0.4 | 0.4   | 0.3            | 0.4          |
| 지역    | 충청권        | (58)  | 1.5     | 1.0      | 0.2     | 0.3 | 0.7   | 0.3            | 0.4          |
|       | 호남권        | (62)  | 0.6     | 0.5      | 0.1     | 0.1 | 0.3   | 0.2            | 0.2          |
|       | 대경권        | (30)  | 0.6     | 0.5      | 0.0     | 0.1 | 0.2   | 0.0            | 0.3          |
|       | 동남권        | (32)  | 1.5     | 0.5      | 0.3     | 0.7 | 0.7   | 0.6            | 0.3          |
|       | 강원·제주권     | (19)  | 1.6     | 0.1      | 0.0     | 1.6 | 0.2   | 0.4            | 1.1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1.3     | 0.7      | 0.1     | 0.5 | 0.5   | 0.4            | 0.4          |
|       | 이전         | (76)  | 0.8     | 0.3      | 0.2     | 0.3 | 0.4   | 0.1            | 0.2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0.1     | 0.1      | 0.0     | 0.0 | 0.1   | 0.0            | 0.0          |
|       | 2015~2019년 | (63)  | 1.3     | 0.7      | 0.3     | 0.3 | 0.7   | 0.3            | 0.3          |
|       | 2020년 이후   | (110) | 1.2     | 0.7      | 0.1     | 0.5 | 0.4   | 0.3            | 0.5          |

〈표 5-51〉 연구개발직 이직 고용 현황(합계)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이직 고용 | 이직 검토    |         |    | 이직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퇴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전 체   |            | (201) | 221     | 117      | 26      | 78 | 90    | 58             | 73           |
| 지역    | 충청권        | (58)  | 86      | 57       | 11      | 18 | 43    | 18             | 25           |
|       | 호남권        | (62)  | 38      | 28       | 5       | 5  | 16    | 12             | 10           |
|       | 대경권        | (30)  | 18      | 15       | 0       | 3  | 7     | 1              | 10           |
|       | 동남권        | (32)  | 48      | 16       | 10      | 22 | 21    | 19             | 8            |
|       | 강원·제주권     | (19)  | 31      | 1        | 0       | 30 | 3     | 8              | 2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160     | 91       | 11      | 58 | 57    | 47             | 56           |
|       | 이전         | (76)  | 61      | 26       | 15      | 20 | 33    | 11             | 17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4       | 3        | 1       | 0  | 3     | 0              | 1            |
|       | 2015~2019년 | (63)  | 81      | 42       | 18      | 21 | 41    | 20             | 20           |
|       | 2020년 이후   | (110) | 136     | 72       | 7       | 57 | 46    | 38             | 52           |

○ (이직 고용 합계) 이직 고용 합계는 업체당 평균 13.0명(총 2,620명), 이직은 ‘동종업계로 이직’이 가장 많고(6.6명, 전체 이직 대비 51%), 지역은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내’(4.8명)와 ‘타 시도’(4.5명)가 유사한 수준 - 권역별 이직 경로는 ‘퇴직’ 비중이 높은 강원·제주권 제외하고는 유사한 경향이며, 유형별로 이전 투자는 ‘퇴직’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표 5-52〉 이직 고용 합계(평균)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이직 고용 | 이직 검토    |         |     | 이직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퇴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 전 체        | (201) | 13.0    | 6.6      | 2.8     | 3.6 | 4.5   | 3.8            | 4.8          |
| 지역    | 충청권        | (58)  | 20.4    | 10.0     | 4.3     | 6.2 | 8.2   | 5.5            | 6.8          |
|       | 호남권        | (62)  | 9.5     | 5.1      | 2.8     | 1.5 | 3.0   | 3.2            | 3.3          |
|       | 대경권        | (30)  | 5.3     | 3.8      | 1.0     | 0.4 | 1.1   | 0.7            | 3.4          |
|       | 동남권        | (32)  | 17.6    | 9.2      | 3.5     | 4.9 | 5.6   | 5.3            | 6.7          |
|       | 강원 · 제주권   | (19)  | 6.6     | 1.1      | 0.3     | 5.2 | 1.6   | 2.4            | 2.5          |
| 지원 유형 | 신 · 증설     | (125) | 16.2    | 8.7      | 3.4     | 4.1 | 5.1   | 4.7            | 6.4          |
|       | 이전         | (76)  | 7.8     | 3.1      | 1.9     | 2.7 | 3.5   | 2.2            | 2.2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4.9     | 3.0      | 1.7     | 0.2 | 2.5   | 1.6            | 0.9          |
|       | 2015~2019년 | (63)  | 9.5     | 5.6      | 2.4     | 1.5 | 3.3   | 2.4            | 3.8          |
|       | 2020년 이후   | (110) | 17.1    | 8.1      | 3.3     | 5.7 | 5.7   | 5.1            | 6.3          |

〈표 5-53〉 이직 고용 합계

(단위: 명)

|       |            | 사례 수  | 총 이직 고용 | 이직 검토    |         |     | 이직 지역 |                |              |
|-------|------------|-------|---------|----------|---------|-----|-------|----------------|--------------|
|       |            |       |         | 동종 업계 이직 | 타 업종 전직 | 퇴직  | 타 시도  | 지방투자 사업장 소재 시도 | 기존 사업장 소재 시도 |
|       | 전 체        | (201) | 2,620   | 1,329    | 570     | 721 | 905   | 754            | 961          |
| 지역    | 충청권        | (58)  | 1,185   | 580      | 247     | 358 | 474   | 318            | 393          |
|       | 호남권        | (62)  | 587     | 319      | 173     | 95  | 187   | 197            | 203          |
|       | 대경권        | (30)  | 159     | 115      | 31      | 13  | 34    | 22             | 103          |
|       | 동남권        | (32)  | 564     | 294      | 113     | 157 | 179   | 171            | 214          |
|       | 강원 · 제주권   | (19)  | 125     | 21       | 6       | 98  | 31    | 46             | 48           |
| 지원 유형 | 신 · 증설     | (125) | 2,028   | 1,090    | 424     | 514 | 642   | 589            | 797          |
|       | 이전         | (76)  | 592     | 239      | 146     | 207 | 263   | 165            | 164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137     | 84       | 48      | 5   | 69    | 44             | 24           |
|       | 2015~2019년 | (63)  | 600     | 353      | 154     | 93  | 206   | 153            | 241          |
|       | 2020년 이후   | (110) | 1,883   | 892      | 368     | 623 | 630   | 557            | 696          |

- (이직 고용 현황 종합) 지방투자 이후 이직은 동종업계로 이직할 것을, 주로 지역은 기존 사업장 인근과 타 시도를 선호하며, 생산직은 지방투자 과정에서 기존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직 결정이 많고, 사무직은 기업 이전에 동참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유추
- 신규 고용과 비교해 보면 생산직은 평균 신규 고용 28.7명 대비 이직 고용 9.2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 사무직은 신규 7.5명 대비 이직 1.6명으로 다소 낮으며, 연구개발직은 2.9명 대비 1.1명의 이직으로 생산직과 유사

#### □ 지방투자 사업장의 채용 애로사항

- (채용 애로 직군) 지방투자 사업장이 채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직군은 '단순생산직'(39.3%)이며, '생산기술직', '연구개발직' 순
- 하지만 대경권 소재 업체는 '연구개발직'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수도권 이전 투자도 열악한 비수도권의 여건이 반영되어 '연구개발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숙련된 '생산기술직'의 채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응답

〈표 5-54〉 채용활동상 가장 어려운 직군

(단위: %)

|          |            | 사례 수  | 단순<br>생산직 | 생산<br>기술직 | 사무·<br>영업직 | 연구<br>개발직 | 기타   |
|----------|------------|-------|-----------|-----------|------------|-----------|------|
| 전 체      |            | (201) | 39.3      | 27.9      | 5.0        | 25.4      | 2.5  |
| 지역       | 충청권        | (58)  | 43.1      | 31.0      | 6.9        | 19.0      | 0.0  |
|          | 호남권        | (62)  | 33.9      | 29.0      | 4.8        | 27.4      | 4.8  |
|          | 대경권        | (30)  | 33.3      | 30.0      | 0.0        | 36.7      | 0.0  |
|          | 동남권        | (32)  | 43.8      | 28.1      | 9.4        | 18.8      | 0.0  |
|          | 강원·제주권     | (19)  | 47.4      | 10.5      | 0.0        | 31.6      | 10.5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40.0      | 28.0      | 7.2        | 21.6      | 3.2  |
|          | 이전         | (76)  | 38.2      | 27.6      | 1.3        | 31.6      | 1.3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50.0      | 14.3      | 0.0        | 35.7      | 0.0  |
|          | 2015~2019년 | (63)  | 41.3      | 27.0      | 1.6        | 25.4      | 4.8  |
|          | 2020년 이후   | (110) | 35.5      | 31.8      | 8.2        | 22.7      | 1.8  |

- (수급 애로 전공계열) 채용활동상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력·전공 계열은 '대졸(이공계)'(1순위 기준 49.8%, 1+2순위 기준 85.6%)
- '전문대졸(이공계)', '고졸(이공계)'은 1+2순위 기준 각각 75.1%, 69.7%의 높은 응답 비중
- 대경권 업체는 1+2순위 기준으로 '대졸(이공계)' 채용을 응답한 비중이 90% 상회

- 2015년 이전 완료 업체는 1+2순위 기준으로 '전문대졸(이공계)' 채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90% 상회

〈표 5-55〉 채용활동상 가장 어려운 계열(1순위)

(단위: %)

|          | 사례 수       | 대졸<br>(이공계) | 고졸<br>(이공계) | 전문대졸<br>(이공계) | 석·박사<br>(이공계) | 전문대졸<br>(인문·사회) | 대졸<br>(인문·사회) |
|----------|------------|-------------|-------------|---------------|---------------|-----------------|---------------|
| 전 체      | (201)      | 49.8        | 15.4        | 14.9          | 13.9          | 2.5             | 2.0           |
| 지역       | 충청권        | (58)        | 43.1        | 20.7          | 19.0          | 0.0             | 1.7           |
|          | 호남권        | (62)        | 43.5        | 21.0          | 14.5          | 4.8             | 3.2           |
|          | 대경권        | (30)        | 60.0        | 6.7           | 16.7          | 0.0             | 0.0           |
|          | 동남권        | (32)        | 50.0        | 9.4           | 12.5          | 3.1             | 3.1           |
|          | 강원·제주권     | (19)        | 73.7        | 5.3           | 5.3           | 5.3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50.4        | 14.4          | 14.4          | 0.8             | 3.2           |
|          | 이전         | (76)        | 48.7        | 17.1          | 15.8          | 5.3             | 0.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53.6        | 21.4          | 10.7          | 10.7            | 0.0           |
|          | 2015~2019년 | (63)        | 49.2        | 12.7          | 20.6          | 1.6             | 0.0           |
|          | 2020년 이후   | (110)       | 49.1        | 15.5          | 12.7          | 0.9             | 3.6           |

주: 고졸(인문·사회), 고졸(문화·예술), 전문대졸(문화·예술) 각 0.5%.

〈표 5-56〉 채용활동상 가장 어려운 계열(1+2순위)

(단위: %)

|          | 사례 수       | 대졸<br>(이공계) | 전문대졸<br>(이공계) | 고졸<br>(이공계) | 석·박사<br>(이공계) | 대졸<br>(인문·사회) | 고졸<br>(인문·사회) | 전문대졸<br>(인문·사회) |
|----------|------------|-------------|---------------|-------------|---------------|---------------|---------------|-----------------|
| 전 체      | (201)      | 85.6        | 75.1          | 69.7        | 24.4          | 19.9          | 9.5           | 6.0             |
| 지역       | 충청권        | (58)        | 87.9          | 74.1        | 70.7          | 32.8          | 13.8          | 12.1            |
|          | 호남권        | (62)        | 82.3          | 82.3        | 69.4          | 19.4          | 24.2          | 9.7             |
|          | 대경권        | (30)        | 93.3          | 66.7        | 73.3          | 16.7          | 23.3          | 3.3             |
|          | 동남권        | (32)        | 78.1          | 71.9        | 68.8          | 25.0          | 18.8          | 12.5            |
|          | 강원·제주권     | (19)        | 89.5          | 73.7        | 63.2          | 26.3          | 21.1          | 5.3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85.6          | 72.8        | 69.6          | 23.2          | 23.2          | 10.4            |
|          | 이전         | (76)        | 85.5          | 78.9        | 69.7          | 26.3          | 14.5          | 7.9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78.6          | 96.4        | 78.6          | 7.1           | 10.7          | 7.1             |
|          | 2015~2019년 | (63)        | 84.1          | 77.8        | 76.2          | 27.0          | 11.1          | 11.1            |
|          | 2020년 이후   | (110)       | 88.2          | 68.2        | 63.6          | 27.3          | 27.3          | 9.1             |

주: 전문대졸(문화·예술) 2.0%, 고졸(문화·예술), 석·박사(인문·사회), 석·박사(문화·예술) 각 1.0%.

- (채용 애로 요인) 지방투자 사업장의 채용 활동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요인은 '입지 요인'(1순위 기준 57.2%, 1+2순위 기준 79.1%)
  - '근로자 임금'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권역, 유형, 시기와 무관하게 요인 간 순위에 대한 경향성은 유사

- 1+2순위 기준으로 '입지 요인'을 응답한 비중은 충청권 소재 업체가 가장 높았으며, 대경권 소재 업체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5-57〉 채용활동상 어려움의 요인(1순위)

(단위 : %)

|          |            | 사례 수  | 입지 요인<br>(출퇴근 시간,<br>교통여건,<br>주변 도시<br>서비스 접근성) | 근로자<br>임금 | 근로자<br>숙련도<br>(학력 및<br>전공지식) | 근로<br>강도<br>(교대제<br>등) | 복리후생<br>여건 및<br>복지시설 | 경력관리<br>비전<br>(정년 및<br>승진 등) |
|----------|------------|-------|-------------------------------------------------|-----------|------------------------------|------------------------|----------------------|------------------------------|
| 전 체      |            | (201) | 57.2                                            | 24.9      | 10.4                         | 4.5                    | 1.5                  | 1.0                          |
| 지역       | 충청권        | (58)  | 67.2                                            | 19.0      | 10.3                         | 3.4                    | 0.0                  | 0.0                          |
|          | 호남권        | (62)  | 46.8                                            | 32.3      | 11.3                         | 6.5                    | 1.6                  | 1.6                          |
|          | 대경권        | (30)  | 53.3                                            | 23.3      | 16.7                         | 0.0                    | 3.3                  | 0.0                          |
|          | 동남권        | (32)  | 59.4                                            | 21.9      | 6.3                          | 6.3                    | 3.1                  | 3.1                          |
|          | 강원·제주권     | (19)  | 63.2                                            | 26.3      | 5.3                          | 5.3                    | 0.0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51.2                                            | 29.6      | 9.6                          | 5.6                    | 1.6                  | 1.6                          |
|          | 이전         | (76)  | 67.1                                            | 17.1      | 11.8                         | 2.6                    | 1.3                  | 0.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60.7                                            | 21.4      | 10.7                         | 3.6                    | 3.6                  | 0.0                          |
|          | 2015~2019년 | (63)  | 58.7                                            | 22.2      | 11.1                         | 4.8                    | 1.6                  | 1.6                          |
|          | 2020년 이후   | (110) | 55.5                                            | 27.3      | 10.0                         | 4.5                    | 0.9                  | 0.9                          |

주 : 기타 0.5%.

〈표 5-58〉 채용활동상 어려움의 요인(1+2순위)

(단위 : %)

|          |            | 사례 수  | 입지 요인<br>(출퇴근 시간,<br>교통여건,<br>주변 도시<br>서비스 접근성) | 근로자<br>임금 | 근로자<br>숙련도<br>(학력 및<br>전공지식) | 근로<br>강도<br>(교대제<br>등) | 복리후생<br>여건 및<br>복지시설 | 경력관리<br>비전<br>(정년 및<br>승진 등) |
|----------|------------|-------|-------------------------------------------------|-----------|------------------------------|------------------------|----------------------|------------------------------|
| 전 체      |            | (201) | 79.1                                            | 51.2      | 35.3                         | 13.9                   | 10.4                 | 5.5                          |
| 지역       | 충청권        | (58)  | 87.9                                            | 46.6      | 34.5                         | 17.2                   | 8.6                  | 1.7                          |
|          | 호남권        | (62)  | 75.8                                            | 53.2      | 35.5                         | 11.3                   | 11.3                 | 8.1                          |
|          | 대경권        | (30)  | 63.3                                            | 53.3      | 43.3                         | 13.3                   | 13.3                 | 6.7                          |
|          | 동남권        | (32)  | 81.3                                            | 56.3      | 34.4                         | 12.5                   | 12.5                 | 3.1                          |
|          | 강원·제주권     | (19)  | 84.2                                            | 47.4      | 26.3                         | 15.8                   | 5.3                  | 10.5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75.2                                            | 56.0      | 33.6                         | 14.4                   | 10.4                 | 7.2                          |
|          | 이전         | (76)  | 85.5                                            | 43.4      | 38.2                         | 13.2                   | 10.5                 | 2.6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85.7                                            | 42.9      | 50.0                         | 7.1                    | 10.7                 | 0.0                          |
|          | 2015~2019년 | (63)  | 74.6                                            | 47.6      | 33.3                         | 15.9                   | 11.1                 | 9.5                          |
|          | 2020년 이후   | (110) | 80.0                                            | 55.5      | 32.7                         | 14.5                   | 10.0                 | 4.5                          |

주 : 기타 0.5%.

○ (노동시장 여건 부족) 노동시장과 여건과 관련하여 ‘지역 고용서비스(구직·구인) 부족’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1순위 기준 59.7%, 1+2순위 기준 76.1%)

- 동남권 소재 업체의 응답 비중(71.9%)이 특히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근로자 정주여건(교육, 의료 등) 부족’, ‘채용 보조금 등 재정지원 부족’이 다음으로 부족하다는 응답

〈표 5-59〉 노동시장 여건 부족(1순위)

(단위: %)

|       | 사례 수       | 지역 고용 서비스<br>(구직·구인) 부족 | 근로자 정주여건<br>(교육, 의료 등) 부족 | 채용 보조금 등<br>재정지원 부족 | 공동근로 복지 여건<br>부족 | 근로자 교육 및<br>재교육 프로그램<br>부족 | 근로자 사회<br>안전망 부족 |
|-------|------------|-------------------------|---------------------------|---------------------|------------------|----------------------------|------------------|
| 전 체   | (201)      | 59.7                    | 17.9                      | 12.9                | 4.0              | 2.5                        | 1.5              |
| 지역    | 충청권        | (58)                    | 62.1                      | 20.7                | 12.1             | 0.0                        | 1.7              |
|       | 호남권        | (62)                    | 56.5                      | 19.4                | 12.9             | 9.7                        | 0.0              |
|       | 대경권        | (30)                    | 43.3                      | 26.7                | 13.3             | 0.0                        | 6.7              |
|       | 동남권        | (32)                    | 71.9                      | 6.3                 | 12.5             | 3.1                        | 6.3              |
|       | 강원·제주권     | (19)                    | 68.4                      | 10.5                | 15.8             | 5.3                        | 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60.8                      | 16.8                | 10.4             | 4.8                        | 3.2              |
|       | 이전         | (76)                    | 57.9                      | 19.7                | 17.1             | 2.6                        | 1.3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57.1                      | 14.3                | 21.4             | 7.1                        | 0.0              |
|       | 2015~2019년 | (63)                    | 61.9                      | 22.2                | 7.9              | 1.6                        | 3.2              |
|       | 2020년 이후   | (110)                   | 59.1                      | 16.4                | 13.6             | 4.5                        | 2.7              |

주: 기타 1.5%.

〈표 5-60〉 노동시장 여건 부족(1+2순위)

(단위: %)

|       | 사례 수       | 지역 고용 서비스<br>(구직·구인) 부족 | 근로자 정주여건<br>(교육, 의료 등) 부족 | 채용 보조금 등<br>재정지원 부족 | 공동근로 복지 여건<br>부족 | 근로자 교육 및<br>재교육 프로그램<br>부족 | 근로자 사회<br>안전망 부족 |
|-------|------------|-------------------------|---------------------------|---------------------|------------------|----------------------------|------------------|
| 전 체   | (201)      | 76.1                    | 38.8                      | 38.3                | 15.9             | 13.4                       | 8.5              |
| 지역    | 충청권        | (58)                    | 77.6                      | 46.6                | 34.5             | 10.3                       | 8.6              |
|       | 호남권        | (62)                    | 75.8                      | 30.6                | 43.5             | 12.9                       | 21.0             |
|       | 대경권        | (30)                    | 70.0                      | 60.0                | 23.3             | 16.7                       | 6.7              |
|       | 동남권        | (32)                    | 84.4                      | 28.1                | 43.8             | 25.0                       | 6.3              |
|       | 강원·제주권     | (19)                    | 68.4                      | 26.3                | 47.4             | 26.3                       | 26.3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76.0                      | 38.4                | 38.4             | 15.2                       | 12.0             |
|       | 이전         | (76)                    | 76.3                      | 39.5                | 38.2             | 17.1                       | 15.8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71.4                      | 25.0                | 39.3             | 28.6                       | 32.1             |
|       | 2015~2019년 | (63)                    | 81.0                      | 44.4                | 31.7             | 14.3                       | 11.1             |
|       | 2020년 이후   | (110)                   | 74.5                      | 39.1                | 41.8             | 13.6                       | 10.0             |

- (채용 애로사항 시사점) 직군별로는 단순 생산직의 양적 노동력 기반 수급이 어려우며, 생산기술, 연구개발이 그 뒤를 이음
  - 전반적으로 초대졸 이상의 이공계 인력 수급에 애로를 토로
  - 지역의 고용서비스 부족이 채용 애로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교통·의료·주거 등 정주여건 분야의 애로도 채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

□ 지방투자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 (생산직) 지방투자 사업장의 사업주 관점에서 현재 근로자(숙련도, 생산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이 40.3%로 가장 높음
  - ‘대체로 만족하며 기존 사업장 대비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25.9%,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은 4.0%에 불과
  - \* 대경권 소재 업체는 ‘대체로 만족하며 기존 사업장 대비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타지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표 5-61〉 생산직 근로자 만족도

(단위: %)

|          |            | 사례 수  | 대체로 추가<br>교육훈련이<br>나 개선된<br>노동력 필요 | 대체로 만족<br>하지만 기존<br>사업장 대비<br>부족 | 대체로 만족 | 대체로 만족<br>하며 기존<br>사업장 대비<br>향상 | 매우 만족 |
|----------|------------|-------|------------------------------------|----------------------------------|--------|---------------------------------|-------|
| 전 체      |            | (201) | 10.9                               | 18.9                             | 40.3   | 25.9                            | 4.0   |
| 지역       | 충청권        | (58)  | 15.5                               | 24.1                             | 43.1   | 13.8                            | 3.4   |
|          | 호남권        | (62)  | 8.1                                | 25.8                             | 35.5   | 27.4                            | 3.2   |
|          | 대경권        | (30)  | 13.3                               | 6.7                              | 33.3   | 43.3                            | 3.3   |
|          | 동남권        | (32)  | 9.4                                | 9.4                              | 46.9   | 25.0                            | 9.4   |
|          | 강원·제주권     | (19)  | 5.3                                | 15.8                             | 47.4   | 31.6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2.0                               | 16.8                             | 40.0   | 27.2                            | 4.0   |
|          | 이전         | (76)  | 9.2                                | 22.4                             | 40.8   | 23.7                            | 3.9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3.6                                | 25.0                             | 39.3   | 28.6                            | 3.6   |
|          | 2015~2019년 | (63)  | 12.7                               | 15.9                             | 41.3   | 27.0                            | 3.2   |
|          | 2020년 이후   | (110) | 11.8                               | 19.1                             | 40.0   | 24.5                            | 4.5   |

- (사무·영업직)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이 51.7%로 최대
  - ‘대체로 만족하며 기존 사업장 대비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22.4%,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은 4.0%에 불과

-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는 타지역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효표본 수가 적어 해석상에 주의 필요

〈표 5-62〉 사무·영업직 근로자 만족도

(단위: %)

|          |            | 사례 수  | 대체로 추가<br>교육훈련이<br>나 개선된<br>노동력 필요 | 대체로 만족<br>하지만 기존<br>사업장 대비<br>부족 | 대체로 만족 | 대체로 만족<br>하며 기존<br>사업장 대비<br>항상 | 매우 만족 |
|----------|------------|-------|------------------------------------|----------------------------------|--------|---------------------------------|-------|
| 전 체      |            | (201) | 4.5                                | 17.4                             | 51.7   | 22.4                            | 4.0   |
| 지역       | 충청권        | (58)  | 5.2                                | 25.9                             | 53.4   | 12.1                            | 3.4   |
|          | 호남권        | (62)  | 3.2                                | 21.0                             | 51.6   | 22.6                            | 1.6   |
|          | 대경권        | (30)  | 3.3                                | 10.0                             | 46.7   | 33.3                            | 6.7   |
|          | 동남권        | (32)  | 9.4                                | 9.4                              | 50.0   | 21.9                            | 9.4   |
|          | 강원·제주권     | (19)  | 0.0                                | 5.3                              | 57.9   | 36.8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4.8                                | 15.2                             | 55.2   | 21.6                            | 3.2   |
|          | 이전         | (76)  | 3.9                                | 21.1                             | 46.1   | 23.7                            | 5.3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3.6                                | 14.3                             | 46.4   | 32.1                            | 3.6   |
|          | 2015~2019년 | (63)  | 0.0                                | 17.5                             | 52.4   | 27.0                            | 3.2   |
|          | 2020년 이후   | (110) | 7.3                                | 18.2                             | 52.7   | 17.3                            | 4.5   |

○ (연구개발직)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직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53.2%)

- ‘대체로 만족하지만 기존 사업장 대비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21.9%로 파악되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2.5%에 불과

\*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 2015년 이전 완료 업체는 ‘연구개발직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이 70%를 상회

○ (향후 고용 전망) 2024년 기준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고용의 전망은, ‘현재 고용 규모 유지’라고 응답한 비중이 41.3%

- 고용의 전망을 ‘현재 고용 규모보다 다소 확대’하겠다는 응답 비중 또한 39.8%로 유사한 비중
- 충청권 및 대경권 소재 업체, 신·증설 업체는 2024년 기준 고용 전망에 대해 ‘현재 고용 규모보다 다소 확대’라고 응답한 비중이 45% 상회

〈표 5-63〉 연구개발직 근로자 만족도

(단위: %)

|          |            | 사례 수  | 대체로 추가<br>교육훈련이<br>나 개선된<br>노동력 필요 | 대체로 만족<br>하지만 기존<br>사업장 대비<br>부족 | 대체로<br>만족 | 대체로 만족<br>하며 기존<br>사업장 대비<br>향상 | 매우<br>만족 |
|----------|------------|-------|------------------------------------|----------------------------------|-----------|---------------------------------|----------|
| 전 체      |            | (201) | 7.5                                | 21.9                             | 53.2      | 14.9                            | 2.5      |
| 지역       | 충청권        | (58)  | 12.1                               | 25.9                             | 51.7      | 8.6                             | 1.7      |
|          | 호남권        | (62)  | 6.5                                | 21.0                             | 48.4      | 21.0                            | 3.2      |
|          | 대경권        | (30)  | 6.7                                | 30.0                             | 46.7      | 16.7                            | 0.0      |
|          | 동남권        | (32)  | 6.3                                | 9.4                              | 59.4      | 18.8                            | 6.3      |
|          | 강원·제주권     | (19)  | 0.0                                | 21.1                             | 73.7      | 5.3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5.6                                | 22.4                             | 52.0      | 17.6                            | 2.4      |
|          | 이전         | (76)  | 10.5                               | 21.1                             | 55.3      | 10.5                            | 2.6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7.1                                | 10.7                             | 71.4      | 10.7                            | 0.0      |
|          | 2015~2019년 | (63)  | 4.8                                | 28.6                             | 46.0      | 17.5                            | 3.2      |
|          | 2020년 이후   | (110) | 9.1                                | 20.9                             | 52.7      | 14.5                            | 2.7      |

〈표 5-64〉 향후 고용 전망

(단위: %)

|          |            | 사례 수  | 현재 고용<br>규모보다<br>대폭 확대 | 현재 고용<br>규모보다<br>다소 확대 | 현재<br>고용 규모<br>유지 | 현재 고용<br>규모보다<br>소폭 감소 | 현재 고용<br>규모보다<br>상당히 감소 |
|----------|------------|-------|------------------------|------------------------|-------------------|------------------------|-------------------------|
| 전 체      |            | (201) | 1.0                    | 39.8                   | 41.3              | 13.4                   | 4.5                     |
| 지역       | 충청권        | (58)  | 0.0                    | 46.6                   | 36.2              | 10.3                   | 6.9                     |
|          | 호남권        | (62)  | 0.0                    | 37.1                   | 41.9              | 16.1                   | 4.8                     |
|          | 대경권        | (30)  | 0.0                    | 46.7                   | 33.3              | 16.7                   | 3.3                     |
|          | 동남권        | (32)  | 3.1                    | 31.3                   | 53.1              | 12.5                   | 0.0                     |
|          | 강원·제주권     | (19)  | 5.3                    | 31.6                   | 47.4              | 10.5                   | 5.3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6                    | 45.6                   | 35.2              | 15.2                   | 2.4                     |
|          | 이전         | (76)  | 0.0                    | 30.3                   | 51.3              | 10.5                   | 7.9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21.4                   | 57.1              | 10.7                   | 10.7                    |
|          | 2015~2019년 | (63)  | 0.0                    | 30.2                   | 46.0              | 15.9                   | 7.9                     |
|          | 2020년 이후   | (110) | 1.8                    | 50.0                   | 34.5              | 12.7                   | 0.9                     |

## 라. 지방투자 일자리의 질적 평가

### □ 근로자 임금 수준

#### ○ (생산직) 지방투자 사업장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동종업계 대비 임금

수준은 생산직은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23.9%

- 지방이전 업체는 생산직의 임금 수준이 동종업계 대비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30%를 상회

〈표 5-65〉 생산직 근로자 임금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80%)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80~95%)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95~105%)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105~120%)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120%~) |
|-------|------------|-------|--------------------------|-------------------------|----------------------|---------------------------|---------------------------|
| 전 체   |            | (201) | 0.5                      | 12.4                    | 63.2                 | 22.9                      | 1.0                       |
| 지역    | 충청권        | (58)  | 0.0                      | 12.1                    | 62.1                 | 25.9                      | 0.0                       |
|       | 호남권        | (62)  | 0.0                      | 19.4                    | 58.1                 | 22.6                      | 0.0                       |
|       | 대경권        | (30)  | 0.0                      | 10.0                    | 63.3                 | 26.7                      | 0.0                       |
|       | 동남권        | (32)  | 3.1                      | 6.3                     | 71.9                 | 12.5                      | 6.3                       |
|       | 강원·제주권     | (19)  | 0.0                      | 5.3                     | 68.4                 | 26.3                      | 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0.0                      | 12.0                    | 68.8                 | 17.6                      | 1.6                       |
|       | 이전         | (76)  | 1.3                      | 13.2                    | 53.9                 | 31.6                      | 0.0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3.6                      | 17.9                    | 50.0                 | 28.6                      | 0.0                       |
|       | 2015~2019년 | (63)  | 0.0                      | 12.7                    | 65.1                 | 20.6                      | 1.6                       |
|       | 2020년 이후   | (110) | 0.0                      | 10.9                    | 65.5                 | 22.7                      | 0.9                       |

- (사무·영업직) 사무·영업직 임금이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60.7%로 가장 높으며,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0.9%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
  - 동남권 업체는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78%로 타지역 대비 상당히 높게 도출됨
- (연구개발직) 연구개발직 임금도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9.2%로 가장 높고,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1.4%로 높게 도출
  - 대경권 소재 업체는 연구개발직 임금 수준이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0%로 타지역 대비 높은 수준

〈표 5-66〉 사무·영업직 근로자 임금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80%)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80~95%)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95~105%)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105~120%)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120%~) |
|-------|------------|-------|--------------------------|-------------------------|----------------------|---------------------------|---------------------------|
|       | 전 체        | (201) | 1.0                      | 16.9                    | 60.7                 | 20.9                      | 0.5                       |
| 지역    | 충청권        | (58)  | 0.0                      | 15.5                    | 60.3                 | 24.1                      | 0.0                       |
|       | 호남권        | (62)  | 1.6                      | 21.0                    | 54.8                 | 22.6                      | 0.0                       |
|       | 대경권        | (30)  | 0.0                      | 20.0                    | 53.3                 | 26.7                      | 0.0                       |
|       | 동남권        | (32)  | 3.1                      | 9.4                     | 78.1                 | 6.3                       | 3.1                       |
|       | 강원·제주권     | (19)  | 0.0                      | 15.8                    | 63.2                 | 21.1                      | 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0.0                      | 17.6                    | 64.0                 | 17.6                      | 0.8                       |
|       | 이전         | (76)  | 2.6                      | 15.8                    | 55.3                 | 26.3                      | 0.0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3.6                      | 17.9                    | 50.0                 | 28.6                      | 0.0                       |
|       | 2015~2019년 | (63)  | 1.6                      | 19.0                    | 63.5                 | 15.9                      | 0.0                       |
|       | 2020년 이후   | (110) | 0.0                      | 15.5                    | 61.8                 | 21.8                      | 0.9                       |

〈표 5-67〉 연구개발직 근로자 임금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80%)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80~95%)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95~105%)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105~120%)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120%~) |
|-------|------------|-------|--------------------------|-------------------------|----------------------|---------------------------|---------------------------|
|       | 전 체        | (201) | 1.5                      | 17.4                    | 59.2                 | 21.4                      | 0.5                       |
| 지역    | 충청권        | (58)  | 0.0                      | 15.5                    | 58.6                 | 25.9                      | 0.0                       |
|       | 호남권        | (62)  | 3.2                      | 19.4                    | 56.5                 | 21.0                      | 0.0                       |
|       | 대경권        | (30)  | 0.0                      | 20.0                    | 50.0                 | 30.0                      | 0.0                       |
|       | 동남권        | (32)  | 3.1                      | 15.6                    | 68.8                 | 9.4                       | 3.1                       |
|       | 강원·제주권     | (19)  | 0.0                      | 15.8                    | 68.4                 | 15.8                      | 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0.0                      | 20.0                    | 60.0                 | 19.2                      | 0.8                       |
|       | 이전         | (76)  | 3.9                      | 13.2                    | 57.9                 | 25.0                      | 0.0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7.1                      | 14.3                    | 53.6                 | 25.0                      | 0.0                       |
|       | 2015~2019년 | (63)  | 1.6                      | 22.2                    | 61.9                 | 14.3                      | 0.0                       |
|       | 2020년 이후   | (110) | 0.0                      | 15.5                    | 59.1                 | 24.5                      | 0.9                       |

#### □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

○ (생산직) 지방투자 사업장의 복리후생(복지제도, 시설 등 여건) 수준은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55.7%이고,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이라는 응답은 29.4%

\* 2015년 이전 완료 업체는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80~95%)’이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68〉 생산직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br>(80~95%)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br>(95~105%)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br>(105~120%)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br>(120%~) |
|-------|------------|-------|----------------------------|-------------------------|------------------------------|------------------------------|
| 전 체   |            | (201) | 13.9                       | 55.7                    | 29.4                         | 1.0                          |
| 지역    | 충청권        | (58)  | 12.1                       | 56.9                    | 31.0                         | 0.0                          |
|       | 호남권        | (62)  | 19.4                       | 53.2                    | 25.8                         | 1.6                          |
|       | 대경권        | (30)  | 6.7                        | 66.7                    | 26.7                         | 0.0                          |
|       | 동남권        | (32)  | 15.6                       | 50.0                    | 31.3                         | 3.1                          |
|       | 강원·제주권     | (19)  | 10.5                       | 52.6                    | 36.8                         | 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12.8                       | 60.8                    | 24.8                         | 1.6                          |
|       | 이전         | (76)  | 15.8                       | 47.4                    | 36.8                         | 0.0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21.4                       | 39.3                    | 39.3                         | 0.0                          |
|       | 2015~2019년 | (63)  | 17.5                       | 55.6                    | 27.0                         | 0.0                          |
|       | 2020년 이후   | (110) | 10.0                       | 60.0                    | 28.2                         | 1.8                          |

- (사무·영업직)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9.2%로 가장 높았으며,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4.4%로 높게 도출됨

\* 충청권 소재 업체는 사무·영업직의 복리후생 수준에 대해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타지역 대비 높은 반면,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가장 낮음

- (연구개발직)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9.7%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3.9%로 높게 도출

\* 동남권 소재 업체는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타지역 대비 낮은 반면,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80~95%)’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69〉 사무·영업직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80%)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80~95%)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95~105%)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105~120%)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120%~) |
|-------|------------|-------|--------------------------|-------------------------|----------------------|---------------------------|---------------------------|
| 전 체   |            | (201) | 0.5                      | 14.9                    | 59.2                 | 24.4                      | 1.0                       |
| 지역    | 충청권        | (58)  | 0.0                      | 12.1                    | 67.2                 | 20.7                      | 0.0                       |
|       | 호남권        | (62)  | 1.6                      | 17.7                    | 54.8                 | 24.2                      | 1.6                       |
|       | 대경권        | (30)  | 0.0                      | 10.0                    | 63.3                 | 26.7                      | 0.0                       |
|       | 동남권        | (32)  | 0.0                      | 21.9                    | 50.0                 | 25.0                      | 3.1                       |
|       | 강원·제주권     | (19)  | 0.0                      | 10.5                    | 57.9                 | 31.6                      | 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0.0                      | 15.2                    | 61.6                 | 21.6                      | 1.6                       |
|       | 이전         | (76)  | 1.3                      | 14.5                    | 55.3                 | 28.9                      | 0.0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21.4                    | 39.3                 | 39.3                      | 0.0                       |
|       | 2015~2019년 | (63)  | 1.6                      | 15.9                    | 63.5                 | 19.0                      | 0.0                       |
|       | 2020년 이후   | (110) | 0.0                      | 12.7                    | 61.8                 | 23.6                      | 1.8                       |

〈표 5-70〉 연구개발직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80%)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80~95%)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95~105%)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105~120%)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120%~) |
|-------|------------|-------|--------------------------|-------------------------|----------------------|---------------------------|---------------------------|
| 전 체   |            | (201) | 0.5                      | 14.9                    | 59.7                 | 23.9                      | 1.0                       |
| 지역    | 충청권        | (58)  | 0.0                      | 12.1                    | 67.2                 | 20.7                      | 0.0                       |
|       | 호남권        | (62)  | 1.6                      | 17.7                    | 56.5                 | 22.6                      | 1.6                       |
|       | 대경권        | (30)  | 0.0                      | 10.0                    | 63.3                 | 26.7                      | 0.0                       |
|       | 동남권        | (32)  | 0.0                      | 21.9                    | 46.9                 | 28.1                      | 3.1                       |
|       | 강원·제주권     | (19)  | 0.0                      | 10.5                    | 63.2                 | 26.3                      | 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0.0                      | 15.2                    | 60.8                 | 22.4                      | 1.6                       |
|       | 이전         | (76)  | 1.3                      | 14.5                    | 57.9                 | 26.3                      | 0.0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21.4                    | 42.9                 | 35.7                      | 0.0                       |
|       | 2015~2019년 | (63)  | 1.6                      | 15.9                    | 65.1                 | 17.5                      | 0.0                       |
|       | 2020년 이후   | (110) | 0.0                      | 12.7                    | 60.9                 | 24.5                      | 1.8                       |

#### □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현황

- (건강검진) 근로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61.2%로 파악되고 동남권 소재 업체는 75.0%에 달하는 가운데,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주기는 평균 1.1년이며 비용의 98.4%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

〈표 5-71〉 건강검진 지원 현황

(단위: %, 년)

|       |            | 사례 수  | 지원 여부 |       | 사례 수<br>(지원하는 경우) | 지원 주기 및 비용 |          |
|-------|------------|-------|-------|-------|-------------------|------------|----------|
|       |            |       | 지원함   | 해당 없음 |                   | 주기(년)      | 비용 지원 비중 |
| 전 체   |            | (201) | 61.2  | 38.8  | (123)             | 1.1        | 98.4     |
| 지역    | 충청권        | (58)  | 58.6  | 41.4  | (34)              | 1.1        | 98.5     |
|       | 호남권        | (62)  | 62.9  | 37.1  | (39)              | 1.2        | 99.2     |
|       | 대경권        | (30)  | 53.3  | 46.7  | (16)              | 1.1        | 92.8     |
|       | 동남권        | (32)  | 75.0  | 25.0  | (24)              | 1.0        | 100.0    |
|       | 강원·제주권     | (19)  | 52.6  | 47.4  | (10)              | 1.0        | 10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64.0  | 36.0  | (80)              | 1.1        | 97.7     |
|       | 이전         | (76)  | 56.6  | 43.4  | (43)              | 1.1        | 99.8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60.7  | 39.3  | (17)              | 1.2        | 100.0    |
|       | 2015~2019년 | (63)  | 54.0  | 46.0  | (34)              | 1.2        | 97.2     |
|       | 2020년 이후   | (110) | 65.5  | 34.5  | (72)              | 1.1        | 98.6     |

- (자녀교육비) 근로자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지원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사업장마다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기타’의 응답 비중이 22.9%로 도출
  - 제시된 항목에서는 ‘중등·고등 교육 등록금을 지원(장학금 및 재정 지원)’ 형태가 19.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
  - 조사된 업체의 절반 정도인 52.7%는 근로자 자녀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 (식비) 근로자 식비를 지원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지원하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대부분인 93.0%가 ‘구내식당 운영 및 위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대경권,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는 100% 응답
- (교통비) 근로자 교통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자체 교통수단 운영’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고, ‘월교통비 지원’이 24.4%인 반면 38.3%는 근로자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 소재 업체는 절반을 상회하는 53.4%가 ‘자체 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

〈표 5-72〉 자녀교육비 지원 현황(복수응답)

(단위: %)

|          |            | 사례 수  | 중등·고등 교육<br>등록금을 지원<br>(장학금 및 재정지원) | 중등·고등 교육<br>등록금을 지원<br>(대출지원) | 중등교육<br>등록금 지원 | 기타   | 해당 없음 |
|----------|------------|-------|-------------------------------------|-------------------------------|----------------|------|-------|
|          | 전 체        | (201) | 19.9                                | 3.5                           | 3.0            | 22.9 | 52.7  |
| 지역       | 충청권        | (58)  | 24.1                                | 3.4                           | 3.4            | 25.9 | 46.6  |
|          | 호남권        | (62)  | 21.0                                | 3.2                           | 3.2            | 11.3 | 61.3  |
|          | 대경권        | (30)  | 16.7                                | 3.3                           | 0.0            | 23.3 | 56.7  |
|          | 동남권        | (32)  | 18.8                                | 6.3                           | 3.1            | 34.4 | 43.8  |
|          | 강원·제주권     | (19)  | 10.5                                | 0.0                           | 5.3            | 31.6 | 52.6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9.2                                | 4.8                           | 2.4            | 24.0 | 52.0  |
|          | 이전         | (76)  | 21.1                                | 1.3                           | 3.9            | 21.1 | 53.9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21.4                                | 0.0                           | 3.6            | 17.9 | 57.1  |
|          | 2015~2019년 | (63)  | 11.1                                | 6.3                           | 4.8            | 22.2 | 57.1  |
|          | 2020년 이후   | (110) | 24.5                                | 2.7                           | 1.8            | 24.5 | 49.1  |

〈표 5-73〉 식비 지원 현황

(단위: %)

|          |            | 사례 수  | 구내식당 운영 및 위탁 | 월 식비 지원 | 기타  | 해당 없음 |
|----------|------------|-------|--------------|---------|-----|-------|
|          | 전 체        | (201) | 93.0         | 7.0     | 3.0 | 0.5   |
| 지역       | 충청권        | (58)  | 91.4         | 12.1    | 1.7 | 0.0   |
|          | 호남권        | (62)  | 90.3         | 8.1     | 6.5 | 1.6   |
|          | 대경권        | (30)  | 100.0        | 0.0     | 0.0 | 0.0   |
|          | 동남권        | (32)  | 90.6         | 6.3     | 3.1 | 0.0   |
|          | 강원·제주권     | (19)  | 100.0        | 0.0     | 0.0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95.2         | 4.0     | 3.2 | 0.0   |
|          | 이전         | (76)  | 89.5         | 11.8    | 2.6 | 1.3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92.9         | 7.1     | 3.6 | 0.0   |
|          | 2015~2019년 | (63)  | 87.3         | 12.7    | 3.2 | 1.6   |
|          | 2020년 이후   | (110) | 96.4         | 3.6     | 2.7 | 0.0   |

〈표 5-74〉 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

|          |            | 사례 수  | 자체 교통수단 운영 | 월교통비 지원 | 기타   | 해당 없음 |
|----------|------------|-------|------------|---------|------|-------|
|          | 전 체        | (201) | 35.3       | 24.4    | 8.0  | 38.3  |
| 지역       | 충청권        | (58)  | 53.4       | 24.1    | 13.8 | 20.7  |
|          | 호남권        | (62)  | 21.0       | 29.0    | 6.5  | 45.2  |
|          | 대경권        | (30)  | 26.7       | 16.7    | 3.3  | 53.3  |
|          | 동남권        | (32)  | 34.4       | 28.1    | 6.3  | 37.5  |
|          | 강원·제주권     | (19)  | 42.1       | 15.8    | 5.3  | 47.4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36.0       | 24.8    | 9.6  | 37.6  |
|          | 이전         | (76)  | 34.2       | 23.7    | 5.3  | 39.5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32.1       | 21.4    | .0   | 46.4  |
|          | 2015~2019년 | (63)  | 34.9       | 27.0    | 7.9  | 36.5  |
|          | 2020년 이후   | (110) | 36.4       | 23.6    | 10.0 | 37.3  |

□ 근로시간 수준

- (생산직) 지방투자 사업장 일자리의 동종업계 대비 근로시간 수준은 생산직의 경우 '동종업계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대부분(85.1%)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5%,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5%로 도출
  -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는 생산직의 근로시간 수준에 대해 '동종업계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100%로 도출

〈표 5-75〉 생산직 근로시간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
|-------|------------|-------|----------------|------------|----------------|
| 전 체   |            | (201) | 5.5            | 85.1       | 9.5            |
| 지역    | 충청권        | (58)  | 6.9            | 79.3       | 13.8           |
|       | 호남권        | (62)  | 6.5            | 83.9       | 9.7            |
|       | 대경권        | (30)  | 3.3            | 86.7       | 10.0           |
|       | 동남권        | (32)  | 6.3            | 87.5       | 6.3            |
|       | 강원·제주권     | (19)  | 0.0            | 100.0      | 0.0            |
| 지원 유형 | 신·중설       | (125) | 5.6            | 84.0       | 10.4           |
|       | 이전         | (76)  | 5.3            | 86.8       | 7.9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7.1            | 89.3       | 3.6            |
|       | 2015~2019년 | (63)  | 6.3            | 85.7       | 7.9            |
|       | 2020년 이후   | (110) | 4.5            | 83.6       | 11.8           |

- (사무·영업직) 사무·영업직도 '동종업계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대부분인 85.6%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7.5%,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6.5%로 도출
  - 동남권 소재 업체는 사무·영업직의 근로시간 수준에 대해 '동종업계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90%를 상회

〈표 5-76〉 사무·영업직 근로시간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br>매우 낮은<br>편이다 | 동종업계 대비<br>낮은 편이다 | 동종업계와<br>유사하다 | 동종업계 대비<br>높은 편이다 |
|----------|------------|-------|-------------------------|-------------------|---------------|-------------------|
| 전 체      |            | (201) | 0.5                     | 7.5               | 85.6          | 6.5               |
| 지역       | 충청권        | (58)  | 1.7                     | 8.6               | 82.8          | 6.9               |
|          | 호남권        | (62)  | 0.0                     | 6.5               | 87.1          | 6.5               |
|          | 대경권        | (30)  | 0.0                     | 10.0              | 80.0          | 10.0              |
|          | 동남권        | (32)  | 0.0                     | 3.1               | 93.8          | 3.1               |
|          | 강원·제주권     | (19)  | 0.0                     | 10.5              | 84.2          | 5.3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0.0                     | 6.4               | 85.6          | 8.0               |
|          | 이전         | (76)  | 1.3                     | 9.2               | 85.5          | 3.9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10.7              | 82.1          | 7.1               |
|          | 2015~2019년 | (63)  | 0.0                     | 9.5               | 87.3          | 3.2               |
|          | 2020년 이후   | (110) | 0.9                     | 5.5               | 85.5          | 8.2               |

○ (연구개발직) 연구개발직은 ‘동종업계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대부분인 85.1%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7.5%,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6.5%로 도출
- 호남권, 동남권 소재 업체는 연구개발직의 근로시간 수준에 대해 ‘동종업계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90%를 상회

〈표 5-77〉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br>매우 낮은<br>편이다 | 동종업계 대비<br>낮은 편이다 | 동종업계와<br>유사하다 | 동종업계 대비<br>높은 편이다 |
|----------|------------|-------|-------------------------|-------------------|---------------|-------------------|
| 전 체      |            | (201) | 1.0                     | 7.5               | 85.1          | 6.5               |
| 지역       | 충청권        | (58)  | 3.4                     | 10.3              | 79.3          | 6.9               |
|          | 호남권        | (62)  | .0                      | 4.8               | 90.3          | 4.8               |
|          | 대경권        | (30)  | .0                      | 10.0              | 80.0          | 10.0              |
|          | 동남권        | (32)  | .0                      | 3.1               | 90.6          | 6.3               |
|          | 강원·제주권     | (19)  | .0                      | 10.5              | 84.2          | 5.3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0                      | 6.4               | 84.8          | 8.8               |
|          | 이전         | (76)  | 2.6                     | 9.2               | 85.5          | 2.6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3.6                     | 7.1               | 85.7          | 3.6               |
|          | 2015~2019년 | (63)  | .0                      | 11.1              | 85.7          | 3.2               |
|          | 2020년 이후   | (110) | .9                      | 5.5               | 84.5          | 9.1               |

□ 월평균 정규 근로 외 시간

- 지방투자 사업장의 1인당 월평균 정규 근로 외 초과 근로시간은 생산직이 13.3시간으로 가장 많고, 사무·영업직과 연구개발직은 각각 5.2시간
- 지방투자 사업장의 1인당 월평균 주말·휴일 근로시간은 생산직이 6.9시간으로 가장 많고, 사무·영업직은 2.2시간으로 파악
- 지방투자 사업장의 1인당 월평균 심야 근로(22시 이후) 시간은 생산직이 6.5시간으로 가장 많고, 사무·영업직 2.5시간으로 파악됨
- 연구개발직은 주말·휴일 근로 및 심야 근로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5-78〉 월평균 정규 근로 외 시간

(단위: 시간)

|          |            | 사례 수  | 1인당 월평균<br>정규 근로 외<br>초과 근로시간 |            |           | 1인당 월평균<br>주말·휴일 근로시간 |            |           | 1인당 월평균<br>심야 근로<br>(22시 이후) 시간 |            |           |
|----------|------------|-------|-------------------------------|------------|-----------|-----------------------|------------|-----------|---------------------------------|------------|-----------|
|          |            |       | 생산<br>직                       | 사무·<br>영업직 | 연구<br>개발직 | 생산<br>직               | 사무·<br>영업직 | 연구<br>개발직 | 생산<br>직                         | 사무·<br>영업직 | 연구<br>개발직 |
| 전 체      |            | (201) | 13.3                          | 5.2        | 5.2       | 6.9                   | 2.2        | 0.0       | 6.5                             | 2.5        | 0.0       |
| 지역       | 충청권        | (58)  | 17.8                          | 7.2        | 9.1       | 9.6                   | 4.2        | 0.0       | 8.6                             | 4.4        | 0.1       |
|          | 호남권        | (62)  | 9.5                           | 3.4        | 3.4       | 4.4                   | 1.3        | 0.1       | 4.1                             | 1.8        | 0.0       |
|          | 대경권        | (30)  | 13.3                          | 4.8        | 3.7       | 6.5                   | 1.5        | 0.0       | 7.1                             | 1.4        | 0.0       |
|          | 동남권        | (32)  | 15.8                          | 6.3        | 5.7       | 9.6                   | 2.0        | 0.0       | 8.3                             | 1.8        | 0.0       |
|          | 강원·제주권     | (19)  | 7.8                           | 3.3        | 1.3       | 2.7                   | .8         | 0.1       | 3.9                             | 1.8        | 0.0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6.4                          | 4.7        | 5.4       | 9.1                   | 1.6        | 0.0       | 8.5                             | 1.5        | 0.0       |
|          | 이전         | (76)  | 8.3                           | 5.9        | 5.0       | 3.3                   | 3.2        | 0.0       | 3.2                             | 4.1        | 0.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4.0                           | 2.2        | 1.4       | 2.5                   | 0.5        | 0.0       | 2.0                             | 2.1        | 0.0       |
|          | 2015~2019년 | (63)  | 12.8                          | 7.8        | 6.6       | 5.3                   | 4.0        | 0.0       | 5.0                             | 4.7        | 0.0       |
|          | 2020년 이후   | (110) | 16.0                          | 4.4        | 5.4       | 8.9                   | 1.6        | 0.1       | 8.5                             | 1.3        | 0.1       |

□ 연차별 퇴사율

- (생산직) 지방투자 사업장의 생산직 연차별 퇴사율은 '1년차 미만'이 평균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무·영업직, 연구개발직 등 타 직종 대비 매우 높은 수준
- '2년차 미만' 퇴사율 평균은 11.6%이며, '3년차 미만', '3년차 이상'

퇴사율 평균은 5% 수준으로 유사

- (사무·영업직) '1년차 미만'이 평균 15.8%로 가장 높으며, '3년차 이상'인 경우가 9.4%로 높으며, '2년차 미만' 퇴사율 평균은 8.6%, '3년차 미만' 퇴사율 평균은 4.0%의 순으로 도출
- (연구개발직) '1년차 미만'이 평균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생산직과 사무·영업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1년차 미만'의 퇴사율은 낮은 편

〈표 5-79〉 생산직 평균 퇴사율

(단위: %)

|          |            | 사례 수  | 1년차 미만<br>평균 | 2년차 미만<br>평균 | 3년차 미만<br>평균 | 3년차 이상<br>평균 |
|----------|------------|-------|--------------|--------------|--------------|--------------|
| 전 체      |            | (201) | 29.9         | 11.6         | 5.0          | 4.9          |
| 지역       | 충청권        | (58)  | 28.1         | 11.9         | 6.5          | 6.4          |
|          | 호남권        | (62)  | 31.7         | 12.8         | 5.9          | 6.7          |
|          | 대경권        | (30)  | 33.3         | 11.7         | 4.5          | 1.8          |
|          | 동남권        | (32)  | 28.8         | 9.9          | 2.2          | 1.8          |
|          | 강원·제주권     | (19)  | 25.3         | 9.1          | 3.7          | 4.8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32.4         | 12.5         | 4.7          | 4.2          |
|          | 이전         | (76)  | 25.6         | 10.0         | 5.7          | 6.0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32.3         | 11.9         | 5.5          | 1.4          |
|          | 2015~2019년 | (63)  | 23.0         | 10.7         | 6.3          | 7.0          |
|          | 2020년 이후   | (110) | 33.2         | 12.0         | 4.2          | 4.6          |

〈표 5-80〉 사무·영업직 평균 퇴사율

(단위: %)

|          |            | 사례 수  | 1년차 미만<br>평균 | 2년차 미만<br>평균 | 3년차 미만<br>평균 | 3년차 이상<br>평균 |
|----------|------------|-------|--------------|--------------|--------------|--------------|
| 전 체      |            | (201) | 15.8         | 8.6          | 4.0          | 9.4          |
| 지역       | 충청권        | (58)  | 15.9         | 8.8          | 4.8          | 8.1          |
|          | 호남권        | (62)  | 15.4         | 9.1          | 4.2          | 11.3         |
|          | 대경권        | (30)  | 14.5         | 10.9         | 1.7          | 11.5         |
|          | 동남권        | (32)  | 17.1         | 5.5          | 5.0          | 4.7          |
|          | 강원·제주권     | (19)  | 17.3         | 8.6          | 3.6          | 11.5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8.0         | 8.0          | 4.4          | 7.9          |
|          | 이전         | (76)  | 12.3         | 9.6          | 3.5          | 11.8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14.8         | 10.4         | 2.9          | 15.7         |
|          | 2015~2019년 | (63)  | 14.0         | 7.4          | 4.0          | 10.1         |
|          | 2020년 이후   | (110) | 17.2         | 8.9          | 4.4          | 7.3          |

〈표 5-81〉 연구개발직 평균 퇴사율

(단위: %)

|          |            | 사례 수  | 1년차 미만<br>평균 | 2년차 미만<br>평균 | 3년차 미만<br>평균 | 3년차 이상<br>평균 |
|----------|------------|-------|--------------|--------------|--------------|--------------|
| 전 체      |            | (201) | 9.1          | 4.7          | 3.6          | 5.2          |
| 지역       | 충청권        | (58)  | 15.8         | 6.3          | 2.9          | 6.3          |
|          | 호남권        | (62)  | 4.3          | 5.5          | 4.4          | 7.5          |
|          | 대경권        | (30)  | 7.8          | 5.1          | 0.2          | 0.2          |
|          | 동남권        | (32)  | 11.6         | 0.9          | 3.7          | 1.8          |
|          | 강원·제주권     | (19)  | 2.0          | 2.9          | 8.3          | 7.7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9.7          | 4.6          | 4.5          | 5.1          |
|          | 이전         | (76)  | 8.1          | 4.9          | 2.1          | 5.3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5.0          | 3.9          | 1.1          | 1.1          |
|          | 2015~2019년 | (63)  | 9.9          | 2.5          | 3.5          | 6.9          |
|          | 2020년 이후   | (110) | 9.7          | 6.2          | 4.3          | 5.2          |

#### □ 근로자 교육훈련 수준

- (생산직) 지방투자 사업장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 수준은 생산직의 경우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는 응답 비중이 76.6%
  - 다음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준이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2.9%로 높게 도출
    - \* 동남권 소재 업체는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타지역 대비 높으며, 대경권 소재 업체는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80~95%)’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타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 (사무·영업직)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68.2%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80~95%)’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6.9%로,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105~120%)’이라고 응답한 비중 10.0%보다 다소 높게 도출됨
    - \* 동남권,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는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는 응답 비중이 75%를 상회하여 타지역 대비 다소 높게 도출
- (연구개발직) 연구개발직은 ‘동종업계와 유사(95~105%)’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65.7%

- 연구개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준 또한 사무·영업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80~95%)'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5.9%로 다소 높게 도출됨

\* 호남권 소재 업체는 교육훈련 수준에 대해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80~95%)'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타지역 대비 다소 높게 도출됨

〈표 5-82〉 생산직 근로자 교육훈련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80%)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80~95%)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95~105%)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105~120%) |
|-------|------------|-------|--------------------------|-------------------------|----------------------|---------------------------|
| 전 체   |            | (201) | 2.5                      | 8.0                     | 76.6                 | 12.9                      |
| 지역    | 충청권        | (58)  | 1.7                      | 8.6                     | 81.0                 | 8.6                       |
|       | 호남권        | (62)  | 6.5                      | 8.1                     | 71.0                 | 14.5                      |
|       | 대경권        | (30)  | 0.0                      | 13.3                    | 76.7                 | 10.0                      |
|       | 동남권        | (32)  | 0.0                      | 6.3                     | 75.0                 | 18.8                      |
|       | 강원·제주권     | (19)  | 0.0                      | 0.0                     | 84.2                 | 15.8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1.6                      | 9.6                     | 74.4                 | 14.4                      |
|       | 이전         | (76)  | 3.9                      | 5.3                     | 80.3                 | 10.5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3.6                      | 3.6                     | 75.0                 | 17.9                      |
|       | 2015~2019년 | (63)  | 1.6                      | 6.3                     | 84.1                 | 7.9                       |
|       | 2020년 이후   | (110) | 2.7                      | 10.0                    | 72.7                 | 14.5                      |

〈표 5-83〉 사무·영업직 근로자 교육훈련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80%)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80~95%)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95~105%)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105~120%)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120%~) |
|-------|------------|-------|--------------------------|-------------------------|----------------------|---------------------------|---------------------------|
| 전 체   |            | (201) | 2.0                      | 16.9                    | 68.2                 | 10.0                      | 3.0                       |
| 지역    | 충청권        | (58)  | 1.7                      | 19.0                    | 69.0                 | 10.3                      | 0.0                       |
|       | 호남권        | (62)  | 4.8                      | 22.6                    | 58.1                 | 8.1                       | 6.5                       |
|       | 대경권        | (30)  | 0.0                      | 16.7                    | 73.3                 | 6.7                       | 3.3                       |
|       | 동남권        | (32)  | 0.0                      | 9.4                     | 75.0                 | 12.5                      | 3.1                       |
|       | 강원·제주권     | (19)  | 0.0                      | 5.3                     | 78.9                 | 15.8                      | 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0.8                      | 16.0                    | 69.6                 | 9.6                       | 4.0                       |
|       | 이전         | (76)  | 3.9                      | 18.4                    | 65.8                 | 10.5                      | 1.3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3.6                      | 10.7                    | 67.9                 | 14.3                      | 3.6                       |
|       | 2015~2019년 | (63)  | 1.6                      | 17.5                    | 71.4                 | 9.5                       | 0.0                       |
|       | 2020년 이후   | (110) | 1.8                      | 18.2                    | 66.4                 | 9.1                       | 4.5                       |

〈표 5-84〉 연구개발직 근로자 교육훈련 수준

(단위: %)

|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80%)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80~95%)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95~105%)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105~120%)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120%~) |
|-------|------------|-------|--------------------------|-------------------------|----------------------|---------------------------|---------------------------|
| 전 체   |            | (201) | 2.0                      | 15.9                    | 65.7                 | 13.4                      | 3.0                       |
| 지역    | 충청권        | (58)  | 1.7                      | 17.2                    | 70.7                 | 10.3                      | 0.0                       |
|       | 호남권        | (62)  | 4.8                      | 22.6                    | 54.8                 | 11.3                      | 6.5                       |
|       | 대경권        | (30)  | 0.0                      | 16.7                    | 63.3                 | 16.7                      | 3.3                       |
|       | 동남권        | (32)  | 0.0                      | 9.4                     | 75.0                 | 12.5                      | 3.1                       |
|       | 강원·제주권     | (19)  | 0.0                      | 0.0                     | 73.7                 | 26.3                      | 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0.8                      | 16.8                    | 66.4                 | 12.0                      | 4.0                       |
|       | 이전         | (76)  | 3.9                      | 14.5                    | 64.5                 | 15.8                      | 1.3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3.6                      | 7.1                     | 60.7                 | 25.0                      | 3.6                       |
|       | 2015~2019년 | (63)  | 1.6                      | 14.3                    | 71.4                 | 12.7                      | 0.0                       |
|       | 2020년 이후   | (110) | 1.8                      | 19.1                    | 63.6                 | 10.9                      | 4.5                       |

#### □ 교육훈련 시간 및 지원 정도

-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교육훈련은 62.2%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을 보장하는 경우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1년 중 6.7일
  - 호남권 업체는 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1년 중 9.5일로 타지역 대비 높게 도출됨
  - 평균 교육훈련 비용 지원 비중은 대부분 94.1%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남권 소재 업체는 평균 교육훈련 비용 지원 비중이 99.0%에 달함

〈표 5-85〉 교육훈련 시간 및 지원 정도

(단위: %, 일)

|       |            | 사례 수  | 지원 여부 |       | 사례 수(지원 하는 경우) | 지원 시간 및 비용 |          |
|-------|------------|-------|-------|-------|----------------|------------|----------|
|       |            |       | 지원함   | 해당 없음 |                | 시간(일)      | 비용 지원 비중 |
| 전 체   |            | (201) | 62.2  | 37.8  | (125)          | 6.7        | 94.1     |
| 지역    | 충청권        | (58)  | 62.1  | 37.9  | (36)           | 5.8        | 93.1     |
|       | 호남권        | (62)  | 59.7  | 40.3  | (37)           | 9.5        | 93.2     |
|       | 대경권        | (30)  | 66.7  | 33.3  | (20)           | 5.9        | 91.8     |
|       | 동남권        | (32)  | 65.6  | 34.4  | (21)           | 5.1        | 99.0     |
|       | 강원·제주권     | (19)  | 57.9  | 42.1  | (11)           | 4.5        | 95.5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67.2  | 32.8  | (84)           | 6.9        | 94.0     |
|       | 이전         | (76)  | 53.9  | 46.1  | (41)           | 6.1        | 94.4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39.3  | 60.7  | (11)           | 4.7        | 95.5     |
|       | 2015~2019년 | (63)  | 65.1  | 34.9  | (41)           | 7.9        | 92.6     |
|       | 2020년 이후   | (110) | 66.4  | 33.6  | (73)           | 6.2        | 94.8     |

□ 교육훈련 생산성 향상 도움 정도

- 근로자 교육훈련 보장과 근로자들의 훈련 경험의 자사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조사한 결과, '소폭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저히 개선'된다는 응답 비중은 10.0%로, 교육훈련이 도움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현저히 개선+소폭 개선)은 절반을 상회하는 57.8%인 것으로 파악
- 반면, 교육훈련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비중 또한 39.3%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도 3.0%를 차지
  - 2015년 이전 완료 업체는 절반을 상회하는 53.6%가 교육훈련의 도움 정도를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하였고, 7.0%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

〈표 5-86〉 교육훈련 생산성 향상 도움 정도

(단위: %)

|       |            | 사례 수  | 현저히 개선 | 소폭 개선 | 잘 모르겠음 | 도움이 되지 않았음 |
|-------|------------|-------|--------|-------|--------|------------|
| 전 체   |            | (201) | 10.0   | 47.8  | 39.3   | 3.0        |
| 지역    | 충청권        | (58)  | 8.6    | 55.2  | 31.0   | 5.2        |
|       | 호남권        | (62)  | 8.1    | 40.3  | 46.8   | 4.8        |
|       | 대경권        | (30)  | 13.3   | 46.7  | 40.0   | 0.0        |
|       | 동남권        | (32)  | 9.4    | 53.1  | 37.5   | 0.0        |
|       | 강원·제주권     | (19)  | 15.8   | 42.1  | 42.1   | 0.0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9.6    | 52.8  | 36.0   | 1.6        |
|       | 이전         | (76)  | 10.5   | 39.5  | 44.7   | 5.3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0.0    | 39.3  | 53.6   | 7.1        |
|       | 2015~2019년 | (63)  | 12.7   | 49.2  | 33.3   | 4.8        |
|       | 2020년 이후   | (110) | 10.9   | 49.1  | 39.1   | 0.9        |

마. 지방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

□ 지방투자 지원 현황

- (지방투자 지원 내용) 지방투자 시 지원받은 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

- 업체의 97.0%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지·설비 보조)’이라고 응답
-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 2015년 이전 완료 업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지·설비 보조)’을 지원받은 비중이 100%로 도출
  - 그 외 지방투자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 비중이 저조하게 나타남

〈표 5-87〉 지방투자 지원 내용(복수응답)

(단위 : %)

|          |            | 사례 수  | 지방투자<br>촉진보조금<br>(입지·<br>설비 보조) | 조세감면<br>(법인세,<br>재산세) | 신속한<br>행정처리 | 입지지원<br>(국공유지<br>수익계약<br>및 임대료<br>감면) | 투자정보<br>제공 및<br>컨설팅 | 기타  |
|----------|------------|-------|---------------------------------|-----------------------|-------------|---------------------------------------|---------------------|-----|
| 전 체      |            | (201) | 97.0                            | 10.0                  | 5.5         | 2.5                                   | 1.5                 | 5.5 |
| 지역       | 충청권        | (58)  | 96.6                            | 6.9                   | 5.2         | 3.4                                   | 0.0                 | 1.7 |
|          | 호남권        | (62)  | 98.4                            | 11.3                  | 3.2         | 0.0                                   | 3.2                 | 8.1 |
|          | 대경권        | (30)  | 96.7                            | 16.7                  | 6.7         | 0.0                                   | 0.0                 | 6.7 |
|          | 동남권        | (32)  | 93.8                            | 6.3                   | 6.3         | 9.4                                   | 3.1                 | 6.3 |
|          | 강원·제주권     | (19)  | 100.0                           | 10.5                  | 10.5        | 0.0                                   | 0.0                 | 5.3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97.6                            | 7.2                   | 5.6         | 2.4                                   | 0.8                 | 5.6 |
|          | 이전         | (76)  | 96.1                            | 14.5                  | 5.3         | 2.6                                   | 2.6                 | 5.3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100.0                           | 7.1                   | 3.6         | 0.0                                   | 3.6                 | 0.0 |
|          | 2015~2019년 | (63)  | 93.7                            | 11.1                  | 6.3         | 3.2                                   | 1.6                 | 9.5 |
|          | 2020년 이후   | (110) | 98.2                            | 10.0                  | 5.5         | 2.7                                   | 0.9                 | 4.5 |

- (지방투자 수혜 실적) 최근 3년간 지방투자사업과 연관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의 수혜 실적을 조사한 결과, 총 322건에 금액 기준 7,129억 3천 3백만 원 규모로 파악
  - 가장 수혜 실적이 큰 지원사업은 ‘투자보조금 등 재정지원’으로 242건에 금액 기준 7,009억 3천 6백만 원 규모
  - ‘세제 지원’은 19건에 금액 기준 42억 9천 7백만 원 규모이며, ‘연구개발 사업지원’은 39건에 금액 기준 35억 1천 8백만 원 규모
- (지방투자 지원사업 수혜 경로) 정부의 지방투자 지원사업 수혜 경로에 대한 조사에서는 절반 정도인 52.2%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보물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이라고 응답

〈표 5-88〉 지방투자 수혜 실적 합계

(단위: 건, 백만 원)

|          |            | 사례 수  | 투자보조금 등<br>재정지원 |         | 세제 지원 |       | 연구개발<br>사업지원 |       | 전 체 |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전 체      |            | (201) | 242             | 700,936 | 19    | 4,297 | 39           | 3,518 | 322 | 712,933 |
| 지역       | 충청권        | (58)  | 76              | 150,448 | 2     | 30    | 2            | 270   | 82  | 150,772 |
|          | 호남권        | (62)  | 68              | 266,009 | 10    | 1,235 | 26           | 472   | 109 | 270,113 |
|          | 대경권        | (30)  | 39              | 77,061  | 6     | 3,020 | 6            | 2,430 | 61  | 82,576  |
|          | 동남권        | (32)  | 36              | 164,859 | 1     | 12    | 4            | 338   | 41  | 165,209 |
|          | 강원·제주권     | (19)  | 23              | 42,559  | .     | .     | 1            | 8     | 29  | 44,263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152             | 497,009 | 16    | 4,217 | 33           | 2,570 | 220 | 507,858 |
|          | 이전         | (76)  | 90              | 203,927 | 3     | 80    | 6            | 948   | 102 | 205,075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34              | 75,351  | 1     | 50    | .            | .     | 35  | 75,401  |
|          | 2015~2019년 | (63)  | 75              | 135,352 | 7     | 3,030 | 25           | 354   | 116 | 140,474 |
|          | 2020년 이후   | (110) | 133             | 490,233 | 11    | 1,217 | 14           | 3,164 | 171 | 497,058 |

- 지방이전 업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보물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0%를 상회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별 접촉 및 권유에 따라 신청'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4%로 도출
- (지방투자 지원과정 애로사항)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신청과정에서의 행정 준비'가 1순위 기준 44.8%, 1+2순위 기준 67.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표 5-89〉 지방투자 지원사업 수혜 경로(복수응답)

(단위: %)

|          |            | 사례 수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보물을 참고하여 귀사가 직접 신청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별접촉 및 권유에 따라 신청 | 지원 경험이나 정보를 알고 있는 유관 기업 혹은 귀사가 속한 조합 등의 기업단체 통해 소개받고 신청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혹은 공공지원기관 등의 설명회를 통해 신청 |
|----------|------------|-------|----------------------------------|------------------------------------|---------------------------------------------------------|-------------------------------------|
| 전 체      |            | (201) | 52.2                             | 21.4                               | 14.4                                                    | 11.4                                |
| 지역       | 충청권        | (58)  | 55.2                             | 19.0                               | 15.5                                                    | 10.3                                |
|          | 호남권        | (62)  | 46.8                             | 22.6                               | 16.1                                                    | 14.5                                |
|          | 대경권        | (30)  | 50.0                             | 33.3                               | 10.0                                                    | 6.7                                 |
|          | 동남권        | (32)  | 59.4                             | 12.5                               | 18.8                                                    | 9.4                                 |
|          | 강원·제주권     | (19)  | 52.6                             | 21.1                               | 5.3                                                     | 15.8                                |
| 지원<br>유형 | 신·증설       | (125) | 47.2                             | 23.2                               | 17.6                                                    | 12.0                                |
|          | 이전         | (76)  | 60.5                             | 18.4                               | 9.2                                                     | 10.5                                |
| 완료<br>시기 | 2015년 이전   | (28)  | 53.6                             | 21.4                               | 10.7                                                    | 10.7                                |
|          | 2015~2019년 | (63)  | 54.0                             | 14.3                               | 15.9                                                    | 17.5                                |
|          | 2020년 이후   | (110) | 50.9                             | 25.5                               | 14.5                                                    | 8.2                                 |

- 강원·제주권 소재 업체는 '신청과정에서 행정 준비'를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타지역 대비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정산과정에서 행정 준비' 또한 1순위 기준 17.9%, 1+2순위 기준 52.2%의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낸 결과를 볼 때, 지방투자 지원 시 발생하는 행정 준비가 기업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애로

〈표 5-90〉 지방투자 지원과정 애로사항(1순위)

(단위: %)

|       |            | 사례 수  | 신청 과정에서 행정 준비 | 정산과정에서 행정 준비 | 투자지원 관련 정보 구득의 어려움 | 분야별 담당 기관이 다른 것에 따른 행정 준비 및 추가적인 시간 소요 | 지원 자격의 제한 |
|-------|------------|-------|---------------|--------------|--------------------|----------------------------------------|-----------|
| 전 체   |            | (201) | 44.8          | 17.9         | 13.4               | 13.4                                   | 9.0       |
| 지역    | 충청권        | (58)  | 46.6          | 19.0         | 15.5               | 13.8                                   | 5.2       |
|       | 호남권        | (62)  | 38.7          | 12.9         | 16.1               | 19.4                                   | 11.3      |
|       | 대경권        | (30)  | 46.7          | 20.0         | 16.7               | 3.3                                    | 13.3      |
|       | 동남권        | (32)  | 43.8          | 21.9         | 6.3                | 15.6                                   | 9.4       |
|       | 강원·제주권     | (19)  | 57.9          | 21.1         | 5.3                | 5.3                                    | 5.3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40.8          | 20.0         | 15.2               | 12.8                                   | 8.8       |
|       | 이전         | (76)  | 51.3          | 14.5         | 10.5               | 14.5                                   | 9.2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53.6          | 17.9         | 7.1                | 14.3                                   | 7.1       |
|       | 2015~2019년 | (63)  | 47.6          | 9.5          | 7.9                | 19.0                                   | 14.3      |
|       | 2020년 이후   | (110) | 40.9          | 22.7         | 18.2               | 10.0                                   | 6.4       |

〈표 5-91〉 지방투자 지원과정 애로사항(1+2순위)

(단위: %)

|       |            | 사례 수  | 신청과정에서 행정 준비 | 정산과정에서 행정 준비 | 분야별 담당 기관이 다른 것에 따른 행정 준비 및 추가적인 시간 소요 | 지원 자격의 제한 | 투자지원 관련 정보 구득의 어려움 |
|-------|------------|-------|--------------|--------------|----------------------------------------|-----------|--------------------|
| 전 체   |            | (201) | 67.7         | 52.2         | 36.8                                   | 23.4      | 16.4               |
| 지역    | 충청권        | (58)  | 63.8         | 51.7         | 44.8                                   | 20.7      | 17.2               |
|       | 호남권        | (62)  | 67.7         | 45.2         | 41.9                                   | 24.2      | 19.4               |
|       | 대경권        | (30)  | 66.7         | 66.7         | 23.3                                   | 26.7      | 16.7               |
|       | 동남권        | (32)  | 65.6         | 50.0         | 28.1                                   | 34.4      | 12.5               |
|       | 강원·제주권     | (19)  | 84.2         | 57.9         | 31.6                                   | 5.3       | 10.5               |
| 지원 유형 | 신·증설       | (125) | 63.2         | 53.6         | 34.4                                   | 25.6      | 19.2               |
|       | 이전         | (76)  | 75.0         | 50.0         | 40.8                                   | 19.7      | 11.8               |
| 완료 시기 | 2015년 이전   | (28)  | 82.1         | 60.7         | 32.1                                   | 14.3      | 10.7               |
|       | 2015~2019년 | (63)  | 68.3         | 46.0         | 39.7                                   | 28.6      | 11.1               |
|       | 2020년 이후   | (110) | 63.6         | 53.6         | 36.4                                   | 22.7      | 20.9               |

## 2. 실태조사 분석 결과종합 및 시사점

### □ 지방투자의 현황과 경향성

- (조사 대상의 대표성) 지방투자 응답 기업은 중소기업 82.1%, 대기업 2%이며, 업체 평균 고용은 30~100인이 48.8%를 차지
  - 국내 전체 기업의 모집단 규모별 분포와 비교하여 대기업 비중이 크고 업체당 평균 고용도 많지만, 현행 제도상 진입 요건을 고려한다면, 기업 규모 측면에서 조사 대상 표본으로서의 대표성은 가진 것으로 판단
  - 대기업 비중은 두 배 정도 크게 나타났는데, 보조금 자격요건-심사의 문턱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준
  - 종사자 규모 분포를 비교해도 모집단 조사의 고용 규모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사업장 및 신규 투자 사업장의 최소 고용 규모에 대한 요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은 기존 및 신규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지방 신·증설’은 기존 및 신규사업장 상시고용 10인 이상

〈표 5-92〉 기업규모별 기업현황

(단위: 개, %)

|     |      | 2020    |       | 2021    |       |
|-----|------|---------|-------|---------|-------|
|     |      | 활동기업 수  | 비율    | 활동기업 수  | 비율    |
| 전 체 | 대기업  | 3,288   | 0.9   | 3,778   | 0.9   |
|     | 중견기업 | 5,220   | 1.4   | 5,228   | 1.2   |
|     | 중소기업 | 357,641 | 97.7  | 409,380 | 97.8  |
|     | 전체   | 366,149 | 100.0 | 418,386 | 100.0 |
| 제조업 | 대기업  | 601     | 0.9   | 677     | 0.9   |
|     | 중견기업 | 1,948   | 2.9   | 1,970   | 2.8   |
|     | 중소기업 | 64,069  | 96.2  | 68,767  | 96.3  |
|     | 전체   | 66,618  | 100.0 | 71,414  | 100.0 |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표 5-93〉 종사자규모별 기업현황

(단위: 개, %)

| 산업         | 종사자규모별   | 2019   |       |
|------------|----------|--------|-------|
|            |          | 기업체 수  | 비중    |
| 제조업(10~34) | 전 체      | 65,808 | 100.0 |
|            | 10~19인   | 34,340 | 52.2  |
|            | 20~99인   | 27,528 | 41.8  |
|            | 50~99인   | 5,738  | 8.7   |
|            | 100~299인 | 3,139  | 4.8   |
|            | 300인 이상  | 801    | 1.2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거래 관계) 구입처 및 판매처 등 거래 관계 조사 결과, 절대적으로는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지만, 구매와 판매 간 비교에서는 구매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판매는 대기업과 관계 형성
  -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구조가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투자보조금 수혜 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에 속하므로, B2B 사업구조 비중이 큰 것을 시사
  - 조사 응답 업체가 실제 지방투자기업 간 거래 관계를 어느 정도 모사하는 것으로 판단
- (투자 사업장 공간 현황) 면적 기준으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증설 투자보다 투자 사업장 면적이 커지는 것은 이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
  - 특히 충청권의 투자 면적이 높게 나타나, 충청권의 입지 수급 및 수요가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투자 입지 선호도) 투자의사 결정 시 입지 유형의 인식 질문에 계획 입지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동종산업 집적지와 개별 입지 선호도는 낮은 수준
  - 다만 동남권·호남권과 같이 특정 산업에 대한 특화도가 높은 권역 소재 기업은 동종산업 집적지로 인식한 경우가 높게 나타남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투자 유형은 개별 입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종산업 집적지 이전은 낮은 반면, 신·증설 투자는 동종산업 집적지 투자가 우세

○ (투자 규모 현황) 신규투자가 기존 사업 확장 개념에 가까운 신·증설은 클러스터 입지 유인이 크며, 이전 투자는 규모도 크고 굳이 동종산업의 집적이 아니더라도 입지의 수급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추론 가능

- 투자 규모에서도 설비투자는 신·증설 대비 이전 투자가 9배, 부지매입 투자 16배를 상회하여 총투자는 9.5배로 상당한 투자 규모의 차이를 현시

#### □ 지방투자의 결정 요인과 애로사항

○ (지방투자의 Push factor) 5점 척도의 점수를 종합·비교 시, 아래의 순서로 나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투자유치의 노력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

〈표 5-94〉 Push factor 요인별 중요도

(단위 : %)

| 지방투자 동기(Push)    | 5점 척도 | 중요   |
|------------------|-------|------|
| 정책지원, 투자유치 지원 수단 | 4.30  | 86.1 |
| 설비 확대·개선         | 4.00  | 70.6 |
| 입지 비용 절감         | 3.92  | 68.2 |
| 신사업 다각화          | 3.85  | 63.7 |
| 물류·시간 비용         | 3.78  | 62.2 |
| 높은 임금            | 3.52  | 50.7 |
| 협업기업의 이전 및 투자 요구 | 3.35  | 46.8 |

- 조사 결과는 알려진 기업투자의 의사결정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지원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나 정책 수혜자 대상의 조사이므로 개별 해석 또는 관계 규명 시 고려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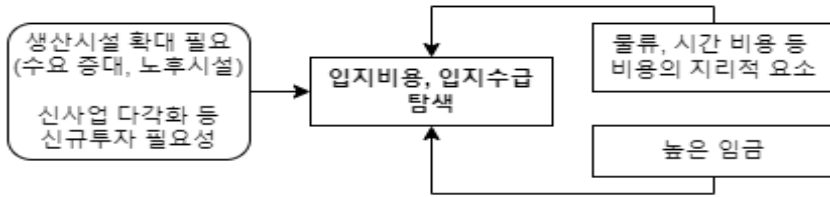
- 지방투자 결정의 최대요인은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을 확대하거나, 신사업의 진출, 다각화 등 자체적인 사업계획의 전망에 기인

- 일단 신규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가장 크게 단기적으로 소요되는 투자 비용 항목인 입지 비용을 고려하여 탐색을 시작

- 기존 사업지의 물류 비용과 입지 비용이 지방투자에 있어 어느 정도 중요(60% 초과)하지만, 기존 사업지의 임금 중요도는 중립적

- 종합하면 입지·임금·물류 등 요소비용보다 설비 확대 필요성이 높으므로, 기업의 투자 결정은 먼저 지방투자의 지원 수단 부존 여부와 사업적 필요성(설비 확대, 사업계획)에 의한 기존 입지 이탈 유인에서 기인

[그림 5-2] 지방투자의 결정 단계(이출)



- (지방투자의 Pull factor) 지방투자 대상 지역을 선택하는 요인인 Pull factor에서도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투자유치의 노력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

〈표 5-95〉 Pull factor 요인별 중요도(종합)

(단위: %)

| 지방투자 동기(Pull) | 5점 척도 | 중요함+매우 중요함 |
|---------------|-------|------------|
| 지자체 노력        | 4.12  | 83.6       |
| 부지확보 용이성·지대   | 4.08  | 77.6       |
| 정주여건          | 3.64  | 55.2       |
| 운송비용          | 3.62  | 54.7       |
| 노동시장 근접성      | 3.58  | 54.7       |
| 협력업체 및 기술 집적  | 3.53  | 51.7       |
| 임금            | 3.46  | 44.8       |
| 배후시장 근접성      | 3.39  | 44.3       |

- 신규 투자 입지를 결정하는 데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부지의 수급 및 지대이며, 정주여건·운송비용·노동시장의 근접성 등이 유사
- 현재 지역의 매력 요인으로 '부지확보 용이성 및 지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여타 요인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대경권 입지의 주

#### 요 요인으로 파악

- 임금보다 운송비용이 입지 결정에 비교적 더 크게 작용하나, 호남권 입지 기업은 임금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협력업체 집적 등 클러스터 요인으로 보이는 부문에 대해 전체 중요 응답은 중립적이나, 대경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임
  - 정주여건 중요도도 중립적이며, 호남·대경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지방투자의 애로 요인) 지방투자 애로 요인으로 인력확보 부문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규제
- 근로자 이탈 및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업에 적합한 지역 내 고급인력의 부족이 다음 순

#### □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규모와 구성) 지방투자 후 고용 규모는 1.16배 증가하였으며, 지방투자 전후 전체 정규직으로 구성된 사업장 비중은 평균 80%에 육박하고, 80~90%를 유지하는 사업장 비중은 오히려 증가
- 직종별 비중은 지방투자 전후 변화가 크지 않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숙련 구성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20·30대 연령대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신규 투자 사업장 개설에 의한 신규 채용, 이전에 따르는 퇴직 등으로 인력 재구조화가 일부 발현
  - 다만, 인력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외국인 인력 비중의 증가도 확인
- (신규 고용 현황 및 인력 수급 경로) 생산직 신규 고용이 평균 28.7명, 사무·영업직은 7.5명, 연구개발직은 2.9명으로 조사
- 생산직의 신규 고용 평균 비중이 가장 높으며, 신규 입직이 최다 입직 경로로, 역내 채용이 절반 정도로 가장 높은 채용경로임을 보여줌
  - 직종별로 연구개발 인력은 신규 입직보다 동종업체 이직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유일하게 절반 미만 인력이 역내 채용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방투자 시 고급인력의 신규 입직-역내 수급이 어려움을 보여줌

- (계획 대비 달성률과 애로사항) 고용계획 대비 현재 고용 달성률은 업체 유형과 무관하게 90% 이상의 고용 달성률을 보인 가운데, 주요 달성률 제고의 애로사항으로 노동력 수급이라고 응답
- (이직 현황) 생산직 이직은 업체당 평균 9.2명(신규 고용 28.7명 대비 32%), 사무·영업직은 2.8명(신규 고용 7.5명 대비 37.3%), 연구개발직은 1.1명(신규 고용 2.9명 대비 37.9%)
  - 전반적으로 동종업계 이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신규 고용 대비 가장 이출이 많은 직종은 연구개발직이며, 대부분 타지역 이출
- (채용의 애로사항) 채용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직군은 단순생산직 > 생산 기술직 > 연구개발직 순이며 지역별로는 상대적 격차 발생
  - 고속권 직종 구인의 어려움만큼 적정 규모의 생산직 충원 역시 상당한 애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만 지역별로 대경권과 같이 특별히 고속권 직종 충원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등 지역별 격차가 뚜렷
  - 전공계열 별로는 '대졸(이공계)', '전문대졸(이공계)', '고졸(이공계)'로 나타나 이공계 채용에 어려움 확인
  - 이러한 애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서 입지 요인(교통, 접근성)이 가장 높았으며, 근로자 임금 수준이 다음으로 중요
- (사업주의 근로자 만족도) 사업주의 직종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생산직이 가장 낮았으며, 사무·영업직, 연구개발직 순으로, 생산직의 채용 어려움과 낮은 만족도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 □ 지방투자 일자리의 질적 평가

- (임금 수준) 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
  - 반면 지방투자기업 근로자 중 생산직은 그 외 직종과 동종업계 대비 임금 수준에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복리후생) 복리후생 수준은 동종업계 대비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숙련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낮게 평가되어 해당 수준에 복리후생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함을 현시

- 부문별 지원 여부는 건강검진 61.2%, 자녀교육비 47.3%, 식비 지원 95.5%, 교통비 지원 71.7%로 나타나, 가장 손쉽게 지원하는 복리 부 문은 식비와 교통비이며, 상당 기업이 건강검진을 지원
- 자녀교육비 중 중등·고등 교육 등록금 지원이 20%를 지원하고 지원 하지 않는 기업이 57.3%로 상당수 기업이 자녀교육비 미지원
-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동종업계 대비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나 근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생산직은 타 직종 대비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
- 월평균 정규 외 근로시간은 생산직이 13.3시간으로 가장 많고, 사무 · 영업직과 연구개발직은 각각 5.2시간

〈표 5-96〉 직종별 근로시간 비교응답 비중 종합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
|--------|-------|-------------------|----------------|------------|----------------|
| 생산직    | (201) | -                 | 5.5            | 85.1       | 9.5            |
| 사무·영업직 | (201) | 0.5               | 7.5            | 85.6       | 6.5            |
| 연구개발직  | (201) | 1.0               | 7.5            | 85.1       | 6.5            |

- (연차별 퇴사율) 1년차 미만 퇴사율 기준 생산직은 29.9%로 사무·영업 (15.8%), 연구개발(9.1%) 대비 상당히 높으며, 2년차 미만 퇴사율 기준 으로도 생산직이 11.6%로 가장 높음

〈표 5-97〉 직종별 연차별 퇴사율 종합

|        | 사례 수  | 1년차 미만 평균 | 2년차 미만 평균 | 3년차 미만 평균 | 3년차 이상 평균 |
|--------|-------|-----------|-----------|-----------|-----------|
| 생산직    | (201) | 29.9      | 11.6      | 5.0       | 4.9       |
| 사무·영업직 | (201) | 15.8      | 8.6       | 4.0       | 9.4       |
| 연구개발직  | (201) | 9.1       | 4.7       | 3.6       | 5.2       |

- (근로자 교육훈련 제공 수준) 전반적으로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수준에 대해서는 동종업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응답

- 다만, 동종업계 대비 낮다는 응답이 사무·영업직과 연구개발직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62.2%는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고,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6.7일, 교육비용은 94% 정도를 지원
- 여전히 교육훈련 미지원 기업이 37.8%로 상당하며, 지원하는 경우라도 연간 6.7일 교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
-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 역시 '잘 모르겠다'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

〈표 5-98〉 직종별 교육훈련수준 평가 종합

|        | 사례 수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80%)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80~95%)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95~105%)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105~120%) |
|--------|-------|--------------------------|-------------------------|----------------------|---------------------------|
| 생산직    | (201) | 2.5                      | 8.0                     | 76.6                 | 12.9                      |
| 사무·영업직 | (201) | 2.0                      | 16.9                    | 68.2                 | 10.0                      |
| 연구개발직  | (201) | 2.0                      | 15.9                    | 65.7                 | 13.4                      |

#### □ 지방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

- (수혜 실적·경로·애로사항) 지방투자보조금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대부분 보조금 수혜를 받은 가운데, 추가적으로 세제 지원은 9.4%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은 19.4%의 기업이 수혜
- 정부 지원 수혜 기업의 절반 정도인 52.2%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보물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이라고 응답하여, 실제로 수혜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탐색한 것으로 보임
  - 개별 접촉 및 권유(21.4%), 인접 기관 혹은 기업 알선(14.4%), 공공 설명회(11.4%)와 같이 공공의 지원 중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투자 촉진 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원 신청과정 애로사항은 '신청과정의 행정 준비'가 67.7%, '정산과 정 행정 준비'도 1+2순위 기준 52.2%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제2절 심층 인터뷰

### 1. 인터뷰 개요

#### □ 필요성

- 정책지원 대상의 특성에 따른 지방투자지원제도의 고용효과 차이를 파악하고, 유효한 정책 수단 및 정책 지원대상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또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방투자 지원 대상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동 제도가 목표로 하는 기대효과와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
  - 동 제도가 목표로 하는 혹은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유형(규모, 입지 형태, 업종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 도출

#### □ 조사 대상

- 심층 인터뷰 조사 대상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관련 사업 추진 주체인 관련 사업의 중앙부처 및 지방 공무원, 사업 집행을 맡고 있는 유관 기관 담당자, 비수도권 지역 관계자, 그리고 수혜를 받은 기업 또는 사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
  - 제도 운영 주체는 본 사업의 주관부처 공무원, 지역 담당 공무원,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등이 포함되며, 투자 주체는 지방투자 보조금 수령 기업이 포함
  - 투자 주체와 제도 운영 주체는 구분하여 면접하는 것이 실효적인 접근으로 보이며, 다만 지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광역권별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추진

〈표 5-99〉 심층 인터뷰 조사 대상 선정

(단위: 명)

|          | 소속                    | 대상 |
|----------|-----------------------|----|
| 제도 운영 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              | 2  |
|          | 중앙부처 담당자              | 2  |
|          | 지역 담당자(1명 · 5개 권역)    | 5  |
|          | 합계                    | 9  |
| 투자 주체    | 지역 기업 담당자(2명 · 5개 권역) | 10 |
|          | 합계                    | 10 |
| 전 체      |                       | 19 |

#### □ 조사 내용

- 인터뷰 조사는 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한 종합적인 시사점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내용적 틀은 유지하되 응답 문항에 구속받지 않도록 폭넓은 범위에서 기업 또는 기업 담당자가 답할 수 있도록 유도
  - 지방투자의 요인과 애로사항
  - 지방투자와 일자리
  - 지방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

#### □ 문항지 초안

#### ○ 부록 참조

## 2. 심층 인터뷰 결과

### 가. 지방투자의 요인과 애로사항

#### □ 지방투자 및 입지 결정 요인

- (지방투자의 결정) 사업 규모 확장 및 새로운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신 · 증설, 이전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며, 지원정책 수혜, 사업장 분산 효과, 규모의 이점 등을 기대하고 지방투자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 이전 투자는 기업 및 산업의 생애주기상 규모 확장에 대한 수요가 발

생하고 있지만 기존의 수도권 내 소재 공간 확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투자를 대부분 결정

- 신·증설 투자는 사업의 확장 또는 다각화 등으로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한 경우 주로 발생
  - 대지 확보의 용이성, 저렴한 임대료, 지가 등이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
  - 기존 사업장 대비 2배 이상의 확장된 규모를 유사한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장 이전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 이유
- (유형별 차이) 해당 지역에 기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연계 신·증설의 경우가 많으며, 이전은 여러 지역 후보지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경향
- 해당 지역에 추가로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권역 내 주요 거래처 및 해당 업종의 집적 지역 등에서 적절한 부지가 나왔을 때 신·증설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 본사는 수도권, 광역시 등 다른 지역에 두고 공장을 지방에 신·증설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방에서는 넓은 부지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함
- (투자 과정) 이전의 경우는 입지 가능 대안 지역을 선정하여 규모, 입주조건, 지자체 정책 등을 비교-결정하는 단계가 신·증설 대비 더 복잡하게 수행
- 기존 사업장의 활동 지역을 벗어나며 발생하는 위험 요소, 추가되는 비용 대비 혜택 등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필요
  - 본사 이전 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결정적 이유는 아니고, 본사와 공장의 인접 필요성, 예컨대 품질 관리, 연구개발이 근거리에서 요구되는 경우 본사 이전이 진행된다는 사례가 있음
- (입지 결정) 지방투자 입지 결정에 있어 지자체 정책뿐 아니라 투자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매우 중요
- 산업단지 내 집적 효과 등은 기본적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투자 조건을 검토하는 데 지자체의 적극성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
- \* 특정 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산업단지 투자 시에는 집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역마다 첨단 산업 관련 산업단지가 많아

어떤 지역을 갈 것인지가 관건이므로 어떤 산업 중심 산업단지를 선택할 것인지는 부차적인 사항

- 여러 지역 대안을 비교, 각 지역 담당자와 논의 중에 업체에 지속적인 관심을 주는 지자체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 사례가 있음
- 사업장이 희망하는 투자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입주

#### □ 지방투자 후의 애로사항

○ (인력확보) 지방투자 과정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근로자 이탈 및 인력확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생산직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

- 신·증설의 경우는 투자 지역에서 인력을 신규 충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목표 인력을 모두 충원한 사업장은 거의 없음
- 이전의 경우는 수도권-충청권 등의 이전에서 기존 인력의 상당수가 이전한 사례가 일부 발생했으며, 대부분 사례에서는 임원급 등 일부만 이전하고 근로자는 해당 지역에서 신규 충원하고 있음
- 지방투자 사업장이 대부분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생산직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같은 권역 내라도 특정 지역에 생산직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 예) 충남은 대기업 영향이 크고 교통 인프라가 좋은 천안, 아산 지역에 생산직이 몰려 있어서 서산, 당진 지역으로까지 유입되지 않아 같은 도 내에서도 ‘시’ 단위마다 인력난에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노동시장 규모가 한정적인 지역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과의 인력 유치 경쟁이 발생하여 인력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제시한 사례도 있음
- 인력 수급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가능한 업종의 경우 단순노무직은 자동화 설비를 통해 대체했거나, 대체할 계획에 있으나, 생산직 중 숙련이 필요한 전문직 생산 인력의 수급이 특히 힘들다는 반응이 있음
- 인력난이 예상되었다면 지방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례도 있지만, 3년 정도는 인력 문제로 애로를 겪었으나 3년 이후 안정

적으로 인력 채용 등이 이루어져 고용 목표 100%를 달성한 사례도 있음

- (주변 인프라) 주변 지역의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는 지방투자를 실행한 후에 체감하게 되며, 특히 젊은 층의 인력 이탈과 직결되는 사항
  - 정주 환경, 문화생활과 관련된 인프라는 단기간에 구축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생활해보니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됨
  - 인력의 이탈 문제는 임금도 영향을 미치지만 임금 수준을 높여도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은 부족한 인프라에서 기인한 바가 큰 상황
  - 다만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투자를 결정하였으며, 다른 기업이 순차적으로 입주하면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될 것으로는 기대
  - 식당, 편의점 등의 가장 기본적인 상업시설이 일부 구축되었으나, 그 외의 인프라는 수년째 구축되지 않고 있음
  - 정주 인프라 외 입주한 산업단지 환경 설비의 용량과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도 있음
- (그 외) 이미 지방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지역 및 소요 비용 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인력 외 애로사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
  - 지방투자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들도 많아서 정보량은 충분하며, 자금조달 또한 알아보면 가능한 경로가 많음

## 나. 지방투자와 일자리

### □ 고용의 규모 및 구성

- 지방투자 시 고용 목표 수준이 있으며 대부분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고 있음
  - 1년 내내 채용 공고를 올리지만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조차 많지 않은 실정이라는 사업장이 다수임
  - 지자체와 협의하에 지역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인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임

- 신규 충원된 직원의 퇴사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이 다수임
- 생산직의 경우 임금을 더 준다고 하는 공장이 있으면 바로 이직하는 경향이 특히 심하기 때문에 임금을 더 줄 수 없는 사업장은 구인 문제가 매우 심각함
- 충청권은 수도권과 가까워 인력이 수도권을 선호하므로 오히려 고용이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이 일부 도출됨
- 인근의 인력공급 주체가 부족하거나, 충남의 인터뷰 사례에 따르면, 있더라도 인접 노동시장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지방이전에 따라 기존 인력 대비 최소 30%는 이탈, 특히 생산직
  - 지방이전 시 동반 이주한 근로자의 경우 당장은 신설된 사업장 시설(안전, 업무환경)에 만족하나, 정주여건 및 수도권 대비 인프라(문화·여가) 부족으로 인한 불만 표출
  - 노동시장과의 인접성(금산-대전 사례)이 떨어지며, 인력을 수급하더라도 통근 시간(약 2시간) 증가
  - 규모 있는 투자가 인적자원 풀이 과소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노동력의 고갈 및 임금의 상승으로 추가로 입지할 수 있는 기업의 인력 접근성을 부족하게 함
- 고용 수준 미달은 근무 시간 연장으로 직결되며 근무 시간 연장은 근로자의 이탈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악순환의 반복)
  - 초과 근무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고용 규모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임
  - 생산해야 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인력이 8시간 기준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잔업 등을 수행해야 함
  - 2개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싶으나 1개조 유지도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를 맞춰가며 사업을 겨우 영위하는 실정
  - 20·30대 젊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젊은 층은 임금을 더 준다고 해도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퇴사함
  - 50·60대 근로자 일부는 연장 근무로 임금을 더 받는 것을 선호하지

- 만 회사 입장에서 50·60대 근로자들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싶지 않음
- 청년층의 고용 여부는 기업 규모, 업종 및 직무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임
    - 첨단 산업과 관련된 업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에서는 비교적 20·30대 근로자 확보가 용이함
    - 해당 지역 출신 중 학력 수준이 높지 않은 청년층이 지방투자기업에 유입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
    - 고졸 청년층이 생산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학력과 무관하게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함
    - 부모가 생산직 근무를 반대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있음
    - 생산직 초봉을 3,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도 청년층 확보는 어려움
    - 20·30대는 현장직 채용 시 단기간에 퇴사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40대 생산직을 가장 선호함
    - 경력직 40대 생산직의 임금 수준은 매우 높고 구하기도 어려움
    - 퇴사 비중이 가장 낮은 50대 생산직을 가장 선호한다는 일부 사례도 있음
    - 지방이전 시 기존 사업장의 평균 연령대가 높은 경우 40·50대 대비 20·30대의 이탈률이 높으며, 사업주는 가급적이면 이전을 기회로 평균연령을 낮추고자 노력함
    - 지방이전 시, 연구개발직 등 상위 직군은 수급이 어려워 기존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기숙사 등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있음
    - 바이오 등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절대 채용하지 않는 방침이라는 사례도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거주지 마련 등의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일부 사례가 발생함
    - 최저임금제의 내·외국인 동일 적용에 대한 불만 표시

## □ 고용의 질

- 지방투자 초기 단계는 투자 소요 비용을 회복하는 문제가 더 크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임금,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주력함
  - 지방투자로 인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비용을 책정할 여력이 없는 일부 사례가 발생
  - 주변 인프라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란 점을 대부분의 업체가 인지하고 있음
  - 기숙사, 임대 아파트 등의 운영으로 주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자 이탈이 적은 사례가 발생
  - 대중교통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업체는 자체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으며, 자차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교통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투자 사업장의 임금 수준이 기존 수도권 사업장보다 높으며, 특히 기존 근로자가 이전해 온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음
- 용접공 등 특정 기능을 가진 직업군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며, 생산 현장의 자동화는 대부분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임
  - 생산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가진 직업군은 특히 구하기가 어려워서 임금 수준을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연구개발직의 경우, 신약 개발보다는 품질(QA, QC), 경력사원이 필요하나 주변 대학 졸업생이 부족하다는 응답
  - 지역 내 용접공 단체 등에게 요청해서 구인하고 있으나 몇 개월째 구해지지 않아 고비용으로 단기간 작업을 수행하는 용접공을 이용하는 실정임
  - 인력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방향을 생산 현장 자동화로 설정했다는 경우가 다수임
  - 신규 인력의 경우, 경력직이 아니라면 특수한 기술의 보유 여부보다 해당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 수준을 보유하였다면, 사내 직업훈련을 통해 숙련을 향상시킬 의지가 있음

- 생산 현장의 자동화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자동화하는 것이 목표임
  - 설계, 시험 등 인력이 필요한 부분의 자동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립 공정, 품질 관리 부분의 자동화는 대부분의 제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생산 현장에서 로봇 투입 등을 위한 투자 규모를 계속 증가시키려는 계획임
  - 다만 업종, 생산하는 품목에 따라 자동화 용이성의 편차가 나타나며, 자동화에 수반하는 공정 변경을 위한 이전, 신·증설 결정도 나타남
  - 또한 자동화를 위해서는 기존 업장 외 공간이 필요하며, 설비투자 매몰비용이 상당히 발생함
- 지방투자 사업장 대부분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난의 해결 방안은 ‘자동화’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지방투자기업의 경우 투자 의사결정 당시보다는 이전 혹은 신·증설 이후 인력 관련 애로사항을 체감하는 경우가 더 많음

#### 다. 지방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

##### □ 지방투자보조금 등 수혜 현황

- 지방투자보조금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았으며, 지방투자보조금이 있어 지방투자를 결정했다는 사례도 일부 도출
  - 지원과정에서 담당자가 제공하는 정보, 지원절차 등에 대한 문제는 크게 지적되지 않았으나, 일부 업체는 지방투자 수행 시기가 다소 경과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하나의 사례로 지방투자 시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았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방투자에 따른 인력 문제 등이 너무 커서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경우가 있음

##### □ 정부 지원과정의 애로사항

- (제반 업무 과다) 제반 서류 요구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원되는 금액 대비 행정 소요가 과다하다는 의견 다수
- (정산 애로사항) 정산에 따른 세부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애로사항이 발생

사례 1) 전자 세금계산서만 인정된다는 것을 정산하는 시점에서야 알게 돼서 간이 계산서로 거래했던 사항에 대해 불인정 처리를 받음. 거래 비용이 커서 추가 증빙 자료 등을 보완해서 결국 인정을 받았으나 기본적으로 업체가 알아야 할 정산에 따른 주요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정산 시점에서 매우 큰 애로사항이 발생함

사례 2) 전자 세설비 투자가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해연도 투자만 인정되어서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했음. 계획서상에는 설비 투자가 1년 만에 완료된다고 쓰더라도 실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데,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없어서 업체 입장에서선 결국 투자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손해를 보게 됨

- (담당자 변경 애로사항) 지원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지적한 사례
  - 지원 담당자가 변경되면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업무가 지연되며, 지원 담당자 변경으로 지원 조건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체 처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 (한도 상향) 지방투자보조금 한도가 좀 더 높았으면 지방투자 이후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감당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음
- 그 외 지방투자보조금에 대한 설명 또는 교육 부족, 지원되는 금액 대비 이행 조건의 까다로움, 정산 후 대금 지급까지의 시간이 너무 지연됨 등의 애로사항이 도출됨

#### □ 추가적인 정부 지원 요청사항

- (주민등록 이전 유예) 신규 고용 시 지방 및 중앙정부의 기숙사 지원사업 중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요건의 완화가 필요
  - 충청남도의 사례에서 확인한바, 이전에 따른 가족 동반 전입신고 후

- 3년 이상 유지 시 일시금으로 1천만 원 지급
  - 근로자의 이전에는 적응-의사결정에 시간이 필요하여 이행기간을 고려한 전입신고 요건 및 지원대상 요건의 완화 필요
- (지원 시 지역 노동시장 범위 확대) 인력 수급 과정에서 노동시장 범위가 넓게 형성된 경우 통근비 지원 등의 범위를 인접지역까지 확대
- (내일채움공제 등의 조건 완화) 현행 지방이전 근로자 지원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은 5년간 근로 소득세 감면,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으나,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대상요건이 강화되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
  - 대상요건의 완화 요청
- (교육을 통한 공통 인재 풀 형성) 매칭사업의 지역 특화형 수요군의 발굴 및 타깃 프로그램 기획 확대 요청
  - 대구 의료첨단산업 복합단지의 '의료기기 전문가과정'(주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성과 대상목적성이 뚜렷한 경우 만족도가 높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 혹은 지나치게 광범한 경우 효과성 저하
- (최저 임금제 동일 적용에 따른 역차별 해소) 내·외국인의 최저임금 동일 적용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요청
- (환경 개선 등에 대한 투자지원) 현장의 냉난방 개선만으로도 일자리의 질 만족도 차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체감하므로, 사업장 환경 개선의 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요청

### 3. 심층 인터뷰 결과종합 및 시사점

#### 가. 지방투자의 요인과 애로사항

##### □ 지방투자 요인

-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지방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생산 확대, 신사업 진출, 다각화 등 기업 및 산업의 생애주기상 단계별 수요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

- 기본적으로 지대 대비 규모가 있는 사업장 용지의 활용을 기대하고 지방으로 이전 혹은 신·증설하는 경우가 대다수
- 규모 대비 입지 비용을 절약하고, 타 지출 부문을 확대하는 등의 비용 재구조화를 꾀함
- 지방투자 입지의 결정도 실태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노력과 지자체가 혜택으로 제공하는 요소비용이 크게 작용
  - 일반적 정책지원 자체보다 지자체의 적극성에 의한 입지 선택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자체 담당자 관심의 지속성, 협의의 구체성, 적극성이 중요
  - 신·증설 입지 선택은 기존 사업장 입지와 유관한 입지를 선택하고, 사업장 이전은 사업의 핵심 부문의 기존 입지를 포기해야 하므로 핵심 부문 이전의 영향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산업 집적의 효과는 부차적인 고려사항

#### □ 지방투자 애로사항

- 인력 이탈 및 확보 어려움은 실태조사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크게 나타났으며, 투자 철회를 고려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지방투자 촉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파악
  - 특히 중·저숙련 생산직의 양적 수급이 가장 어려운데, 지방투자 사업장이 대부분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생산직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특정 지역 내에서는 인력 유치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
  - 특히 지방투자 보조금 수혜 대상 사업장의 유형이 공장인 경우가 많아 생산직 수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지방투자 사업장 주변 인프라 부족도 인력 수급 애로를 심화시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정적 요인(실태조사에서도 세 번째 Pull factor)
  - 새로이 조성되는 부지의 입주 시 주변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특히 입주율이 저조한 산단은 인프라 구축이 지연됨
  - 주변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 입주 시, 근로자는 임금 수준과 함께 고려할 어메니티로 인한 효용의 저하로 사업장 매력도를 하락시켜 이탈 유인이 증가

## 나. 지방투자와 일자리

### □ 고용의 규모 및 구성

- 대부분 지방투자 고용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로는 지속적인 채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중도 이탈률 때문
  - 지방이전 시 동반 이주한 근로자의 경우 당장은 신설된 사업장 시설(안전, 업무환경)에 만족하나, 정주여건 및 수도권 대비 인프라(문화·여가) 부족으로 인한 불만 표출
  - 지방이전에 따라 기존 인력 대비 최소 30%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생산직의 이탈 비중이 큼
  - 노동시장과의 인접성이 떨어지며 인력을 수급하더라도 통근시간이 길어 애로 발생
  - 자체적 채용활동이 어려우며, 지자체의 도움도 효과가 미미
  - 신규 입직의 1년 퇴사율이 높으며, 특히 생산직의 경우 임금 차이에 의한 이직 가능성이 높음
  - 충청권의 일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접 노동시장의 임금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인력충원의 어려움은 잠재적인 인력 부족분의 상존으로 이어지며, 인력규모를 웃도는 생산량의 지속으로 1인당 근로강도 및 근로시간의 확대로 연결되어, 중국에는 근로자 이탈 유인으로 귀결
  - 또한 초과근로 및 근로 강도에 대한 세대별 감수성 차이는 청년근로의 고용유지율에도 악영향
  - 결국 지방 사업장의 근로 수요는 40대 장년층 중 경력이 있는 생산직에 집중되는 경향
  -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높이는 경우에는 임금 외 비용을 감안할 필요

### □ 고용의 질

- 통상적으로 투자기업은 투자 초기 매몰비용으로 인해 근로의 질 개선을 위한 여력이 부족했던 점을 경험

- 주변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의 지방투자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식사, 교통, 주거 등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발생하며, 지방투자자는 대부분 이를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어메니티 격차로 인한 효용의 차이는 지방투자 시 동반 이전 근로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 요소로 현시
- 고숙련 노동자 수급의 애로
  - 연구개발직의 경우, 신약 개발보다는 품질(QA, QC), 경력사원이 필요하나 주변 대학 졸업생이 부족
  - 대구 의료첨단산업 복합단지의 '의료기기 전문가과정'(주관: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구체성과 대상목적성이 뚜렷한 경우임
- 자동화 수요 증대
  - 기술직 등 중숙련 직업군, 특화된 숙련의 근로자일수록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저숙련 생산직 부족 현상과 함께 자동화 압력으로 작용
    - 특정 숙련 부문 인력을 수급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수급 애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구체적으로 조립/품질 등 생산직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로 대체될 것

#### 다. 지방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

- 정부 지원과정의 애로사항
  - 제반 서류 사항이 과다하고, 잦은 담당자의 변경과 안내 및 교육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
    - 지자체의 적극성이 투자유치에 주요 요인임을 고려한다면 잦은 담당자 변경은 이에 반하는 요소로 투자유치 단계뿐 아니라 지자체 대 기업 행정서비스의 전문성 혹은 연속성이 정부 지원의 질을 좌우
    -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은 규정의 숙지-안내 등 행위와 연결되어 투자 성과를 감하거나 확대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 정부 지원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
- 지방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 조건 완화, 노동시장 범위 확대, 투자지원 등 다양한 측면의 정부 지원을 요청
  - 주민등록 이전 유예, 지원 시 지역 노동시장 범위 확대, 내일채움공제 등의 조건 완화, 공통 교육을 통한 인재 풀 형성 지원, 최저 임금제 동일 적용에 따른 역차별 해소, 환경 개선 등에 대한 투자지원 등을 요청

### 제3절 지방투자기업의 인력 수급 시사점

#### 1. 실태조사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인력 수급의 시사점

- 지방투자기업의 인력 수급 애로에 대한 인식
- 지방투자기업은 인력 수급의 애로를 투자의사 결정단계에서는 사전적으로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았으나, 지방투자 이후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기존 입지 이탈 결정에 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Push/Pull factor 양 측면에서의 예상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표 5-94, 표 5-95 참조)
    - 근로자 이탈 및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업에 적합한 지역 내 고급인력의 부족이 다음 순
  - 다만 투자대상 입지 선정에 대해 정주여건·운송비용·노동시장의 접근성 등이 유사한 중요도로 나타나 인력 수급 여건을 다면적으로 고려함
    - 임금보다 운송비용이 입지 결정에 비교적 더 크게 작용하나, 호남권 입지 기업은 임금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방투자기업의 인력 구성(수요) 변화 및 동향
- 지방투자 후 고용 규모는 1.16배 증가하였고, 정규직 구성비는 약간 증

가하는 경향을 현시

- 직종별 비중(요구숙련의 구성)은 지방투자 전후 변화가 크지 않음
- 20·30대 인력 비중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신규 채용, 이전·퇴직 등으로 인력 재구조화가 일부 발현
- 다만, 인력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외국인 인력 비중의 증가도 확인
- 생산직의 신규 고용 평균 비중이 가장 높음
  - 연구개발 인력은 동종업계 이직을 통한 충원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역내 수급(낮은 비중)이 어려움을 보임
- (이직-이탈 현황) 생산직 이직은 업체당 평균 9.2명(신규 고용 대비 32%), 사무·영업직은 2.8명(신규 고용 대비 37.3%), 연구개발직은 1.1명(신규 고용 대비 37.9%)
  - 전반적으로 동종업계 이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신규 고용 대비 가장 이출이 많은 직종은 연구개발직이며, 대부분 타지역 이출
  - 1년차 미만 퇴사율 기준 생산직은 29.9%로 사무·영업직(15.8%), 연구개발직(9.1%) 대비 상당히 높으며, 2년차 미만 퇴사율 기준으로도 생산직이 11.6%로 가장 높아 생산직은 초기 직장 정착이 어려움
- (인력 수급의 애로) 채용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직군은 단순생산직>생산기술직>연구개발직 순이며 지역별로는 상대적 격차 발생
  - 고숙련 직종 구인의 어려움만큼 적정 규모 생산직 충원 역시 상당한 애로로 작용
    - 다만 지역별로 대경권과 같이 특별히 고숙련 직종 충원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등 지역별 격차가 뚜렷
  - 전공계열 별로는 '대졸(이공계)', '전문대졸(이공계)', '고졸(이공계)'로 나타나 이공계 채용에 어려움 확인
  - 이러한 애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서 입지 요인(교통, 접근성)이 가장 높았으며, 임금 수준이 다음으로 중요

#### □ 근로자 관점의 미스매치 요인

- (임금 수준) 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고숙련 근로자는

임금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근로시간) 월평균 정규 외 근로시간은 생산직이 13.3시간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 생산직의 근로 강도 업무환경이 생산직 기피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 중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 2. 심층 인터뷰에서 나타난 인력 수급의 시사점

□ 지방투자 이후 인력 수급의 애로 현황

○ (인력부족) 지방투자 과정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근로자 이탈 및 인력확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생산직 확보가 애로

- 이전투자의 경우 수도권 → 충청권 등의 이전은 기존 인력 상당수가 이전한 사례가 일부 관측되어 수도권 인접지와 그 외 지역의 편차
- 지방투자 사업장은 대부분 공장을 운영, 생산직 수요가 큰 반면 수급이 어려우며, 같은 권역 내라도 특정 지역별 생산직 인력의 편중
  - 예) 충남은 대기업 여건 및 교통 여건이 좋은 천안, 아산 지역에 생산직이 집중되어 서산, 당진 지역으로까지 유입되지 않아 같은 도 내에서도 인력난의 지역 간 격차
- 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자동화 대체를 했거나, 예정 중이나, 자동화 후에도 수요가 여전한 전문직 생산 인력 수급이 특히 어려움

○ (중도 이탈) 대부분 지방투자 고용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로는 지속적인 채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중도 이탈률 때문

- 신규 입직의 1년 퇴사율이 높으며, 특히 생산직의 경우 임금 차이에 의한 이직 가능성이 높음
- 지방이전은 기존 인력 대비 최소 30% 이탈하는 경우가 다수, 특히 생산직의 이탈 비중이 큼
- 노동시장과 인접성이 떨어지며 통근 시간이 길어 애로 발생

○ (부정적 효과의 확대 재생산)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인력규모를 웃도는 생산량 지속으로 1인당 근로 강도 및 근로시간 확대로 연결되어, 중국에는 근로자 이탈 유인 증가로 귀결

- 또한 초과근로 및 근로 강도에 대한 세대별 감수성 차이는 청년근로

## 자의 고용유지율에도 악영향

### □ 지방투자 인력 수급 관련 여건

- (정주여건) 지방투자 사업장 주변 인프라 부족도 인력 수급 애로를 심화시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정적 요인
  - 주변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 입주 시, 근로자는 임금 수준과 함께 고려할 어메니티로 인한 효용의 저하로 사업장 매력도를 하락시켜 이탈 유인이 증가
- (추가비용 발생) 통상적으로 투자기업은 투자 초기 매몰비용으로 인해 근로의 질 개선을 위한 여력이 부족했던 점을 경험
  - 주변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의 지방투자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식사, 교통, 주거 등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발생하며, 지방투자자는 대부분 이를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어메니티 격차로 인한 효용의 차이는 지방투자 시 동반 이전 근로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 요소로 현시

### □ 인력 수급 관련 추가적 시사점

- 고숙련 노동자 수급의 애로
  - 연구개발직의 경우, 신약 개발보다는 품질(QA, QC), 경력사원이 필요하나 주변 대학 졸업생이 부족
  - 대구 의료첨단산업 복합단지의 '의료기기 전문가과정'(주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구체성과 대상목적성이 뚜렷한 경우임
- (자동화 가속) 기술직 등 중숙련 직업군, 특화된 숙련의 근로자일수록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저숙련 생산직 부족 현상과 함께 자동화 압력으로 작용
  - 특정 숙련 부문 인력을 수급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수급 애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구체적으로 조립/품질 등 생산직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로 대체될 것

## 제4절 소 결

- 지방투자 수요는 기업 및 업종의 생애주기 단계에 의존하여 발생
- 지방투자 결정은 기업과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사업적 필요로 촉발되는 바가 크므로, 지방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 및 업종의 특성과 성격에 대한 사전파악과 이에 기반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마련 필요
- 지방투자 입지 결정은 투자유치 지자체의 노력과 비용 요인에 의존
- 최종적으로 지방투자가 실현되는 것은 유치 지역 간 경쟁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지 여부이며,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은 적극적인 지자체 유치 노력과 저렴한 부지 등 본원적 생산요소 확보가 중요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비용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 인접지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증설 기업은 기존 사업장과의 거리 및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근접성을 이유로 입지 선정
  - 정책변수로 활용 가능한 것은 AM특장(전북 김제시)의 사례와 같이 시험·검사장 등 시험 및 인증시설의 인접성 제고
  - 가급적 시험·검사·인증 시설의 비수도권 산업 집적지 배치를 고려
- 노동력 확보와 인프라 부족이 지방투자 후 겪는 가장 큰 애로 요인
- 비수도권 내 노동력 확보와 인프라 부족 문제는 지방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 환경으로서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 발전정책 차원의 접근 요구
  - 지방투자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지방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 사업장은 공장의 유형인 경우가 상당수
  - 직종 중 생산직, 청년근로자 수급이 가장 어려우며, 청년근로자의 근로 여건 및 근로 강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음

- 생산직 등 저숙련 노동은 임금 민감도가 높아 이직 경향성이 높음
- 전반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단순노무)는 자동화·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기술(품질관리, 분석, 공정기술, 생산관리 등) 및 중숙련 근로자의 내국인 근로자 수요는 지속할 것
- 수도권 인접지역의 경우, 인접한 노동시장의 더 좋은 일자리와 지방투자 사업장의 인력경쟁으로 인한 인력 수급 어려움
  - 수도권과의 거리 격차에 따라 주중 근로-주말 복귀의 선택지가 어려운 지역은 지방이전 및 근로자 동반 이전이 더욱 어려움
  - 비수도권 지역 중 주변 광역시 및 노동시장 집중지역과 거리가 있는 경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됨
  - 수도권 광역교통 인프라 대비 낙후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단별 통근버스 지원 및 인프라 부족의 보완적 정책이 강화될 필요
  - 비수도권 정주여건에 대한 하드웨어 확충은 단시일 내 어려우므로, 인접 정주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거나, 근로자의 이주 결정 및 가족 동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행기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
-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제반 기능을 모두 이전하므로 비수도권 지역의 관점에서는 규모, 기능의 구성면에서 더 큰 효과성을 나타냄
  - 다만 최근 보조금 수혜 사업체 중 지방이전 유형은 현저히 낮아짐
  -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지방이전보다는 신·증설이 이전에 의한 구축 효과 없이 순증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근로환경설비 투자 가중치 확대
  - 근로환경설비는 일자리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비금전적 요소이나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다만, 사업주는 근로환경설비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근로 설비는 사업장 신설투자 완료 후에는 개선이 어려움
  - 따라서, 지방투자보조금의 설비투자 하위 비목 중 근로환경설비 목적 투자에 대한 보조율 가산 지원 고려
- 지방투자 사업장에서 창출되는 신규 근로자의 지원 확대

- 전반적으로 지방투자 지원제도는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근로자 단위의 지방이전 및 지방 취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함
  -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등이 있으나,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근로자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투자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고려 가능
- 인력양성 및 매칭서비스의 지역 특화형 수요군의 발굴 및 타깃 프로그램 기획이 매우 중요
- 중숙련 이상의 품질(QA, QC) 관련, 공정기술 관련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 관련학과 졸업생을 수요로 하나 주변 대학의 관련 전공 졸업생이 부족한 경우 다수
  - 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기기 전문가과정' 사례와 같이, 구체성과 대상목적성이 뚜렷한 경우 만족도 증가
  - 동종 업종, 동류의 사업체 간에는 한정된 지역의 인력 풀에 대해 경쟁하는 양상으로 보여 민간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은 어려우므로, 중간 조정-기획의 역할을 하는 주체 필수
- 행정 간소화와 투자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
- 투자 과정상에서 투자 주체들이 느끼는 행정상의 문제점들은 투자의 촉발과 지속 그리고 확산 등에 중요하므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조정과 역량 강화가 요구
- 실태조사를 통해 주로 지적된 애로사항은 기초 지자체의 역량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잘못된 인사이동, 낮은 전문성)으로 나타남

##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한 제언

### 제1절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투자에 집중

-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투자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투자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제4장에서의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유형별로는 이전에 대한 지원, 보조금 유형별로는 입지 및 설비에 대한 지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난 사실에 기반하여,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원 예산을 기여도에 따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을 가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추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심층 인터뷰 결과 현장에서 이러한 신규 고용에 따른 설비보조금 가산 조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바,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
-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신규 고용창출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신설 및 증설보다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효과의 차이는 지방이전 사업장과 신·증설 사업장의 최소고

용 규모 요건의 차이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한 경우에도 신설보다는 이전 지원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더 높았음

-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재정의 여유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의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이는 앞선 정량분석에서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한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유추 가능
  - 지방투자보조금 제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 지원 제도는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그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균형발전 하위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등 지자체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국비를 더 지원해주는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방안들은 지자체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제2절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협력

- 제5장의 실태조사 분석에서 기업의 지방투자 결정요인을 Push factor와 Pull factor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지방투자 지원제도의 시행과 지자체의 노력이 가장 높은 순위의 결정요인으로 꼽힘

-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가장 큰 Push factor가 지방투자 지원제도의 존재인 만큼 기존 지원제도의 확대를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제도의 성공적 정착도 중요
- 미국의 기회특구제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곧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의 기회발전특구의 고용창출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
  - 미국의 기회특구는 저소득지역 혹은 낙후지역의 주거·상업 등에 직접 투자한 개인 및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에 도입
  - 직접투자 이외에 투자자는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를 통해서도 기회특구에 간접투자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전역에 8,762개의 기회특구가 지정됨
  - 초기 통계자료(시행 후 3년)를 바탕으로 기회특구가 그 지역의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논문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기회특구제도가 특구에 있는 노동시장에 약하지만 긍정적인 효과(modest effect)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실태조사 결과, 지방투자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Pull factor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꼽았으며, 심층 인터뷰에서도 지방투자 입지 결정에 있어서 지자체 정책뿐 아니라 투자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이 필요
  -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임
  - 기업의 입장에서 지방투자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큰 모험을 의미하며, 미래의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의 깊은 소통과 지원을 통해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

## 1. 행정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

-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청과정 및 정산과정 행정'의 어려움, '인사이드'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 교체 시 복잡한 업무 파악에 대한 시간 소요로 행정절차 지연'을 꼽음에 따라 지자체가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부서와 지원하는 부서가 별개로 운영되어 지방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이들 부서를 일일이 찾아 접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적 서류작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상당함
  - 지방투자를 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이 기업들의 경우 투자보조금 관련 행정을 전담할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 결정부터 투자 완료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편의적 행정 지원, 적시적인 교육 제공 등이 매우 필수적임
  - 이를 위해 지자체는 기업투자 전담 인력을 두어 유치기업의 인·허가 등의 행정업무 전 과정을 지원하고, 기업 이전 및 투자에 대한 전반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원스톱기업투자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즉,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부서를 통할하는 '기업투자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행정 절차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이를 통해 행정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유치기업을 위해 입지 탐색 및 타당성 조사 지원 필요
  - 현재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2차전지 생산기업인 엘앤에프가 대구시와 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통해 41일 만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음

## 2.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지방투자 희망 기업 연계망 구축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지방투자 희망 기업이 투자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지방이전이나 신·증설을 한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이전이나 투자 지역 선정에 있어 일관된 채널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전 및 투자 적합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역시 이전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필요시 민간 리서치 회사 등에 보조금을 주고 구득하고 있으며,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서 제공하는 크레탑(Cretop) 등을 통해 기업의 신용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임
- 따라서 관련 정부부처가 지자체와 지방투자 희망 기업 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토록 하면 기업의 지방투자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별 투자정보, 인프라, 인센티브, 교육 기관과의 연계 정보, 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
  - 기업 데이터는 기업의 업종, 규모, 신용 등급, 투자 계획 등을 포함
  - (인터페이스 개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기업과 지자체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다양한 기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반응형 웹 또는 앱 기반으로 개발
  - (데이터 연계 및 공유) 공공 데이터 및 민간 데이터 소스와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3.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노력

- 심층 인터뷰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시험·검사·인증 시설의 인접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유치산업 배려를 위해 테스트베드(Testbed)<sup>2)</sup> 구축을

---

2) 어떤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하고 검증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술 검증) 테스트베드는 기업들에게 그들의 기술이나 솔루션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리스크 감소) 테스트베드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어, 상업화 단계에서의 위험과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경쟁력 향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테스트베드를 통해 기업은 자신의 기술이나 제품의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음
- (추가적인 투자 유치) 실제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테스트베드 결과는 외부 투자자나 파트너 기업의 관심을 끌 수 있어, 추가적인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
-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 성공적인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혁신 및 기술 친화적 이미지를 강화

### 제3절 지방투자기업의 필요 인력 수급을 위한 노력

- 지방투자 과정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근로자 이탈 및 인력확보 어려움’이 지적됨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
- 지방투자기업이 중소기업협회, 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기관들이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에 매년 참석하지만 마땅하게 회사의 필요인력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더군다나 경력자 채용박람회는 거의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경력자 채용을 위한 공공지원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

기 위한 환경을 의미.

- 그 밖에 지자체 주도로 전문가양성프로그램이 때때로 가동이 되지만 지속적이지 않아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무직, 영업직은 역내에서 신규 조달이 용이하지만 생산직과 고속련 전문인력의 조달이 가장 어렵다고 토로
  - 먼저 단순생산직의 경우 단기 계약직의 수요가 많고 국내 청년층의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자동화 투자를 통해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
  - 고속련 전문인력은 주로 동종업계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입사원을 뽑아서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에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력직 채용을 선호
  - 그러나 경력직 채용 시 신입직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숙소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 또한, 경력직은 주로 헤드헌터를 통해 수급하는데 이 역시 비용이 발생
- 따라서 생산직과 전문인력의 고용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두 직군의 인력 조달 해소를 위해 서로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

## 1. 생산직 인력 수급을 위한 개선방안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산직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근로자들은 노동 여건과 노동 시간에 민감도가 높아 근로시간의 장기화나 주변의 문화시설 부족이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이로 인해, 생산직에 종사하는 국내 인력은 주로 40대와 50대 장년층으로 옮겨감
-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라 국내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 수준의 임금을 받는 데에 불만을 나타냄
- 지방에 투자한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부족한 근로환경, 복리후생과 정주여건은 인력 채용에 더욱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의 경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 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수급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 구인난이 가중
- 같은 권역 내라도 특정 지역에 생산직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부족한 정주여건 등의 인프라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한 직장 내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을 대폭 확대
- 식사, 교통, 주거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
- 근로환경설비는 일자리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비금전적 요소이나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지방투자보조금의 설비투자 하위 비목 중 근로환경설비 목적 투자에 대한 보조율 가산 지원 고려
- 임금 구조를 재검토하여 노동자의 기술, 경험, 교육 수준에 따라 공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내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노동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필요
- 국내 노동자들이 더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에 따라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지자체 고용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정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지 기준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
- 인접지역에서 수급한 근로 인구를 본 지역의 생활인구로 간주하여 고용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생산 공정에서 자동화 및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집약도를 줄임

## 2. 고급인력 조달을 위한 개선방안

- 심층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고숙련 전문인력을 자체 노력과 비용을 들여 구인하고 있는 상황

- 주로 역외에서 동종업계 경력직을 구인하고 있으며, 역내 대학을 찾아가 필요 인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만족스러운 매칭이 이뤄지지 못함
  - 제5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방투자기업의 경우 중숙련 이상의 품질(QA, QC), 공정기술 관련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인이 어렵고 주변 대학의 관련 전공 졸업생도 부족한 경우가 다수
-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숙련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임금 수준과 복리후생 수준이 낮다고 평가
- 이에 지자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 노력 필요
  - 첫째, 세제혜택, 정주여건 개선 및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경력직 구인 지원
  - 둘째,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역내에서 고숙련 인력을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조금 및 세제혜택, 정주여건 개선 및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경력직 수급 지원

- 중소기업은 투자에 보수적이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환경 개선, 안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잘 이뤄지기만 해도 이직·이탈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보다 활발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지방투자 지원제도는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근로자 단위의 지방이전 및 지방 취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므로 지방투자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세제혜택 고려 가능
  - (초기 정착 지원금) 지방에 처음 정착하는 근로자들에게 주거,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 (소득세 감면 및 세액 공제) 지방에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지방 생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특히 생활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기대
-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고용의 양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고급인력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고용

의 질적 측면에서도 제고될 여지가 존재

□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숙련 인력 수급 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설비 메인テナンス, QA, QC, 연구개발(R&D) 등의 전문인력 조달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급 인력 수급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 중소기업 전문인력 수급의 경우 공급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상존하는데, 첫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전공자를 역내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 둘째, 역내 대학에 관련학과 졸업생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공존
  - 따라서 지자체는 산업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인력의 공급을 요청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필요
  - 또한 지역대학에서 배출된 필요인력이 산업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MOU를 맺어서 필요 인력을 조사하고, 지역대학 배출 인력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R&D 자원, 연구 주제, 연구 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

### 3. 인력 수요 예측 및 매칭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이전 및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전략이 필요
- 이를 위해 산업 분석과 비전을 설정

- 지역의 산업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지역경제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 지역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를 형성할 지역을 지정
-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 내 기존 산업단지를 넘어선 성공적인 산업 클러스터 형성<sup>3)</sup>을 위해 노력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앵커기업<sup>4)</sup>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도 함께 경주할 필요
- (인재 수요 조사) 산업 분석을 통해 도출된 특화산업에 필요한 인재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
- (지역 인재 유지 및 유치) 지역 대학의 졸업생들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
  - 우수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주거, 생활환경 개선, 장학제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대학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특화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특성화대학 및 전문교육센터를 설치·운영
  - (산학 커리큘럼 개발) 대학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

---

3) 산업클러스터는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이가 있음. 산업단지는 주로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데 국한되며, 그 안에 있는 기업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협력보다는 개별 기업의 입지 조건을 중시함. 반면, 산업클러스터는 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크, 지식 교환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집중지역을 의미함. 다시 말해서, 보다 다이나믹한 경제 활동의 집중을 의미함.

4) 앵커기업이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해당 분야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기술력과 자본력이 뛰어난 기업을 말함.

## 참고문헌

---

- 강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22), 『부문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및 시·도 발전시행계획』.
- \_\_\_\_\_(2022),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 김광국·백승기·황지옥(2016), 「지역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 (1), pp.29~43.
- 김은경(2009a), 「중국 이전 기업의 실태 분석에 근거한 기업지원정책 방향」, 『Policy Brief』 No.8, 경기연구원.
- \_\_\_\_\_(2009b), 「일본의 U-턴기업 지원정책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Policy Brief』 No.12, 경기연구원.
- 김정홍·한준기·하정석(2020), 『혁신도시 입주 기업의 성과분석 및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2020-01, 산업연구원.
- 문남철(2006),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과 이전기업의 공간적 패턴」, 『국토지리학회지』 40 (3).
- 박건우·윤성일(201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 (1), pp.27~49.
- 박상수·허원제(2022), 『기회발전특구(ODZ) 조세지원 방향』, 기획과제 2022-10, 지방세연구원.
- 박재곤(2010), 「지역투자보조금의 개편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월간산업경제』 11월호, 산업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2004. 5.), 「기업지방이전 재정지원 계획」 설명자료.
- \_\_\_\_\_(2014), 「COMIS(기업지방투자지원시스템) 현황 및 운영방향」.
- 산업연구원(2016),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현황 및 이전요인 분석』.
- 설영훈(2015), 「수도권 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운영단계 효과 분석」, 『지역정책연구』 26 (1), pp.43~58.
- 이유진·김의준(2017),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와 관련한 수도권 제조업체의 비수도권 이동 확률 변화 분석」, 『지역연구』 33 (3), pp.61~78.

- 이유진 외(2020),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2020-03, 경기연구원.
- 정운선(2016), 「기업의 지역간 이동분석 및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시장경제연구』 45 (2), pp.101~120.
- 최진섭(2022), 「미국 기회특구제도 사례의 검토와 정책시사점」, Tax Issue Paper 71, 지방세연구원.
- 홍하연·이길재(2014.11), 「수도권 유출인구의 공간적 패턴분석 및 이동영향 요인 분석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학술지 『地籍』 44 (2), 2014.
- 허동숙·박경(2021),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II : 국내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21-17, 국토연구원.
- Atkins et al.(2021. 1.), “What is the Impact of Opportunity Zones on Employment?,” Tech. rep., New York University.
- Arefeva et al.(2021. 2.), “Job Growth from Opportunity Zones,” SSRN Working Paper 3645507.
- Freedman et al.(2021. 2.), “The Impacts of Opportunity Zones on Zone Residents,” NBER Working Paper 28573.

## 부 록

### 1. 실태조사 설문지(안)

|                                                                                                                                                                                                                                                                                                                           |         |          |  |
|---------------------------------------------------------------------------------------------------------------------------------------------------------------------------------------------------------------------------------------------------------------------------------------------------------------------------|---------|----------|--|
| 통계법 33조(미망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br>개인의 미망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 ID       |  |
|                                                                                                                                                                                                                                                                                                                           |         |          |  |
| <b>지방투자 고용효과 실태조사</b>                                                                                                                                                                                                                                                                                                     |         |          |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br>2. 본 설문조사는 지방투자지원제도의 고용효과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br>3. 본 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은 <b>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됨과 동시에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b><br>4. 설문조사 대상은 <b>2023년 현재까지 비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로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대상입니다.</b><br>5. 바쁘시더라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  |
| 2023년 X월                                                                                                                                                                                                                                                                                                                  |         |          |  |
| 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담당자 :    |  |
|                                                                                                                                                                                                                                                                                                                           |         | E-mail : |  |
| 조사수행기관                                                                                                                                                                                                                                                                                                                    |         | 담당자 :    |  |
|                                                                                                                                                                                                                                                                                                                           |         | Tel :    |  |
|                                                                                                                                                                                                                                                                                                                           |         | E-mail : |  |

|     |    |         |     |  |     |  |
|-----|----|---------|-----|--|-----|--|
| 출발자 | 성명 |         | 연락처 |  | 여제일 |  |
|     |    | 부서 및 직위 |     |  |     |  |

| 사업장일반 현황 (2023년 현재 기준) |                                                                                                                                                                                                                                                                                                                                                                                                                                                                                                                                     |
|------------------------|-------------------------------------------------------------------------------------------------------------------------------------------------------------------------------------------------------------------------------------------------------------------------------------------------------------------------------------------------------------------------------------------------------------------------------------------------------------------------------------------------------------------------------------|
| 기업명                    | <input type="checkbox"/> 동사 <input type="checkbox"/> 지사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br>※ 출당자의 원 소속 기준으로 체크 및 상세 주소 작성                                                                                                                                                                                                                                                                                                                                                                               |
| 소재지 주소                 | 130* 입지 성격 : <input type="checkbox"/> ① 계획입지(산업단지 등) <input type="checkbox"/> ② 개발입지<br>130* 건물 소유 : <input type="checkbox"/> ① 자가 <input type="checkbox"/> ② 임대<br>130* 토지 소유 : <input type="checkbox"/> ① 자가 <input type="checkbox"/> ② 임대<br>130* 입지 규모 : 부지면적 _____ m <sup>2</sup> , 건물면적 _____ m <sup>2</sup>                                                                                                                                                                                                                  |
| 업종 구분                  | 130* 업종 : <input type="checkbox"/> ①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②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③ 중소기업<br>130* 매출액 구분(최근 3년 평균) : <input type="checkbox"/> ① 1,00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1,000~1,500억원 <input type="checkbox"/> ③ 1,500억원 초과                                                                                                                                                                                                                                                                            |
| 고 용                    | 130* 상시고용 규모 : <input type="checkbox"/> ① 30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30인~100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③ 100~300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④ 300인 이상<br>130* 주 생산품 : _____    130*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_____                                                                                                                                                                                                                                                                                                           |
| 생 산                    | 130* 구매처 비율(100%) :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 <input type="checkbox"/> 기타    %<br>130* 판매처 비율(100%) : <input type="checkbox"/> (국내)소재    % <input type="checkbox"/> (국내)타지역    % <input type="checkbox"/> (수출)    %<br>130* 판매처 비율(100%) :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 <input type="checkbox"/> 일반소비자    %<br>130* 판매처 비율(100%) : <input type="checkbox"/> (국내)소재    % <input type="checkbox"/> (국내)타지역    % <input type="checkbox"/> (수출)    %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표 1> 업종분류로 참고하여 작성

## Part A. 투자사업장 개요

### ■ 지방투자의 주요 내용과 결정 요인 ■

☞ 수도권에서의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 및 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방투자**에 대해 귀사가 수행한 투자를 중심으로 답해 주십시오.

※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서 현재 지방 소재지로 이전, '신·증설 및 창업' 등은 **수도권을 제외한 현재 소재지 포함 지방에서의 투자를** 기준으로 응답

#### A1. 현 사업장 투자단계

| 항목         | 응답          |
|------------|-------------|
| 1) 착공 시기   | 0000 년 00 월 |
| 2) 공장등록 시점 | 0000 년 00 월 |
| 3) 현재 가동률  | ___ %       |

#### A2. 현 사업장 규모

| 항목      | 응답                 |
|---------|--------------------|
| 1) 산업시설 | ___ m <sup>2</sup> |
| 2) 지원시설 | ___ m <sup>2</sup> |
| 3) 총계   | ___ m <sup>2</sup> |

#### A2-1. 투자 결정 당시 신규 투자 사업장 부지를 어떤 유형으로 인식 하셨습니까?

- ① 개별입지  
 ② 동종산업 집적지  
 ③ 동종산업 집적은 아니나 계획입지

#### A3. 총 투자액

| 항목      | 응답      |
|---------|---------|
| 1) 설비투자 | ___ 백만원 |
| 2) 부지매입 | ___ 백만원 |
| 3) 총계   | ___ 백만원 |

#### A3-1. 신규사업장 비수도권 투자는 어떤 유형입니까?

- ① 지방이전(3년 이내 기존 수도권 사업장 폐쇄)  
 ② 비수도권 사업장 신설  
 ③ 비수도권 사업장 증설

#### A4. 주 생산품

| 항목         | 응답    |
|------------|-------|
| 1) 기존 사업장  | _____ |
| 2) 신규투자사업장 | _____ |

A5. [지방투자 결정요인 : Push 요인] 기존 소재지에서 이전 또는 신증설 등 투자를 결정  
한 주된 이유의 중요도를 평가해주시시오.

| 구 분                                      | 전혀<br>고려하<br>지 않음 | 중요하<br>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br>중요함 |
|------------------------------------------|-------------------|-------------|----|-----|-----------|
| 1) 높은 임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높은 인지 비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협력기업의 이전 또는 투자 요구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불필요한 물류·시간 비용 소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기존 사업장의 생산역량 부족에 따른 확대<br>및 공정 개선의 필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사업의 다각화 및 신사업(품목 전환 포함) 추진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기타 ( )                                | ①                 | ②           | ③  | ④   | ⑤         |

A6. [지방투자 결정요인 : Pull 요인] 현재 지역으로 지방투자를 결정하게 된 요인의 중요도를 평  
가해 주십시오.

| 구 분                                                    | 전혀<br>고려하<br>지 않음 | 중요하<br>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br>중요함 |
|--------------------------------------------------------|-------------------|-------------|----|-----|-----------|
| 1) 부지 확보 용이성 및 저렴한 임대료·지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저렴한 임금(노동력, 토지, 운송비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저렴한 운송비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협력업체 및 관련 기술의 집적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배후시장 근접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노동시장 근접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양호한 정주 여건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투자유치 노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본사·사업장 이전·신증설에 따른 정책적 지<br>원 및 투자유치 활동(보조금, 인센티브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기타 ( )                                             | ①                 | ②           | ③  | ④   | ⑤         |

A7. [지방투자 실현 과정의 애로사항] 지방투자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순위 까지 응답)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① 투자확보의 어려움
- ② 근로자 이달 및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 ③ 기업에 적합한 지역내 고급인력의 부족
- ④ 교통, 주거 등 주변환경에 대한 직원 불만
- ⑤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 ⑥ 투자지역의 정보구득
- ⑦ 자금 조달
- ⑧ 기타 (직접 기재: )

A5. [지방투자 계획] 향후 5년 이내 투자계획에 대해 아래 표에서 모두 선택해주시요.

| 구분      | 이전(재이전포함)                  | 신증설                        |
|---------|----------------------------|----------------------------|
| 현재 소재지  | <input type="checkbox"/> ① | <input type="checkbox"/> ② |
| 수도권     | <input type="checkbox"/> ③ | <input type="checkbox"/> ④ |
| 그 외 지방  | <input type="checkbox"/> ⑤ | <input type="checkbox"/> ⑥ |
| 투자계획 없음 | <input type="checkbox"/> ⑦ |                            |

## Part B. 고용의 규모 및 구성

B1. **[고용 구성 : 지방투자 이전 형태별]** 지방투자 사업장으로 이전 혹은 지방 신증설 당시 귀사의 기존 사업장의 정규직의 구성비는 어떠하였습니까?

- |                 |                 |
|-----------------|-----------------|
| ① 100%          | ② 80% 초과 90% 이하 |
| ③ 70% 초과 80% 이하 | ④ 60% 초과 70% 이하 |
| ⑤ 50% 초과 60% 이하 | ⑥ 40% 초과 50% 이하 |
| ⑦ 30% 초과 40% 이하 | ⑧ 30% 이하        |

※ 정규직 근로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장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B1-1. **[고용 구성 : 지방투자 이후 형태별]** 지방투자 사업장으로 이전 혹은 지방 신증설 이후 현재 귀사 지방투자사업장의 정규직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100%          | ② 80% 초과 90% 이하 |
| ③ 70% 초과 80% 이하 | ④ 60% 초과 70% 이하 |
| ⑤ 50% 초과 60% 이하 | ⑥ 40% 초과 50% 이하 |
| ⑦ 30% 초과 40% 이하 | ⑧ 30% 이하        |

B2. **[고용 규모]** 지방투자 전후 총 고용규모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지방투자 이후 고용은 공정등록 3년 후를 기준으로 답하되, 해당 시점 미경과시 현 시점을 기준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 투자 유형          | 총 고용규모 |
|---------|----------------|--------|
| 지방투자 이전 | -              | 명      |
| 지방투자 이후 | ① 수주권 기업의 지방이전 | 명      |
|         | ② 신증설          | 명      |

B3. **[고용 구성 : 직종별]** 지방이전투자 혹은 신증설 투자 전후 지방투자사업장의 생산직과 사무·영업직, 연구개발직의 구성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투자 이후 고용은 공정등록 3년 후를 기준으로 답하되, 해당 시점 미경과시 현 시점을 기준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종별       | 사업      |         |
|-----------|---------|---------|
|           | 지방투자 이전 | 지방투자 이후 |
| 1) 생산직    | %       | %       |
| 2) 사무·영업직 | %       | %       |
| 3) 연구개발직  | %       | %       |
| 합계        | 100%    | 100%    |

B3. [고용 구성 : 연령별] 지방투자 이전과 이후 귀사의 연령별 고용 구성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지방투자 이후 고용은 공정등록 3년 후를 기준으로 답하되, 해당 시점 미경과시 한 시점을 기준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대별      | 사명      |         |
|-----------|---------|---------|
|           | 지방투자 이전 | 지방투자 이후 |
| 1) 20대 이하 | _____ % | _____ % |
| 2) 30대    | _____ % | _____ % |
| 3) 40대    | _____ % | _____ % |
| 4) 50대    | _____ % | _____ % |
| 5) 60대 이상 | _____ % | _____ % |
| 합계        | 100%    | 100%    |

B4. [고용 구성 : 외국인 근로] 지방투자 전·후 귀사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지방투자 이후 고용은 공정등록 3년 후를 기준으로 답하되, 해당 시점 미경과시 한 시점을 기준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 비중 | 지방투자 이전 | 지방투자 이후 |
|------------|---------|---------|
| 전체 근로자 대비  | _____ % | _____ % |

B5. [신규고용] 지방투자 이후 현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규고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지방투자 이후 고용은 공정등록 3년 후를 기준으로 답하되, 해당 시점이 미경과시 한 시점을 기준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총 신규고용 | 총원 경로             |                    |        | 총원 지역  |                          |                        |
|-----------|--------|-------------------|--------------------|--------|--------|--------------------------|------------------------|
|           |        | 동종업계<br>로부터<br>이직 | 타<br>업종으로<br>부터 전직 | 신규 입직  | 타 시도   | 지방투자<br>사업장<br>소재시도<br>내 | 기존<br>사업장<br>소재시도<br>내 |
| 1) 생산직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 2) 사무·영업직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 3) 연구개발직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 합계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_____명                 |

B5-1. 지방투자사업장 투자 이후 신규 고용계획 대비 현재 어느정도 고용을 달성하셨습니다가?

-계획 대비 ( \_\_\_\_\_ %)

B5-2. 신규고용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B9. [고용 애로사항: 근로자] 지방투자사업장을 기준으로 채용활동상 어려움이 있다면 그 요인이<sup>1)</sup>

무엇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① 입지 요인(출퇴근 시간 및 교통여건, 주변 도시서비스 접근성)  
 ② 근로자 임금  
 ③ 복리후생 여건 및 복지시설  
 ④ 근로자 숙련도(학력 및 전공지식)  
 ⑤ 근로 감도(교대제 등)  
 ⑥ 경력관리 비전(정년 및 승진 등)  
 ⑦ 기타( )

B9-1. [고용 애로사항: 사용자] 지방투자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현재 근로자(숙련도, 생산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입니까?

| 직군        | 대체로<br>추가적인<br>교육훈련이<br>필요하거나<br>개선된<br>노동력이<br>필요하다. | 대체로<br>만족하지만<br>기존 사업장<br>대비 부족하다 | 대체로<br>만족한다. | 대체로<br>만족하며기존<br>사업장 대비<br>합당되었다. | 매우 만족한다. |
|-----------|-------------------------------------------------------|-----------------------------------|--------------|-----------------------------------|----------|
| 1) 생산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무·영업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연구개발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B10. [고용 애로사항: 정책] 지방투자사업장을 기준으로 채용활동상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노동시

장의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① 지역의 고용서비스(구직·구인) 부족      ② 근로자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③ 공동근로복지 여건 부족      ④ 채용 보조금 등 재정지원 부족  
 ⑤ 근로자 정주여건(교육 의료 등) 부족      ⑥ 근로자 사회 안전망 부족  
 ⑦ 기타( )

B11. [향후 고용전망] 2024년을 기준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고용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고용규모보다 대폭 확대      ② 현재 고용규모보다 다소 확대  
 ③ 현재 고용규모 유지      ④ 현재 고용규모보다 소폭 감소  
 ⑤ 현재 고용규모보다 상당히 감소      ⑥ 기타( )

## Part C. 고용의 질

C1. [근로자 보상] 지방투자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동종업계 대비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직군        | 동종업계 대비<br>매우 낮은<br>권이다.<br>(예, ~80%) | 동종업계 대비<br>낮은 편이다.<br>(예, 80%~95%) | 동종업계와<br>유사하다.<br>(예, 95~105%) | 동종업계 대비<br>높은 편이다.<br>(예, 105%~120%) | 동종업계 대비<br>매우 높은<br>권이다.<br>(예, 120%~) |
|-----------|---------------------------------------|------------------------------------|--------------------------------|--------------------------------------|----------------------------------------|
| 1) 생산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무·영업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연구개발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C2. [근로자 복지] 지방투자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동종업계 대비 복리후생 (복지제도, 시설 등 여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직군        | 동종업계 대비<br>매우 낮은<br>권이다.<br>(예, ~80%) | 동종업계 대비<br>낮은 편이다.<br>(예, 80%~95%) | 동종업계와<br>유사하다.<br>(예, 95~105%) | 동종업계 대비<br>높은 편이다.<br>(예, 105%~120%) | 동종업계 대비<br>매우 높은<br>권이다.<br>(예, 120%~) |
|-----------|---------------------------------------|------------------------------------|--------------------------------|--------------------------------------|----------------------------------------|
| 1) 생산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무·영업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연구개발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C2-1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지원하고 있다면 어떤 주기로,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하십니까?

①-1 주기 (\_\_\_년)      ①-2 건강 검진비용의 (\_\_\_%)      ② 해당 없음

C2-2 근로자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지원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지원하십니까?

① 중등·고등교육 등록금을      ② 중등·고등교육 등록금을      ③ 중등교육 등록금 지원  
지원(장학금 및 재정지원)      지원(대출 지원)

C2-3 근로자의 식비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지원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지원하십니까?

① 월 식비 지원      ② 구내식당 운영 및 위탁      ③ 기타(\_\_\_\_\_)      ④ 해당 없음

C2-4 근로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지원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지원하십니까?

① 월교통비 지원      ② 자체 교통수단 운영      ③ 기타(\_\_\_\_\_)      ④ 해당 없음

C3. [근로시간] 지방투자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동종업계 대비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직군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
|-----------|--------------------|-----------------|-------------|-----------------|--------------------|
| 1) 생산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무·영업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연구개발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C3-1. 지방투자 사업장의 1인당 월평균 정규 근로 의 초과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1) 생산직    | ____시간 |
| 2) 사무·영업직 | ____시간 |
| 3) 연구개발직  | ____시간 |

C3-2. 지방투자 사업장의 1인당 주말·휴일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1) 생산직    | ____시간 |
| 2) 사무·영업직 | ____시간 |
| 3) 연구개발직  | ____시간 |

C3-3. 지방투자 사업장의 1인당 심야근로(22시 이후)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1) 생산직    | ____시간 |
| 2) 사무·영업직 | ____시간 |
| 3) 연구개발직  | ____시간 |

C4. [근속] 지방투자 사업장의 연차별 퇴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도별 X년차 미만 퇴사율)=(연도별 X년차 미만 퇴사자)/(연도별 X년차 미만 근로자)

|           | 1년차 미만 | 2년차 미만 | 3년차 미만 | 3년차 이상 |
|-----------|--------|--------|--------|--------|
| 1) 생산직    | ____%  | ____%  | ____%  | ____%  |
| 2) 사무·영업직 | ____%  | ____%  | ____%  | ____%  |
| 3) 연구개발직  | ____%  | ____%  | ____%  | ____%  |

C5. [교육훈련] 지방투자 사업장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직군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 동종업계 대비 낮은 편이다. | 동종업계와 유사하다. |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다. | 동종업계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
|-----------|--------------------|-----------------|-------------|-----------------|--------------------|
| 1) 생산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무·영업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연구개발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C5-1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교육훈련 시간과 지원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1 30일 중 (\_\_\_일)      ①-2 교육훈련 비용의 (\_\_\_%)      ② 해당없음

C5-2. 근로자 교육훈련 보장과 근로자들의 훈련 경험에 귀사의 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현저히 개선      ② 소폭 개선      ③ 잘 모르겠음      ④ 도움이 되지 않았음

## Part D. 정부지원

D1. [지방투자 지원 종류]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자·설비 보조) ② 입지지원(국공유지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③ 조세감면(법인세, 재산세) ④ 신속한 행정처리  
 ⑤ 투자정보 제공 및 컨설팅 ⑥ 기타( )

D2. [수혜 실적] 최근 3년 간 지방투자사업과 연관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사업 건수 및 지원 금액규모를 유형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건수 | 총 지원금액<br>(감면액, 현금 및 현금 보조 등) |
|------------------|----|-------------------------------|
| 1) 투자 보조금 등 재정지원 | 건  | 백만원                           |
| 2) 세제 지원         | 건  | 백만원                           |
| 3) 연구개발 사업 지원    | 건  | 백만원                           |
| 4) 기타(기타 )       | 건  | 백만원                           |
| 5) 총계            | 건  | 백만원                           |

D3. [지원사업 수혜 경로] 정부의 지방투자 지원사업에 어떠한 경로로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 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보물을 참고하여 귀사가 직접 신청하였다.  
 ②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별접촉 및 권유에 따라 신청하였다.  
 ③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혹은 공공지원기관 등의 설명회를 통해 신청하였다.  
 ④ 지원의 경향이 있거나 정보를 알고 있는 유관 기업 혹은 귀사가 속한 조합 등의 기업 단체를 통해 소개받고 신청하였다.  
 ⑤ 기타 ( )

D4. [지방투자 지원과정의 애로사항] 지방투자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투자지원 관련 정보 구득의 어려움  
 ② 신청과정에서의 행정 준비  
 ③ 분야별 담당 기관이 다른 것에 따른 행정 준비 및 추가적인 시간 소모  
 ④ 지원 자격의 제한  
 ⑤ 정산과정에서 행정 준비  
 ⑥ 기타( )

## 2. 심층 인터뷰 주요 문항

### 〈투자사업장 개요〉

■ 수도권에서의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 및 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방투자에 대해 귀사가 수행한 투자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서 현재 지방 소재지로 이전, ‘신·증설 및 창업 등’은 수도권을 제외한 현재 소재지 포함 지방에서의 투자를 기준으로 응답

A1. 현 지방투자 사업장 개황(주 생산품, 투자시기, 규모, 지방이전의 유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방이전, ② 비수도권 사업장 신설, ③ 비수도권 사업장 증설

A2. 투자 결정 당시 신규 투자 사업장 부지를 어떤 유형으로 인식하셨습니까?

① 개별입지      ② 동종산업 집적지  
③ 동종산업 집적은 아니나 계획입지

A3.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를 결정한 주된 이유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높은 임금      ② 높은 입지 비용의 절감  
③ 협업기업의 이전 또는 투자 요구      ④ 불필요한 물류·시간 비용의 소요  
⑤ 본사·사업장 이전·신증설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보조금, 인센티브 등)  
⑥ 기존 사업장의 생산역량 부족에 따른 확대 및 공정 개선의 필요  
⑦ 사업의 다각화 및 신사업(품목 전환 포함) 추진

A4. [지방투자 결정요인] 현재 투자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지확보 용이성 및 저렴한 임대료·지가      ② 저렴한 임금  
③ 저렴한 운송비용  
④ 협력업체 및 관련 기술의 집적  
⑤ 배후시장 근접성      ⑥ 노동시장 근접성  
⑦ 양호한 정주 여건  
⑧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투자유치 노력

A5. [지방투자 과정 애로사항] 지방투자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부지확보의 어려움      ② 근로자 이탈 및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 ③ 기업에 적합한 지역 내 고급인력의 부족
- ④ 교통, 주거 등 주변환경에 대한 직원 불만
- ⑤ 복잡한 절차/규제      ⑥ 투자지역의 정보구득      ⑦ 자금 조달

### 〈고용의 규모 및 구성〉

■ 지방투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용의 규모, 구성의 변화 및 고용활동상 애로사항 등 쟁점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B1. [고용의 구성 변화: 정규직] 지방투자 사업장으로 이전 혹은 지방 신증설 당시와 이후 귀사의 기존 사업장의 정규직 및 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B2. [고용의 구성 변화: 직종별] 지방투자 사업장으로 이전 혹은 지방 신증설 당시 그리고 그 이후 귀사의 기존 사업장의 생산직과 사무·영업직, 연구개발직 등 직종별 인적 구성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B3. [고용 구성 변화: 연령구조] 지방투자 이전과 이후 귀사의 연령별 고용 구성변화가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4. [고용 구성 변화: 외국인 근로] 지방투자 이전/이후 귀사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의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5. [신규 고용] 지방투자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신규고용 현황(규모, 채용경로, 출신 지역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6. 지방투자 사업장 투자 이후 신규 고용계획 대비 현재 어느 정도 고용을 달성하셨습니다? 고용목표 달성이 어렵지는 않은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사업의 실적 부진      ② 노동력의 수급
- ③ 지방투자 이후 예상치 못한 과다 지출 발생
- ④ 기존 사업장 근로자 등과 노사 관계

- B7. [고용 애로사항] 지방투자 사업장을 기준으로 채용활동상 가장 어려움을 겪은 직군이나 학력 및 전공 등 인력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B8. [고용 애로사항 : 사용자] 지방투자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현재 근로자(숙련도, 산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 B9. [고용 애로사항 : 정책] 지방투자 사업장을 기준으로 채용활동상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노동시장의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의 고용서비스(구직·구인) 부족      ② 근로자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③ 공동근로복지 여건 부족                  ④ 채용 보조금 등 재정지원 부족  
⑤ 근로자 정주여건(교육 의료 등) 부족      ⑥ 근로자 사회 안전망 부족  
⑦ 기타( )

### 〈고용의 질〉

■ 지방투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용의 질적 측면의 변화나 배경에 관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C1. [근로자 보상] 지방투자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동종업계 대비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C2. [근로자 복지] 지방투자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동종업계 대비 복리후생(복지제도, 시설 등 여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C3. [근로자 복지] 지방투자 사업장의 일자리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① 건강검진      ② 자녀교육비      ③ 식비, 교통비 등
- C4. [근로시간/강도] 지방투자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동종업계 대비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C4-1. 지방투자 사업장의 1인당 월 평균 정규 근로 외 초과근로나 주말·휴일·심야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C5. [근속] 지방투자 사업장의 연차별 퇴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text{연도별 } X\text{년차 미만 퇴사율}) = (\text{연도별 } X\text{년차 미만 퇴사자}) / (\text{연도별 } X\text{년차 미만 근로자})$

C5. [교육훈련]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이에 해당하신다면, 어떠한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또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정부지원>

■ 귀사가 연관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 및 수요사항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1. [지방투자 지원 종류] 어떤 종류의 지방투자지원을 받으셨습니까?

- 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지·설비 보조)
- ② 입지지원(국공유지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 ③ 조세감면(법인세, 재산세)
- ④ 신속한 행정처리
- ⑤ 투자정보 제공 및 컨설팅

D2. [지원사업 수혜경로] 정부의 지방투자 지원사업에 어떠한 경로로 받게 되었습니까?

D3. [지방투자 지원과정의 애로사항] 지방투자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

- |           |                                                                                                      |
|-----------|------------------------------------------------------------------------------------------------------|
| ▪ 발행연월일   | 2023년 12월 26일 인쇄<br>2023년 12월 29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b>한국노동연구원</b><br>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br>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br>☎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창보문화사 (02) 2272-6997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260-0713-4 (비매품)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 ]

